



/대/통/명/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8.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부 총괄 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5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5년 지역경제 6

1. 지역경제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1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14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4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2.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6

3.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9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21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21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28

3.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실적 3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36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36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6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7

3.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40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42

1. 평가목적 및 방향 42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43

3. 평가체계 및 절차 44

4. 평가결과 및 활용 47

제2부 부문별 시책 51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53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53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53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6
3. 지역공동체 활성화 75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86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86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98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10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26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31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31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37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7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53
3. 항만 인프라 개선 159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63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6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66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66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208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208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213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213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217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221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21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25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29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37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237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43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48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52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256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59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264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64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76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316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18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318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18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24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328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28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333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33
2. 인문학 진흥 강화	339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341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341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341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42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47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47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49
3. 문화소의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54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356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56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61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67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374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74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78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86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392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92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92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396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399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399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06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409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09

제3부 지역별 시책 415

제1장 서울특별시	417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417
1. 일반 현황	417
2. 산업 현황	417
3. 혁신활동 현황	419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42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21
1. 발전비전	421
2. 추진전략	42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2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2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2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2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2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3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31
제2장 부산광역시	432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432
1. 일반 현황	432
2. 산업 현황	432
3. 혁신활동 현황	4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6
1. 발전비전	436
2. 추진전략	4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3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4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4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45
제3장 대구광역시	446
제1절 경제 현황	446
1. 일반 현황	446
2. 산업 현황	446
3. 혁신활동 현황	44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4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0
1. 발전비전	450
2. 추진전략	45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5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5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5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5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5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59
제4장 인천광역시	461
제1절 경제 현황	461
1. 일반 현황	461
2. 산업 현황	461
3. 혁신활동 현황	46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6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65
1. 발전비전	465

2. 추진전략	46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6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6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69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7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7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7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74
제5장 광주광역시	476
제1절 경제 현황	476
1. 일반 현황	476
2. 산업 현황	476
3. 혁신활동 현황	47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0
1. 발전비전	480
2. 추진전략	4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8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8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85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48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8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90
제6장 대전광역시	491
제1절 경제 현황	491
1. 일반 현황	491
2. 산업 현황	491
3. 혁신활동 현황	4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9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95
1. 발전비전	495
2. 추진전략	4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9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97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9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0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05

제7장 울산광역시 506

제1절 경제 현황	506
1. 일반 현황	506
2. 산업 현황	506
3. 혁신활동 현황	50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0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0
1. 발전비전	510
2. 추진전략	51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1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1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1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1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1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1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19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20

제1절 경제 현황	520
1. 일반 현황	520
2. 산업 현황	520
3. 혁신활동 현황	52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2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24
1. 발전비전	524
2. 추진전략	52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2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2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2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3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3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3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34

제9장 경기도 535

제1절 경제 현황	535
1. 일반 현황	535
2. 산업 현황	535
3. 혁신활동 현황	53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3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40
1. 발전비전	540
2. 추진전략	54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4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4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4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5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1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52

제10장 강원도 553

제1절 경제 현황	553
1. 일반 현황	553
2. 산업 현황	553
3. 혁신활동 현황	55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5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7
1. 발전비전	557
2. 추진전략	55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5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59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6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6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6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65
제11장 충청북도	566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566
1. 지역경제 일반현황	566
2. 지역산업현황	566
3. 혁신활동 현황	56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6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0
1. 발전비전	570
2. 추진전략	57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7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7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7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7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81
제12장 충청남도	583
제1절 경제 현황	583
1. 일반 현황	583
2. 산업 현황	583
3. 혁신활동 현황	58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8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87
1. 발전비전	587
2. 추진전략	58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8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9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9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97

제13장 전라북도	599
제1절 경제 현황	599
1. 일반 현황	599
2. 산업 현황	599
3. 혁신활동 현황	60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0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3
1. 발전비전	603
2. 추진전략	60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0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0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0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1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1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15
제14장 전라남도	617
제1절 경제 현황	617
1. 일반 현황	617
2. 산업 현황	617
3. 혁신활동 현황	61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2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1
1. 발전비전	621
2. 추진전략	62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2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2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2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2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2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30
제15장 경상북도	632
제1절 경제 현황	632

1. 일반 현황	632
2. 산업 현황	632
3. 혁신활동 현황	6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1. 발전비전	636
2. 추진전략	6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4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4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46
제16장 경상남도	647
제1절 경제 현황	647
1. 일반 현황	647
2. 산업 현황	647
3. 혁신활동 현황	64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5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1
1. 발전비전	651
2. 추진전략	65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5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5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5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57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65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5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60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61
제1절 경제 현황	661
1. 일반 현황	661
2. 산업 현황	661

3. 혁신활동 현황	66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6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65
1. 발전비전	665
2. 추진전략	66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6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6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6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7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7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7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73

표 목차

제1부 총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8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5 년생산동향	9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10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5년 수출	11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2
<표 1-1-8> 지역 산업별 2015년 취업자	13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5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5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8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20개 실천과제'	21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22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23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25
<표 1-2-8>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26
<표 1-2-9>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27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5년 선정결과(42개)	29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결과(2015.3월)	31
<표 1-2-12>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중간점검 결과(2015.6)	34
<표 1-2-13> 시·도별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	35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	36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8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40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41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41
<표 1-3-6> 주요 부처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비교	47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4개)	49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4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	57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99개 시·군·구)	57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	59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5년도)	60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64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65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67
<표 2-1-9>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68
<표 2-1-10>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8
<표 2-1-11>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70
<표 2-1-12> 2016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72
<표 2-1-13> 2016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19개)	73
<표 2-1-14>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76
<표 2-1-15>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77
<표 2-1-16> 자율관리어업 수산자원관리성과(2015)	81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84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88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88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90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	90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92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5년 12월 기준)	93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5년 12월 기준)	93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94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97
<표 2-1-27>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98
<표 2-1-28> 2013~2015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99
<표 2-1-29>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100
<표 2-1-30> 도시가스 보급 추이	100
<표 2-1-31> 상수도 보급률 현황	104
<표 2-1-3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5년 내시 기준)	104

<표 2-1-33>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5년 내시 기준)	105
<표 2-1-34> 기항지 현황	106
<표 2-1-35> 2015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	106
<표 2-1-36>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107
<표 2-1-3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109
<표 2-1-38>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110
<표 2-1-39>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5년)	112
<표 2-1-40>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5년)	113
<표 2-1-41> 하수도 보급률 현황	115
<표 2-1-42>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년)	116
<표 2-1-43>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16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118
<표 2-1-45>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5)	118
<표 2-1-46> 하수도 보급률 현황	120
<표 2-1-47>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회수시설 확충)	121
<표 2-1-48>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22
<표 2-1-49>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5년)	124
<표 2-1-50>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28
<표 2-1-51>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129
<표 2-1-52> 고령인구 비중	130
<표 2-1-5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2015년 기준)	130
<표 2-1-54>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	134
<표 2-1-55> 노후산업단지 현황(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135
<표 2-1-56>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	137
<표 2-1-57>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표 2-1-58>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9
<표 2-1-59> 교통혼잡비용 추이	139
<표 2-1-60>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0
<표 2-1-61>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40
<표 2-1-62> 광주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1
<표 2-1-63>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2
<표 2-1-64>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3
<표 2-1-6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3
<표 2-1-66>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현 황	144
<표 2-1-67>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4

<표 2-1-68>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69>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5
<표 2-1-70>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6
<표 2-1-71>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6
<표 2-1-72>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7
<표 2-1-73>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47
<표 2-1-74>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8
<표 2-1-75>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8
<표 2-1-76> 충주-제천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9
<표 2-1-77> 특정지역 현황	150
<표 2-1-78>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51
<표 2-1-79>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52
<표 2-1-80>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53
<표 2-1-81>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54
<표 2-1-82> 광역철도사업현황	155
<표 2-1-83> 도시철도 개통현황	158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67
<표 2-2-2> 분야별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171
<표 2-2-3>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173
<표 2-2-4>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174
<표 2-2-5>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76
<표 2-2-6> 동물약품 허브 2015년도 목표치 및 달성결과	180
<표 2-2-7> 국내 로봇시장 규모	183
<표 2-2-8>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189
<표 2-2-9>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194
<표 2-2-10>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 성과 현황	201
<표 2-2-11>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 현황	202
<표 2-2-12>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211
<표 2-2-13> 2008~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212
<표 2-2-14> 노후산업단지 현황(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215
<표 2-2-15>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219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19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220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224
<표 2-2-19>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226

<표 2-2-20>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20년)	226
<표 2-2-21>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5년)	228
<표 2-2-22> 대학 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30
<표 2-2-23>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31
<표 2-2-24>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32
<표 2-2-25>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35
<표 2-2-26>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37
<표 2-2-27>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238
<표 2-2-28>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39
<표 2-2-29>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239
<표 2-2-30> 연구개발특구육성(비R&D) 사업 주요내용	240
<표 2-2-3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243
<표 2-2-32>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률	246
<표 2-2-33>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정률	246
<표 2-2-3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48
<표 2-2-3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249
<표 2-2-3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49
<표 2-2-37>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54
<표 2-2-3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255
<표 2-4-39> 기항지 현황	255
<표 2-2-40>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58
<표 2-2-41>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259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261
<표 2-2-43>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263
<표 2-2-44> 스마트 팜 보급현황	264
<표 2-2-45>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성과분석 결과	265
<표 2-2-46> 2015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67
<표 2-2-47>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2006~2015년)	273
<표 2-2-48>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2010~2014년)	274
<표 2-2-49>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78
<표 2-2-50>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80
<표 2-2-51> 작목별 노동력 절감 효과	284
<표 2-2-52> 작목별 비용절감 효과	285
<표 2-2-53>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286
<표 2-2-54>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286

<표 2-2-55>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88
<표 2-2-56>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290
<표 2-2-57>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293
<표 2-2-58> 2015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293
<표 2-2-59>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	294
<표 2-2-60>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297
<표 2-2-61>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지원 실적	298
<표 2-2-62>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99
<표 2-2-63> 2015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303
<표 2-2-6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305
<표 2-2-65> 지역별 2015년 사업예산	306
<표 2-2-66> 2015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309
<표 2-2-67> 2015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310
<표 2-2-68> 2015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311
<표 2-2-69> 2015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312
<표 2-2-70> 본 사업에 의한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313
<표 2-2-71>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317
<표 2-3-1> 2015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권역별·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318
<표 2-3-2>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319
<표 2-3-3>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320
<표 2-3-4>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	321
<표 2-3-5>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322
<표 2-3-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23
<표 2-3-7> 2015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	325
<표 2-3-8> 2015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2년제)	327
<표 2-3-9>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2015)	328
<표 2-3-10>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328
<표 2-3-11>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329
<표 2-3-12> 유형 및 학교급별 사업비 배분 기준	330
<표 2-3-13> 학생 종합 만족도 및 현장실습 항목 만족도 점수	331
<표 2-3-14>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32
<표 2-3-15>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운영·지원 현황	334
<표 2-3-16>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조사 결과	335
<표 2-3-1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36
<표 2-3-18>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337

<표 2-3-19> 2015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	338
<표 2-3-20>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339
<표 2-4-1> 2015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341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44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345
<표 2-4-4> 2015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346
<표 2-4-5> 2015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현황	346
<표 2-4-6>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52
<표 2-4-7> 클럽운영 과정	353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353
<표 2-4-9> 연도별 실적	354
<표 2-4-10>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354
<표 2-4-11>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56
<표 2-4-12>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2015년 12월 현재)	361
<표 2-4-13>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62
<표 2-4-14>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365
<표 2-4-15>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2012~2015)	366
<표 2-4-16> 2015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372
<표 2-4-17> 연도별 조성계획(자연마당)	375
<표 2-4-18> 연도별 조성계획(생태놀이터)	376
<표 2-4-19>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82
<표 2-4-20>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	383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86
<표 2-4-22>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388
<표 2-4-23>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389
<표 2-4-24>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390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392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394
<표 2-5-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402
<표 2-5-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402
<표 2-5-5>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402
<표 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405
<표 2-5-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406
<표 2-5-8> 2015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406
<표 2-5-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5년 12월 기준)	408

<표 2-5-10>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410
<표 2-5-11> 2016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	412
<표 2-5-12>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13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17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18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18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19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32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3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3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34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46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7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7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48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1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2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2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63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76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7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7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78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1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2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2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3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06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7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7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08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20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1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1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22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35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36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36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37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	543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53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4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4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55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566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7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7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568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2015~2017) 현황 및 성과	573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583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4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4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585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599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0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0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601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17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8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8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19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32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3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3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34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647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48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48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49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661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2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2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663

그림 목차

제1부 총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17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20
<그림 1-2-3>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선정 현황(2014.9)	33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15년 기준)	37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9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44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	46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55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69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	77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 12월)	103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125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132
<그림 2-1-7>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	133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57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167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168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추진체계	169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173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175
<그림 2-2-6>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	180
<그림 2-2-7> EU 등 선진국의 Micro-모빌리티 활용 사례	181
<그림 2-2-8> 개발 중인 3·4륜 Micro-모빌리티 디자인	181
<그림 2-2-9>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	184
<그림 2-2-10>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체계	185
<그림 2-2-11>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189

<그림 2-2-12>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세부사업	191
<그림 2-2-13>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193
<그림 2-2-14>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비전과 목표	200
<그림 2-2-15>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200
<그림 2-2-16> 2015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 성과 현황	201
<그림 2-2-17>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203
<그림 2-2-18>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208
<그림 2-2-19> 입지 vs 설비 비중(2004~2015년)	209
<그림 2-2-20> 수도권인접지역 vs 비인접지역 지원실적	210
<그림 2-2-21>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21
<그림 2-2-22>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도	222
<그림 2-2-23>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체계	223
<그림 2-2-24> 2015년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 주요 실적	225
<그림 2-2-25>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 진행 단계	226
<그림 2-2-26>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5년)	227
<그림 2-2-27>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5년)	229
<그림 2-2-28>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34
<그림 2-2-29>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53
<그림 2-2-30> 지자체 도시숲	273
<그림 2-2-3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301
<그림 2-2-32> 사업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305
<그림 2-2-33>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	311
<그림 2-2-34>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317
<그림 2-3-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333
<그림 2-3-2>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335
<그림 2-3-3>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338
<그림 2-4-1> 추진체계	352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53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362
<그림 2-4-4> 도시숲의 도심열섬 완화 기능	377
<그림 2-4-5> 사업 추진체계	378
<그림 2-5-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399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11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21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23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36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생활권 구성	438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0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52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65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68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0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2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95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97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0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11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12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24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26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40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42
<그림 3-10-1> 강원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7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59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0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72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87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89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3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05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1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3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38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1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53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65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67

제1부 총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5년의 국내외 경제¹⁾

1.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경제는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일본경제는 내수 성장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신흥국경제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원 수출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신흥시장국 중 중국은 수출부진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에 그쳤으며, 브라질은 정정 불안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만 인도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 내수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 성장 률 (%)	전 세계	3.3	3.4	3.1
	선진국	1.1	1.8	1.9
	미국	1.5	2.4	2.4
	유로지역	-0.3	0.9	1.6
	일본	1.4	0.0	0.5
	신흥국	5.0	4.6	4.0
	중국	7.7	7.3	6.9
	브라질	3.0	0.1	-3.8
	인도	6.4	7.0	7.3
세계 교역신장률(%)		3.3	3.4	2.6
원유가격(\$/bbl)		105.4	96.7	51.2

자료 : IMF, 한국은행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1) 한국은행의 「2015년 연차보고서」(2016년 3월) 내용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교역 확산세 둔화와 중국 및 자원 수출국의 수입 둔화 등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 중반부터 급락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미국의 원유시추설비 가동기수 감소 등에 따라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며 상반기에 60달러 내외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2015년 중반부터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말에는 30달러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2. 국내경제

2015년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4년 수준보다 낮아진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의 등락은 내수의 움직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설비투자가 양호하였던 반면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연간 성장률을 하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의 양호한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큰 폭 개선으로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메르스 충격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 증가세는 하반기에는 저유가 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3/4분기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실시’ 등 정부의 연이은 소비활성화 대책 등도 민간소비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IT 부문과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투자확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건설투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연장, 저금리 등으로 주택거래, 분양 및 착공이 크게 늘어나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총수출(실질 기준)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신장세 둔화로 0.8%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휴대폰 부품, 반도체 등의 IT제품,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 기계류, 선박 등은 글로벌 투자수요 둔화, 후발국들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총수입(실질 기준)은 수입차 선호 증대 등으로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원유, 천연가스 등 광산품도 국제유가 하락 및 수출수요 확대에 증가하였다.

산업별 생산에 있어 제조업은 1.3% 성장에 그쳐 전년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조선업 업황 부진과 자동차 수출 감소로 운송장비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업은 가계대출 확대 및 증권시장 거래호조로 금융 및 보험업 성장세가 확대되었지만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둔화되고 의료비 지출 감소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전년보다 둔화된 2.8%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건설업은 주택경기 호조로 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고용은 취업자수가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전년보다 34만명 증가에 그쳐 전년보다 축소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가 주도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구조조정과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실업률은 전년의 3.5%에서 3.6%로 높아졌다.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구분		2014	2015				
			연간	I	II	III	IV
국민 소득 ¹⁾	국내총생산	3.3	2.6	2.4	2.2	2.8	3.1
	최종소비	2.0	2.4	1.9	2.1	2.4	3.4
	민 간	1.7	2.2	1.5	1.7	2.2	3.3
	정 부	3.0	3.4	3.2	3.3	3.0	3.9
	고정투자	3.4	3.8	2.6	2.2	5.1	5.4
	건 설	1.1	3.9	0.9	1.0	5.6	7.5
	설 비	6.0	5.3	5.8	5.1	6.7	3.9
	수 출	2.0	0.8	0.5	-0.4	0.5	2.5
산업 생산 ¹⁾	수 입	1.5	3.2	2.1	1.6	3.1	6.1
	제 조 업	3.5	1.3	0.6	0.5	1.5	2.4
	건 설 업	0.8	3.0	-0.5	-1.0	4.8	7.5
	서비스업	3.3	2.8	3.0	2.9	2.8	2.7
	취업자수 ¹⁾	2.1	1.3	1.4	1.2	1.2	1.5
	실 업 률	3.5	3.6	4.1	3.8	3.4	3.1
	소비자물가 ¹⁾	1.3	0.7	0.6	0.5	0.7	1.1
	주택매매가 ²⁾	2.1	4.4	0.8	1.3	1.3	1.0
국제 수지	상품수지	888.9	1,202.9	242.2	336.8	306.4	317.6
	서비스수지	-36.8	-157.1	-43.9	-30.9	-35.6	-46.7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제품 가격의 큰 폭 하락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된 0.7% 상승한 반면,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호전된 데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하여 전년 수준보다 확대된 4.4%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통관 기준)이 감소하였지만,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의 889억달러에서 1,203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및 운송·건설수지 흑자폭 축소로 15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제2절 2015년 지역경제

1. 지역경제 개관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경제의 개선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수출·고용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수출이 증가하였고 관련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서울은 생산·수출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인천은 철강,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권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지역이었다.

충청권 지역경제는 여타 권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은 지역 주력업종 생산·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였고 취업자도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충북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생산·수출이 줄었으나, 식료품, 전기장비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전지류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도 늘어났다. 충남 지역경제는 대전·충북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세종은 산업생산은 줄었으나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은 크게 늘어났다.

호남권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전남 지역은 생산·수출·고용 모두 전년수준을 하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자동차 생산·수출 호조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자동차,

전남은 석유화학의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경권은 대구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생산·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경북은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생산이 부진하였고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였다.

동남권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수출은 부산만이 자동차 및 부품을 중심으로 높은 실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취업자 증가도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원은 생산·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취업자수 증가 수준도 전국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제주는 생산·수출이 미약하게나마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2. 생산동향

2015년 들어 전국 기준 산업생산은 전년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되며 특히 상반기에 감소폭이 컸으며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생산 증감이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6.8%), 인천(-5.0%), 대구(-4.3%), 울산(-3.8%), 전북(-3.2%) 등의 산업생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들 지역은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울(-4.7%), 경북(-3.2%) 등도 생산 감소가 큰 지역으로서 다만 이들은 4/4분기 들어서 미약하게 생산이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2~3년 내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침체하였던 전남(8.2%)은 2015년 들어서 증가세로 반전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산(7.0%), 충북(6.3%), 충남(1.4%)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인 지역으로 구분되며, 경기(3.6%), 광주(1.1%)는 산업생산 증가세가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전국	0.7	0.2	-0.6	-1.1	-1.3	-0.1	-0.1
서울	-4.6	5.9	-4.7	-8.4	-7.5	-4.3	0.9
부산	0.1	2.4	7.0	7.8	10.2	6.1	3.9
대구	3.4	2.6	-4.3	-3.3	-2.9	-3.8	-7.0
인천	2.1	-0.3	-5.0	-6.4	-4.2	-4.7	-4.3
광주	6.9	8.9	1.1	-0.6	1.2	1.6	2.2
대전	-4.5	7.6	3.1	6.9	-0.2	-2.0	7.8
울산	-1.8	-1.7	-3.8	-4.1	-4.2	-1.7	-5.2
세종	0.9	-5.2	3.2	6.2	4.2	-1.9	4.5
경기	8.1	4.1	3.6	1.3	1.5	4.1	7.5
강원	0.5	-2.0	-0.5	-2.8	1.1	2.6	-2.6
충북	22.0	1.9	6.3	11.7	6.3	1.1	6.3
충남	5.3	0.5	1.4	2.7	0.9	2.5	-0.5
전북	-0.8	-0.6	-3.2	-3.3	-0.4	-2.8	-6.5
전남	-7.6	-4.3	8.2	1.3	6.9	10.9	13.6
경북	-5.7	0.3	-3.2	-5.3	-5.2	-2.6	0.4
경남	0.4	-1.9	-6.8	-3.8	-6.7	-7.3	-9.3
제주	4.6	1.1	7.4	19.3	4.2	5.1	2.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지역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을 살펴보면, 2015년 산업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전남은 유가하락에 힘입어 화학제품(4.7%), 석유정제(5.3%)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대형 조선업체의 특수선 조업물량 증가로 기타운송장비(75.4%) 생산이 급증하였다. 부산은 철강(-5.9%)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4.3%)·기계장비(3.8%), 충북은 전자부품(10.2%), 충남은 석유정제(17.8%) 등의 호조가 생산 증가세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지역 산업생산이 줄어든 지역 중에서 경남과 울산은 기타운송장비(각각 -15.2%, -19.3%), 인천과 대구는 기계장비(각각 -13.4%, -10.1%), 전북은 자동차(-8.2%) 생산 부진이 크게 나타났다. 그 밖에 서울은 의복(-2.0%), 경북은 전자부품(-9.2%) 등의 부진이 지역 산업생산의 부진을 주도하였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5년 생산동향

(단위 : %)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서울	의복	-2.0	전자부품	-7.8	인쇄	-9.8	기계장비	-17.2
부산	철강	-5.9	금속제품	1.5	기계장비	3.8	자동차	14.3
대구	자동차	3.0	기계장비	-10.1	금속제품	-5.9	섬유제품	-7.2
인천	기계장비	-13.4	철강	-4.6	자동차	-5.4	금속제품	-11.8
광주	자동차	-0.5	전기장비	-13.0	고무플라스틱	-4.9	기계장비	-7.0
대전	고무플라스틱	-2.8	기계장비	3.9	전자부품	1.0	화학제품	-5.8
울산	자동차	2.0	석유정제	-0.8	화학제품	-2.5	기타운송장비	-19.3
경기	전자부품	8.9	자동차	1.2	기계장비	0.8	금속제품	0.5
강원	비금속	4.1	식료품	-3.1	음료품	1.9	자동차	-3.1
충북	전자부품	10.2	식료품	4.2	전기장비	-6.6	자동차	24.6
충남	전자부품	-7.6	자동차	-1.0	화학제품	4.0	석유정제	17.8
전북	자동차	-8.2	화학제품	-4.2	식료품	3.8	철강	-14.5
전남	화학제품	4.7	석유정제	5.3	철강	6.4	기타운송장비	75.4
경북	전자부품	-9.2	철강	-3.6	자동차	-4.7	화학제품	1.1
경남	기타운송장비	-15.2	기계장비	-7.3	금속제품	-12.3	자동차	5.8
제주	식료품	0.6	음료품	14.3	비금속제품	8.5	고무플라스틱	23.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3위내 업종

3. 수출동향

2015년 수출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8.0%나 줄어든 5,268억달러 실적을 기록하였다. 경기(20.1%)가 1,059억달러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울산(13.8%), 충남(1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수출 실적은 제주(13.8%)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충북(7.1%), 부산(6.0%), 인천(4.0%)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는 홍콩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충북과 부산은 대미, 인천은 대중국 수출이 지역 수출 실적 호조를 견인하였다. 반면, 전남(-22.0%)은 대중국·대아시아, 울산(-21.1%)은 대미국·대중국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외 경북(-15.6%), 강원(-9.1%), 경남(-8.1%) 등도 전국 감소세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출이 줄어들었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수출 금액	지역간 비중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559,632	572,665	526,757	100.0	-8.0	1.6	3.2	3.6	0.9
서울	60,316	62,329	60,273	11.4	-3.3	2.6	6.7	4.6	-0.5
부산	13,263	14,702	15,579	3.0	6.0	-2.2	5.9	16.2	22.8
대구	7,012	7,807	7,090	1.3	-9.2	22.1	8.5	14.5	2.8
인천	27,288	30,003	31,198	5.9	4.0	12.5	3.1	19.5	6.0
광주	15,868	16,258	15,305	2.9	-5.9	-1.1	2.2	8.2	1.0
대전	4,030	4,732	4,307	0.8	-9.0	16.3	23.2	11.8	18.7
울산	91,513	92,400	72,907	13.8	-21.1	-5.0	14.5	-0.4	-4.2
세종	904	1,020	929	0.2	-9.0	5.6	17.8	5.5	23.0
경기	102,005	111,641	105,908	20.1	-5.1	14.7	4.1	8.1	11.4
강원	2,173	2,070	1,881	0.4	-9.1	-11.8	-3.8	-5.6	2.5
충북	13,735	14,196	15,210	2.9	7.1	5.2	-3.8	-1.0	13.8
충남	64,282	65,112	67,123	12.7	3.1	0.0	6.4	0.9	-1.6
전북	10,116	8,556	7,952	1.5	-7.1	-30.6	-10.3	0.7	-17.1
전남	41,402	39,112	30,494	5.8	-22.0	-9.0	-1.7	-2.6	-9.0
경북	53,765	51,476	43,458	8.3	-15.6	2.0	-6.1	-3.1	-9.1
경남	51,859	51,142	47,020	8.9	-8.1	0.1	-8.5	3.5	0.9
제주	103	106	121	0.0	13.8	-0.3	14.7	7.0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 내 주요 품목별 2015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 신장세가 가장 컸던 제주
는 반도체(64.4%)가 지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늘어났으며, 충북도 반
도체(24.0%)가 지역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은 자동차부품(32.8%)·자동차
(48.7%), 인천은 자동차 수출은 줄었으나 반도체(216.5%) 수출 호조로 지역 수출이 늘
어났다.

반면 전남은 석유제품(-35.2%)·합성수지(-12.7%)·철강판(-24.4%) 등 지역 수출의
65%를 상회하는 품목들의 부진이 컸다. 울산은 자동차(-5.1%)·석유제품(-47.0%), 경북
은 무선통신기기(-12.4%)·철강판(-5.4%)·디스플레이(-10.5%), 강원은 전자응용기
기(-14.6%)·자동차부품(-19.2%), 경남은 선박(-13.1%) 등 지역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
이 크게 나타났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5년 수출

(단위 : %)

구분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서울	자동차부품	9.8	-5.5	무선통신기기	8.4	247.5	반도체	6.5	16.7
부산	자동차부품	14.8	32.8	자동차	14.1	48.7	철강판	5.0	-6.0
대구	자동차부품	15.2	-8.1	인조장섬유직물	6.9	-6.7	기구부품	3.8	-0.1
인천	자동차	13.8	-19.6	반도체	10.7	216.5	철강관	8.1	-20.6
광주	자동차	39.3	-4.5	반도체	26.6	6.3	냉장고	8.3	-18.8
대전	기호식품	12.2	18.0	원동기및펌프	10.5	-6.0	건전지및축전지	8.9	1.6
울산	자동차	22.2	-5.1	석유제품	21.4	-47.0	선박해양구조물	20.0	18.2
세종	기구부품	18.9	5.5	평판디스플레이	15.9	-42.9	자동차부품	8.8	-11.4
경기	반도체	25.2	-3.5	자동차	10.7	-8.0	무선통신기기	7.7	-36.0
강원	전자응용기기	16.3	-14.6	자동차부품	14.7	-19.2	합금철선철및고철	14.6	-0.5
충북	반도체	38.5	24.0	건전지및축전지	8.0	10.3	플라스틱 제품	6.4	4.7
충남	반도체	24.3	-9.5	평판디스플레이	21.8	1.7	무선통신기기	13.1	170.3
전북	자동차	21.8	-3.2	정밀화학원료	12.8	-5.4	선박해양구조물	9.0	106.5
전남	석유제품	30.1	-35.2	합성수지	24.2	-12.7	철강관	11.3	-24.4
경북	무선통신기기	21.0	-12.4	철강판	18.1	-5.4	평판디스플레이	15.3	-10.5
경남	선박해양구조물	43.4	-13.1	자동차부품	6.1	2.2	원동기및펌프	4.1	-1.8
제주	반도체	32.0	64.4	어류	23.2	-10.0	기호식품	6.5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4. 고용동향

2015년 전국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3% 늘어난 2,594만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5.4%), 충남(3.1%), 강원(2.8%), 울산(2.7%) 순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제주와 울산은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컸던 반면 강원과 충남은 임시근로자²⁾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고용 개선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경북(-0.6%), 부산(-0.6%), 서울(-0.2%)은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경북과 부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컸으며, 서울은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취업자 수	지역간 비중	2015 전년 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25,066	25,599	25,936	100.0	1.3	1.4	1.2	1.2	1.5
서울	5,097	5,146	5,135	19.8	-0.2	-0.3	-0.1	0.1	-0.5
부산	1,644	1,667	1,657	6.4	-0.6	1.5	-1.0	-2.3	-0.6
대구	1,195	1,215	1,234	4.8	1.6	1.8	2.4	1.0	1.1
인천	1,442	1,469	1,488	5.7	1.3	0.9	0.5	0.7	3.1
광주	708	736	740	2.9	0.5	0.6	-0.9	1.1	1.8
대전	736	765	777	3.0	1.6	3.9	2.2	0.3	0.0
울산	546	546	561	2.2	2.7	-0.5	2.4	4.8	5.0
경기	5,988	6,226	6,364	24.5	2.2	3.2	2.4	1.6	1.8
강원	698	711	731	2.8	2.8	3.6	1.5	3.6	2.6
충북	776	810	828	3.2	2.2	2.2	1.2	1.4	3.9
충남	1,137	1,158	1,194	4.6	3.1	2.2	3.2	3.0	4.3
전북	876	875	894	3.4	2.2	3.3	2.0	2.8	0.7
전남	915	909	924	3.6	1.7	1.7	1.1	2.7	1.1
경북	1,386	1,420	1,412	5.4	-0.6	-0.6	-0.6	-1.3	0.3
경남	1,619	1,632	1,663	6.4	1.9	-0.9	1.9	3.2	3.5
제주	305	316	333	1.3	5.4	1.9	4.4	7.3	7.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로는 전체 취업자의 17%를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3.6% 늘어났으며,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1.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전남(20.5%), 충남(10.0%), 충북(8.2%)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3.8%), 대구(-2.5%), 경북(-2.1%)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대구(4.5%), 강원(4.5%) 등에서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부산(-1.9%)과 서울(-0.4%)에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지역 산업별 2015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486	17.3	3.6	1,823	7.0	1.5	18,269	70.4	1.4
서울	499	9.7	1.2	324	6.3	-0.6	4,305	83.8	-0.4
부산	297	17.9	6.8	124	7.5	-0.8	1,230	74.2	-1.9
대구	235	19.0	-2.5	88	7.1	-3.3	890	72.1	4.5
인천	335	22.5	5.0	100	6.7	-4.8	1,032	69.4	0.9
광주	109	14.7	0.9	68	9.2	-6.8	544	73.5	2.3
대전	77	9.9	-3.8	63	8.1	-1.6	629	81.0	2.6
울산	212	37.8	2.9	41	7.3	17.1	301	53.7	1.0
경기	1,277	20.1	4.9	482	7.6	3.7	4,488	70.5	2.0
강원	51	7.0	2.0	55	7.5	-1.8	530	72.5	4.5
충북	172	20.8	8.2	54	6.5	3.8	510	61.6	1.4
충남	274	22.9	10.0	77	6.4	14.9	697	58.4	2.5
전북	118	13.2	0.0	69	7.7	3.0	566	63.3	1.8
전남	100	10.8	20.5	79	8.5	6.8	519	56.2	0.4
경북	278	19.7	-2.1	86	6.1	1.2	810	57.4	2.9
경남	438	26.3	1.4	85	5.1	-3.4	981	59.0	4.4
제주	13	3.9	0.0	28	8.4	27.3	237	71.2	3.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고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정책
1960~1970년대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 · 지방중소도시 육성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년대	참여 정부 (2003~2008)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 정부 (2008~2013)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 정부 (2013~2018)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2.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도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2) 주요 추진시책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④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3.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 추진 배경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자율로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고 이들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동시에 지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시·도별로는 지역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8월)를 끝으로 전국에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어 창조경제의 지역별 실행 기구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방식이나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정책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를 마련하였다.

(2)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지역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정책 고도화를 통한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 창조경제 확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을 위해 (과제 ①) 국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과제 ②)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추진(Top-Down)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Bottom-Up)되는 방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과제 ③)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특회계의 범위와 운용방식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제 ④) 창조경제기반의 지역특화발전 추진, (과제 ⑤) 지역문화와 산업·기술의 창조적 융합, (과제 ⑥)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육성, (과제 ⑦)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생활권 사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한국 기반 확립’을 위해 (과제 ⑧)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낙후지역 지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 ⑨) 도시와 지역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고향희망심기 운동」의 추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9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 20개 실천과제 - 258개 단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2015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20개 실천과제'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업부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등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해수부
	·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부	-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업부	국토부
	·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미래부	국토부
	·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국토부	미래부, 행자부, 농식품부 등
	·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해수부, 농림청, 산림청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	-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체부	문화재청
	·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
	·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복지부	여가부 등
	·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

(1)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지역 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분야의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42개 신규 선

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 690개 지구(누계),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6개, 특수상황지역 명품자원 활용 특성화 사업 65개소 지정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73.1%, 도시가스 보급률 78.9%,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 14.5%, 농어촌생활폐기물 매립률 20.7% 등을 달성하고, 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위험지역의 교통사고를 39.1% 감소시킴으로써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주민체감 생활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15개소 지정,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33개소로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지역중심지의 활력을 증진하였다. 넷째, 충주~제천 등 6개 고속도로 개통, 대전역~세종간 주행차로(BRT) 일부 개통(21.3km) 등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진되고,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물동량과 컨테이너처리량이 각각 3.7%, 4.8% 증가하였다.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확대 : ('14) 35개 → ('15) 42개
	창조지역사업 추진건수 : 21건 추가 (누계 95건)
	성장촉진지역 민간투자자본유치 목표 70% 대비 97.5% 달성
	특수상황지역 명품자원 활용 특성화 사업 확대: ('15) 신규 65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14) 60개소 → ('15) 66개소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 ('14) 350개 → ('15) 418개
	수산업 자율관리(공동체, 참여인) : ('14) 1,086개, 69,088명 → ('15) 1,129개, 70,539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 ('15) 8개소 신규선정(누계 21개소)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여성친화도시 수 : 11개 지자체 추가 (누계 66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15년 85개 지구 신규 선정(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광역상수도 공급실적 2,915백만톤/년, 가동률 69.4% 달성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농어촌 마을 47개소, 사회복지시설 385개소
	도시가스 보급률(사업권역내) : ('14) 79.4% → ('15) 8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수 : ('14) 330건 → ('15) 303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체 매출액 : 3,009억 (전년대비 8.6% 증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 ('14) 7개 → ('15) 8개 (+1개소)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28개소(신증설 14, 개선 14)
	해양쓰레기 12,110톤 수거·처리, 방치선박 178척 처리, 접안시설 6개소 개선
	교통사고찾은곳 개선·정비 : 293개소(교통사고 건수 43.6% 감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5개 선도지구, 63개 일반지구 지원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누계)확대 추진 : ('14) 13개 → ('15) 33개 (+20개소)
	광역도로 : 67개 사업(319.2km) 중 35개 사업(152.7km) 완료
	국가지원 지방도 : 67건, 547km, 5,442억원 투입
	고속도로 : 동해-삼척, 상주-영덕, 울산-포항, 주문진-속초, 춘천-양양 등
	국도 : 거제-마산, 돌산-화태, 영남-적금, 화양-소라, 월전-중군 등
	순환도로 : 광주순환, 대구순환, 부산순환, 제2외곽순환 등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경의선 등 광역철도 21개 사업 지정 (총연장 609.8km)
	도시철도 22개 개통·운영 중 (총연장 639km)
	부산·광양·울산·인천항 특화개발, 방파제 보강사업,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
	도시BRT 서울·경기 30.5km 개통, 서울·부산 22.7km 구간 공사 중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지역의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 어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기술개발 및 패키지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진 등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고용은 2014년 2,620명 → 2015년 3,346명, 사업화매출액은 2014년 1,321억원 → 2015년 3,62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5년 지방투자 기업(87개)을 통해 고용 2,821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셋째,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방형 창조경제 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 이전한 대학/학과 수가 2014년 20개/43개에서 2015년 22개/51개로 증가하였다. 넷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별 특화모델을 통해 2015년 창업보육 기업 수와 매출증가액이 578개사, 337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특구의 매출액이 2014년 781억원 → 2015년 904억원으로, 신규 고용은 2014년 734명 → 2015년 902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섯째, 6차산업화, ICT기술 보급·활용 확대 등을 통한 농촌의 신규 일자리가 2014년 2,550명에서 2015년 3,070명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 신규고용 2,804명, 5,175억원 사업화매출 달성 경제협력권산업 : 153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 발굴, 1,500개 지역기업 지원

실천과제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13,464명(60.8%) 취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도입 후 고용률 : ('14) 65.3% → ('15) 65.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최고대비 기술수준 : ('14) 24.3% → ('15) 25%
	지역 SW산업 : 매출 2.7조원(전년대비 20% 증가), 고용창출 1,807명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방투자 기업 유치 건수 : ('14년) 89개사 → ('15년) 87개사
	보조금 수혜기업의 신규고용 : ('14년) 2,909명 → ('15년) 2,821명
	보조금 수혜기업의 투자이행률 : ('15년) 82.9%(투자액 1조 1,056억원)
	FDI 유치 : ('14) 190억 달러 → ('15) 209억 달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건수 : ('14년) 7건 → ('15년) 9건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학연 협의체/참여자 : ('14년) 71개/7,512명 → ('15년) 78개/8,035명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학과 이전 : ('14년) 20개/43개 → ('15년) 22개/51개
	혁신산업단지 지정(15개),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완료(1차 4개),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3개 부처 10개 사업 합동 공모로 17개 산업(23건) 지원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 3개 센터(군산, 김해, 청주) 준공, 7개 센터 운영(누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443km 건설(누계), 156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누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수 : ('14) 8개 → ('15)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창업보육 기업수/매출증가액 : ('15) 578개사/337억원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15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R&D조사·분석 수행
	대학TLO 기술이전 : ('14) 1,605건 → ('15) 1,953건(26.7%↑)
	대학TLO 기술이전 수입료 : ('14) 400억원 → ('15) 490억원(22.5%↑)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 ('14) 5개 → ('15) 7개(40%↑)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 ('14) 201개 → ('15) 271개(34.8%↑)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 매출액 150억, 비용절감 78억, 특허출원 및 등록 43건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누계) : ('14) 89개 → ('15) 160개
	연구개발특구 신규고용인원 : ('14) 235명 → ('15) 259명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60분→30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완료 : 136개 (총 154개)
	혁신도시 조성부지 분양률 : ('14) 82.4% → ('15) 88.9%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외자 實투자 : ('14) 3,955억원 → ('15) 1조3,634억원
	6차산업 창업 경영체 수 : ('14) 392개소 → ('15) 472개소
	6차산업 일자리 창출 : ('14) 2,550명 → ('15) 3,070명
	6차산업 인증사업자 : ('14) 379개소 → ('15) 802개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매출액 1조 2,358억원, 고용인원 7,950명 창출
	어촌자원복합산업화 : 매출액 741억원, 고용인원 644명
	로컬푸드 직매장 : 103개소, 매출액 1,659억 창출
	친환경농업 단지/지구 : ('14) 44개소/1,112개소 → ('15) 48개소/1,159개소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 : ('14) 29.0% → ('15) 36.3%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환경 16.2% 개선, 어패류 서식환경 79.0% 개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개소 완공 : 군산(수산물연구가공), 영덕(로하스수산식품거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매출액 증가율 : ('14) 66% → ('15) 76.5%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지역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 학습체제 구축' 등의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방의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해 BK21플러스 지원 대학원생은 2014년 4,900명에서 2015년 6,500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은 2014년 17.3%에서 2015년 18.2%로 향상되었고, 그 결과 특성화분야 지방대학과 지방전문대학의 취업률이 각각 74.1%, 69.8%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지역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연구인력, 현장인력 육성을 통해 등록특허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이 2014년 47.1%에서 2015년 61.5%로 개선되었고, 연구비 1억원당 취업자수 또한 2014년 0.51명에서 2015년 0.67명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평생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평생학습지원 대학(학과)은 2014년 35개(156개) → 2015년 56개(194개), 행복학습센터는 2014년 180개 → 2015년 276개로 확대되는 등 지방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BK21플러스 지원 대학원생 : ('14) 4,900명 → ('15) 6,500명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취업률 : ('15) 74.1%
	특성화 전문대학 취업률 : ('14) 64.8% → ('15) 69.8%
	LINC 4년제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14) : 17.3% → ('15) 18.2%
	산학협력 선도대학 : 가족회사 57,463개사, 기술이전 계약 2,578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 가족회사 20,648개사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록특허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 ('14) 47.1% → ('15) 61.5%
	연구비 1억원당 취업자수 : ('14) 0.51명 → ('15) 0.67명
	학교기업 현장실습생 수 : ('14) 8,817명 → ('15) 9,702명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운영 : 12개교, 721명(총원율 57.8%)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학습지원 대학(학과) 수 : ('14) 35(156)개 → ('15) 56(194)개
	지방대학 인문학 참여 시민수 : ('14) 178,148명 → ('15) 182,411명
	성인학습자 친화형 관련 학과 개편 : 47개 대학, 153개 학과 개편
	평생직업교육 대학 : 10개교, 772개 과정 운영, 17,428명 배출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생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며,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문화예술 공동체 형성지원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향유 수혜자 (2014년 38,350명 →) 2015년 40,210명, 공연 관람객 (2014년 59만명 →) 2015년 64만명, 종합형스포츠클럽 운영수 (2014년 19개 →) 2015년 30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의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방문객 (2014년 223만명 →) 2015년 310만명, 관광두레 참여 주민수 (2014년 1,111명 →) 2015년 1,466명 등의 각종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비율이 (2014년 48.1% →) 2015년 52.3%, 생태관광지역이 (2014년 17개소 →) 2015년 20개소, 농업유산지역이 (2014년 4개소 →) 2015년 6개소로 확대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8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화도시 : ('14) 1개소 → ('15) 7개소(신규 6개)
	문화마을 : ('14) 2개소 → ('15) 13개소(신규 11개)
	폐산업시설 신규 조성 : ('14) 4개소 → ('15) 6개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대구 패션사업 디자인개발 : ('14) 615건 → ('15) 610건
	지역문화향유 수혜자 수 : ('14) 38,350명 → ('15) 40,210명
	공연 관람객 수 : ('14) 59만명 → ('15) 64만명
	종합형스포츠클럽 운영 : ('14) 19개 → ('15) 30개
	생활체육 광장 조성 : 434개소 운영, 59,020회 활용(누계)
지역 관광산업 육성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529개 단체, 4662회 순회공연, 관람객 200만명
	여수세계박람회장 방문객 : ('14) 223만명 → ('15) 310만명
	관광두레 참여 주민수 : ('14) 1,111명 → ('15) 1,466명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 ('14) 223만명 → ('15) 318만명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조성 이용객수 : ('14) 88만명 → ('15) 100만명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우수외식업지구 운영으로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 증가(16.4%↑), 전체 평균 매출액(11.1%↑)
	생태놀이터 조성 : ('14) 12개 → ('15) 35개
	생태하천 복원비율 : ('14) 48.1%(1,149km) → ('15) 52.3%(1,250km)
	생태관광지역 지정 : ('14) 17개소 → ('15) 20개소
	생태탐방체험시설 : ('14) 5개소 → ('15) 7개소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기술지원 : ('14) 1,058개 → ('15) 1,125개
	농업유산 지정 : ('14) 4개소 → ('15) 6개소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의

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등 3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2014년 203개 시군구 → 2015년 214개 시군구에 구축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2015년 1,660명 추가 선발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4년 29,979개 → 2015년 32,882개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통해 드림스타트 설치율 (2014년 219개 시군구 → 2015년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소년시설을 (2014년 건립 24개소, 기능보강 52개소 → 2015년 건립 33개소, 기능보강 75개소로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지원(2014년 11개소 → 2015년 12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2014년 82개소 → 2015년 104개소)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5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 ('14) 203개 시군구 → ('15) 214개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 ('14. 7) 1,177명 선발 → ('15) 1,644명 선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적 : ('14) 29,979개 → ('15) 32,882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14) 212개소(광역 11, 기초 199) → ('15) 224개소(광역 13, 기초 209)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14) 63.5 → ('15) 66.3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 ('14) 68.0 → ('15) 70.3
	드림스타트 설치 : ('14) 219개 시군구 → ('15)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임산부 수 : ('14) 107,127명 → ('15. 11) 127,758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 ('14) 3,989개소 → ('15) 4,113개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 만족도 : ('14) 85.8점 → ('15) 87.4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수혜자 : ('14) 187,518명 → ('15) 197,212명
	청소년시설(개소) : ('14) 건립 24, 기능보강 52 → ('15) 건립 33, 기능보강 75
	방과후 아카데미 : ('14) 200개소/8,043명 → ('15) 244개소/9,490명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2,629개소(신규 150) 설치·운영: 165,743명의 아동 이용
	분만산부인과 : ('14) 11개소(신규 2개소) → ('15) 12개소(신규 1개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14) 신규 1개소 → ('15) 신규 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 ('14) 82개소 → ('15) 115개소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1)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년7월)를 통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새뜰마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5대 중점분야(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리 연계, 상하수도·가스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원의 공동 개

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3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다. 이전에는 시·군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 관계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지원한 반면에, 2015년의 신규 선정 과제는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5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5년 선정결과(42개)

구분	사업명	참여 지자체
수도권	아차산 문화벨트	서울 광진, 중랑, 구리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	부천, 인천 부평, 계양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	고양, 파주, 김포
강원권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화천, 홍천, 양구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속초, 양양, 고성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평창, 영월, 정선
충청권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인제, 양구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	대전, 옥천, 계룡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세종, 공주
	공예디자인 창조벨트조성사업	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키즈 라이브리카페 조성 및 운영	제천, 단양
	청개구리 프랜딩행복생활권 사업	영동, 보은, 옥천
	창의적 생태복원 및 자원화를 위한 꿀벌랜드 조성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내포 역사·문화 투어사업	홍성, 예산
	서해안 평생안전 체험교육센터 설치	당진, 서산, 태안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공주, 부여, 청양
호남권	발효 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논산, 계룡, 금산
	생활권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체계구축	광주, 나주
	국산보리(맥아)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군산, 김제
	Berry-Good 소스산업 육성	고창, 정읍, 부안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남원, 임실, 순창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무주, 진안, 장수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기능 교육활동 운영	곡성, 구례, 담양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	함평, 영광, 장성
영남권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	강진, 영암, 장흥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부산, 김해, 양산
	수경(壽慶)지역 ECO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HI-UP프로젝트	대구 수성, 경산
	울산~경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울산, 경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	안동,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문경, 상주, 예천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청도, 경산, 영천
	의성·군위 여성 유희 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의성, 군위
	낙동정책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	영양, 영덕, 울진

구분	사업명	참여 지자체
영남권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	함안, 창원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	고성, 통영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구축	함천, 밀양, 창녕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	함양, 거창, 산청
제주권	주민 행복드림(Dream) Job 프로젝트	서귀포시, 제주시
기타 (도경제)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	김천, 영동, 무주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영주, 단양, 영월

(2)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전국민 대상의 명칭 공모전(2015년 5월)을 통해 기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변경)은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농어촌지역에 1,200개, 도시지역에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년 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새뜰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원, 100가구 최대 35억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지원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원 이내, 슬레이트주택은 동당 24백만원)를 적용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3차 지역발전위원회(2015년 3월 24일)’를 통해 전국 162개(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의 사업신청 지역 중에서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2015년에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잠정)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 선정되었다.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결과(2015.3월)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총계	55개소	30개소	경기 (3)	파주	포천, 양주
서울 (1)	-	종로	강원 (11)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인제, 정선, 철원	강릉, 태백, 동해, 영월
부산 (4)	-	영도, 서구, 사상, 사하	충북 (8)	괴산, 보은, 옥천, 음성, 증평, 청주, 충주	제천
대구 (2)	달성	중구	충남 (6)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논산
인천 (3)	강화	동구, 부평	전북 (10)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전주, 익산
광주 (2)	-	남구, 서구	전남 (12)	곡성,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암, 완도, 장흥, 해남, 화순	여수, 순천
대전 (1)	-	대덕	경북 (9)	군위, 상주, 안동, 예천, 울진, 의성, 청송, 칠곡	김천
울산 (1)	-	남구	경남 (10)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양산, 창원, 진주
세종 (1)	-	조치원	제주 (1)	-	제주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5.3월)

3.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실적

(1)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점검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HOPE프로젝트)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자율형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서 시군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와 함께 시도 단위의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화발전프로젝트는 시·도별로 미래성장동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 비전 및 발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특화분야와 관련한 각종 세부사업(기존사업, 신규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한편,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의 확정 시, 시·도에서 신청한 프로젝트 중에서 지역공약과 연계한 프로젝트(15개 프로젝트 중 지역공약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는 11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안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9월에 개최된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도별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15개 프로젝트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80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였다. 세부사업은 지역 발전전략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공약 연계여부 등의 프로젝트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굴·제시한 프로젝트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다.

특화발전프로젝트는 지방·중앙간 역할분담,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중앙정부는 총 15개 프로젝트, 80개 세부사업에 5년간(2014~2018년) 총 2조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중앙간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프로젝트의 기획, 입지 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핵심기반 조성, 지역기업들의 기술개발, 창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시설 투자 및 고용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업을 주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제10차, 2014년 9월)에서 최종 확정된 특화발전프로젝트는 2014년 12월에 확정·공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년~2018년)에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인프라 조성, R&D 신규 사업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5년에는 3,7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2016년 4,538억원, 2017년 4,705억 원, 2018년 4,7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1-2-3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선정 현황(2014.9)



부산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 조성
대구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천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 · 콘텐츠 산업 육성
대전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울산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강원	건강 · 생명 클러스터 조성
충북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충남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전북	농생명 허브 조성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
경북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융합수 융합산업 육성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프로젝트 목표와 세부 사업별 목표간의 연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성과목표의 타당성, 세부사업간 협업, 예산집행 실적 등을 중점 점검하였는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의 차년도 예산배분 및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1-2-12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중간점검 결과(2015.6)

지역	프로젝트	점검 결과
부산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 영상콘텐츠밸리조성사업(에타 철폐 후 사업규모 축소·변경, 영진위 이전 난항)
대구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인천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 로봇랜드조성사업(로봇산업진흥시설 이외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은 투자유치 지연으로 사업차질) · 송도글로벌캠퍼스 2단계(에타진행기간 및 사업예산 반영시기 고려할 때 기간내(∼'18년) 성과창출 어려움)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육성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문화전당 건립 외 세부 콘텐츠 구축 등 추진상황 미흡) · 3D콘텐츠미디어산업클러스터(부산시 영상·디지털콘텐츠와 차별성 부족)
대전	국방ICT융합 기업생태계	· 민군겸용기술사업(국비의 67.3% 비중이나, 대전시와 무관함) · 국방ICT융합 R&D/비R&D(기존사업과 연계 미흡)
울산	친환경전지 융합산업 육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경기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 임진강유원지 조성(소관부처와 사업추진 협의 지연)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소관부처-지자체간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사업차질 우려)
강원	생명·건강 클러스터조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충북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충남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전북	농생명 허브 조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경북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	· 휴먼ICT중소기업창조생태계(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용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중복성 문제로 재검토 중)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제주	융합수 융합산업 육성	· 계획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2)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선정

그간의 지역경제 대책이 재정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경직된 규제와 잔존, 기업 투자 유치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2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발전방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5년 10월)에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2개)을 상향식으

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폐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에 14개 시·도(수도권 제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특례(안)·재정지원사업(안) 제출 가이드라인(2015년 11월 2일)’에 의거하여 39개의 지역전략산업(안)을 제출(2015년 11월 30일)하였고, 중앙부처(산업별TF 구성·운영)는 기업 및 인프라 분포 등 지역의 산업경쟁력,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의 우선 선정, 시·도간 산업의 중복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27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산업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도) → 지자체 선정·제출(시·도→중앙) → 관계부처 조정(중앙↔시·도)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통해 시·도별로 2개(세종시 1개)의 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표 1-2-13 시·도별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

지역	산업1	산업2
부 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 구	IoT 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광 주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 전	첨단센서	유전자의학
울 산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3D프린팅
세 종	IoT 기반 스마트계측	-
강 원	헬스케어	관광
충 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자동차부품
충 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 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	무인항공기
전 북	탄소섬유	농생명
경 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 북	스마트디바이스	타이타늄
제 주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제18차 지역발전위원회 안건 -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선정(안)(2015.12.4.)

주 : 밑줄 친 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임.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014년 기준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종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유사하게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었다.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광역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균형발전기반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1월 7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하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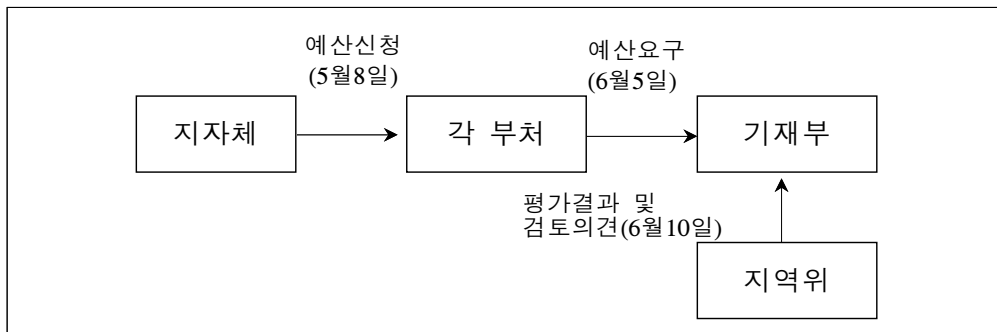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기초생활권 관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15년 기준)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36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15년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13개)
		②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 개발 등(4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등(5개)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5개)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5개)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등(2개)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3개)
		⑪어업기반정비	· 지방어항 등(10개)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5개)
		⑬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4개)
	산림청	⑮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⑯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숲길 조성·관리 등(8개)
		⑰임도시설(국유림 제외)	· 임도시설
	산업부	⑱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6개)
	중기청	⑲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여가부	⑳청소년시설 확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등(2개)
	환경부	㉑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5개)
		㉒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지역생태계 복원 등(4개)
		㉓생태하천복원	· 생태하천 복원
	국토부	㉔대중교통 지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2개)
		㉕지역거점 조성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2개)
		㉖주차환경개선지원	·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㉗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㉘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고용부	㉙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복지부	㉚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㉛성장촉진지역 개발	· 지역개발 지원 등(2개)
		㉜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지재생 등(4개)
	행자부	㉝특수상황지역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4개)
	농식품부	㉞일반농산어촌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4개)
		㉟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연계협력사업 등(2개)
	안전처	㊱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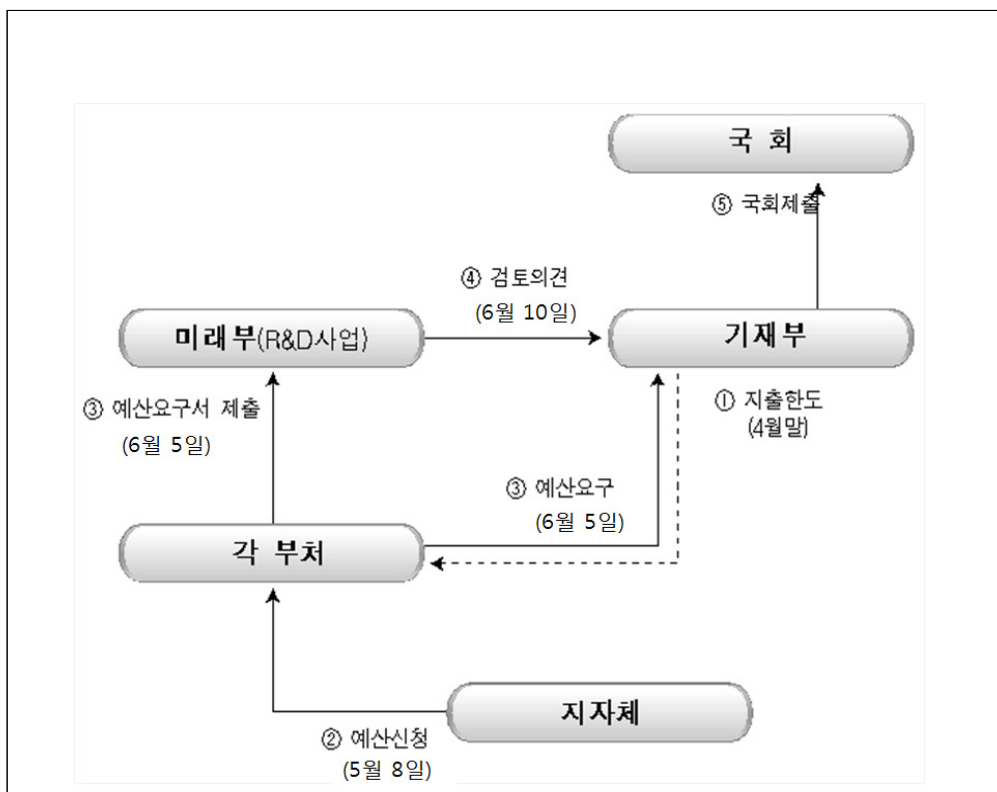
(2) 부처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일부 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 농수산물 유통개선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로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 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국과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전검토 대신,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5년 세입은 주세(31.5%), 일반·특별회계 전입금(61.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2,523억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30,067→32,523억원)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은 6조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55,549→63,686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7,18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7,997→7,180억원)하였다.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합 계	93,613	100.0	103,389	100.0	9,776	10.4
○ 주세 100%	30,067	32.1	32,523	31.5	2,456	8.2
○ 전입금(일반+특별)	55,549	59.3	63,686	61.6	8,137	14.6
○ 개발부담금 등 기타	7,997	8.6	7,180	6.9	-817	▽10.2

(2)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5조원, 경제발전계정 5.4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37조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1조원 등 전년대비 10.4% 증가한 10.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생활기반계정이 29.4%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 및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대폭 투자되었다. 가장 많은 증가는 보건 분야로 1,244.7% 대폭 증가(2014년, 47억원→2015년, 632억원)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도 612.6% 증가(2014년, 564억원→2015년, 4,019억원)하였다. 또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확대되어 1,200억원(2014년 650억원)을 투자하였다.

기능별 세출은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0.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1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4.9%) 등의 순이다. 2014년에 비해서는 보건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총액 감소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4%), 통신(-85.3%) 등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구성비(%)	2015년	구성비(%)	증감	%
	예산		예산			
합 계	93,613	100.0	103,389	100.0	9,776	10.4
○ 생활기반계정	34,773	37.1	44,981	43.5	10,208	29.4
○ 경제발전계정	55,398	59.2	53,686	51.9	-1,712	▽3.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443	3.7	3,701	3.6	258	7.5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1,022	1.0	1,022	-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구성비(%)	2015년	구성비(%)	증감	%
	예산		예산			
합 계	93,613	100.0	103,389	100.0	9,776	10.4
일반공공행정	2,136	2.3	2,253	2.2	117	5.5
공공질서 및 안전	822	0.9	3,112	3.0	2,290	278.6
교육	8,571	9.2	8,869	8.6	298	3.5
문화 및 관광	6,768	7.2	7,393	7.2	625	9.2
환경	8,357	8.9	8,742	8.5	385	4.6
사회복지	564	0.6	4,019	3.9	3,455	612.6
보건	47	0.1	632	0.6	585	1244.7
농림수산	20,358	21.7	21,038	20.3	680	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975	17.0	15,432	14.9	-543	▽3.4
교통 및 물류	15,074	16.1	16,561	16.0	1,487	9.9
국토 및 지역개발	13,752	14.7	13,615	13.2	-137	▽1.0
과학기술	915	1.0	1,683	1.6	768	83.9
통신	273	0.3	40	0.0	-233	▽85.3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2004년 추진실적)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5년에는 2014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피평가자의 수용성 제고, 평가결과의 활용성 강화,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피평가자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 평가의 효율성은 보다 제고하였다. 사업단 위 평가는 부처·지자체의 자체평가에 의한 확인·점검 위주의 상위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중복사업은 제외하였다. 생활기반계정의 경우,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단위를 기존 내역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평가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평가지표의 구체적 객관화를 통해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정성적 평가지표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개편하여 객관성을 제고하였고,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등 정량적 성과평가를 강화하였다. 타 평가(E&D평가, 재정자율사업평가)와의 정합성과 상대평가의 변별력 확보 등을 감안해, 사업별 평가등급비율을 일부 조정(미흡비율: 25%이상 → 10%이상)하였다.

셋째, 상위계획 진단을 통해 정책제언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과 포괄보조 운영현황 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하였다. 계정별·분야별로 사업의 우수·미흡 등 평가 등급을 모두 공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확충하였다. 평가자문단내에 계정별 분과위원회뿐 아니라, 별도의 심층평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컨설팅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지특회계(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4년에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 시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의 4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5년 지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4년 5월)의 체계에 따라 경제·제주계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공정률 중심의 일부 SOC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 단위로 평가하였으며, 총 7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20개 포괄보조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4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513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5단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제주계정은 사업군내 평가대상사업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생활·제주·세종계정은 포괄보조사업별 지자체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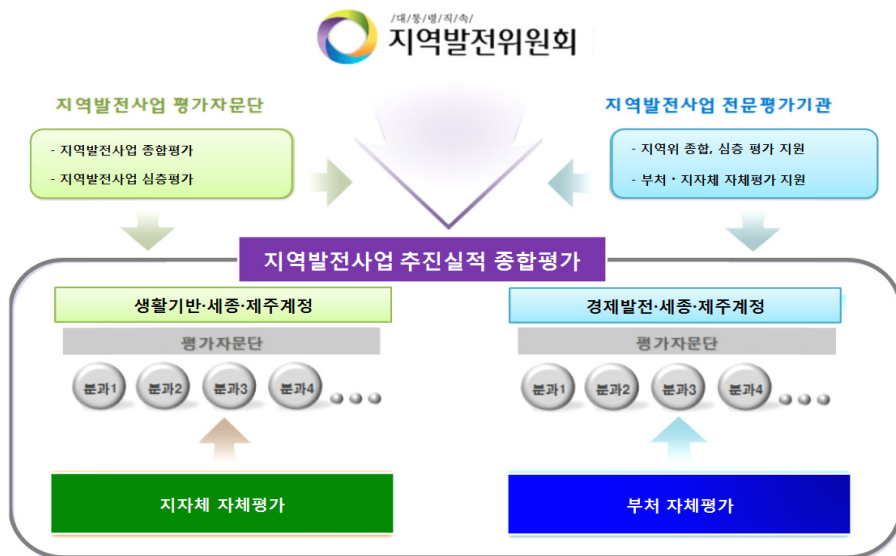
2014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제시하였다. 다만, 총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신규사업은 평가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계정 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관련기관 지원, 타 평가(미래부 R&D 평가, 기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중복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생활계정 사업 중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별도의 심층평가를 추진하였다.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에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운영되던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평가방법과 절차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이의신청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부처의 자체평가는 부처별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방식의 자체평가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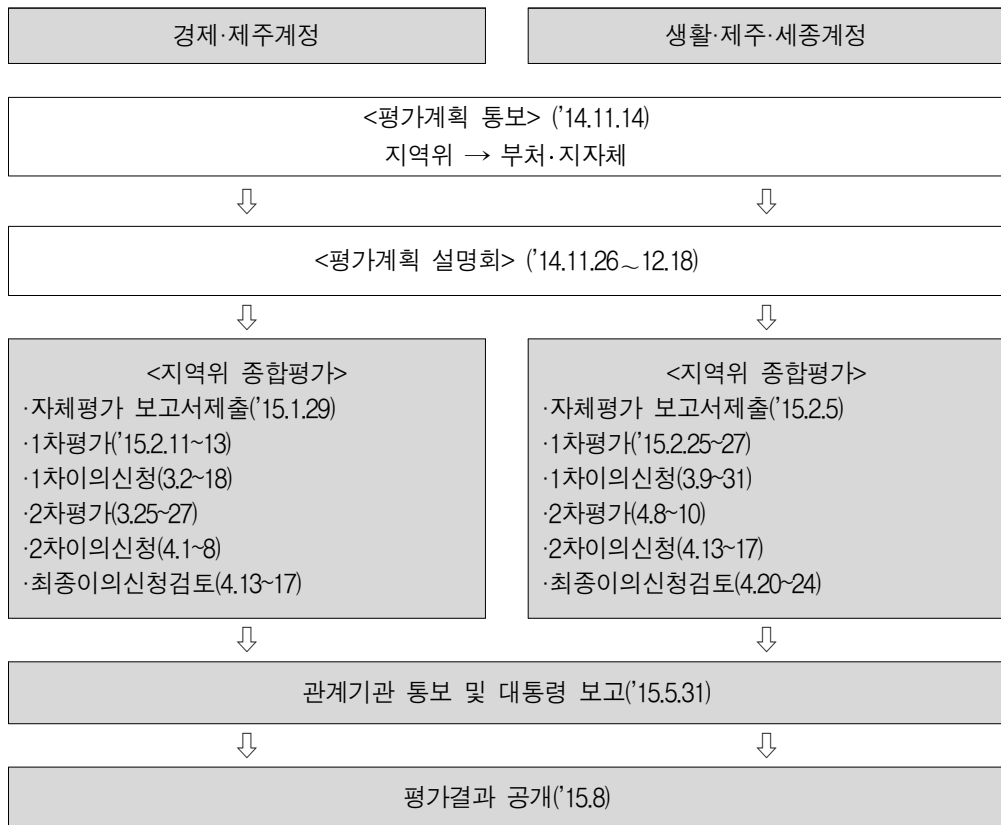
로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수가 6개 이상인 부처만 상대등급을 부여하고, 5개 이하인 부처는 절대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3년 평균 예산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소액사업이나 종료사업은 평가등급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사업의 경우,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시·군·구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로 자체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개별 포괄보조사업별로 기획·집행·성과의 각 세부지표별 자체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요소별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시·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존 평가단위였던 내역사업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자율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지 않고, 포괄보조사업 보고서 작성과 자체 예산편성 등 지자체의 자체 성과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종합평가는 1차 평가, 1차 이의신청, 2차 평가, 2차 이의신청, 최종이의신청 평가로 진행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부처·지자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분과별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제주계정사업 평가시 부처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한 부처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인정하고, 부적절한 부처에 대해서는 사업별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사업 평가시에는 별도로 포괄보조금 종합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운동을 통해 사업성과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1차 평가 후 잠정결과를 부처·지자체에 송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보완 등의 1차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2차 평가에서는 이의신청 내용과 추가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사업등급을 확정하였다. 경제·제주계정사업 평가시 자체평가와 지역위 평가 의견차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등급을 부여하고 확정하였다. 부문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투자방향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고,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사업 평가시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 보완자료를 확인하고 시·도, 시·군·구별 포괄보조사업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는데, 주로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기획, 추진체계의 우수성, 타 포괄보조사업간 연계, 성과관리체계, 종합성과에 중점을 두어 사례를 발굴하였다. 2차 평가 후 잠정결과를 부처·지자체에 송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보완 등의 2차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의신청은 C, D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가능하며, 평가 과정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평가결과(안)

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든 이의신청 사항은 부처 및 지자체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대면검토를 통해 평가자문단이 의견을 듣는 사전검토를 거치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평가자문단 분과장 회의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하였다.

2014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였다.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경제·생활계정 모두 사업별 성과는 비교적 우수하나, 종합적 성과분석·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강화하여 주민체감형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제주계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 달성과 그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도는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성과분석과 환류체계 구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경우, 내역사업 단위의 성과는 비교적 우수하나, 지역 자율성 확대, 주민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경제·제주계정사업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산업육성, 농어촌개발 등은 전반적으로 경제성(매출·고용)이 양호하나, 단지조성·센터구축 등 H/W사업, 문화관광권 육성사업 등은 성과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 자체평가와 비교해 동일(51%)하거나 1단계 하락(31%), 등급부여 사업수는 산업부·교육부·미래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을 통해 자체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한 환경부(2개), 국토부(SOC 8개)는 자체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표 1-3-6 주요 부처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비교

부처명	자체평가								종합평가								신규	사업수
	S	A	B	C	D	달성	미달성	S	A	B	C	D	달성	미달성				
미래부	1	2	4			1			2	4	1			1				8
교육부	1		4	1				1		4	1							6
문체부		4					1			3		1		1	1			6
산업부	2	3	12	1	1	1		1	2	14	1	1	1		1			21
국토부		1	1			7	1			2			7	1				10

사업별로는 ‘숲길네트워크구축’,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문화관광육성’ 분야의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역주민 수요 적기 대응,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우수한 반면,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사업은 지자체 간의 협력미흡, 성과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사업이 체계적 성과관리, 우수한 경제사회적 성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 1개소 사업포기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제주계정도 총 513개 포괄보조사업을 5단계(S, A, B, C, D)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주민 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성과중심의 지표로 개선, 지자체의 포괄보조단위 사업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조 개선, 자체 평가체계 등은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우수 시·도로 평가되었으며, 지역 특성 반영 및 지역사회 공감대형성, 적절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경남 거창, 대구 남구, 경남 합천, 강원 고성 등이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으며, 상위계획과의 연계, 지역특성 반영, 환류체계 구축 및 효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포괄보조단위 사업추진이 양호하다는 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인센티브 배분시기에 맞춰 공개·포상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상호 학습 및 사업 개선을 유도하였다.

종합평가의 후속조치로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우수 사례의 지역 확산·전파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총 24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3개 기관은 지특회계운영이 우수한 지자체로, 충남 홍성군, 경남 거창군 등 6개 기관은 포괄보조사업 우수사례로, 울산 남구, 충북 증평군 등 15개 기관은 내역사업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4개)

분 야	지자체
지특회계운영 우수(3개)	경기, 전북, 경남
포괄보조사업 우수(6개)	경북, 대구 남구, 강원 고성, 충남 홍성, 경남 거창, 경남 합천
내역사업 우수(15개)	서울 구로, 울산 남구, 강원 영월, 충북 증평, 충남, 전남, 부산 동래, 대전, 제주*, 경북 군위, 경남 함안, 전북, 경기 가평, 전남 목포

주 : 제주는 2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사례에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증평군은 김득신 생애 이야기를 통한 지역마케팅 및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협소한 폐철로를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켜 경관 개선과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한 목포시의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의 사례가 우수하였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2015년 8월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24개의 우수지자체와 31명의 우수담당자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처음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31명도 선정하여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시 사례 발표, 지자체 공무원 교육, 패널 전시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수사례집『우리가 꿈꾸는 지역행복 이야기』로 발간하여 지역희망박람회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시도발전연구원, 생활권협의회 등 지역발전 유관기관에도 배포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

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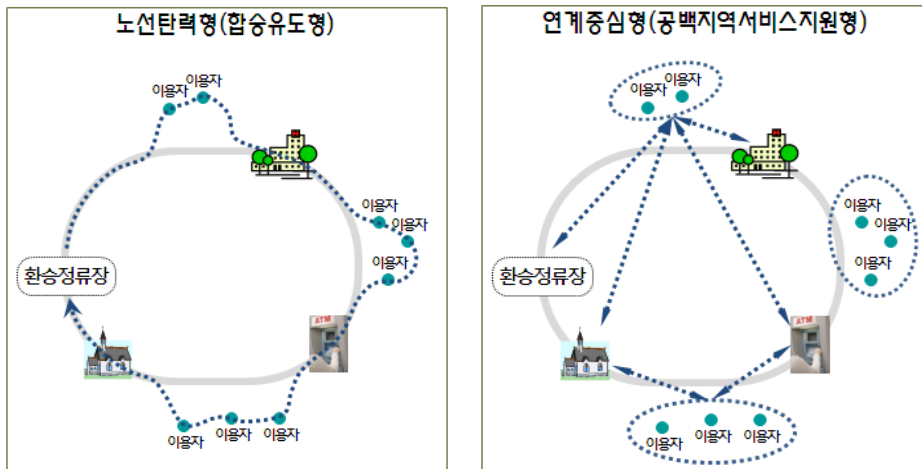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서울(1)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1)	인천+부천+김포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11)	고양+파주+김포 / 안산+시흥 / 군포+의왕 / 안양+과천 / 성남+용인+광주+하남 / 수원+용인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평택+안성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오산+화성 / 포천+연천+강원철원
강원(5)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인제+양구 /
충북(5)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옥천+보은+영동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 홍성+예산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완도 / 장성+영광+함평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양양 / 영주+봉화 / 상주+문경+예천 / 경산+청도+영천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울진+영양+영덕 / 김천+충북영동+전북무주 / 영주+충북단양+강원영월
경남(5)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거창+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특광역시+제주 분과)

2013년도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선정 및 65,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20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초 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의 주민 또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민도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보완적·대체적 수단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2013년도『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지역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주 : 도로망+수요+통행형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6개 시군,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 시군,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3개소 등 총 20개 시군 21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15년도 추진성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전 41점

→ 도입후 89점)와 농촌지역주민의 월평균 외출횟수(도입전 4.3회 → 도입후 8.7회)가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전 평균 22분 → 도입후 5.6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전 17.1분 → 5.1분)이 1/4 수준으로 감소되어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모델 사례집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1,000부) 등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20개 시군 이외에도 70개 시군(2014년 9개 → 2015년 70개)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을 자체 도입운행하고 있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그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1,337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계속사업	86,396	83,608	85,996	91,850	84,862	91,788
신규사업	14,941	12,792	10,400	16,747	18,305	12,379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군·구)

구분	개수	도시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17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1	청주시
충남	1	천안시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1	전주시
전남	1	목포시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1	포항시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2	창원시, 김해시
강원	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세종	1	세종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4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주거지재생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중심시가지재생 사업은 해당 도시만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도시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상업, 환경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셋째,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은 마을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넷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운영, 지역 및 사업을 위한 홍보·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에서 지역자산(수변 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

절차	주관부서	내 용
예산신청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마련(→ 중앙, 광역시·도)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교육
	↓	
예산배분	시·군·구	예산신청
	↓	
	시·도	예산신청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예산신청, 신규사업제안서 설명회 (지자체 : 사업제한 설명, 국토부 : 평가위원회 평가)
	↓	
	국토교통	예산신청 검토의견서 및 예산배분 요청(→ 기재부)
	↓	
사업수행	기획재정부	지자체 별 예산배분
	↓	
	시·도, 시·군·구	지자체 매칭 차년도 예산반영
	↓	
사업평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	
	시·도	사업계획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시·도, 시·군·구	사업 착공보고(→ 국토부)
	↓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시·도, 시·군·구	사업 완료보고
	↓	
	시·군·구	사업성과 자율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	
	시·도	자율평가 보고서 취합 제출(→ 지역위)
	↓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검토의견 제출(→ 지역위)
	↓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성과 평가
	↓	
	기획재정부	인센티브 결정, 차년도 예산반영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5년도)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83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구로디지털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로구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마포구		경의선(선형의 숲) 공원 조성사업
	성북구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중구	지역역량강화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남구		인천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남동구		소래구역 기반시설확충사업(1단계)
	동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문화서로, 용천로)
	부평구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부평구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중구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경기도	담양성당	지역역량강화	담동성당 일원관광자원화 사업
	남구	지역역량강화	송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과천시	지역역량강화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자』프로젝트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속 군장마을활활재생 프로젝트
			주민참여를 통한내각마을 재생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남양주 그린베이스조성사업
	부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
			부천역 북부광장문화커뮤니티 조성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 Fanta Box 조성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성남시	지역역량강화	부천시 원미공원(역곡지구) 조성
			움직이는 문화공감 3.0 부천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 UP, 활력 UP“DAN(丹)”
			매산동 수원형도시 르네상스
			거북시장(느림보타운)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사업
			매향동 노후주택 밀집지역 자활환경 조성
	시흥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희망수원의 창조경제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재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다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등기소~하상공간종단선형 개량공사
	안산시	지역역량강화	ART & ECO CUBEProject
			천지인 마을만들기
			사이좋은 마을만들기
			테마가 있는 오뎬장터만들기
	오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랑동 문화마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숨쉬는 교육도시 조성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
	경기용인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마평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낙후된 농촌지역생활환경정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
			추동 ‘웰빙 공원’ 조성사업
	경기의왕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기의정부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경기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83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전광역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대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육골지구)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성2, 대동2, 대신2, 소재, 천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유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대전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선화동『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풍세면)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
			추억의 풍물 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 특성화를 위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보강개발
	광주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다시 쓰는 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 '다하기 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광주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
			오카리나 주민참여형크로스컬처
			문화복지도시조성
			주거환경정비사업
	광주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4구역)
			학운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표수보강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
	광주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 공동화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도동 풍물마을 만들기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복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표수보강개발
			만호지구 주거지재생
			도심 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 조성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풍납초교 인근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강당 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보행중심 테마거리조성사업
			동동동 마을재생코디사업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83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창조지역사업)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사업 "레드블록" 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연암 서당골 여·행 농촌생활환경정비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 날외골 만들기사업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 명품단독주택지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남산화원 둘레길조성사업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술술술, 빨간구두속보물찾기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어방구역) 진영 좌곤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봉황대유적지 주변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사업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남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노후주거지재생 기반확충사업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월영광장 조성사업 창원 들녘 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송라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문성 새마을구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봉산 해병대구역) 홍해약성선(농도301)확포장	
			강원도	동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빈집 정비사업 햇빛 어울거리 조성
											속초시
				태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83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수현거리조성사업
	금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장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체험마을조성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도로 초량동 마을활력증진사업
	동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동래 고도심 재창조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정터널 상부공간연결사업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철로변 도시재생프로젝트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사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상로광장 가로환경개선사업
			지성이면감천 문화마을조성사업
			하단오거리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존 조성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대학캠퍼스&임시수도로재창조사업
	영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래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중구오름길문화만들기
울산광역시	울산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큰 마루터 기상사업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반송 창조문화그린웨이조성
	울산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조성사업
			남산 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울산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2구간)
			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울산울주군	도시생활환경개선	주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호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살맛나는 농촌생활환경정비
	울산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향교일원 구시가지기반시설확충
			한글마을 조성
	울산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함월 드림게이트
			달빛 누리길
			구도심 녹지공간 조성

(2)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163개 시·군)을 특성별로 도시화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해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 특성과 부처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이 중 낙후도가 하위인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70개 시·군, 2009년 9월)하고 2010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70개 시·군 중 66개 시·군은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시·군과 동일하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옥천군, 예산군, 정읍시, 밀양시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9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시에는 각 2개 시·군이 지정(홍천군, 태안군) 및 제외(정선군, 무안군)되었다.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	70개 시·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 도서에 대하여 생산·문화·생활 등 성장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왔다. 2015년 2,091억 중 지역개발지원(구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506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8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지역개발지원(구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370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21억원을 비롯하여 총 2,0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 지역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지역개발사업 발굴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공모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지역수요맞춤지원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는 발전형 및 거점형 각 2개 지구를 선정하여 발전형 투자선도지구에 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참고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발전형), 부담금 감면, 100억원 범위 내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구분	지구 시·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	’13	’14
계 (7개도)	60	7	7	6	6	7	6	8	4	2	7
	78	16	11	11	10	9	6	8	4	2	7
강원	7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	철원		
	12										
충북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5										
충남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 금산	-	-	부여	예산
	7										
전북	8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 김제	부안		정읍
	9										
전남	9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담양/ 나주/ 해남
	14										
경북	11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 울릉	청도/ 군위/ 고령	성주		
	17										
경남	6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창녕/ 고성
	7										

(3)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물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2015~2019년)[중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116개 시·군
경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합천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을 지원, 2013년도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 2014년도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지원, 2015년도 116개 시·군, 1,515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2개 시·군, 1,548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여 농산 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도서지역 19개 시·군·구 185

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2015년에는 242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529억 원을 투자하였다.

표 2-1-9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52,912	189,401	63,511	
기초생활기반확충	159,574	116,245	43,329	
지역소득증대	73,205	57,012	16,193	
지역경관개선	18,778	15,023	3,755	
지역역량강화	1,355	1,121	234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3%로 2014년에 비해 0.8%p(2014년 82.5%) 증가하였다.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51억원을 투자하여 287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10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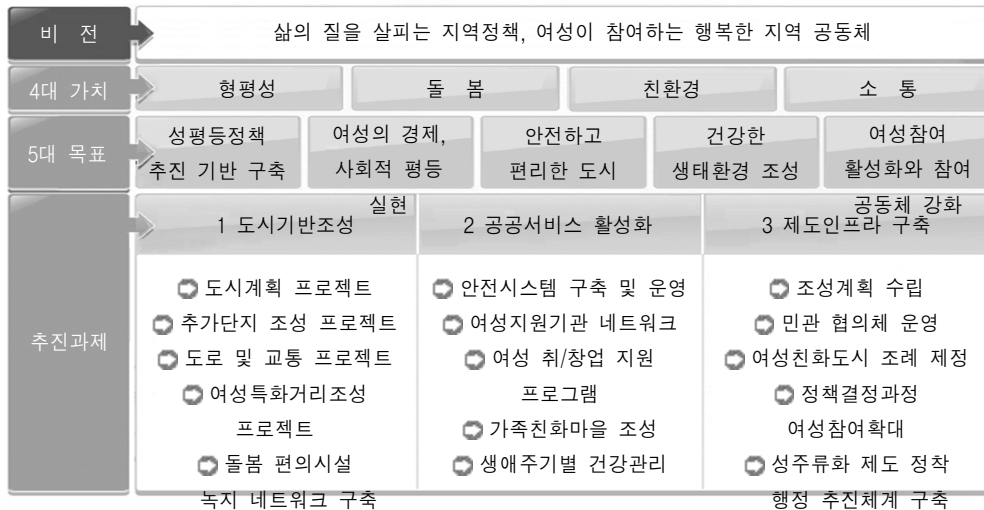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계	287	255,072	189,401	65,671
기초생활기반확충	143	162,390	117,362	45,028
지역소득증대	100	64,737	49,862	14,875
지역경관개선	32	25,861	20,463	5,398
지역역량강화	12	2,084	1,714	370

(5)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확산 사업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첫째는 형평성으로 지역 내 참여의 기회,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돌봄으로 이는 여성의 일로 전가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가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가 적극 분담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는 친환경인데 이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는 소통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

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익산시, 여주시 2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제출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2-1-11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여성친화도시	비 고
(전북)익산시, (전남)여주시	2009년 지정
(대구)중구·달서구, (경기)수원시·시흥시,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2010년 지정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동구·부평구, (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경기)안산시·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장흥군, (경북)영주시, (경남)창원시·김해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지정
(서울)마포구·서대문구, (부산)연제구, (대구)수성구, (경기)의정부시·광명시, (강원)영월군, (충북)제천시, (경북)포항시	2012년 지정
(부산)중구·남구, (인천)연수구, (대전)서구, (경기)용인시, (강원)원주시, (충남)보령시·태안군, (전북)남원시, (경북)구미시·경산시	2013년 지정
(부산)북구·금정구·영도구, (경기)고양시·김포시, (충남)홍성군, (경남)거창군	2014년 지정
(서울)성동구·은평구, (부산)사하구·수영구·부산진구, (대전)동구·대덕구, (경기)부천시, (충남)논산시, (전남)강진군, (경북)칠곡군	2015년 지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공무원(관리자, 담당자), 지역 시민리더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6) 창조지역 사업 확대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은 선진국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확충해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기존의 시설물·SOC중심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자연·환경·문화 등 지역별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볼 필요성

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살린, 살고 싶은 지역개발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초 다음 연도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기재부 등)와 협의를 거친 후, 3월 중순에 관련부처 및 광역 시·도에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통보한다. 시·군·구에서는 4월 말까지 시·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하며, 각 시·도에서는 5월 초까지 해당부처에 신규사업을 신청한다. 해당부처에서는 신규사업 신청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하여 5월 중순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창조지역사업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경에 다음 연도 창조지역 신규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창조지역사업은 “①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②창의적 발상으로, ③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④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⑤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4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은 사업 적합성(20%), 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5%), 추진체계(10%)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H/W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혀 없거나, 미미한 관 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 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5년말 기준으로 95개 사업에 국비 58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 2015년 21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17개, 전남 14개, 경북 12개, 경남 10개, 충남 10개, 강원 10개, 충북 9개, 경기 3개, 대구 3개, 제주 2개 등이며,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등이 각각 1개 사업이다.

2016년 창조지역사업(2015년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121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24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2-1-12 2016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6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자치부	1건	3.3억원(4.3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16건	20억원(71.2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2건	0.4억원(3.6억원)
합 계		19건	23.7억원(79.1억원)

표 2-1-13 2016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19개)

권역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경기권	경기 ○(파주시) 법원을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 집창촌을 재정비하여 전통등가(빛 돌레길)와 전 통등 전시관 조성, 장단콩 두부촌 조성 등	행자부
강원권	강원 ○(영월군)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 성사업	▪ 장돌뱅이 시장 순례행사, 5일장 체험 및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노후환경 개선 등	농식품부
충청권	대전 ○(서 구)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 갑천 만들기	▪ 갑천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개발, 갑천누 리길 조성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국토부
	충북 ○(영동군) 금강과 함께하는 삼도 삼미 삼락 사업 ○(증평군) 도깨비 이야기 학당(學 堂) 만들기 ○(괴산군) 한국형 창조농업 개발사 업	▪ 특산물로 음식체험 상품, 디저트, 도시락 개발, 3 개군 연계 푸드 투어 시범코스 개발	농식품부
		▪ 도깨비 관련 체험학습장, 활동무대, 놀이터 조성, 훈장 양성, 구멍가게 설치 등	농식품부
		▪ 미선나무를 활용하여 절임배추 및 미선포크 개 발, 미선나무 재배 전업농 육성 등	농식품부
	충남 ○(서산군) 문화예술 향기를 머금은 술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 노인대상 사진동아리, 마을디자인 대학, 사진관 카페 운영 등	농식품부
호남권	전북 ○(정읍시) 정읍시 창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 ○(순창군) 동네목수 양성소 (마을 건축학교)	▪ 한옥숙박 및 전통문화예술 체험, 토속음식 판매 (할머니 부엌), 지역민 수공예 교실 및 장터 운 영, 문화축제, 전통주(가양주) 복원·상품화 등	농식품부
		▪ 마을건축학교 운영(체험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등	농식품부
	전남 ○(강진군)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 모니 강진’ 만들기 ○(구례군) 야화(野花)의 베일을 벗 기다.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완도군) 섬, 주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주민공동체 ‘완도 섬 여 행등대’ ○(순천시)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遊遊樂樂) 향림골 만들 기	▪ 하모니 어울마당(음악축제) 개최, 하모니 버스킹 (이동음악회), 강진시장 내 라디오 방송국 운영, 하모니 음악센터 조성 등	농식품부
		▪ 야생화 체험 및 탐사 프로그램 운영, 야생화 재 배 및 상품화 지원, 꽃나물 명가 육성, 야생화 전문인력 양성, 야생화 전시회 등	농식품부
		▪ 섬과 섬을 잇는 연계관광 상품개발, 주민, 관광객 과의 쌍방향 여행정보 시스템 구축 등	농식품부
		▪ 생활밀착형 마을학교 운영, 마을신문 및 마을역 사 책자 제작, 생태창조체험 프로그램 및 그린투 어리즘 운영 등	국토부
영남권	경북 ○(안동시) 벽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날아라! 달동네 ○(상주시) 그림의 미학 국제슬로시 티 『상주명주 전승 및 명품화 사업』 ○(봉화군)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 대!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 운영	▪ 할매네 백화점(실버 프리마켓) 운영, 할매 연극단 구성·운영,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농식품부
		▪ 상주명주 전통기법 육성·전승, 명주짜기 실습장 건립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주한복 패션쇼, 명주테마공원길 조성 등	농식품부
		▪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 생 활목공지도자 양성 등	농식품부
	경남 ○(고성군) 공룡콘텐츠를 활용한 활 력 넘치는 공룡나라 만들기 ○(합천군) 전국 유일의 “대령 군 물” 농촌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 공룡인형극 제작·공연, 공룡콘텐츠 상품개발 등	농식품부
		▪ ‘군물’ 복원 및 재현, ‘군물’을 활용한 공연·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 스토리텔링 개 발 등	농식품부
제주권	제주 ○(서귀포) Archtrail - 아름다운 서 귀포 건축기행	▪ 건축기행 운영, 건축기행 네트워크 구축, 건축기 행 상품 개발 등	농식품부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창조지역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 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완주군에서만 10개 마을에서 두레농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139개의 일자리와 6억여 원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수입 일부는 마을 어르신들 효도관광 등 전체 주민을 위해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농촌형 복지사업이 되고 있다. 완주군 비봉면 평치마을의 평치두레농장 이완상 위원장은 암 투병 중에도 두레농장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산향교가 청소년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부활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개인주의화, 폭력화 등 정서가 불안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예절은 점점 잊어가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청소년들에게 예절을 통한 정서안정과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620년 동안 지역 주민 교육의 장이었던 경산향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옛 전통의 장점을 잇고 발전시켜 지역향교에 녹여낸 경산시의 창조지역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2013년 지원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예절, 유학, 다도에 대해 배우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5개교(유치원 5곳, 초·중·고교 10곳)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유·청소년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호응에 힘입어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 이질감 해소 등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사업 주관부처를 단일화하고 적정한 예산규모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창조지역사업은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부처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로 나뉘어 있고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예산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과제는 창조지역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사이에 창조지역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별화된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

하였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 2014년 13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4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득사업유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2014년의 60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총 66개소를 지원하게 되었고,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 활력 증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지원하게 되었다.

향후 농촌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을 상향 적용하며, 지원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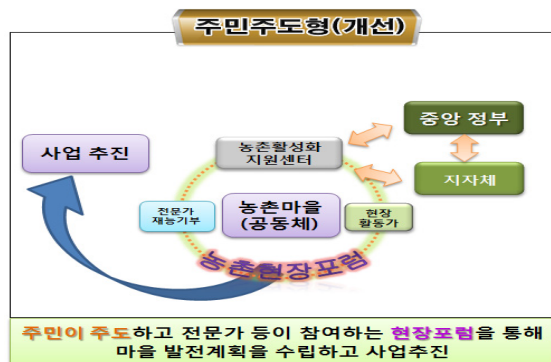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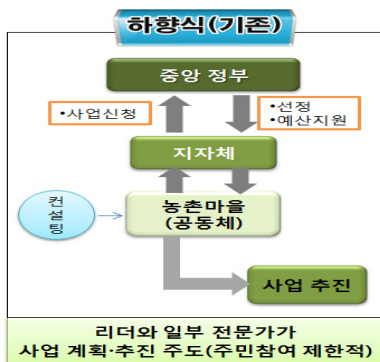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5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잠정치)
농촌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37	234	350	418	418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초급과정 22회 575명, 중급과정 5회 146명, 고급과정 2회 59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3) 귀농귀촌 정착지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 등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귀농·귀촌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제공·상담·교육을, 실행단계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체

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며, 정착단계에서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 하고 대책을 수립·추진중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의 경험과 지식·기술·자본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관점에서는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등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 크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로 이전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그룹 강의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강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5 귀농·귀촌 창업박람회(2015년 6월 5일~7일)’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체험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동체의 리더 역할 수행 사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적 뒷받침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에게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준비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분류·편성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천안연암대학, 서해영농조합법인 등에서는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확대(40개 시·군 → 50개 시·군)하는 등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고창, 영천)를 추가 건립 중에 있다. '2014년 지원된 금산센터는 준공이후 입교자를 모집하여 귀농창업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일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2억→3억)하고, 융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 등 구입을 위한 융자 조건을 개선(3%→2%)하였다. 창업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제공, 교육·실습,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평가를 받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총 1,129개 공동체로 증가하는 양적성장을 보였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영 및 민간컨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공고화하고 2009년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 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두었다.

그동안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힘쓴 결과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에 따라 공동체 평균소득이 2008년 1,702백만원에서 2014년 1,984백만원으로 117% 증가하는 등 직접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산자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2-1-16 자율관리어업 수산자원관리성과(2015)

구분	참여공동체(개소)	연간참여인원(명)
자발적 생산량 규제	343	20,655
바위닦기, 저질개선	181	8,796
어장청소	513	26,874
해적생물구제	444	19,737

구분	참여공동체(개소)	연간참여인원(명)
법보다 강화된 어획능력삭감 * 어선감척, 망목확대, 특정어구어법 사용제한 등	172	7,386
법보다 강화된 조업금지기간 확대	385	21,375
법보다 강화된 포획금지체장제중	466	26,779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5년 전체 사업비는 13,869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원된다. 2015년에는 11개 지자체 249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2,399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선을 위해 1,0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물, 수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56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관광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1차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마을 당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6차산업화에 필요한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체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과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브랜드 개발 등의 S/W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마을 리더교육, 선진지역 견학, 어촌특화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공적 어촌특화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컨설팅, 어촌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유통·홍보지원, 교육·연수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2016년 2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국 연안 광역시·단위로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을기업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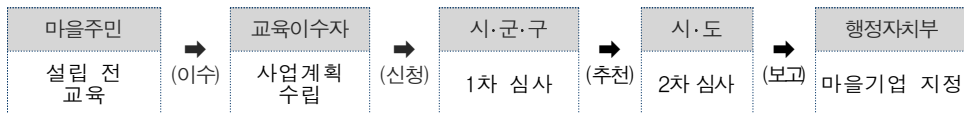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지역발전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 25일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형태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체성과 지역성, 공공성, 자립가능성 등에 대한 시·군·구와 시·도의 심사 이후,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법인 등과 기초자치단체간 마을기업 육성협약을 체결하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1:1 매칭(국비 50%, 지방비 50%)하여 지급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는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 이내에서 2년간(1+1년) 지원되며, 사업비 외에도 전문교육 및 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현재 마을기업은 총 1,342개로 경기도(169개), 전남(123개) 소재 마을기업이 가장 많으며, 제주(23개)와 세종(13개) 소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1,513명으로 1개 마을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8.6명이다. 2015년 마을기업의 총 매출액은 118,322백만원으로, 1개 마을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2012년 120개에서 2015년 281개로 134%이상 증가하는 등 마을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회

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인력 및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경제적 효과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마을기업육성법의 제정, 지원 체계의 효율화, 마을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58.7㎢(2015년 12월 31일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까지 정부는 5,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443필지, 23,288천㎡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공원 등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2,674건, 8,6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298건(7,055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11건(1,110억원), 복지증진사업 88건(245억원), 소득증대사업 50건(149억원), 연구조사사업 4건(11억원)이며,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5,272세대를 지원하였다.

(2) 재정비축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축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낙후지역 등인 경우에도 재정비축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비축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재정비축진사업지원은 도촉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재정여건 또는 지구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는 지원대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0~50%(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기준)를

1,0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등 38개 지구에 총 5,87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착공, 보상, 설계용역 등의 과정에 있으며, 2016년에는 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현재 국비를 교부 중인 32개 지구와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20개 지구에 지원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 수	38개
국비 지원 금액	5,878억원
사업 기간	2009년~계속
지원 비율	10~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06.10.19	10%	○
	② 성북 길음	1,249	"	10%	○
	③ 용산 한남	1,110	"	10%	○
	④ 노원 상계	645	"	10%	○
	⑤ 은평 수색·중산	893	"	10%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10%	○
	⑦ 금천 시흥	697	"	10%	○
	⑧ 영등포 신길	1,465	"	10%	○
	⑨ 동작 흑석	871	"	10%	○
	⑩ 관악 신림	529	"	10%	○
	⑪ 송파 거여·마천	1,043	"	-	x
	⑫ 동대문 이문·휘경	1,010	"	10%	○
	⑬ 성북 장위	1,873	"	10%	○
	⑭ 중랑 상봉	505	"	10%	○
	⑮ 광진 구의·자양	385	"	10%	○
	⑯ 강동 천호·성내	275	"	10%	○
	⑰ 종로·종구 세운	438	"	-	x
	⑱ 중랑 중화	510	'06.12.21	10%	○
	⑲ 양천 신정	697	"	-	x
	⑳ 강서 방화	508	"	10%	○
	㉑ 동작 노량진	736	"	10%	○
	㉒ 동대문 전농·답십리	906	'08.12. 2	10%	○
	㉓ 강북 미아	980	'08.12.11	10%	○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㉔ 동대문구 청량리	370	'09.09.10	10%	○
	㉕ 서대문구 가재울	1,077	'09.12.10	10%	○
	㉖ 영등포구 영등포	226	'10.01.21	10%	○
	㉗ 마포구 합정	297	'10.01.21	10%	○
	㉘ 마포구 아현	1,088	'10.08.19	10%	○
	㉙ 서대문구 홍제	200	'10.12.16	10%	○
	㉚ 강동구 천호	409	'14.07.31	-	x
	㉛ 종로 돈의문	199	'15.06.11	-	x
	㉜ 성동 왕십리	337	"	-	x
	㉝ 성북·강북 미아중심	478	"	-	x
부산시	㉞ 금정구 서·금사	1,524	'07.05.23	30%	○
	㉟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	30%	○
	㊱ 영도구 영도제1	590	"	30%	○
대구시	㊲ 동구 신암	1,085	'07.05.21	30%	○
	㊳ 서구 평리	689	'10.11.22	30%	○
인천시	㊴ 동구 동인천역	310	'07.05.21	10%	○
	㊵ 남구 주안 2,4동	1,274	'08.05.26	20%	○
대전시	㊶ 동구 대전역세권	887	'06.12.29	30%	○
	㊷ 대덕구 상서·평촌	2,595	'07.07.31	30%	○
	㊸ 서구 도마·변동	2,213	'07.08.31	30%	○
	㊹ 중구 선화·용두	743	'07.11.09	30%	○
	㊺ 유성구 유성시장	338	'07.12.28	30%	○
	㊻ 대덕구 신탄진	470	'07.12.31	30%	○
	㊼ 동구 신흥	678	'08.03.28	30%	○
	㊽ 유성구 도룡	501	'08.09.12	30%	○
경기도	㊾ 구리 인창·수택	2,072	'07.06.04	10%	○
	㊿ 광명 광명	2,281	'07.07.30	10%	○
	1 고양 원당	1,130	'07.09.10	-	x
	2 고양 능곡	843	'07.11.05	-	x
	3 남양주 덕소	636.8	'07.11.26	20%	○
	4 고양 일산	612	'07.12.31	-	x
	5 평택 신장	518	'08.05.07	10%	○
	6 남양주 도농	329.5	'08.06.02	20%	○
강원도	7 김포 재정부	2,008	'09.01.16	20%	○
	8 춘천 약사	728	'08.08.29	40%	○
	9 춘천 소양	856	"	40%	○
충남도	10 아산 온양중심상권	224	'07.12.10	30%	○
전남도	11 목포 서산·온금	388	'09.11.27	50%	○
경북도	12 포항 동빈내항복원	591	'09.02.12	30%	○

(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07년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

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5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35	10	6	2	4	3	4	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는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투입 예산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2009년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 앞산 맛돌레길 사업('10~'14) ▶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연도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	42,00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 조성 시범사업(150, '10)	▶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 가야 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2011년	경남 거창	▶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거창여고, '14~'15)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2012년	경북 울진	▶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 전선지중화 사업('14~'15) ▶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10,200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배 사업('13~'15) ▶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 일죽·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2013년	경남 하동	▶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전북 원주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로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2014년	경북 김천	▶ 김천 시립도서관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15~'16)	430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50, '14)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19)	6,000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 “송산마을” 만들기(150, '14)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5~'18)	2,857

(4) 한옥건축지원사업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

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억~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개소의 지자체에 50.3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3.3억원 (35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5)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751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6,751	2,653	464	362	326	166	241	100	1,347	184	121	71	149	74	97	386	10
보급률	20.7	35.2	18.5	21.8	14.1	17.8	25.0	14.9	13.8	32.5	22.4	9.4	17.5	10.9	8.9	25.2	6.0

(6)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군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588대로 법정기준 보급대수 2,785대의 92.9%를 도입하고 있다.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 정 대 수	2,785	409	205	141	145	78	84	53	9	562	120	109	137	142	159	188	205	39
운 행 대 수	2,588	446	198	112	140	80	62	38	8	553	94	107	80	110	80	124	316	40
도입률	92.9	109.0	96.6	79.4	96.6	102.6	73.8	71.7	88.9	98.4	78.3	98.2	58.4	77.5	50.3	66.0	154.1	102.6

(7)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5년까지)	추진중	잔여
1,060	90	24	3	63

주: 전체 건널목 1,060개소 중 청원건널목을 제외한 국가건널목 813개소에 대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의한 철도건널목 교통량 조사 결과 232개소에 대하여 개량이 필요하나, 이중 142개소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11~'20)에 포함되어 제외하여 90개소 건널목 입체화 대상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목입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³⁾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버스이용 확대 등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내의 시스템 구축사업

3)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사업을 통해 광역적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노선과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확인·이용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5년까지 71개 지자체에 대하여 729억원을 지원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하여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2016년도에는 31.5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적·경제적 차별 없이 보편적인 대중교통정보의 이용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9)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과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1960년대 이후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여 4대강 본류에 다목적댐과 하굿둑 등 대단위 수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수자원을 대규모 수요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간 수자원 분배시스템이 광역상수도이다. 즉, 다목적댐과 하굿둑이 수자원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것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천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간선 및 분배 기능인 광역상수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원 중이며, 2016년에는 대청권광역상수도 등 10개 사업에 738억원을 투입하여 급수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 용수공급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수돗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지방

상수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해 소매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과 별개로 지자체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 m^3 /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 착공 이래,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광역상수도,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착공되었다.

2015년 말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이 8,285천 m^3 /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59.8%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40.2%를 차지한다. 급수량을 보면 전체 급수량 8,132천 m^3 /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Ⅰ~Ⅵ, 일산권)이 54.8%, 기타 지역에서 45.2%를 공급하고 있다.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6	6,293	6,741	832	8,132	3,209	4,397	526
수도권광역(Ⅰ ~ Ⅵ)	8,285	4,898	3,008	379	4,310	2,212	1,874	224
구미권광역(Ⅰ, Ⅱ)	400	-	252	149	248	-	187	61
태백권광역(광동, 달방)	110	40	70	-	44	14	30	-
대청권광역(Ⅰ, Ⅱ)	1,010	180	571	258	786	155	468	163
남강댐광역(Ⅰ, Ⅱ)	325	-	325	-	178	-	178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5	3	142	-
섬진강광역	90	-	90	-	51	-	51	-
부안댐광역	87	-	87	-	62	-	62	-
금호강광역	376	325	51	-	294	254	40	-
주암댐광역(Ⅰ, Ⅱ)	596	496	100	-	300	262	38	-
보령댐광역	285	-	285	-	252	-	191	61
전주권광역	700	-	700	-	463	-	463	-
충주댐광역	250	-	230	20	184	-	181	3
밀양댐광역	150	-	150	-	96	-	96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1	96	45	-
감포댐광역	5	5	-	-	3	3	-	-
동화댐광역	52	-	52	-	26	-	26	-
원주권광역	100	-	100	-	74	-	74	-
울산권광역	220	220	-	-	194	194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09	-	109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27	-	27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	33	-	19	14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5	16	79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7	-	17	-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 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표 2-1-27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단위 : 백만원)

LPG용기		LPG소형저장탱크	
3단계 (수입·생산→용기 충전→배달)	(유통단계)	2단계 (수입·생산→벌크충전)	
잔량 부족시 수시 교체	(공급빈도)	사전계획에 따라 가끔 대량 배송	
교체하는 동안 사용 중단	(중단여부)	중단 없이 계속 사용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

우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내 지하매설 배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385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총 875개소(2013년 339개소, 2014년 151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은 2014년 18개 마을에 이어 2015년 47개 마을에 마을 공동 소형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여 총 65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70개소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농어촌 26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28 2013~2015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예정)
사회복지시설 지원	339개소	151개소	385개소	203개소 예정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	18개마을	47개마을	31개마을 예정

(2)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3년도에는 620억원, 2014년에는 740억원, 2015년에는 75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6년도 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41,187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7,363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은 21,595백만 m^3 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1%(2015년 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29 용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 용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용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용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용자대여(농협) • 2015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650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10%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100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가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용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 유통물평균수익률-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표 2-1-30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p)
수요가구(천개)	13,933	14,536	15,160	15,760	16,379	16,883	17,363
공 급 량(백만 m^3)	19,406	21,954	22,951	24,605	24,942	23,027	21,595
사업권역내보급률(%)	71.1	72.2	75.0	76.5	78.6	79.4	80.1
배관연장(km)	31,597	32,919	34,520	36,344	38,087	39,696	41,187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민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낙후마을이 상존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2014년 9월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낙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본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내역사업으로 반영함에 따라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국고 550억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주변 위험경사지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업을 위해 주민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주도·체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자율·책임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주민부담·연계사업을 결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전국적으로 총 85개 지구(농어촌 55, 도시 30)를 선정하였고, 3~4년간(농어촌 3년, 도시 4년) 국비 2,040억원(농어촌 940, 도시 1,100)이 지원되며, 2015년에 국비 550억원(농어촌 300, 도시 250)과 2016년에 국비 500억원(농어촌 275, 도시 225)을 지원한다. 2016년도에는 200억원(농어촌 110, 도시 90)을 지원하여 66개 지구(농어촌 44, 도시 22)를 신규로 선정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1) 사업목적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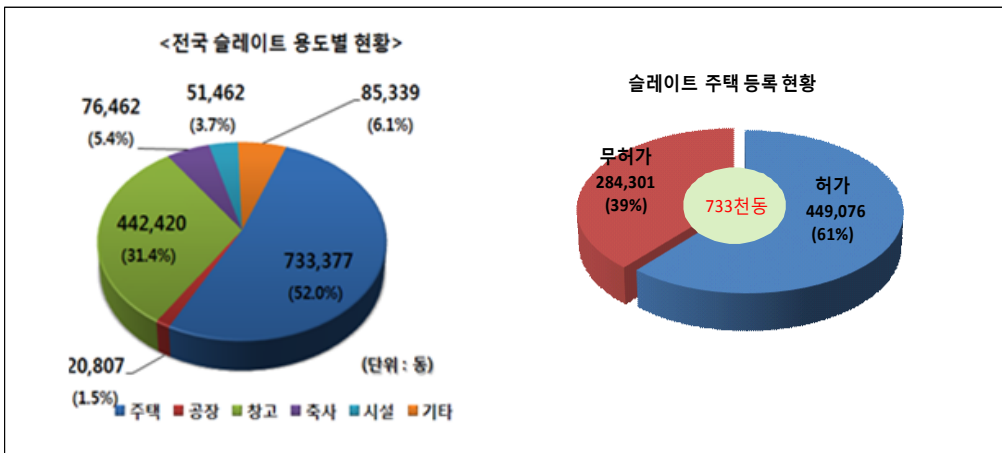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만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2015년에는 국고 369억원을 들여 27,746동 철거 지원으로 2015년까지 78,67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국고 344억원을 들여 20,450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 12월)



4) 향후계획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건강보호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주택 인근의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특·광역시시의 경우 99.7%, 일반 시지역은 99.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69.1%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2)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7,863억원(국고 3조 4,1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813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572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41개소)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이 69.1%(2013년 65.9%)로 향상되었다.

표 2-1-31 상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94.6	95.1	95.7	96.1
특·광역시	99.6	99.6	99.6	99.7
시지역	98.8	98.9	99.1	99.1
면지역	58.8	62.2	65.9	69.1

자료 : 상수도통계연보 기준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5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구시 등 12개 광역지역에 283,08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인천시 등 7개 광역지역에 22,291백만원을 투자하여 면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3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구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283,080	595	1,236	34,155	8,476	17,670	42,014	22,539	55,066	60,896	29,123	4,000	7,310

표 2-1-33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2,291	2,168	817	1,772	7,861	4,000	4,233	1,440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생태 자원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녹색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첨단신소재부품단지, 의료복합 휴양시설 조성, 첨단 국토클러스터, 대학·산학연구시설, 국회·대학·민간 등 연수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

행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년~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회의정연수원을 고성에 유치함에 따라 의정연수원 공사를 착공하였고, 연수원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착공하여 토지보상, 토공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016년도까지 연수원 시설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강화, 춘천 봉명), 철원 플라즈마 산단 조성, 연천 첨단 국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역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의 여객선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52개소이며, 항만 40개소, 어항 151개소, 그 외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161개소이다. 이 중 소규모 항포구는 전체 기항지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접안시설·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4 기항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항만(40)		어항(151)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마을공동	
개소	352	21	19	36	51	48	16	161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등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년부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해상교통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민, 지자체 등의 개선 수요 및 기항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2012년에 장자도, 가사도 2개소에 1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백아도, 말도 등 4개소에 30억원, 2014년에는 굴업도, 광도 등 8개소에 33억원, 2015년에는 삼목, 울도 등 6개소에 31억원을 지원하였다.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도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표 2-1-35 2015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

지원예산	사업실적
3,100 (백만원)	삼목, 울도, 하노대/상노대, 관사도, 성남도, 동거차도 등 6개소

또한, 2017년부터 여객선 안전운항,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항지 중에서도 인프라 여건이 더욱 열악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15년간 2배로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79.2%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36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2.6	58.9	61.9	65.0	67.5	74.0	76.9	79.2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m²당 1,500천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 당 36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0개소, 화장시설 57개소(화장로 330로), 봉안시설 391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72개소, 장례식장 1,089개소이다.

연간 최대 화장능력을 감안할 때 화장시설 개소수는 수급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별 화장시설 접근성(이동시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7%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2016년 1월)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 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년 7월)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9)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까지 1,084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1조 8,742억원을 지원하여 3,572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5년에는 303개 시장에 아케이드 81건, 진입로 5건,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17건 등 80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지원 금액	3,720	1,22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18,742
지원 건수	689	201	22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3,572

2015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시장은 매출이 18.9% 증가하였고, 고객 수는 6.9%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3% 증가하였으며, 고객 수는 1.1% 증가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로 전환).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6개소에 총 77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고흥 등 계속 2곳에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3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흥 등 3개소가 현재(2016년 5월) 건립 중에 있다.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3%)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영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도 3,00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표 2-1-38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 액	67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34	17.5	772.5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농가 시설에서의 가축분뇨처리 효율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액비시설은 톤당 4,000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톤당 9,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 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를 생산 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체계로 가축분뇨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 12월말기준으로 퇴액비화시설 114개소, 에너지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퇴액비화시

설 80개소, 에너지시설 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퇴액비화시설 150개소, 에너지시설 2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되고 불안정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고파랑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연안정비사업은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년~2019년)에 근거하여,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업비 521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52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사업비 270억원(국비 50~70%, 지자체 자율편성) 등 총 8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등 20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과 46개소에 대한 지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도까지 6개소(강릉 남항진리, 서천 섬도지구 등)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된 바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몇 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업비 561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5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사업비 291억원(국비 50~70%) 등 총 9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시 송도 해수욕장 등 21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과 55개소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64억 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닷가 해양쓰레기 12,110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는 88억 8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39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5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6,412	440	5,372	600	400
수거·처리량	12,110	520	10,771	539	280

(4)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 등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2015년에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부산시, 충청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방치선박 178척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도 2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치선박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0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5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비	200	34	-	-	20	30	106	-	10
처리척수	178	12	1	1	5	17	112	12	18

주 : 지방청 실적 포함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정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등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 개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처리방법으로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전국에 103개 시설(11.9천㎥/일)이 가동되고 있고, 37개 시설(4.7천㎥/일)이 신·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5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1,063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0,208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한·EU FTA 체결,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에 공공처리시설 145개소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고, 특히 2017년까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 감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공법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201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5.9%(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개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2조 1,843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보조금 1조 6,96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3,160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4년말 기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5.9%(2014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1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5년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는 경기도 가평군 등 12개 시·도에 288,335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2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년)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제주	세종	경기	강원
288,335	844	3,185	4,673	10,344	23,828	21,53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5,925	31,639	38,242	55,837	34,238	47,995	-

(7)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 사업목적 및 사업의 추진체계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되어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국고를 편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에서는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지원 및 정산 등을 수행한다.

표 2-1-43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15억/개소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2) 추진경과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도

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3) 2015년도 추진성과

2015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9개소에 8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8)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201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0%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5.9% 수준이나,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7.3%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2) 개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 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총 국고 1조 1,924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47.3%(2014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5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연천군 등 8개 시·도에 74,371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5)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4,371	450	69	2,160	4,643	17,728	31,461	3,831	14,029

(9)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2014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5.9%(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2) 개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 지역에 총 국고 231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91.1%로 제고되었다.

표 2-1-46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91.1

주: 농어촌 평균은 군지역 읍·면 평균 수준임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5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4,673백만원(서귀포시 612백만원, 제주시 4,06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0)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1) 사업목적

단순 매립·소각 또는 해양배출되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폐수(음폐수) 해양투기 금지('13)에 따라, 음식물폐수의 안정적인 육상처리 등 음식물류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2) 사업의 추진체계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

정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 인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표 2-1-47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회수시설 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추진경과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5년 부산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육상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2007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음식물 폐수(음폐수)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보일러 연료)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2009년 7월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5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4) 추진성과

2015년에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소각여열 회수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총 25개소의 자원화회수시설 설치 시 654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기존 매립 또는 소각되던 쓰레기를 에너지원(연료)으로 전환하는 데 기

여하였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최적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별처리에 따른 중복투자, 가동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였으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등 육상 처리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폐수 등 해양투기에 대응하였다.

(11)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 사업목적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 사업의 추진체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인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표 2-1-48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3) 추진경과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추진성과

2015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41개소에 64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과 함께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개요

클린하우스 설치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 체계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 수거시간 및 인력·장비 단축,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시간 확대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5년말 기준 비가림 클린하우스 1,501개소, 거치대 1,158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2001~2005) 48%에서 설치 후(2014) 56%로 증가하였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49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5년)

(단위 : 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659	1,501	1,158	706
제 주 시	2,029	1,024	1,005	483
서귀포시	630	477	153	283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5년에도 4,360톤을 수거하였다.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3) 비점오염저감사업

1)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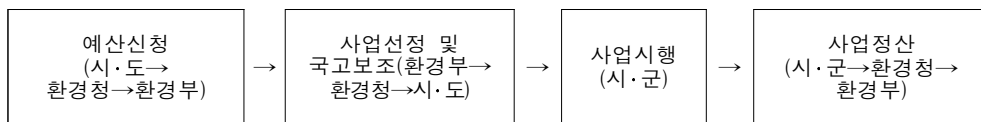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방향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발생원 관리를 통한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3) 추진 경과 및 성과

2015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8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청사 등 10개소에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4) 향후 추진방향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사전 발생원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다.

제 1~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39개소(114억원), 2015년에 78개소(48억원)를 개선·정비하였으며, 2016년에는 33억원을 투입하여 52개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소(146억원), 2015년 24개소(67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하여 18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

민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와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와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246억(국비12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4개소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사업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사업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환경제로 구축” 국정과제(협업과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2015년까지 총 4,711억원(국비 2,275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21,957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714억원(국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3,385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 설치한 CCTV 4,132개소를 대상으로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후 26.6% 감소하였고, 지역주민 2,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CCTV 설치 후 장소별, 주·야간별 불안감 점수가 대폭 하락하여 ‘불안’(평균 3.81)에서 ‘안전’(평균 2.64)으로 안심효과가 발생하였다.

(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굴곡부·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년~2013년, 제2차 2014년~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

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23개소에 1조 4,078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750억원(국비 375억원)을 투입하여 11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표 2-1-50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2017년 이후
사업량		2,415	1,726	111	670
사업비	합 계	31,562	18,956	750	11,856
	국 비	15,781	9,478	375	5,928
	지방비	15,781	9,478	375	5,928

(5) 도시침수 대응사업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매년 도시침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개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대폭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도심지역내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추진경과 및 성과

①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도시규모, 하수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에 침수대응 하수도 시설 확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설계, 공사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지역의 하수도정비대책 추진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⁴⁾

②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⁵⁾

표 2-1-51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 규모	10,277	2,025	1,967	2,347	2,078	1,860

주 : 1) 2014~2015년까지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총 4,181억원 기투자

2) 2017년도 이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산출

(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4) 김해·천안·부천·안동시, 보성·서천군 등 6개소에 사업기간 2013~2015년까지 총사업비 2,327억원이 투입되었다.

5)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5년까지 43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표 2-1-52 고령인구 비중

구 분	2010년	2015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1.8	38.4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11.3	13.1

주 : 고령인구 비중=(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300백만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농업인 손상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3년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3개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과수농가의 상지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등 특정분야 농업인의 유병률 및 농작업과의 상관관계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도서·벽지 고령농업인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5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2015년 기준)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한양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호흡기 질환	2013년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2013년
충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일광·자외선 노출질환	2013년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관절염 질환	2013년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3년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중독 질환	2014년
동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감염성 질환	2014년
제주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손상감시체계 구축	2015년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⁶⁾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책화 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그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6) 농촌 중심지는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 → [계획수립] → [통합적 접근] → [투자 효율성] → [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에 반영 등이다.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한 후 처음으로, 선도지구 15개 지구 11,374백만원, 일반지구 63개 지구 31,13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선도지구 32개 지구 29,833백만원, 일반지구 131개 지구 73,67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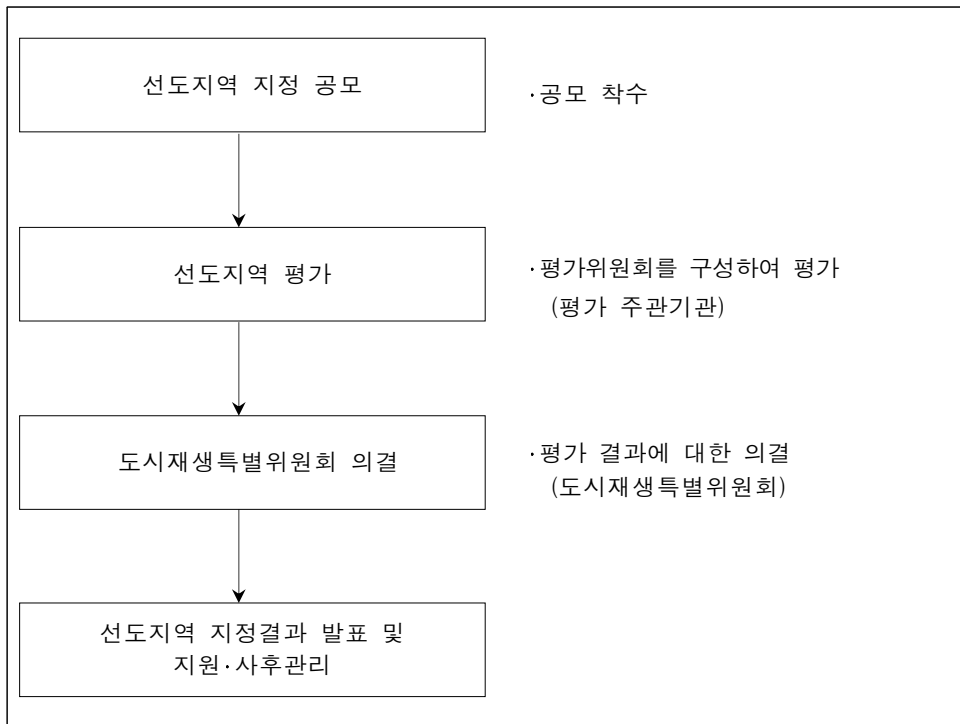
(2)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정립한다. 특히, 장소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평가·지정 절차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2-1-7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산업단과 그 주변 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사권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경제 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한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였고, 2015년 현재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곳의 경제기반형은 총사업비 250억원, 6곳의 일반 근린재생형은 총사업비 100억원, 5곳의 소규모 근린재생형은 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54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선도지역개수	2개	6개	5개
1개소당 지원액	250억원	100억원	60억원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1-55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수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 (부평)	69	751	한국수출 (서울대입구)	73	9,748	옥포 구미2	80	1	포항 반월특수 (반월)	92	98	12	19,880
				구미1	73	1,194	고정 죽도	83	128					
일반산업단지	전주1	69	131	한국수출 (주안)	74	487	광양 (연관)	85	43	신평정림 (협동화)	91	149	51	11,532
				익산1	74	223		85	1					
합계	3		958	원주우산	70	19	양산 정읍1	81	102	하남1-3 (3차)	91	457		
				인천기계	71	168	진주신평 소 촌	81	8					
합계	3		958	서울운수	71	160	달성1차	81	515	문막 조치원	92	19		
				인천	73	432	강릉중소 하남1-3 (1차)	83	327					
합계	3		958	대전1	73	97	오천 본 촌	83	45	신평 천안2	92	62		
				대구검단	75	534	송 암	83	111					
합계	3		958	성남	76	3,141	신평정림 (기존)	84	160	왜관 (기존)	92	279		
				대전2	79	95	향남제약	85	38					
합계	3		958				안성1	85	49	안성2	93	53		
							순천	86	37					
합계	3		958				전주2	87	19	충주1	93	43		
							반월도금	88	107					
합계	3		958				대구염색	88	125	상봉암	93	6		
							성서1	88	897					
합계	3		958				하남1-3 (2차)	89	331	경산1	94	194		
							문평 청주	89	7					
합계	3		958							완주	94	83		
합계	3		958							외동	94	22		
합계	3		958							문발1	94	13		
합계	3		958							현도	94	3		
합계	3		958	12		16,298	26		3,843	22		10,313	63	31,412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업단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산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산업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0년)까지 국비 3,3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5년~2016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도에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수, 순천, 대구염색)를 추가 선정하여 2016년부터 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도 3개소(4차)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낡은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2015년 8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주택도시시기금 출범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전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56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8	61.83km	16,352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50.76km	8,052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5	88.46km	9,86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1차(2007~2011년)	13	65km	13,844억원
추가지정(2009년 12월)	1	9.8km	582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1년 12월)	9	47.1km	7,597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7개 사업(314.9km) 중 35개 사업(152.7km)을 2015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18개 사업(80.9km)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4개 사업(81.3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

될 경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57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역도로	2,305	2,472	1,492	1,483	1,322	779	826	663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사비의 7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06년~2010년)계획’ 및 ‘제3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1년~2015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 추진할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6년~2020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3년까지 총 118건, 761km를 완료

하였고, 2014년도에는 59건, 485km에 5,44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7건, 547km에 5,4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58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지도	14,047	5,600	5,426	6,039	5,865	6,285	5,943	6,072	6,404	5,442	5,450

(3)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용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1-59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	9,094	9,180	9,684	9,881	10,064	10,436	10,742	11,130	11,418	11,737	12,057	2.86
	도시	14,446	15,441	16,488	17,022	17,641	18,073	18,355	19,185	20,002	20,647	21,293	3.96
GDP(B, 조원)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	1,4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2.20	2.18	2.16	-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구원,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2006년~2010년), 2009년 2차(2011년~2015년), 교통연구원)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 2015년(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울산대교, 일곡~용전, 제2창원터널) 준공, 2016년 실시설계 1건(식만-사상, 상무-첨단, 문전교차로, 삼화맨손-과정교차로), 예타 1건(월전동-무진로)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60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427	311	335	456	1,158	1,290	1,423	778	950

(4)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년~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2,26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회천-신촌 등 3개 사업(21.7km)에 2,574억원을 투자하여 준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8.0km)에 1,1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1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268	730	752	803	536	519	220	243
제주구국도건설	2,268	730	752	803	536	519	220	243

(5)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2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2 광주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2,077 (4,343)	149 (149)	225 (255)	280 (513)	1,423 (3,426)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

구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3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6,436 (12,127)	1,261 (1,495)	1,932 (2,780)	1,435 (3,372)	1,798 (4,468)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7)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2015년까지 국비 400억원을 지원하여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하남 1개소, 부천 1개소 등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 1개소, 오산 1개소, 부산 1개소 등 3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돌산-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4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돌산-화태	159,882	132,831	23,836	3,215	-

(9) 동해-삼척고속도로건설사업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AHP=0.652) 총 18.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6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3,057 (5,995)	2,441 (4,451)	364 (897)	239 (634)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0)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6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계	370,859	101,201	52,196	39,744	177,718
거제-마산2	181,061	54,176	28,179	18,747	79,959
거제-마산3	189,798	47,025	24,017	20,997	97,759

(11) 부산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부산순환 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 예정이다.

표 2-1-67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12,391 (22,821)	8,803 (6,513)	2,209 (4,890)	2,093 (5,200)	1,577 (3,92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2)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상주-영덕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4축(당진-영덕)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68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13,071 (27,514)	7,977 (14,721)	2,478 (6,184)	2,509 (6,345)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3)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9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합 계	936,629	376,991	97,267	139,798	322,573
압해-암태	562,306	267,181	46,773	67,710	180,642
· 1공구	259,919	143,583	22,085	36,712	57,539
· 2공구	302,387	123,598	24,688	30,998	123,103
화양-적금	374,323	109,810	50,494	72,088	141,931
· 1공구	73,553	21,496	9,291	12,486	30,280
· 2공구	102,581	29,059	11,199	17,378	44,945
· 3공구	143,321	45,300	18,006	31,479	48,536
· 4공구	54,868	13,955	11,998	10,745	18,170

(14) 영남-적금 국도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영남-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0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영남-적금	277,483	247,687	19,477	10,319	0

(15)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부산항-울산공업단-포항을 연결하는 화물 수송로를 확보하고, 부산 신항 개발 등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후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B/C=1.09)하여 울산-포항 구간 총 53.7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양남터널 구간(11.6km)을 제외한 42.1km를 개통하였으며, 2016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1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10,369 (19,983)	8,317 (14,887)	1,857 (4,610)	201 (502)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6)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2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계	417,782	356,384	18,281	24,738	18,379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4,844	233,446	18,281	24,738	18,379

(17)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8.3km에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73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 억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중('09준공)	파주-포천	착공예정('16下)
봉담-송산	민자사업 협상중	포천-화도	민자사업 협상중
송산-안산	공용중('13준공)	화도-양평	공사중('14착공)
안산-인천	장기검토(예타 '15.9, B/C=0.78)	양평-양평	공용중('12개통)
인천-김포	공사중('12착공)	양평-이천	기본설계완료('15.12)
김포-파주	실시설계중('16.12)	이천-오산	협약체결('15.5)

(18) 주문진-속초고속도로건설사업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현남-속초 구간 총 43.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에 착공한 현남-하조대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하조대-양양)은 2009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4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5,155 (9,482)	4,424 (7,642)	409 (999)	321 (839)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5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11,525 (24,126)	7,912 (15,073)	1,314 (3,278)	1,608 (4,069)	692 (1,69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0)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사업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와 연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

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16)한 후 엄정-금성 구간 총 23.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5년 개통하였다.

표 2-1-76 충주-제천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3,907 (7,763)	3,652 (7,127)	201 (502)	-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1) 거점지역(구 특정지역) 도로건설지원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랐으나(1993년 6월 11일, 백제문화권지정), 국토의 균형적 개발촉진이용을 위하여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2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백제 문화권은 2010년 종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1-77 특정지역 현황

명 칭	지정지역	면적 (km ²)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사업
계		6,819.34		- 7조 9,925.2억원 · 국비 3조 5,999.3 · 지방비 2조 5,152.9 · 민자 1조 877.3	- 총 27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정비(120) · 관광레저개발(77) · 기반시설 확충(67) · 정신문화창달 등 기타(11)
내포 문화권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산	1,036.73	'04.12. 9 ('05~'20)	- 6,404억원 · 국비 2,320 · 지방비 3,958 ·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 정신문화창달(6) · 역사문화유적정비(41) · 관광휴양시설확충(6) ·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성	809.38	'05.12.30 ('06~'15)	- 1조 1,301억원 · 국비 5,304 · 지방비 5,542 · 민자 455	- 총 42개 사업 · 문화재정비(9) · 문화유적 전송(10) · 관광휴양시설 확충(16) ·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19)	- 7,213억원 · 국비 2,874 · 지방비 2,203 ·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정비(11) · 관광레저개발(17) ·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19)	- 1조 7,404억원 · 국비 8,617 · 지방비 3,756 ·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 관광자원 정비·조성(8) · 정주환경개선(2) · 기반시설(11)
동남내륙 문화권	울산	693.70	'10.6.17 ('10~'19)	- 1조 536억원 · 국비 3,566 · 지방비 3,389 ·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 기반시설 설치(7)
	경남				
가야 문화권	대구	931.90	'10.12.24 ('10~'19)	- 9,062억원 · 국비 6,541 · 지방비 2,330 ·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 관광자원 정비·조성(9) · 기반시설 설치(12)
	경북				
	경남				
설악단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20)	- 1조 2,120억원 · 국비 4,073 · 지방비 1,283 ·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임진강 평화문화 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23)	- 5,886.2억원 · 국비 2,704.3 · 지방비 2,691.9 ·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 관광자원 정비·조성(11)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상기 근거법에 따라 특정지역은 ① 문화관광권형, ② 산업전환지대형, ③ 특수입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관광권형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전환지대형은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수입지형은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개발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150km²)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3,000~9,000km²)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인 500km²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제도는 상기 근거법의 폐지와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으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도별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22)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78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5,646 (12,853)	259 (259)	120 (136)	673 (1,359)	4,563 (11,099)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3)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년~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잔여구간(함양-창녕, 창녕-밀양)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79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25,924 (59,616)	1,901 (2,006)	740 (2,690)	1,365 (3,019)	21,078 (51,896)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4)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나진-소라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다.

화양-소라 구간은 2개구간으로 화양-나진 10.24km, 나진-소라 11.64km로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2009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4년까지 115,7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4,4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80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래
계	193,188	4,213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14,400	63,014
화양-나진	103,707	2,107	8,300	11,279	9,500	11,785	14,500	8,100	38,136
나진-소라	89,481	2,106	8,300	12,697	14,100	13,000	8,100	6,300	24,878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표 2-1-81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 국가시행 - 국비 75%, 지방비 25% ○ 지자체시행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 국가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자체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 표정속도 - 40km/h 이상	○ 표정속도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 연장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 범위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을 해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경의선(용산~문산) 등 21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국비 17조 1,977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609.8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6조 3,054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나갔다.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과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

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정자역~광교역(12.8km)을 2016년 2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송도~인천구간(7.3km)을 개통하였다.

표 2-1-82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km, 억원)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5년 예산	2016년 이후
계	609.8		171,977	63,054	5,709	103,214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	1993-2010년	5,724	5,724	0	0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	2000-2012년	5,192	5,192	0	0
망우~금곡 복선전철	18.0	1997-2013년	4,653	4,653	0	0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2005-2011년	1,913	1,913	0	0
오리~수원 복선전철	19.5	2000-2014년	8,905	8,905	0	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	1996-2016년	18,051	17,779	272	0
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995-2018년	12,972	8,317	1,538	3,117
신분당선(정자~광교)	12.8	2005-2016년	2,477	2,477	0	0
신안산선 복선전철	46.9	2006-2022년	30,735	722	450	29,563
별내선 복선전철	12.9	2007-2022년	7,434	0	750	6,684
신분당선(용산~강남)	7.8	2008-2017년	4,543	52	0	4,49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0.9	2014-2021년	34,016	62	10	33,944
진접선 복선전철	14.9	2012-2019년	7,052	335	850	5,867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1-2020년	4,000	240	850	2,910
삼성~동탄 복선전철	39.5	2014-2021년	5,283	590	988	3,705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1	2014-2019년	4,632	3	1	4,628
도봉산~옥정	15.0	2014-2023년	4,436	0	0	4,436
계룡~신탄진	35.2	2016-2021년	1,427	0	0	1,427
안심~하양	8.7	2015-2021년	1,871	0	0	1,871
구미~경산	61.9	2016-2021년	571	0	0	571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1)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총 18.36km(고양시 6.00km, 서울시 5.97km, 부천시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 634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되었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12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2) 소사-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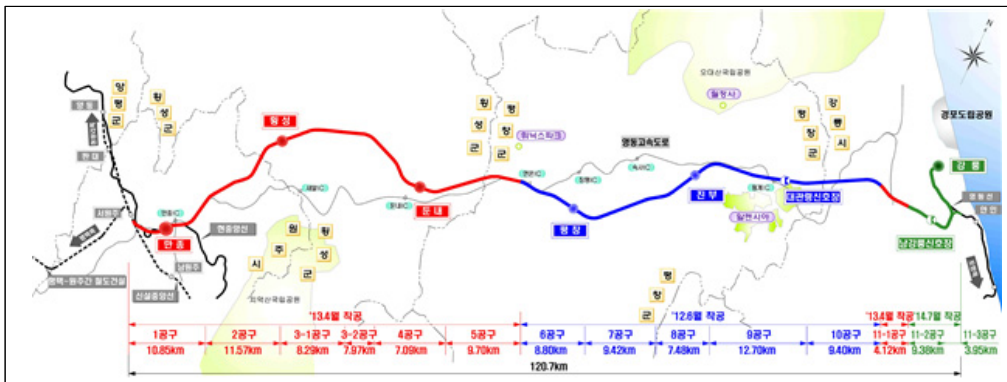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3km, 1조 7,8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55.8%에 이르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5,495억원이 투입되었다.

(3) 원주-강릉 간선철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3조 8,927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전 공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하여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총예산 3조 8,927억원으로 2015년도까지 총 2조 4,858억원을 투입(2016년 예산 8,807억원)하여 노반공사, 건물 구조물 공사, 궤도 및 신호·통신공사 등 주요 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말 기준 총 공정률은 62.3%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는 38조 4,55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2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643.4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31.6km로 총연장의 52%를 차지하며, 부산 108km, 대구 81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5,535량(2014년 기준)으로 연간 33억명(수송인원)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0년 29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7.6% (승용차 포함) 다음인 8.2% 수준(2013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의 철도의 분담률인 4.1%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총 11개 노선 총 174.02km(총사업비 11조 8,699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중 인천 2호선(오류~운연)은 2016년 7월에, 대구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은 2016년 하반기에 새롭게 개통된다.

표 2-1-83 도시철도 개통현황

구분	노 선	연 장 (km)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2개	643.4	626		384,553	
서울 (9)	소 계	331.6	307		172,797	
	1호선	7.8	10	서울역~청량리	984	'74.08.15
	2호선	60.2	50	성수~성수	11,171	'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	26	당고개~남태령	8,315	'85.04.20
	5호선	52.3	51	방화~상일, 마천	30,215	'95.11.15
	6호선	35.1	38	응암~봉화산	25,496	'00.08.07
	7호선	57.1	51	장암~부평구청	39,676	'96.10.11
	8호선	17.7	17	암사~모란	8,502	'96.11.23
	9호선	31.5	30	개화~종합운동장	34,640	'09.07.24
부산 (4)	소 계	107.8	108		68,314	
	1호선	32.5	34	노포~신평	9,751	'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	17	대저~수영	17,395	'05.11.28
	4호선	12.0	14	안평~미남	12,616	'11.03.30

구분	노 선	연 장 (km)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대구	소 계	81.2	89		56,247	
(3)	1호선	25.9	30	대곡~안심	15,187	'97.11.26
	2호선	31.4	29	문양~영남대	26,147	'05.10.18
	3호선	23.9	30	동호~범물	14,913	'15.04.23
인천	1호선	29.4	29	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	'99.10.06
광주	1호선	20.5	20	녹동~평동	16,658	'04.04.28
대전	1호선	20.5	22	판암~반석	18,931	'06.03.16
부산-김해	부산-김해	23.2	21	사상~가야대	13,241	'11.09.17
의정부	의정부	11.1	15	발곡~탑석	6,767	'12.07.01
용인	용인	18.1	15	기흥~전대	7,278	'13.04.26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해군 기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534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으며, '14.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비 84억원을 확보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정추진이 부진하였고,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설득 끝에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는 2018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으로 제주도내 항만의 70%이상의 항만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9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0월 착수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2015년 7월 준공·개장하였고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제주의항 철재부두 축조공사’(2만톤급 1선석, 210m)가 준공되었다. 또한 탐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와 부족한 해양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탐동지역에 대한 방파제건설(L=1,100m)을 위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제주의항 지역에는 크루즈부두 1선석(10만톤) 및 해경전용부두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항만 외곽에 축조한 방파제는 설계과고 증가로 인해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10개 항만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2개 항만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과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사업은 2015년까지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여수항 동방파제 등 26개소를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71개소를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광양항, 마산항, 목포항, 제주 성산포항 등에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면, 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도에는 약 11,216백만원을 투입하여 친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40선석까지 확충하고 자동차 등 다목적부두(5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하여 2016년 5월 기준 ‘권’부두 21선석(12,454만TEU), 잡화 1선석, 자동차 1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조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남‘권’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4,409억원(민자) 투자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조성(호안 2.65km)에 44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000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부산신항 전수역의 17m 중심 준설을 2014년 12월부터 55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 완료로 추진중에 있으며, 항만배후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남 ‘권’ 배후단지(1공구) 조성(42만 m^3)을 위해 1,742억원으로 2016년 1월부터 2021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북항 재래부두를 국제적 해양관광,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개발을 2008년 12월 착공하여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5.8) 등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항만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2019년 12월 까지 부산 북항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수심 20m의 천연수로와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 산업 취약 및 정기항로 부족 등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5년 232만 TEU 처리)하였다. 이에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광양항을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춘지구 항만매립지를 조기 개발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에너지 물류 및 발전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는 등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2013년 12월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북항 및 남항지역에 유류부두 7선석 및 2,8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2010년부터 수립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남항 2단계 외곽시설 중 2013년 12월 착공된 남방파제 2-1공구(900m)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 또한 2017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남방파제 2-1공구에 이어 2015년 남방파제 2-2공구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 발주할 계획이다.

북항 방파호안은 2016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남항 방파호안은 201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오일허브(2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6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2017년 기본설계, 2018년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강화와 對 중국교역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부두를 2017년까지 6선석, 2020년까지 12선석(최대 4천TEU 급) 건설하고 '컨'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을 2016년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항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를 위해 시민 친수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에 시작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컨'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 설계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사업추진 성과로는 총 예산 2,381억원(국비 1,775억원, 민자 606억원)을 투입하여 신항 '컨'부두 개장(6.1) 및 '컨'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신항 진입도로 개설 완료(4.30), 복합물류단지 부족난 해소 및 신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항 배후단지(1단계)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3.26), 북항 배후단지 및 청라투기장 배후교통망 확보를 위한 남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착공(10.22),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 배후교통망(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건설 지속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전국 연안항에 종합적인 장기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전국 각 권역별 연안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안 여객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중심기지 및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민 정주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

시정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 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축을 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5년까지 국비 585억 원을 지원하여 2011년 3월 경기 하남~서울 천호(L=10.5km),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도시BRT는 2015년까지 국비 307억원을 지원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서울·부산에서 22.7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BRT는 2015년까지 국비 585억 원을 지원하여 2011년 3월 경기 하남~서울 천호(L=10.5km),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도시BRT는 2015년까지 국비 307억원을 지원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서울·부산에서 22.7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박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1개 시·도 23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금호·신서, 인천, 대전, 광주 진곡·북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강진·나주, 경남 진해·거창·진주, 제주, 충남 서천)에 1,28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5년에는 12월 부산 회동 등 11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6년에는 전남 목포·구례, 경북 경주 등 신규사업(3개소)을 포함하여 총 14개소에 326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 및 연고산업육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산업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차원에서 1999년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2002년부터는 4개 지역 외 9개 지역에서도 추진됨에 따라 비수도권 13개 시·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후 지역산업의 자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하의 '7대 과제'중 하나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선정·지원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 대학의 강점분야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엔진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995년부터 진행하였던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201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광역시·도차원에서 추진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2012년)됨에 따라, 지역 내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新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시·도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신특화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특화 (주력산업)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2004년 ~)	특화 (지역연고산업)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지역별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시·도 단위의 주력산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웰니스식품 ,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융합 ,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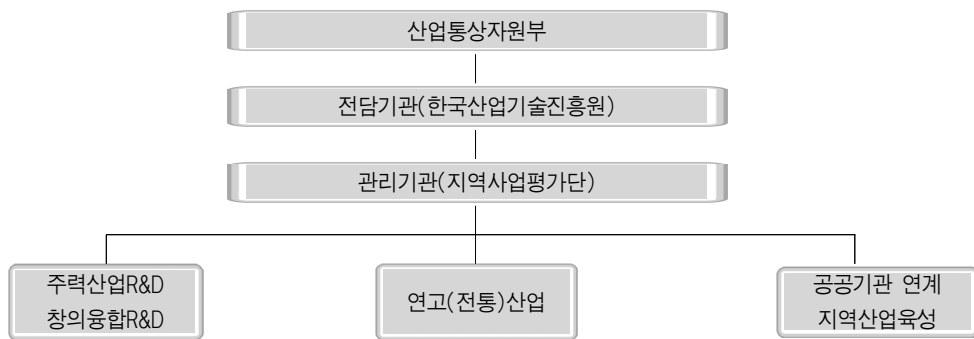
주 : 굵은 글씨는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

또한, 2014년부터는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1개씩의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에 창

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도 추진 중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1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468개 과제(823억원), 창의융합R&D 88개 과제(155억원), 풀뿌리기업육성 40개 과제(220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59개 과제(342억원), 지역혁신센터조성 22개 과제(111억원) 등 총 677개(1,651억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한편, 2015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001명(인정률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464명)이 창출되었으며, 누적 사업화매출액은 4,51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10.5억원의 사업화 매출실적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특허 출원 742건, 등록 270건, 기술인증 139건 등 가시적인 기술경제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규과제 선정시 수출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수출효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등 수출연계형 과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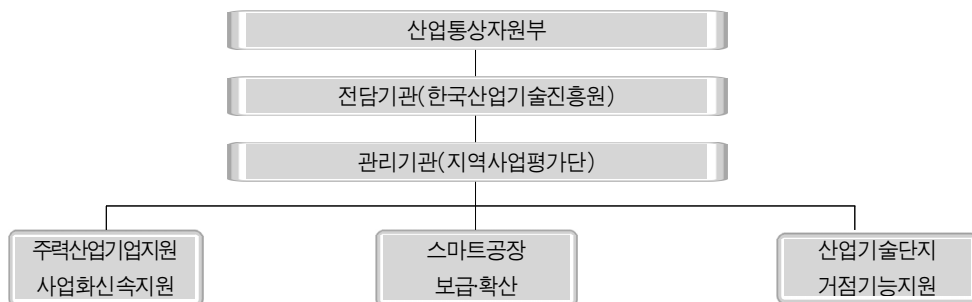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04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실시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던 지역 전략산업이 2012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지역내 기업 지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는 新특화산업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다.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사업분야 지역 기업에 기술지도, 사업화 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조기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시현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총괄 연계·중개하기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추진체계



2015년 1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117개(634억원), 사업화신속지원 13개(78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5개(21억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32개(149억원) 등 총 167개(929억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주된 성과로, 2015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21명(인정률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340명)이 창출되었으며, 인정률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340명 중 정규직 94.1%(2,738명), 청년 38.9%(1,225명), 여성 33.1%(986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567억원의 사업화매출액과 특허출원 143건, 등록 46건, 기술인증 102건 등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정부 지원 전-후 기업성장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역산업 기업지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특화산업육성(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기업 매출증대를 주요 목표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12개 지역에 30개 과제(9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R&D사업으로,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업 생태계 내에서 공공기관들이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산업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산업 등 유사 기능군을 집적화함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해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2개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지역산업에 활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적 성과를 극대화한다.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혁신자원인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달리 조기에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전도시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큰 사업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수요·공급을 고려한 총 30개 과제(기술개발 12개, 기업지원 9개, 인력양성 8개, 네트워킹 1개)를 지원하였다. 28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80개 기관이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킹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간 지속적 연계활동으로 신규 사업 수요 발굴 등을 위해 매년 12개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표 2-2-2 분야별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분야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기술개발	• 공공기관·기업 공동R&D, •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 창조기술 이전·실용화 R&D
인력양성	•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기업지원	• 공공구매(MRO) 활성화, • 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 공공기관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기반 클러스터 형성 지원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술지도하에 지역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하여 단시간 내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과제로, 지역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조건부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누출검지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구매조건부 스마트기반 가스누출검지장비 개발기술 지원을 한 것이다. 2017년 개발 완료 시 525대(약 9.4억원)를 구매 예정이며, 통상 가스누출검지기 교체주기가 3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협력사 등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양성과제는 공공기관의 채용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대학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전력기술(주)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발전소 설계·시공·관리 등의 전문인력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였는데, 경북보건대학교와 발전플랜트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교육·훈련비용 18.7억원 절감 및 수료생 155명 중 25명이 협력사에 취업하였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주)이 지방이전함에 따라 8개 협력사가 동반이전을 완료하였고, 2016년 5개사가 추가 이전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과제는 공공기관의 우수 연구인력, 보유 장비,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지역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내 병원용 의료기기의 건강보험등재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비용 2.67억원 절감 및 수혜기업에서 보험등재 및 사업화를 위해 신규인력 2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기업·혁신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상호간 협력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지역테크노파크를 통한 네트워킹 과제 지원으로 만남의 장을 가지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시작 1년 6개월만에 사업화매출액 90.9억원, 사업화고용 50명을 채용하여 지역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154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의 계속과제가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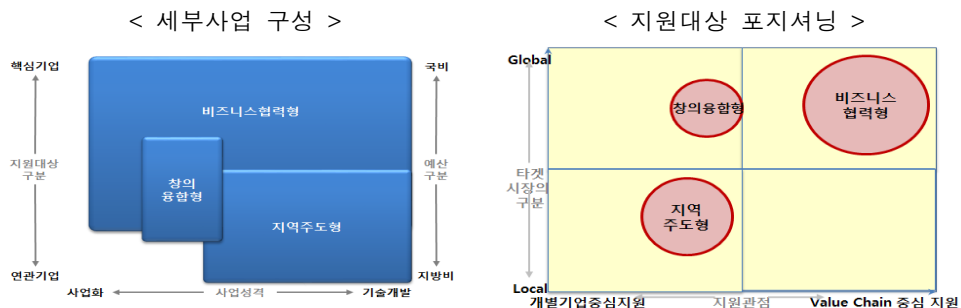
표 2-2-3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I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 II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거래처발굴·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를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과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의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2015년은 1,642억원(국비 1,234억원, 지방비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억원이 증가된 1,924억원(국비 1,434억원, 지방비 490억원)을 지원하여 산업육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자 한다. 2015년에는 기술개발 과제를 통하여 546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53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발굴하여 유망품목의 개발을 2017년까지 지원하고, 지역 내 384개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138개의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 내 고용 및 매출(수출)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및 수출연계형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수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수출,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지역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4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술개발	비즈니스협력형 산업생태계 조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5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방식) 지정공모	국비 100%
	창의융합 R&D 시·도별 대표산업(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R&D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방식) 자유공모	국비 100%
	지역 주도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지방비 100%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비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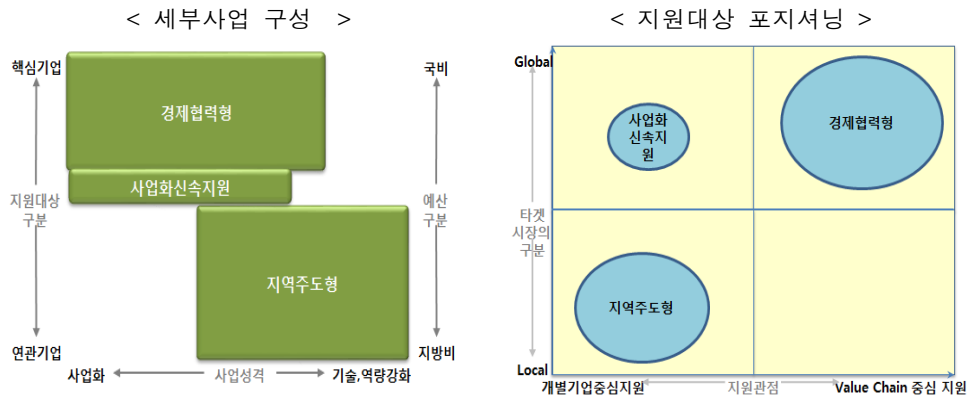
동 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거래처발굴·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를 지원한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및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

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2015년은 741억원(국비 457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도 같은 규모로 협력산업 생태계조성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2015년에는 171개의 사업화전문기관이 참여하는 56개의 기업지원 과제를 통하여 1,500여개의 지역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 내 고용 및 매출(수출) 등 직접적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수출지원 강화 등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5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업지원	경제협력형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2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방식) 지정공모	국비 100%
	사업화신속지원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6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1년 (수행기관) TP(기업지원단) (지원방식) 정책지정	국비 100%
	지역주도형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연차협약) (지원내용) 기술지원, 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지원방식)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지방비 100%

(6) 감성터치플랫폼

우리나라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출력산업은 세계 1위이나, 터치 패널 등 입력디바이스 산업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터치산업”이 디스플레이-IT산업계의 최대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급성장함에 따라 감성터치 등 차세대 입력 디바이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이 긴요해지고 있다. 이에 감성터치 산업육성을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응용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은 기반조성분야와 기술개발분야 과제지원을 통해 세계 2위 감성터치 산업국 진입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감성터치 IT 융합분야의 글로벌 기술수준 확보를 위하여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과제로 2011년에는 3개 과제 20억원, 2012년에는 10개 과제 105억원, 2013년에는 12개 과제 123억원, 2014년에는 19개 과제 211억원, 2015년에는 18개 과제 169억원을 지원하였다.

연차별 기술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변화 주기가 짧은 터치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미세패턴용 LDI, 인쇄소재 성능 향상을 위한 광소결장비, 플렉서블 터치디스플레이 공정개발 지원을 위한 웹코터 등 최

신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개발제품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터치분야에 특화된 터치소재 환경신뢰성 검사기, 플렉서블 터치센서 검사기, 다양한 UI/UX 앱 검사 등 시험·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기술 멘토링을 추가한 프리미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4년 6월 대구(성서)에 터치관련 시험인증 거점기관인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30여종의 시험 및 시제품공정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MS사 Windows WHQL인증’ 서비스 및 KOLAS 국제공인시험인증,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시제품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터치체험관을 조성하여 기업의 개발제품 전시 및 감성터치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거점기관(인프라)과 전국(서울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을 연계한 수요형·국산화·터치응용분야 단기 상용화 시제품사업(22개 제품, 8억) 지원을 통해 지역의 터치소재 및 장비, 터치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의 성장과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터치패널용 강화글라스 공정·장비기술과 기능성하드코팅 내재 PET 필름개발 등 19개 과제와 구동변위 10% 이상 축감과 3단계 이상의 질감 표현이 가능한 센싱과 구동 기능 멀티터치센서 원천기술개발 등 3개 과제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화 실적을 이루었다(특허출원 31건, 특허등록 12건, 사업화 매출액 347억원, 고용창출 70명).

향후 터치산업은 신규시장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고 특히, Flexible 터치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및 웨어러블, 디지털사이니지 분야가 20% 이상 성장이 기대(KDIA, 2015년)된다. 또한, 소재→부품→디바이스→알고리즘(control IC)→응용 제품(컨텐츠 포함)에 이르기까지 상호기술 연관도가 매우 높아 Supply chain의 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시장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출력 디바이스(모바일, 디스플레이, IT응용기기 등)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7)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울산광역시시는 2014년도 기준 전국 자동차산업 생산의 20.5%, 부가가치 20.6%를 담당하는 국내 자동차산업 메카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산업 단지이다. 자원의 고갈과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차량으로 급속

도로 변모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은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성장과 직결되는 생존문제이므로, 향후 본격적인 시장전개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탑재한 장거리주행 전기자동차(RE-EV,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 핵심부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RE-EV 전용의 구동계, 엔진발전기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RE-EV 전용 차체, 전장 및 주행제어 부품 등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전기차 부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린카 기술센터를 건축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험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까지 11개 기술개발과 1개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3개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추가하여 RE-EV용 구동계, 고효율 엔진발전기, 전용 차체샤시,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플랫폼 등 14개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였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울산광역시 그린카기술센터는 2013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11월에 건립을 완료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 공간제공, 그린카 분야 시험평가 장비 16여종 구축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 사업에는 DH홀딩스 등 39개의 중소·중견 부품기업과 20개의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까지 특허출원 및 등록 97건, 논문 86편, R&D 인력 고용창출 517명의 직접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장거리 주행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을 상용화해서 향후 전기자동차 부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카 기술센터 건립을 통해 전기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공동연구·시험평가·품질개선·상용화 및 실증평가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의 일괄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기차 분야의 강소 중핵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동물약품허브 조성사업

동물약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6,454억원으로 타 산업 대비 크지는 않으

나 이중 수출이 2,433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3.5%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생활여건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증대, 가축 사육수 증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연평균 6% 성장이 예상되면서 육성 필요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 동물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주요 수출 시장 선점이 절실하지만, 국내 동물약품 업체의 영세성으로 개별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및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자체 연구 개발 시스템을 투자/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비해 R&D 투자 규모, 품질 및 기술 수준이 낮고, 수출의 경우 수출 국가별 허가 요건이 상이하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약품허브 조성사업은 수출 주도형 동물약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R&D 지원 체계 구축, 동물약품 원료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기능성 상용화 촉진 등 동물약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지방비(충남도, 예산군) 100억원, 민간부담금 76억원 등 총 266억원을 투입하여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 기반 구축 1건과 동물약품 원료 연구개발 1건을 수행 중에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재)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3년 9월 사업에 착수하여, 동물약품 원료 중 합성원료와 발효/천연물원료를 국제 수준(GMP)에 맞추어 시험생산이 가능한 시험생산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후보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원료의약품 시험생산 설비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구축 장비 가동을 위한 설치적격성평가(IQ), 운전적격성평가(OQ), 성능적격성평가(PQ)를 2016년 8월에 완료하여 기업의 장비활용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사업은 (주)고려비엔피 동물약품 중소기업과 1개의 연구소, 1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천연허브 기반 원료와 DDS 기반 합성 원료 기술개발완료 및 지적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을 2015년 12월 완료하였고, 관련분야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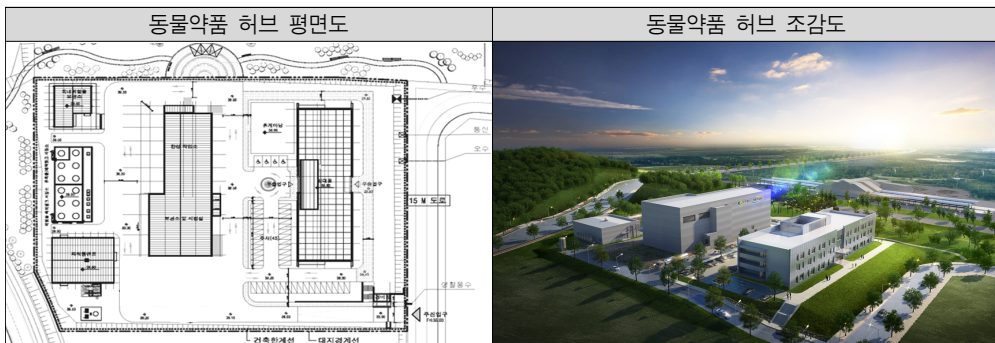
본 사업은 기반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며, 시험생산 시스템의 활용기업 선정 및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고용창출, 사업화 매출액 등 주요 지역 발전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표 2-2-6 동물약품 허브 2015년도 목표치 및 달성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건축공정률(%)	100%	100%
특허출원(건)	2건	2.1건
사업화고용창출(명)	1명	2명

향후 동물약품허브의 국제기준 확보를 통한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 동물약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시장 확대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6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



(9)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생소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환경문제, 거대도시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현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과 향후 10년 이후인 2025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65%가 대도시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1천만 이상 거대도시가 2010년 22개에서 2025년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가구유형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며, 거대도시화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주택문제 등은 실로 그 속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동 수단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친환경적이고, 소수의 탑승자를 이동하기에 최적화된 신개념 근거리 이동수단 개발과 新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1) 3·4륜 Micro-모빌리티 및 핵심부품 개발, (2) 신뢰성 고도화를 위한 평가 장비 구축, (3) 핵심부품 연구지원을 위한 센터구축(전남 영광군 대마산단), (4) 효율적인 보급·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림 2-2-7 EU 등 선진국의 Micro-모빌리티 활용 사례



그림 2-2-8 개발 중인 3·4륜 Micro-모빌리티 디자인



3·4륜 Micro-모빌리티 개발은 전기 구동계 등 핵심부품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신뢰성 고도화를 위한 최적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4륜 : 400kg, 13kW, 60km/h; 3륜 : 350kg, 6kW, 80km/h이며, 각각 유럽 기준 L7, L2 Category에 해당). 평가 장비 구축은 디자인 및 설계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3차원 측정기 등은 완료하였고, 사업 종료 후 관련 중소·중견 핵심부품 업체 지원을 위한 대형 평가 장비 구축을 국내·외 전문 업체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보급·확산에 실패했던 저속전기자동차 관련 중소·중견 업체를 비롯한 130여개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연구센터 구축은 설계 및 모든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쩍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등) 및 행정자치부(경찰, 도로교통공단 등)를 중심으로 합리적 차량 등급의 정의 및 안전 규제, 면허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세계 5대 주요 OEM(VW, BMW, Honda, Hyundai, GM)은 2020년까지 60개의 초소형 전기차 新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3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해마다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 중이며, 2020년까지 135개 모델이 세계시장에 출시될 계획이다. 도요타 등 해외 선진업체는 완성도 높은 Micro-모빌리티(Twizy, i-Road, COMS 등)를 개발하고 국내·외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 OEM이 주도하는 승용차 기반 전기차 개발 및 실증/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이며 미래 교통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Micro-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본 사업이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Micro-모빌리티 생태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10)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014년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2.3% 성장한 167억불(2013년도 148.7억불)로 추산된다. 연평균(2009년~2014년)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로봇시장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로봇산업은 4대 로봇분야 기준 2014년 생산액이 2조 6,467억원으로, 전년대비 19.2%(2013년 생산액 2조 2,210억원) 성장해 초

기 시장진입기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로봇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계획’을 통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지정하여 육성책을 강화하였다. 로봇수요의 전산업 확대 및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R&D 종합역량 제고를 위해 2014년 7월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부육성정책을 토대로 로봇산업을 주력산업화하기 위하여 특화육성분야 선정과 집중지원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로봇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 2012년 착수·추진하였다.

표 2-2-7 국내 로봇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제조업용 로봇	1,647,894	70.7	1,618,410	71.5	1,695,849	70.0	1,967,232	66.4
전문서비스용 로봇	68,236	2.9	35,510	1.5	37,797	2.0	65,718	2.2
개인서비스용 로봇	239,418	10.3	295,896	13.1	265,056	11	272,794	9.2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90,878	8.2	182,895	8.1	222,337	9.0	340,926	11.5
소 계	2,146,426	92.1	2,132,711	94.2	2,221,039	92.0	2,646,670	89.4
로봇시스템	159,632	6.9	114,103	5.0	168,313	7.0	221,362	7.5
로봇임베디드	1,696	0.1	4,034	0.2	1,175	0.1	12,573	0.4
로봇서비스	22,627	1.0	13,229	0.6	16,134	0.9	79,985	2.7
총 계	4,454,180	100	2,264,078	100	2,406,661	100	2,960,590	100

자료 : 2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중소제조·사회안전·의료·부품모듈 상품화 등 4개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지원을 통해 로봇산업 R&BD허브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1차년도 부지매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2차년도 공사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센터 착공(2013년 12월)을 거쳐 3차년도인 2015년 5월에 로봇혁신센터와 로봇협동화팩토리를 준공, 로봇기업 입주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집적화

된 로봇환경을 조성하였다. 표준시험인증센터 내 성능·신뢰성 평가 장비구축을 시작으로 센터별·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장비 구축을 통하여 로봇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우수로봇기술을 발굴하여 로봇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으로서 로봇기술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검증 과제를 통하여 1차년도 14개, 2차년도 18개 과제, 3차년도 15개, 4차년도 13개 과제를 지원하여 제품화성공비율 71.0% 달성 및 31개 과제에서 80억 47,207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3차년도부터 추진한 로봇창업맞춤형과제를 통하여 3차년도 7개, 4차년도 5개사의 로봇 창업 및 로봇기업화로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였다.

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2차년도 2개 과제, 3차년도 11개 과제, 4차년도 13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총 26개 과제(2015년 종료과제 13개 포함)가 수행 중으로 동 과제를 통해 2015년 12월 기준 국내외 특허 41건, 고용 97명, R&D 관련 매출액 사업화 실적 16억 1,900만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9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의료용로봇, 사회안전로봇, 중소제조지원로봇의 기술개발과 제품혁신을 통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제조용 로봇개발 및 제품화로 뿌리산업 중소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전·후방 산업에 로봇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시장 확대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반구축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TP(테크노파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유희시설에 건축·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2010년 ‘지식경제R&D사업체계’ 개편 시 6개 사업이 통합되며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5년 현재 38개 내역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국비 1,089억원의 투자로 추진 중이다. 분야별로는 기반조성 37건, 기술개발 78건으로 분류된다.

지역산업거점조성이라는 본 사업 목표의 특성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구축장비의 가동률(31.3%), 지역기업의 성장(5%), 지식재산권 질적수준(4.1%) 제고, 고용창출 등)목표를 설정하여 2015년에는 목표대비 100% 상회한 우수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술 및 사업화 애로요인의 능동적 해결이 가능한 종합기술지원체계 마련 및 적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목표의 효율성 검토 및 거점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결과공유, 사후관리 등을 위해 통합관리·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림 2-2-10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체계



(12) 수출전략형 FGCV 기술개발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의 R&D 지원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차는 환경적으로 CO₂, NO_x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청정화, 에너지 절감 등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확보가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1,117억원, 지방비 354억원, 민자 265억원 등 총 1,736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대비 70% 수준인 국내 상용차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용차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친환경 동력 기술, 고안전 경량화기술 등 12개 핵심요소 기술개발과제와 이들 기술개발을 지원할 상용차에 특화된 연구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연비 다단 자동화 수동변속기 개발 과제를 선정(2015년 6월 개발 완료)하였으며, 상용차부품 R&D센터 및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구축에 착수하여 상용차부품 R&D센터 설계 완료,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을 완료하였다.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상용차 보조동력 부품인 ‘상용차용 고마력 유압식 보조제동장치(Retarder) 개발’ 등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용차 R&D센터 건축을 2014년 6월에 완공하고, 상용차에 특화된 대형상용차용 실차기반 전기적 적합성 평가시설 등 2개 평가장비에 대한 미래부의 장비도입심의 통과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상용차 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은 상용차 핵심부품에 대해 실차상태의 신뢰성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상용차부품 R&D센터의 착공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인 2014년에는 친환경 동력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상용차용(8L급 이상) Euro-6 규제 대응 One-Box 배기후처리 시스템 캐닝기술 개발’과제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4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기반구축으로는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차부품 R&D센터의 준공,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의 설계, 도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을 수행하였으며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4차년도인 2015년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상용차용 PHEV 기반 청소차량 구동 시스템 개발'과제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5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기반구축으로는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부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2015년 3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31%)이다. 또한 시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매뉴얼(관제, 안전수칙, 시설관리 등)을 작성하고 시험장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문기관과의 N.D.A 체결, 국내자동차부품업체와의 MOU 등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 완공된 상용차부품 R&D센터 내 상용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공동연구 장비를 연차별 계획대로 구축하여 국내 상용차부품산업을 지원하고, 2017년 완공예정인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의 공사에 있어서 노면품질 및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상용차 산업의 국산화, 고부가치화를 실현하여 2020년까지 상용차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수출 200억불 이상 등 상용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3)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클러스터 조성 사업

광주광역시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반영하기 위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자동차산업 지속 발전 기반 마련과 부품기업 대상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함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창조경제·창조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에 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전용산단 조성, 기술지원센터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전용산단 조성은 광주지역의 뛰어난 노동생산성과 지역기반의 노사간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여 완성차 및 부품기업을 유치하고, 공장부지, 인프라시설, 공공시설에 주거, 문화, 에너지 등의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자동차 기술지원센터는 환경규

제 대응 및 차량성능 향상을 위한 자동차 경량화, 지역 내 축적된 광·전자·가전·IT산업과의 융합, 특수목적차량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기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자동차 전시 및 국제행사 개최 등 MICE 산업 지원,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일자리 연계형 자동차전용산업단의 일자리 창출과 토털비즈니스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정부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신서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책사업과 원주의료기기단지, 경기, 인천 송도 등에서 지자체 차원의 의료산업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구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달된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새로운 IT융합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IT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첨단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기반 조성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원주의료기기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란 의료기기 중 전자장치 특히, 컴퓨터를 제어나 정보가공장치로 이용하는 전자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하여 소요되는 핵심요소 및 자원을 의미하며,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하는 추세이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6년간 국비 820억원, 지방비 270억원, 민간부담금 43.5억원 등 총 1,133.5억원을 투입하여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용화지원센터 및 집적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체의료기기, 의료영상기기 분야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지원센터는 (주)루셈, (주)엔디디 등 17개 기업이 입주하여 입주율이 95.3%이고, 2017년에 완공 예정인 집적생산단지는 IT 업종전환 기업과 국내외 의료기기 앵커기업 생산시설 유치 및 KGMP의 품질경영시스템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2-2-11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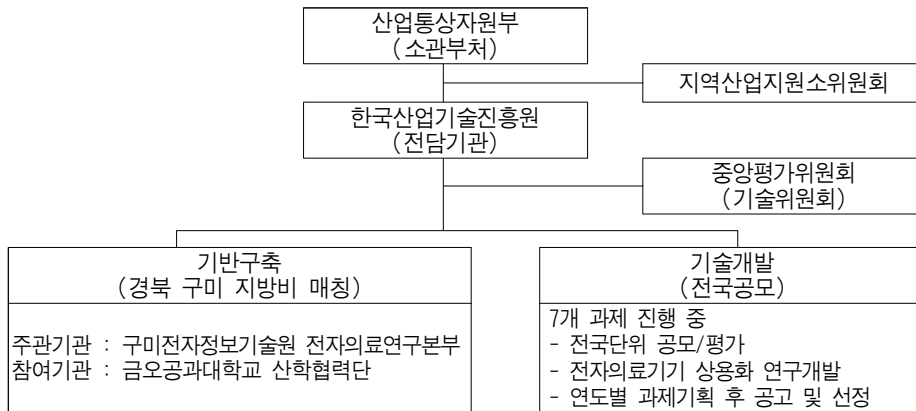


표 2-2-8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투입	20	58.87	95.60	122.6	215.0	100.0

기술개발사업으로 11개 과제를 지원하여 “심전도 검사용 전도성 실리콘 점착패치 및 이의 제조방법” 등 총 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10억원당 1.8건의 특허출원 실적으로서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5건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인 마이크로엔엑스는 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여 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외에도 기업 비즈니스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지역 경제 발전 및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스위스 경제사절단 파견을 지원하고, 전자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지원은 물론 대경 지역 IT업체들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엔엑스, 대영오앤이 등 7개 기업이 업종다각화를 성공하여 매출액 258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세아메카닉스, 동양산업 등 20개 IT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수행사업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하여 워크숍, 기반조성협의회, R&D수행기업 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 공동협력 방안 제고 및 성과 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수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BC 1.02, AHP 0.572)시 집적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 편익이 전체 사업 편익의 80.5%를 차지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조성이 지연되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7년 완공된 후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차부품고급브랜드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자동차 브랜드는 대중적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고급차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급브랜드(프리미엄) 자동차는 단순히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라 기술적 혁신성을 동반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고유가에 따른 중·대형 세단의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급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7~9%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 영업이익의 60%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이다.

고급브랜드 자동차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 승차감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야 한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보다는 타협하지 않는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대중적인 자동차에서는 가격과 제조의 어려움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제조 방법들이 고급브랜드 자동차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개발된 프리미엄 자동차용 부품은 양산화된 초기에는 비용과 생산성의 문제로 프리미엄 자동차에 탑재되지만 개발과 생산을 거치면서 일반 자동차에도 도입된다.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이 결국 자동차 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자동차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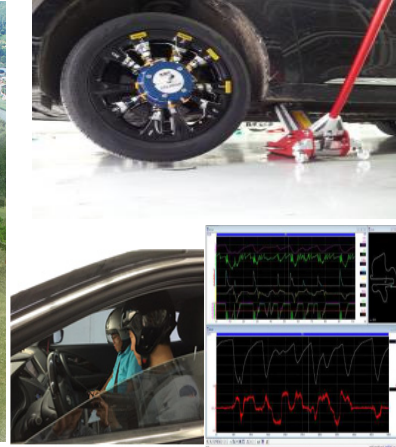
2012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년간 사업비 5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F1경주장을 활용해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부품들을 시험·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12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세부사업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 조감도>



<F1 서킷활용 고성능 부품 평가>



타이어, 휠, 제동 등 3대 부문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핵심 부품 5종 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평가 기법 확보 등의 기반 조성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특히 F1 서킷을 활용한 극한 성능 평가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능시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된 국산 자동차 부품을 프리미엄 차량과 모터스포츠 차량에 우선 적용하여 국내 부품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F1 경주장 인근에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영암 F1 서킷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건설기계산업은 자본집약형, 수출지향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후방 연계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다. 세계 건설기계·부품 시장은 연평균 5.4%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건설기계 시장규모는 2015년에 1,711억 달러로 조선, 공작기계의 두 배에 달한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저비용 고효율, 지능형 장비생산을 위해 건설기계부품의 주력산업화를 통한 전략적 특화단지 조성 및 대용량 유압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통합 시험·인증·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산화율을 현재 30~50%에서 2020년에 70% 이상으로 제고하고, 2020년 생산 493억 달러(세계 4위) 달성과 대기업 10개사, 매출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완성차 25개사, 중소 부품기업 500여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2년도부터 국비 1,334억원과 지방비 423억원, 민자 7,094억원 등 총 8,851억원을 투자하여, 경산시식산업지구 내 종합실차시험장 및 시험평가센터 건축과 실차시험장비 및 분석장비 구축, 건설기계부품 기업전문단지 구축 그리고 건설기계부품 핵심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핵심과제는 건설기계부품 기업 실수요 중심의 시설·장비 기반구축을 통한 활용극대화 시스템 구축과 국내외 건설기계전문기업의 특화단지 내 입주 유치라 할 것이다.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전문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정기적인 기업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 추진된 기술개발과제에서 대용량 유압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기술개발 7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특허출원 4건, 고용창출 27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7년까지 융복합센터 및 종합실차시험장을 착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추진, 대용량 유압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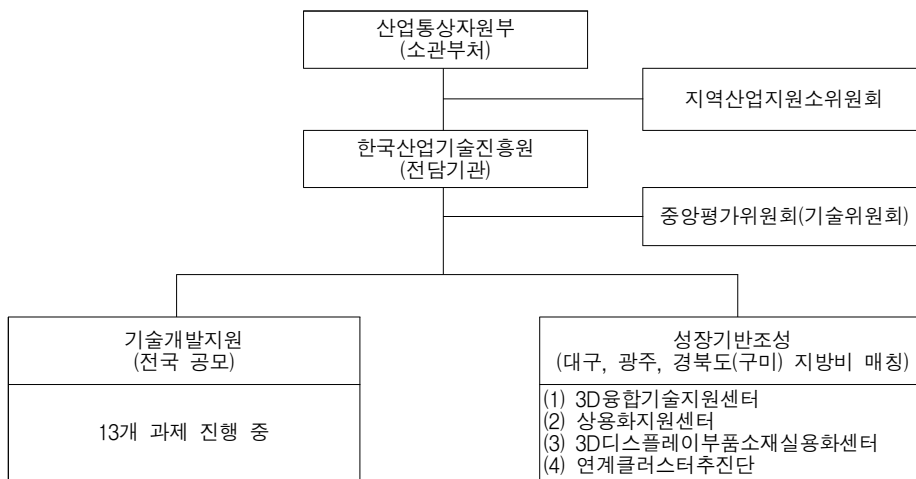
(17)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은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및 영상기기(3D TV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3D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3D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3D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체감, 사실감, 현장감을 제공하는 3D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자동차, 로봇, 콘텐츠,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 경북과 광산업 집적지인 광주의 역량을 결

집하여 서로 다른 기술 및 산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연계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의 디스플레이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광주의 광학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13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광주, 경북(구미)에 각각 지역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의 성과 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클러스터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3D융합기술의 취약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제품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0년 발표된 범부처 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을 기초로 해서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실시가 확정되었다. 2012년 7월에 사업이 착수된 이후, 5년간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원 예산도 매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다.

표 2-2-9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 : 억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투입	90	193	257.3	360	337.7

2015년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13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21건의 국내외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10억원당 특허출원 실적이 3.5건으로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5건을 약 2.4배 초과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3D융합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도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실적도 18건으로 정부지원금 10억원당 3건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실적인 1.5건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품1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으로 2015년 총 123건의 기술의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총 172명의 고용 창출과 총 525억원에 달하는 매출 발생을 달성하는 등 3D융합기술 거점센터로 지역의 3D융합산업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3개 거점센터 건축 완료 전에는 임시공간에서 인프라구축 본격화 및 기업지원 수행 업무를 추진하는 등 애로점이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에 3개 거점센터가 모두 완공됨으로써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지원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된 11개 기술개발 과제와 계속 추진 중인 2개 기술개발과제 등 총 13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3D융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

에너지효율이 높아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숙단계에 있는 클린디젤자동차 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사업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년간 국비 1,283억원, 지방비 366억원, 민간부담금 222억원 등 총 1,871억원이 투입되어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연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디젤기술전문센터와 핵심부품소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와 관련 기술개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동차부품 시장경쟁력 강화와 부품개발을 지원한다. 기반구축 사업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 개발은 동력발생부품, 전후처리/엔진부대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개 핵심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 3월 클린디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및 분석 장비는 12종을 기구축 또는 구축 추진 중에 있다. 1차년도 장비 포터블 FT-IR 분석계(2012년 12월 구축), 2차년도 장비 열전도도측정기(2013년 8월 구축)와 중·대형 엔진동력계(2015년 8월 구축) 및 3차년도 장비 대형 엔진동력계(2015년 8월 구축), 진동환경챔버(2015년 4월 구축)는 기구축하여 기업지원(시험평가)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4차년도 장비 “4WD 승용 차대동력계” 등 장비 3종의 경우 현재 구축추진 중으로 제작장비를 제외하면 2016년 말까지 구축완료 예정이다. 5차년도 장비 “배기가스분석계” 등 4종은 현재 입찰 중으로 기구축하여 지역 부품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사업은 “연비 개선을 위한 전동식 융합형 클러치타입 워터펌프 기술개발” 등 총 17개의 수행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7개의 계속과제가 수행 중이며, 2015년 2개 과제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과제에는 지금강 등 11개 자동차부품 기업과 11개의 연구소, 5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9개 과제에 금호HT 등 8개 지역 부품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논문건수, 특허출원 등 질적 기술력 측면의 사업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매출이 약 175억 원 발생하였고 32명의 고용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사업성과가 꾸준히 도출되어 우수한 사업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클린디젤사업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들과 협업하여 기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기술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클린디젤자동차이지만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클린디젤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견인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메디컬 섬유란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되면서 모든 생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섬유상의 소재 및 제품을 말하며 진찰, 치료, 외과수술, 건강관리 등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중 섬유구조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메디컬 섬유는 치료/수술용 섬유와 헬스케어/위생용 섬유로 분류되며, 치료/수술용 섬유는 다시 이식용 섬유와 비이식용 섬유 그리고 체외장치용 섬유로 구분된다.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284억달러이며, 연평균 5.1%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3,625억불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조 6,315억원으로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5조 1,124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메디컬 섬유소재 시장(의료위생용품)의 경우는 2013년 수출 1억 4,000만 불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수입은 3억 2,000만 불로 기록되어 무역수지가 적자 1억 8,000만 불을 보이고 있다.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493.6억원, 지방비 163억원, 민간부담금 94.6억원 등 총 751.2억원을 투자하여 수입의존도가 심화(대외 무역수지 적자 : 2006년 12억달러→2009년 17.6억달러)되고 있는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융합제품의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다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은 창상치료 제품, 임플란트용 치료/수술제품, 비임플란트용 치료/수술제품, 신체기능 보조용 제품 등의 기술개발이며,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은 소모성 위생용품, 감염방지 보조용품, 스킨케어용품, 인체보정용품 등의 기술개발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기술개발 과제로 조직재생기능 복합 다층구조 드레싱재의 개발, 생흡수성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상 조직유착방지막 개발, 기술융합 복합기능성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인체친화형 경량 무연 방사선 차폐 소재 및 의료용 보호복 개발,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조를 위한 환편시스템 및 제품개발, Medical Textile 용도전개(Application) 기반기술 개발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위해 물성위주의 기

반을 경북테크노파크에 설치하였으며, 항염증 기능성 도입을 통한 통증완화 효과를 가지는 생체분해성 봉합사의 개발, 팽창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판형 및 원통형 인조혈관 스텐트 개발, 99.99%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율과 TVOCs 제거율을 가지는 복강경 수술용 복합 다층구조 smoke 제거 필터의 개발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경북 경산에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비혈관용 생분해성 브레이드 섬유 스텐트 제조 기술 개발, 셀룰라이트 감소 유도 물질의 경피 흡수 촉진용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응급실 환경에서의 HIV 감염성 질환의 멀티 분석 디바이스 및 정량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선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당류계 섬유상 지혈제, 의료용 High Pressure Injection Line, 항문대체용 인공장관 및 장루, 2.4 Fr급 PTCA balloon catheter, 산소투과도가 우수한 소프트 하이드로겔 마스크, 나노케어 스팟패치 등 6개 신규 사업 개발을 선정하였다.

5차년도인 2015년에는 메디컬융합소재산업 조사 및 연구, 기업의 기술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가 연계하여 메디컬융합소재R&BD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기반조성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기업 제품의 식약처 허가획득, 인증지원 등으로 경상지역 메디컬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중심의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기반기술 개발 사업 12개를 계속 지원하였다.

(20) 탄소밸리구축사업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소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소재 개발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 또는 집적하여 차세대 신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소재는 고강도, 경량성 등의 특징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원의 확

대로 미래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핵심소재로 거론되고 있다.

탄소밸리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971억원, 지방비 78억원, 민간부담금 530억원 등 총 1,579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단가 절감을 위하여 24K 이상의 토우를 뽑아내는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석탄·석유 잔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와 응용기술개발(단열재, 자동차부품에 적용), 그리고 공정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저에너지비용 탄소섬유 공정기술개발 등 5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험·분석 장비와 성형·가공 장비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탄소소재 일류화지원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KIST 전북분원을,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지원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각각 선정하여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기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석유잔사물을 활용한 이차전지 전극용 피치계 코팅소재개발을 신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고성능 탄소섬유(T700급)의 국내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연 2천톤 규모의 탄소섬유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석탄계 피치섬유개발을 위한 파일럿(40톤/년)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단열재용 복합재 및 활성탄소섬유 제조원천기술이 확보되었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의 응용확대를 위한 자유공모 1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자동차 부품용 탄소복합재 개발을 포함, 탄소복합재 재활용 등 국내 탄소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피치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럿(50톤/년)을 구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 사업화 확대를 위해 기술수요 조사를 통한 재활용 분야를 비롯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고성능 부품 등 우선 지원분야를 도출하여 13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이는 사업의 탄소섬유의 원천소재 개발에서 응용제품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완제품 간 상호연계 강화 및 성과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 추진된 라지토우 탄소섬유(50톤/년), 석탄·석유 잔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럿(50톤/년) 구축 및 응용기술개발을 본격 추진 예정이다.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0건 이상의 시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카본인더스트리포럼, 탄소페스티벌, 탄소밸리구축사업 KICK-

OFF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계 최고 복합재료 전시기관인 JEC asia 'Innovation Awards' 수상하였다. 더불어 JEC europe에서 최초로 한국관(탄소밸리 특별관)을 열어 우리나라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국내 탄소섬유 분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제전시 참여와 시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다.

5차년도인 2015년에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국산 탄소섬유(라지토우, 단섬유, 활성탄소섬유, 등방성피치)를 무상 현물로 제공받아 적용하여 국산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9건을 신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 투자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탄소복합재성형 종합지원을 위한 상용화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축하였고 탄소밸리구축사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T700급 탄소섬유(고강도 탄소섬유)는 (주)효성, 태광산업, 도레이 첨단소재 등 3개사의 생산량 증가로 국내생산이 100%에 달하고 있으나 고가로 인해 시장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충실히 수행되고, 관련 기업들의 양산화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까지 저비용 라지토우 탄소섬유 및 피치계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100% 이루어져, 원천소재·공정기술 개발 등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로 국내 약 1조 5천억원, 해외 약 11조원의 신규시장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탄소소재가 이용되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에너지, 토목/건축 분야에도 폭발적인 시장성장이 기대된다.

(21) SW융합기술고도화

본 사업은 예타 신청전 기획부터 진행된 과제로서⁷⁾, 기획단계부터 2017년 SW융합 산업 5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2012년 사업착수 기준)하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SW융합 기반 및 응용·상용화 R&D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내 SW 융합거점을 구축하고, 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산업을 통하여 SW산업의 서울편중 문제해결 및 SW산업

7)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년 9월 20일, KISTEP), B/C는 1.03, AHP는 0.705였다.

규모 확대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보유한 지역내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자체, 지역 중소SW기업 대상 관련 인프라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SW융합新시장 및 일자리 등 창출 기여를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14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비전과 목표



그림 2-2-15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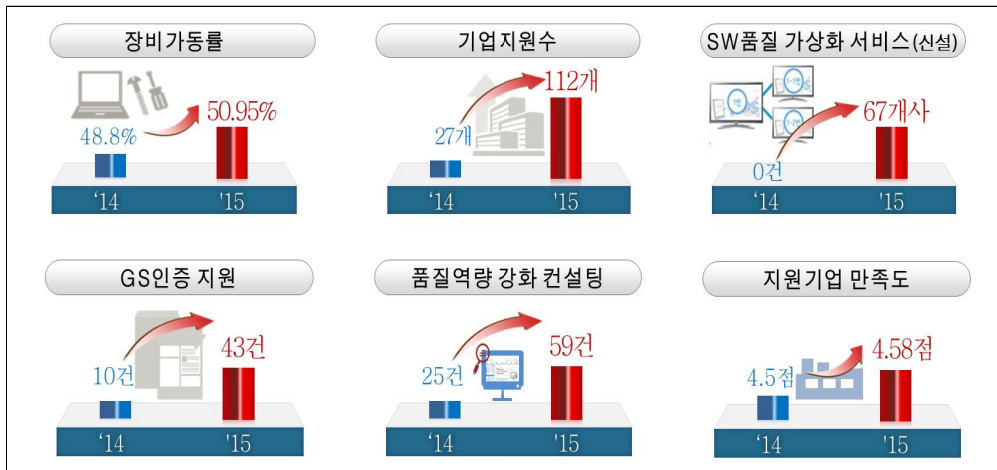


주 : 2016년 12월 완공 예정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건폐율	용적율
시설개요	4,292㎡	9,305㎡	지하1층 지상6층	54대	42.16%	161.52%
구분	면적		공간용도			
	㎡	평				
6층	1,123	340	SW융합기술지원센터 운영본부(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등)			
5층	1,123	340	SW융합기술지원센터 연구공간(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대회의실			
4층	1,123	340	TTA대구SW시험센터(시험표준인증평가), 교육실			
3층	1,123	340	산학협력실			
2층	1,089	330	산학협력실			
1층	1,352	409	상설홍보관, 미팅라운지, 관리실, 각종 편의시설, 다목적홀			
지하1층	2,372	719	공조실, 기계 및 전기실, 발전실, 주차장			
계	9,305	2,818	*부지면적 : 4,292㎡			

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첫째, 지역 전통산업에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지역거점 기반의 융합 SW 품질 보증 등 요구 해소를 위해 SW 융합 기반이 우수한 대구 지역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장비활용률 50.9%, 테스트 99건, GS인증 49건, 품질시험 59건, 오픈랩 27건, 활용기업 144개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16 2015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 성과 현황



두 번째 성과로는 2013년~2015년까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SW기업 대상으로 SW융합 기반기술에 지역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 지원(33개)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304명, 사업화율 53%, 논문 30건, 특허 76건, SW등록 4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지역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10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 성과 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과제지원	지원과제수	6	25	30
	지원금액	29.5	96	113.5
주요성과	신규고용	-	115	189
	사업화율	-	24	53
	논문	-	20	30
	특허	-	16	76
	SW등록	-	7	40

본 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A등급(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통합재정사업 미래부 자체평가 우수(9개사업중 2위) 등 지역 SW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신시장,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성과제고 노력에 주력할 것이다.

(22)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성과·기업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제품 상용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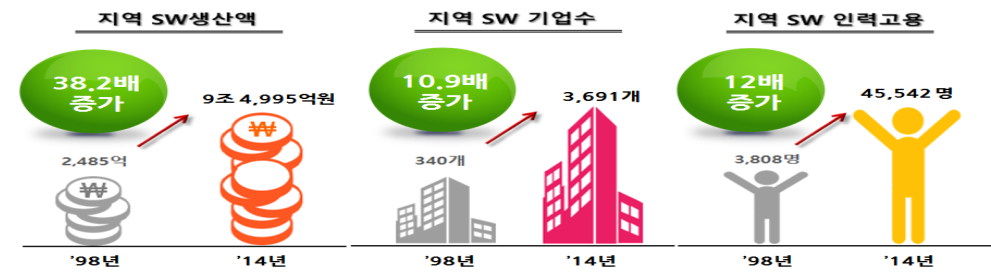
표 2-2-11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 현황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지역SW품질역량센터	
18개 지역 IT·SW산업진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융합 R&D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테스팅 지원 기능	
1998년 ~ 계속	2006 ~ 2012년	2011년 ~ 계속	

이러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17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단위: 억원, 개, 명)



구분	1998년			2014년		
	서울	지역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생산액	42,979 (94.5%)	2,485 (5.5%)	45,464	280,184 (74.7%)	94,995 (25.3%)	375,179
기업수	1,768 (83.9%)	340 (16.1%)	2,108	4,556 (55.2%)	3,691 (44.8%)	8,247
종사자수	41,623 (91.6%)	3,808 (8.4%)	45,431	115,907 (71.8%)	45,542 (28.2%)	161,449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2014년 ICT산업실태조사

이에 18개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분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SW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33개 과제를 발굴·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SW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SW품질역량센터에서는 테스트, 컨설팅, 인증취득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SW정책 로드맵 수립,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술 최신동향 정보제공, 지원과제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2015년에는 국비 156억원을 투자하여 18개 지역의 633개 중소 SW기업을 지원, 수혜기업 매출 2.7조원(전년대비 20% 증가), 신규고용 1,807명, 전문 인증 360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 1,232명 수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6년에는 충청남도 지역을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 내 문제를 SW를 통하여 해소하는 SOS(Software Oriented Society)사업을 연구·기획하고 있어 SW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SW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 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화사업’, ‘연구 사업’, ‘포럼사업’ 및 이들 사업 중 둘 이상이 결합된 ‘패키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로는 첫째,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발굴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의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향상되었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된 점을 들 수가 있다.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72개 자치단체가 사업공모절차에 참여하여 603개 사업을 선정, 868억원을 지원하였다. 선정 결과 특화사업이 497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패키지사업 16건, 연구·컨설팅사업 37건, 프로젝트사업 17건을 지원하였다. 특화사업의 사업에 참여하여 22,136명이 수료하고 13,464명이 취업(60.8%)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은 수행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력양성사업 위주에서 고용촉진사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협업체계

를 통해 전략적 지역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혁신선도사업을 집중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장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도입되었고,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2010년 3월~5월), 관련 연구용역 추진(2010년 4월~9월)을 거쳐 2010년 7월에 사업계획을 확정·공표하였다.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자치단체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역일자리 정책한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역량도 향상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는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서고(65.3%), 2015년도 고용률은 65.7%로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고용문제를 협력하고 조율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25)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5년말 현재 384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양한 선원 및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이 시급함에 따라 선박관리사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정)과 심화과정(6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약 15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서,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선박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대를 많이 보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1,985척 중 58%인 1,159척이 외국선박인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선박관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비용절감, Cost Down) 확보 및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2014년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선진화된 선박관리 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박관리산업은 향후 조선산업과 연계되거나 해운S&P(Sale and Purchase)산업 등 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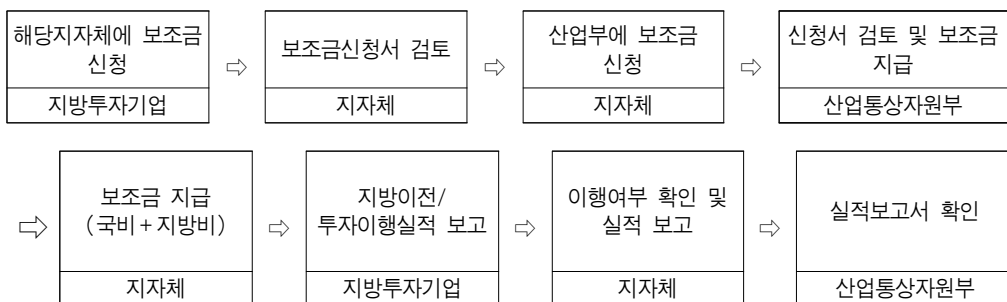
(1) 지역투자촉진(세종 포함)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한 기업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18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그 동안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574개 업체에

총 5,533.9억원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방 투자액은 총 15조 7,458억원, 지방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42,48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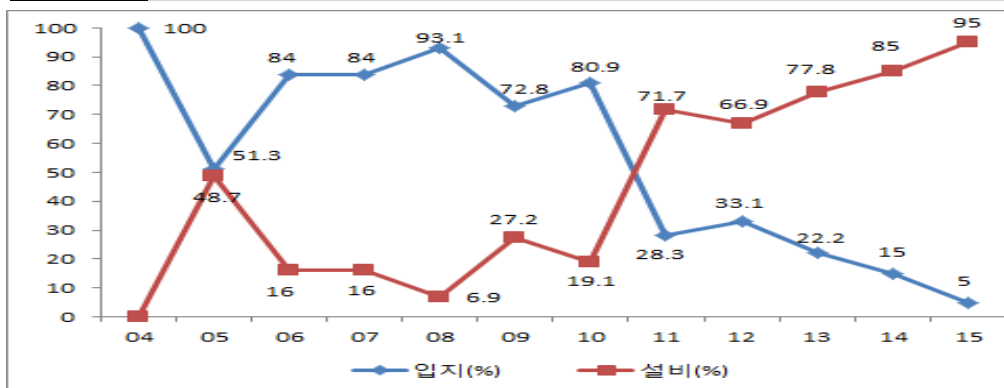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은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91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2,77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지방 신·증설 투자지원이 동 사업의 주력으로서 향후 신청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2-19 입지 vs 설비 비중(2004~2015년)



또한 신·증설 보조금 지원제도는 수도권 인접·비인접 지역간 지원규모 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투자촉진사업이 지역간 불균형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20 수도권인접지역 vs 비인접지역 지원실적



주 : 강원·충북·충남 지원비중 : (2004년) 85% → (2011년) 40% → (2013년) 29% → (2015년) 24%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최초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5) 지방기업의 공장스마트화 지원

2015년 ‘제조업 3.0 혁신전략’에 따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이 시행되었고, 지방투자촉진사업에서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연간 300개 보급(국비 100억원)을 목표로 7월 고시개정 후 권역별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12월말 총 231개 업체의 신청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191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투자유치기반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12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94,92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17,130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	7,438	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	민간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	민간보조
정책연구비 등	354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합 계	120,576		

2015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1,206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949억원,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171억원,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7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9억 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4년 190억 불 대비 10.0%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13 2008~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이는 한·중 FTA 활용,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각종 규제개선,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치 노력 등 국내 투자 및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및 주요국 대상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가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 전망, 한·중 FTA 효과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핵심소재부품, 고도기술수반, 고부가 서비스 등 중점유치 분야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노후산업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독자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산업현장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네트워크 구축·운영, 테마클러스터,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5년 예산 597.3억원).

R&BD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 기술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5년 12월말 전국 6개 권역에 총 78개의 미니클러스터

가 구성되어 있으며, 8,123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2)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왜관(경북), 군산새만금(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전남),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 2015년에는 부산, 여수(전남)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였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시화·구미·군산·오송·대불 등 5개 지구에서 총 13개 대학 28개 학과 5,804명, 기업연구소 202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공동 R&D 217건, 사업화 프로젝트 74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758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11,000여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6,800여명에게는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4년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단지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평생학습, 기업지원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성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2-14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수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부평)	69	751	한국수출(서울대입구)	73	9,748	옥포구미2	80	1	포항반월특수(반월)	92 93	98 7,116	12	19,880
				구미1	73	1,194	고정죽도	85	43					
				한국수출(주안)	74	487	광양(연관)	85	1					
				익산1	74	223		89	90					
일반산업단지	전주1 춘천 후평	69 69	131 76				양산정읍1	81	102	신평중림(협동화)	90	449	51	11,532
							진주상평소	81	8	송탄	91	149		
							달성1차	81	515	하남1-3(3차)	91	457		
							강릉중소	83	50	문막	91	19		
							하남1-3(1차)	83	327	조치원	92	19		
				원주우산	70	19	오천	83	45	신평	92	6		
				인천기계	71	168	본촌	83	111	천안2	92	62		
				서울운수	71	160	송암	83	65	상수	92	11		
				인천	73	432	신평중림(기존)	84	160	성서2	92	1,153		
				대전1	73	97	향남제약	85	38	왜관(기존)	92	279		
				대구검단	75	534	안성1	85	49	안성2	93	53		
				성남	76	3,141	순천	86	37	충주1	93	43		
				대전2	79	95	전주2	87	19	상봉암	93	6		
							반월도금	88	107	평택	93	63		
							대구염색	88	125	경산1	94	194		
							성서1	88	897	강릉협업	94	15		
							하남1-3(2차)	89	331	완주	94	83		
							문평	89	7	외동	94	22		
							청주	89	356	문발1	94	13		
										현도	94	3		
합계	3		958	12		16,298	26		3,843	22		10,313	63	31,412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업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0년)까지 국비 3,3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5~2016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도에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수, 순천, 대구염색)을 추가 선정하여 2016년부터 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도 3개소(4차)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낡은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

자로 2015년 8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출법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2015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시화 및 부평국가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등 3개단지 내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자금 270억원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총 1,440억원 규모의 근로자용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근로자 오피스텔, 복합시설(지식산업센터+복지·편의시설(업무, 문화집회, 근생)) 등의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입지 제공 및 근로자들의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도부터 혁신지원기관을 단지 내로 집적화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부평, 창원, 대불, 여수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160억원(각 센터별 40억원/3차년도 사업)을 지방·민간비 등 198억원과 매칭하여 총 358억원 규모의 혁신지원센터 4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부터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서울디지털 및 창원, 대불, 반월시화, 구미,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근로자 복지센터 7개와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3개 등 총 10개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165억원에 지방·민간비 등 340억원을 매칭하여 총 505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로 청년 인력의 취업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공모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5년도에는 17개 산단(23건)에 3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10개 사업(지

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국비 138.8억원을 지원하였다.

(2) 종합비즈니스센터

최근 들어 산업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에 불과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의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이·퇴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입주기업의 인력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통해 근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내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상 공공서비스, 창업보육, 시험·연구시설, 회의장 등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소범위에서의 정부 자본보조를 센터 당 40억원 정액으로 자치단체 지원과 자치단체 지방비 40억원이상 1:1매칭을 통해 센터 당 총사업비가 최소 80억원 이상 200억원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한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대구, 시화, 구미 등 4개 센터가 건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비 8,317백만원 지방비 15,033백만원 민자 4,370백만원을 투입하여 군산, 김해, 청주 등 3개 센터가 준공되어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 광주, 익산, 제주 등 4개 센터는 공사 진행 중이다.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기업지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2-15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 공 시 설	컨 벤 션	·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 교육·연수	·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 차 장	· 주차장
기 업 지 원 시 설	공공서비스	·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 화 복 지 시 설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 업 시 설	금융 등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64건, 443km를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4,948억원을 투자해 60건, 111k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55,815	8,881	8,391	7,629	7,960	4,948

(4)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156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9,912억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44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876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	12	21,383	36,883
2000	10	21,383	58,266
2001	11	20,641	78,907
2002	7	1,898	80,805
2003	8	6,775	87,580
2004	8	10,742	98,322
2005	10	15,970	114,292
2006	11	37,180	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	16	47,064	232,856
2009	22	50,684	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	63	155,971	540,754
2012	68	135,708	676,453
2013	64	119,134	795,587
2014	51	106,563	902,150
2015	51	89,065	991,215
2016	44	87,616	1,078,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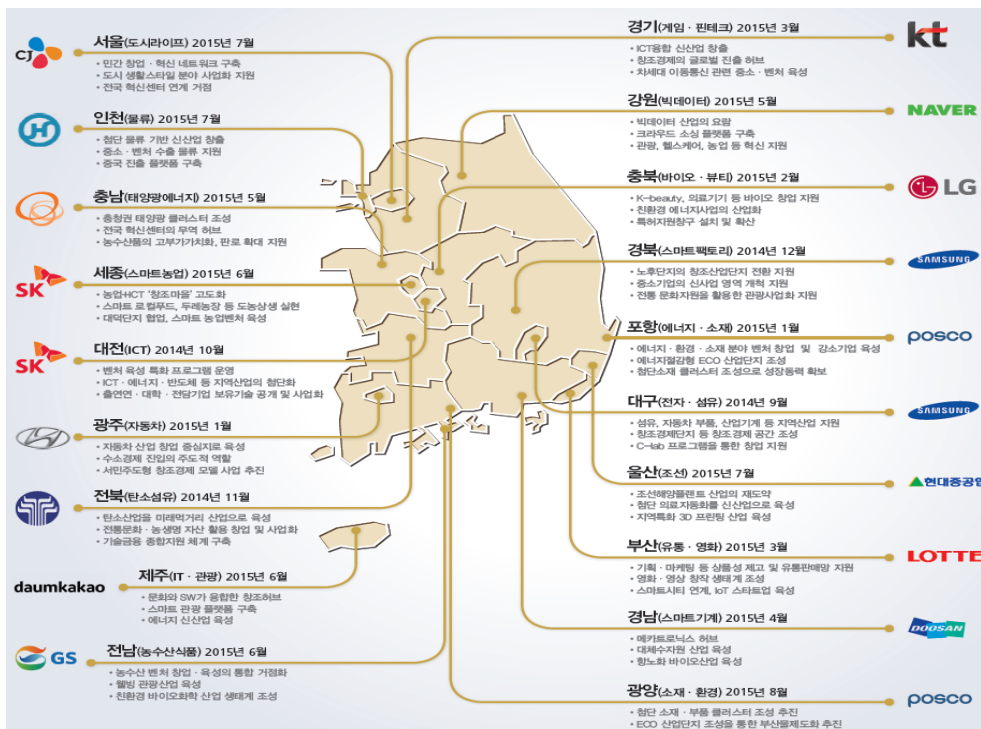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창업·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서 현재의 생태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대기업의 경험과 신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open source)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상주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시스템과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 조성 기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2-21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전국 17개 지역에 개소를 완료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혁신센터운영위 및 센터간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담기업(지역 창조경제생태계 보강)을 접목하는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정책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특성과 전담기업 강점분야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idea to value)까지 지원하는 창업허브,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별 전담직원이 고객에게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역역량을 최대한 연계한 밸류체인 강화와 우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해 멘토링, 투자,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22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도

창업과 지역혁신, 일자리 창출의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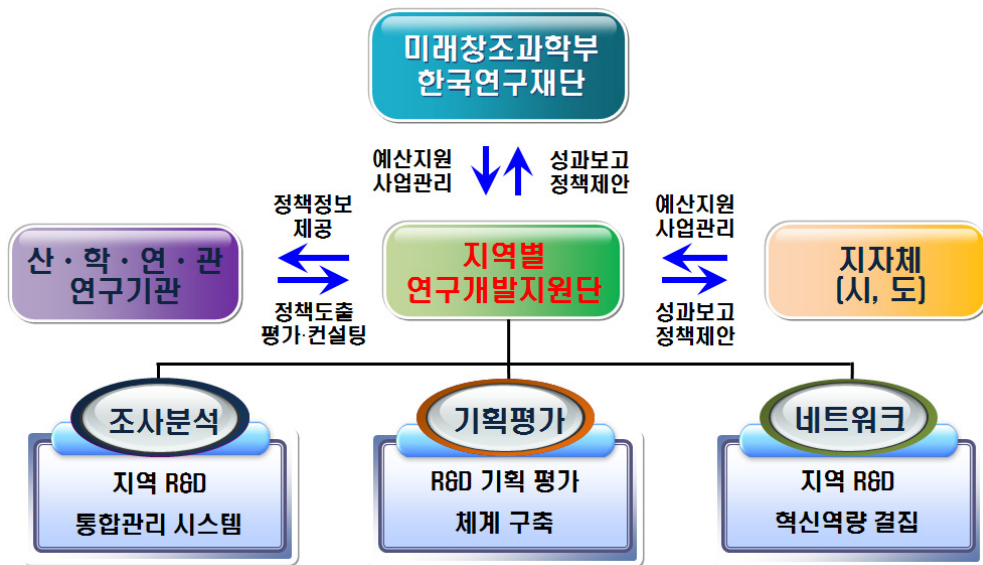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 완료 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별로 2개씩(세종 1개)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별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선정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 육성이 직접적으로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정부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R&D 조사·분석, 기획,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창조생태계 조성을 도모하였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그림 2-2-23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체계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2008년), 대구·전북(2009년), 경기(2010년), 광주(2012년), 강원·경남·경북·인천·전남(2013년), 대전·울산·제주·충남(2014년) 등 15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 R&D 사업의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육성하였다. 지역 R&D 전담기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R&D 조사·분석·기획 역량을 높였다.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지정년도	권역	주관기관
2007	부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2009	대구, 전북	대구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2010	경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13	강원, 경북, 전남, 경남, 인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2014	충남, 울산, 제주, 대전	충남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계	15개 지역	15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내 R&D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전략 발굴 및 기획지원, 지역 산업 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 R&D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역 R&D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9월에는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연구개발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R&D 역량강화 및 지역 R&D 이슈와 정책추진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포럼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R&D 투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15개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를 2015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15개 시·도 과학기술 인프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guide map)을 발간·배포하여 지역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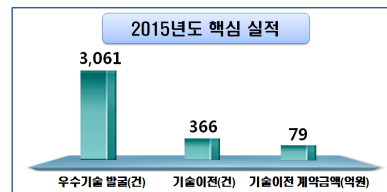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센터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 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80 대 20 비율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민간TLO 및 공공TLO(지역대학 및 출연(연) 등)간 컨소시엄을 구축·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기술거래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2-2-24 2015년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 주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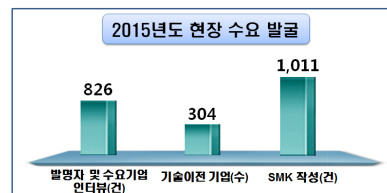
【핵심실적】

- 우수기술 발굴 3,061건
- 기술이전 366건
- 기술이전 계약금액 7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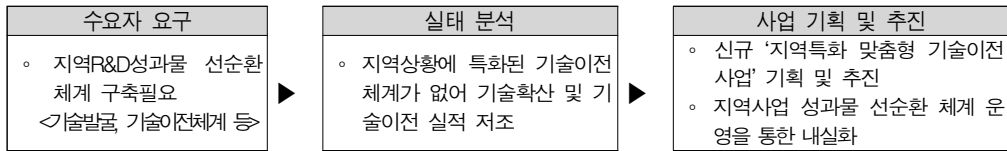
【현장 수요발굴】

- 발명자 및 수요기업 인터뷰 826건
- 기술이전 기업 수 304건
- SMK 작성 1,011건



2015년에는 SMK(Sales Material Kits) 작성 및 기술이전 설명회를 확대하고, 대외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면대면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지도, 노하우 공유,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확산 전후 단계별 연계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 기술의 TRL 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연계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전 성사율을 제고하였다.

그림 2-2-25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 진행 단계



(2)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 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의 국토교통분야 현안해결, 지역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1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2-19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정부예산	1,104	4,136	6,572	8,670	8,237	12,000	13,000	13,000	66,719

표 2-2-20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14년)

구축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2013년	충청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년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제주도자치개발공사

권역별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며,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인력채용에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6개 권역의 주요 경제적 성과로 각 권역 내 참여 기업은 150억 이상의 매출액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해 78억의 비용절감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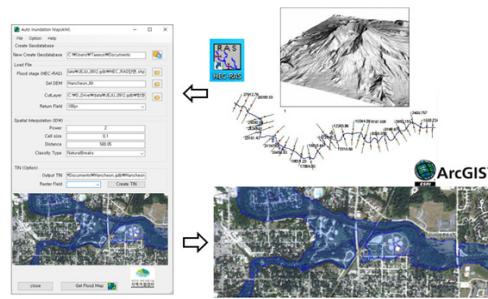
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도에 달성한 14건의 기술실시계약과 65건의 연구성과 지역활용 등을 비롯하여 35건의 특허출원 및 8건의 특허등록은 지역거점센터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및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여 28건의 SCIE 논문게재 및 83명의 인력양성 효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의 R&D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강원권 지역거점센터에서는 강원권 기후특성을 반영한 기능성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트랙 시공사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2015년 2월). 동일한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은 국민안전처의 방재신기술 제91호로 지정되었으며, 권역내 15개 공사현장에 적용되어 공사비의 30% 절감효과를 달성하였다. 동남권 지역거점센터에서 개발된 화력발전소의 bottom ash를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기술은 산업 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정제된 bottom ash를 이용한 콘크리트 및 블록 제작으로 약 2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제주지역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최적대응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30% 향상된 정확도와 모의시간 단축을 통해 제주권의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우선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국토교통기술들의 전국적인 확대 적용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26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5년)



< 봅슬레이 트랙 현장 적용 >



< 제주지역 기후변화 대응 홍수저감 기술 개발 >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연구인프라 조성 및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3)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21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5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정부 예산	2,000	4,000	8,000	6,270	7,000	7,000	7,000	6,300	5,196	3,864	1,310	57,940

지역특화기술 분야는 전국을 7대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현재 수행중인 1개 과제의 지원을 끝으로 2016년도에 지역특화기술 분야는 종료되나, 6개 권역의 지역거점센터에서 총괄하여 지역에 특화된 국토교통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과제인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경북대학교, 김화중)’의 주요성과로는 5건의 국내 특허 등록과 1건의 기술실시계약(2015년 8월)을 체결하였으며, 개발된 인공리프 기술을 속초·양양 연안정비사업의 설계에 시범 적용하여 약 3.1억의 현장적용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개발된 인공리프는 기존의 테트라포드와 비교하여 절반길이의 설치로 유사한 파랑 저감률을 얻을 수 있어 설치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인공리프 제작을 위한 해양건설재료의 기술확보를 통해 제철 부산물을 활용하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인 철강 슬래그 처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27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5년)



< 개발된 인공리프 설계기술 이미지 >

< 해양건설재료 기술 개발 >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함으로써, 그간의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협력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이전 촉진 TLO)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18개 대학 TLO를 지원하였으며 제1기 사업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제2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기관별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에 따라 선도형(독자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

하여 30개 사업단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다소 미약한 8개 대학들은 기술거래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신규로 선정된 12개 사업단의 초기 사업안정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 현장컨설팅 및 전담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학 TLO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급성장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1,953건을 기록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여 2015년도에는 490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2-2-22 대학 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2006~2010년)					제2기(2011~201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1,953
수입료	64	118	181	205	249	376	447	370	400	490

주 : 제1기 18개 사업단, 제2기 30개 사업단 실적이며, 수입료는 현금 입금액 기준, E-TLO(공동TLO)를 통한 기술이전 실적은 제외

(2) 산학협력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정부는 세계 각국이 대학이 창출한 지식을 신속히 사업화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함을 반영하여 국내 대학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수단 중 ‘기술지주회사’ 모델이 기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기술기반형 학교기업의 적극적 수익창출 기회부여와 경영위험 회피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학 연구성과물의 직접 사업화 촉진을 위해 ①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② 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 등의 비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를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국고지원금의 30% 이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의 사업화 추진을 통해 대학의 우수 기술이 신제품에 적용되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은 누적실적 기준 2011년 대비 2015년도에 125% 성장하였고, 자회사 설립 건수는 266% 향상되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되고 중·장기적 성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23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기술지주회사	3	7	3	9	1	36
누적	16	23	26	35	36	36
자회사	30	44	27	56	70	271
누적	74	118	145	201	271	271

(3)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글로벌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출연(연), 국외기관 등 외부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제품의 개발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3년). 또한 국내 기업들은 R&D협력 연계기능 부족과 공동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부진을 산학연 R&D 협력의 가장 어려운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년). 이에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 개발’을 추가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협력 우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24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지원 분야		연도	2002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예산(백만원)			10,440	2,400	2,400	2,400	17,640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24	16	18	20	378
	과제기획(건)		2,668	81	67	150	2,966
	정부사업(건)		878	124	85	85	1,172
	공동연구 등(건)*		1,031	116	65	144	1,356
	기술로드맵(건)		-	14	14	7	35
핵심애로기술개발 지원	지원과제(개)		49	5	7	8	69
	지식창출**						
	논문(건)		-	11	18	(진행 중)	29
	특허(건)		-	15	18	(진행 중)	33
맞춤형 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		219
	컨설팅(회)		1,240	-	-		1,240

주 : 1)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2)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2013년 ~ 계속

3)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2009 ~ 2012년(UNITEF)

(4)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연구성과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death valley 극복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중장기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견인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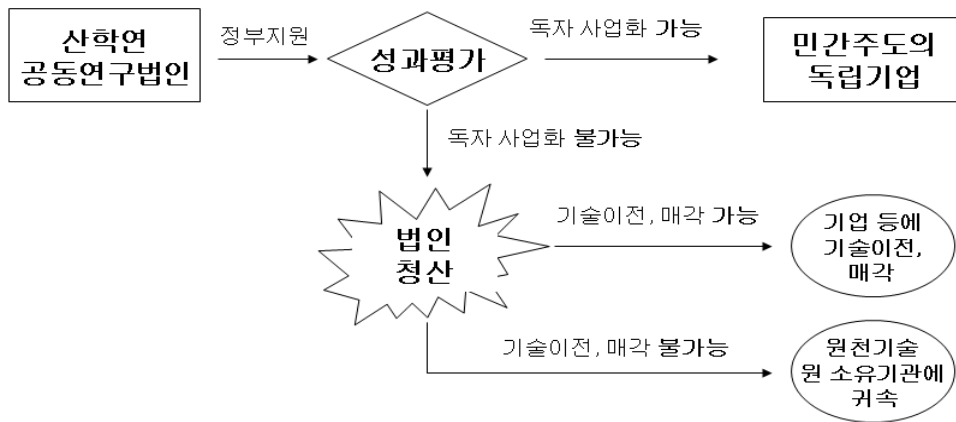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7)하였고, 2015년까지 총 7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초·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제작까지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용자인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 설립 시 투자·공동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용화 성공률을 극대화 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Tech-BM Workshop 사업에 대학·출연(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후속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M&A, IPO 등 포함),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의 3가지 방안으로 후속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2-2-28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본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주)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주)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주)이노캠포(충남대), 2014년에는 (주)탑앤씨(한밭대)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리튬 2차전지 파우치 분야의 후속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모바일 의료검진 장치를 개발하는 (주)커넥스과 스마트기기용 3차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쓰리디아이즈(주), 총 2개의 신규 공동연구법인을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특허 46건, 논문 37건 등의 연구성과와 총 39명의 신규인력이 채용되었다.

설립된 공동연구법인은 최대 5년의 후속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출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2-25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구분	연세대학교 연구법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법인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충남대학교 연구법인	한밭대학교 연구법인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연구법인	울산과학기술원 연구법인
법인명	아이씨엠(주)	(주)지피오	(주)지안산업	(주)아노텍	(주)탑앤씨	쓰리디 아이즈(주)	(주)커넥스
대표 이사	김대원	김민곤	김희숙	손원근	김동수	윤현식	신재혁
사업 분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개발	무기결합체 및 표층차단용 무기결합체 등 자반교체 건축소재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개발	인쇄전자용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	스마트기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개발	모바일 내시경, 모바일 통합의료 장치 개발
설립 자본금	5억원	14.8억원	5.95억원	1.84억원	4.05억원	5억원	2억원
출자 기관	○ 연세대 기술지주 회사 (90%) ○ 아이진(주) (10%)	○ 광주과학기술원 (38.7%) ○ 생명연 (41.8%) ○ (주)인포피아 (19.5%)	○ 전북기술지주 회사(35%) ○ (주)씨엠디기술 단 (65%)	○ 충남대학교 (45.6%) ○ (주)시온텍 (27.2%) ○ 코아텍(주) (27.2%)	○ 한밭대 학교 (63%) ○ 플렉스파이(주) (37%)	○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70%) ○ 계룡한경 (주) (25%) ○ (주)애플 (5%)	○ 울산과학기술원(44%) ○ 에이텍(10%) ○ 기타(55%)
설립일	'12.9.18	'12.9.26	'13.7.3	'13.5.8	'14.8.12	'15.11.30	'15.11.13
소재지	연세대학교 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기술연구 소	우석대학교 본관 806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 지원센터 106호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울산과학 기술원 경영관
후속연 구개발 과제명	○ 연골세포 기초 활성제 어를 통 한 퇴행 성 관절 염 예방·치료 기술 개발	○ 고감도/ 고 속/ 다중 화학 발 광 법 POC 진 단 바이 오센서 개발	○ 산업부산물 을 활용하 여 2차 환 경오염이 없는 고성 능 자반교 체 재료 제 조 기술 개 발	○ 이온선택성 Membrane, 이 온교환 Binder, 다공성 이온교 환 Sheet, 다공 성 이온교환 Tube 등 제조 기술 개발	○ 인쇄전자 용 초정밀 롤투롤 장비기반 이차전지의 고신뢰성 파우치 사업화	○ 스마트 기기용 3차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실감 콘텐츠 개발	○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통 합형 의료검 진장 치 개발
연구 책임자	김대원 교수 (연세대)	김민곤 교수 (GIST)	서세관 연구소장 (지안산업)	황택성 교수 (충남대)	김동수 교수 (한밭대)	윤현식 교수 (서울과기대)	정웅규 교수 (울산과기원)
연구 기간				5년 (3년+2년)			
연구비	매년 3.5~5억원 내외				매년 1.5억~3억원 내외		

(5)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특화전문대학원 지원)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은 2008년 7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새정

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정부출연연구소의 교육·연구 역량을 상호 보완하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협력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성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연협력에 의한 기초원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과제로서 2009년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선정하고 정부 출연금을 2009년도 2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매년 30억원 2013년까지 총 140억원을 지원하였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2011년 첫 졸업생 14명, 2012년 23명, 2013년 18명 등 총 55명을 배출하였다. 이중 진학 17명, 기업 및 연구소 등에 36명이 취업하는 등 2명을 제외한 53명이 진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정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신규 선정된 특화전문대학원에는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개발비,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전문대학원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3차년도까지 지원한 후 2015년에 3월에는 단계평가 실시한 결과,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박막태양전지” 기술의 경우는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학연 공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자립화에 필요한 10대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토록 할 예정이다.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졸업생 3명, 2013년 17명, 2014년 9명, 2015년에는 23명 등 총 52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9명을 제외한 39명이 진학(4명)과 취업(39명)하였다. 에너지환경분야의 국외 SCI논문 게재는 2015년까지 134편, 현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러시아 무기모대학교(에너지)에 대학원생을 파견하는 등 국제 협력교육을 강화하고, 2015년 5월에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환경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과제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1) 연구개발특구육성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표 2-2-26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지정연도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8월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달 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구· 영도구·사하구·부산 진구·연제구 일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및 정읍시 일원
면 적	총 67.4km ²	총 18.7km ² (광주 150km ² , 장성 37km ²)	총 22.2km ² (대구 162km ² , 경산 60km ²)	총 14.1km ²	총 16.3km ²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융합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달러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ii)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 (iii) 특구 커뮤니티 강화, (iv) 창조적 연구 사업화 공간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글로벌 지원, 특구간 연계 및 특구 인프라 개발·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27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7,508	13,800	24,07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40,706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9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35,726
2. 특구창업·글로벌지원	3,008	3,910	5,57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4,980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30,200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	-	-	-	-	-	9,200	12,450	24,060	26,060	27,500
2. 특구창업 지원	-	-	-	-	-	-	800	1,550	2,940	3,940	2,700
☐ 연구개발특구육성(非R&D)	2,492	11,224	25,93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52,909	17,839	20,711
1. 특구기반시설 구축	-	6,000	19,000	30,000	25,500	4,000	5,000	20,740	42,880	8,000	10,650
2. 특구재단 운영·지원	2,492	5,224	6,930	5,983	6,390	6,602	8,502	8,306	10,029	9,839	10,061
☐ 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124,615	91,545	91,617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나 2014년말 3,579개로 약 421%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39.1조(2014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4년 69개로 약 528%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8.7조원(2014년)으로 약 383% 확대되었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55,718명(2014년)으로 약 232% 증가하였다.

표 2-2-28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14년	증 감(%)
입주기업 수	(개)	687	3,579	421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39.1	1464
연구개발비	(조원)	1.8	8.7	383
연구인력	(명)	16,759	55,718	232

1) 연구개발특구역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R&D)

정부는 특구의 우수한 공공 R&D 역량을 활용,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역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이전매칭→출자(이전) 및 창업→사업화 및 성장지원」에 이르는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망 공공기술의 적시 사업화 및 사업화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29 연구개발특구역성(R&D) 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역성 (R&D)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 (R&D)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찾기 포럼 및 기술이전 촉진사업 등 기술발굴·연계 - 공공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특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전기획,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한 전략육성 -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글로벌 지원	-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능 강화 및 창업 아이템 검증 고도화 - 특구별 특화성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체질강화 및 특화사업 추진 - 기술,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자금의 특구유지 촉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 및 운영·관리 - 특구내 기술금융 활성화 및 투자

주 :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R&D)은 2011년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과 함께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특구역성(R&D)과 사업구조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당 2개 사업을 통합 운영 중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글로벌 지원의 경우 지난 10년(2005년~2015년)간 4,313억 원을 지원하여 2,349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기술이전금액 1,250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대표적

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5년까지 160개(신설 71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원)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4년까지 총 1,250억원 펀드를 조성하여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1,053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2008년~2015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5회(65개국, 292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4년~2015년 7개사, 32만달러 투자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5년 3개사, 245만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2) 연구개발특구역성(非R&D)

연구개발특구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역성(非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30 연구개발특구역성(비R&D)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역성 (非R&D)	특구기반시설 구축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효율적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 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및 기관고유사업 추진

2005년 대덕특구 지정 이후 특구정책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추가특구를 지정하여 총 5개 특구로 사업화 인프라를 확대하였고, 특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구개발사업(8개 지구, 10.25㎢)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용지(기업입주 공간)를 공급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3개소)을 지원하여 특구내 입주기관의 지속적인 유치·확대를 통해 특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종합지원 및 산·학·연 교류협력을 위해 특구별 기술사업화 전문 인프라 구축을 추진(대덕테크비즈센터 2010년 1월, 광주이노비즈센터 2015년 10

월, 부산테크비즈센터 2018년 예정, 대구테크비즈센터 2018년 12월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핵심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종합계획(2010~2013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2014~2016년)에서는 첨단복합단지 안정화를 위해 우수인재 및 기관 유치, R&D지원 확대 및 기획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내용으로 포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5만㎡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만㎡ 부지에 기업·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구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구역이 조성되었다.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위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될 연구 지원 시설 구역에는 실험용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와 임상 시험용 신약을 생산·공급하게 될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연구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고, 편의시설 구역에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공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위해 총 4,375억 원을 투자, 201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핵심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가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첨복특별법 개정(2016년 1월)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주심의절차 간소화, 생산센터 수탁사업범위 확대 등 단지활성화 및 재단 재정 자립화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지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단지 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술공유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컨퍼런스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성과를 활용하고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와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18개 광역도로망(118km)을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말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대덕테크노 연결도로(대전시~세종시~오송역 BRT 구축)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인근 도시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로 인적 및 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4.19km에 이르는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6차로(BRT 2차로 포함)로 개통하여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역으로의 이동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도 말에는 청주 및 남청주IC 연결도로를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청주 연결도로 10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남청주IC 연결도로 3.3km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될 것이다. 주요 공종(교차로입체화, 구조물 등) 공사 추진 시 안전점검 강화 및 현안사항(민원 등)을 조기 해결하여 적시에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3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5년 목표	검증방법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개통 (1구간, 2구간)	보상 집행률	100%	집행비 / 총사업비
	공사 진행률	100%	집행비 / 총사업비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대통령 기록관 건립, 세종청사 편의시설 확충과 집적화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복합민원센

터를 건립하고 2008년~2017년(총 9년) 사업기간 동안 행복청(공공청사기획과), 국가 기록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 대통령기록관은 계획대로 준공(2015년 4월)하고 관리기관(행정자치부 국가 기록원)에 이관(2015년 6월)하였고, 복합편의시설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2015년 12월)를 실시하여 건립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복합편의시설은 정부세종청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보안계획 등을 반영하여 복합편의시설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세종시내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장을 위한 선관위 청사를 건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선관위 청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시청사,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필수 도시행정 시설의 적기 건립을 통해 지방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도시정착 지원을 위해 2006년~2018년(총 10년) 사업기간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시청사 본관동을 계획대로 준공(2015년 4월)하고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3-2 생활권으로 이전·개청(2015년 7월)함으로써 주민복지, 교통, 환경 등 광역행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사 의회동은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관리·운영주체인 세종시에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2개층 추가 증축을 요청하여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아서 증축 설계변경 및 계약을 완료하였다. 소방서는 당초 계획대로 준공(2015년 10월), 관리운영 기관인 세종시에 이관 완료하였다.

2016년에는 연말까지 시청사(의회동) 준공·입주를 완료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시배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찰서 직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4) 행복도시 문화시설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문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2019년(총 8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 아트센터 건립규모 확대(700석→1200석)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2015년 12월).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적정 규모로 조정한 후 기재부(KDI) 등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2016년에는 아트센터 건립규모 확대(700석→1000석) 조정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여 잔여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위상과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아트센터 규모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적의 공연장 규모 도출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 복지지원센터 등의 건립 추진, 2006~2026년(총 21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생활권 중촌동 입주민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 및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2015년 4월)하였다. 1-1(B)·2-2·3-3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완료로 입주 예정시기에 맞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주여건 기반 마련을 도모할 것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정률은 총사업비(487,686백만원) 대비 2015년까지 233,321백만원이 누적 투자되었다. 총 2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2015년까지 5개를 완료하고, 7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표 2-2-32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률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3년	2014년	2015년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정률(%)	(Σ각 사업별 누적투자액 /Σ각 사업별 총사업비) × 100	목표	64.2%	78.0%	79.2%
		실적	67.2%	73.4%	79.6%
		달성률	104.6%	94.1%	100.5%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목표	-	신규	5.8%
		실적	-	신규	6.0%
		달성률	-	-	103.4%
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정률(%)	(Σ각 사업별 누적투자액 /Σ각 사업별 총사업비) × 100	목표	신규	12.0%	33.7%
		실적	신규	13.7%	33.7%
		달성률	-	114.1%	100%

광역복지지원센터는 2015년말로 예정되었던 2생활권 가족복지지원센터를 2015년초 조기 착수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건립함으로써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은 총사업비(45,041백만원) 대비 2015년까지 20,559백만원이 누적 투자되었다.

표 2-2-33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정률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3년	2014년	2015년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정률(%)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목표	25.5%	39.2%	36.4%
		실적	24.8%	23.9%	45.6%
		달성률	97.2%	60.9%	125.2%

2016년에는 주민들이 행정, 복지, 문화 등의 편의시설을 적기 제공할 수 있도록 건립 추진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IT·BT·ET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캠퍼스 등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캠퍼스 건립 방식을 제공하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병원,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하고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범위를 확대(2013년 12월) 하였다. 행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 9월)하고,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2015년 6월)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계에 착수(2015년 12월 설계공모 발주)하였다.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우선 기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 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쳐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양(2016년 6월)하였다. 대학은 카이스트, 고려대 등 개별형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의 진행 및 공동캠퍼스·분교타운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대학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은 입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토지공급 계약(2015년 5월)을 체결하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대학·연구기관으로는 아일랜드 국립 Tyndall 연구소 및 Cork 대학과 산학연클러스터 내 생명과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5년 10월)하였으며, 행복청-코크대 약대-고려대 약대 간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한 MOU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미국 코넬대에서 뇌과학연구,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LOI를 제출(2016년 1월)받았다. 공공기관은 4개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2개 공공기관도 추가 유치할 예정이다.

정주인구 부족, 산업기반 열악 등 도시 초기의 부족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세종테크밸리 우수 기업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 등 창조형 캠퍼스 구축,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54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표 2-2-3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4개	115	19	20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3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9개 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 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 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20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주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되어 이전지역 등이 변경되고 이전기관은 154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
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표 2-2-3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상은 2014년 10월에 마무리되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평균공정률 99.9%로 2016년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꾸준한 추진에 의거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5년까지 136개(88.3%)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하였다. 또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에 2.5%였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4년에는 10.2%, 2015년에는 12.8%로 점차 증가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4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1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과 경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28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5년 12월 기준 88.9%)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5년 12월 기준 43.2%)은 저조한 등 클러스터 조성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들의 조기입주를 독려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 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공유수면 40,100ha를 토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여 대단위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조제공사는 199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고 2009년부터 내부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공사는 총사업비 2조 9,42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3.9km,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 2010년 준공식을 가졌다.

2009년에는 사업 착수이후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농지개발 면적비율을 축소(농지 72%→30%)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토지의 70%는 산업·관광·복합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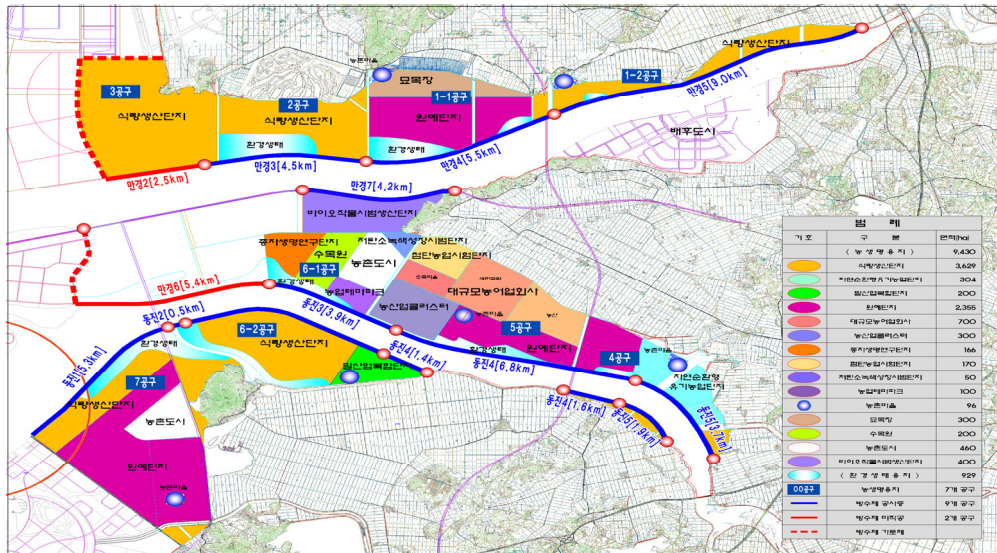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 및 보완(2014년 9월)하였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복합도시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추진, 매립토 조달사업,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 조기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을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8,300ha)의 30%에 해당하는 9,430ha는 2020년까지 농생명용지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공하기로 한 것이며,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업용지조성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2-29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조제공사 준공을 앞둔 2009년에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62.1km, 농생명용지 9,430ha 및 생태환경용지 929ha 등의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중 선도사업 구간 54.2km를 착공 하였으며, 2015년말 현재 공정률 79%(방수제 11개 공구 사업비 11,024억원 대비 2015년까지 8,753억원 투입) 수준까지 추진하였다.

농생명용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복합농산업·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녹색성장, 농업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농산업 모델로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2013년부터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생명용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 1,513ha는 2013년에 착수함에 따라 2016년까지 대규모농업회사 부지 700ha에 대해 우선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 5공구 전체면적을 농업용지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농생명용지를 조기 개발함에 따라 새만금지구내 산업·도시 및 관광용지 등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등 타 용지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농생명용지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농업생태 공간 등 경쟁력있는 다양한 농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지구의 첨단 농산업단지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으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 2월~2009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2-37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장래
계	295,073	228,793	30,727	27,643	7,910
고군산군도1	50,629	39,866	4,192	6,571	-
고군산군도2	118,339	109,093	9,246	-	-
고군산군도3	126,105	79,834	17,289	21,072	7,910

(3)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군산-부안을 방조제로 연결, 401km를 간척하여 다기능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서해안·호남·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진봉-상관 구간 총 54.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3축(새만금-전주)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6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표 2-2-3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예 산	9,011 (19,241)	212 (212)	158 (158)	74 (184)	8,457 (18,687)

주 : () :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4)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482억원(재정 1조 4,102억원/민자 1조 1,380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4.4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하역능력 17,291천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4-39 기항지 현황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	-	18	4,115	4	910	14	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2,77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5년도에 510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km 구간 중 1.5km를 준공하고, 2016년도에는 방파제(총사업비 2,799억원) 전구간을 완공할 계획으로 항만 내부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방파제 축조공사 후속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두개발을 위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항만 내부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도에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로 나눠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신항만 내부개발이 입체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신항 개발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입찰방법이 각각 대안입찰과 일괄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공기 단축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 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서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 부두를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1)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금융 등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을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방안으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업 자신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생산·연구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결과 8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주·원주(이상 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태안·무주·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최종 6개 시범사업이 같은 해 7~8월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 참여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태안기업도시의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 충주(6월), 원주(7월), 2013년 영암·해남 구성지구(1월)가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 및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2011년 1월 무주 사업이 취소된 이후 무안 기업도시도 주 출자자인 중국측의 철수,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등으로 2013년 2월 사업이 취소되는 등 기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안건상정을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격 기준 마련, 면허권 양수대금 분할납부(3년 거치 7년 상환)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면제, 이자율 하향조정(5%→2.65%)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후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토지가격 평가시 평가기준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공유수면 특례도입을 추진하였고, 기업도시 공원녹지 확보율을 완화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향상하였다.

표 2-2-40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단위 : 만㎡, 억원)

구 분		면적	총사업비	사업추진현황	분양 및 입주현황	참여기업
총 주		701	5,343	준공 (2012년12월)	분양률 87.5% 17개사 입주완료 4개사 공장설계중	포스코건설, 주택공사,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 포스데이터 등
원 주		529	9,722	착공 (2008년 7월)	공정률 62% 분양률 29.2% 5개사 입주완료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 경남은행 등
무 안		-	-	-	-	사업취소(2013년 2월)
태 안		1,464	11,462	착공 (2007년10월)	공정률 33.9% 골프장 2개소 완료 및 운영	현대건설
무 주		-	-	-	-	사업취소(2011년 1월)
영 암 · 해 남	삼호	866	5,505	개발계획승인 (2010년 7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공사 추진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등
	구성	2,096	11,038	착공 (2013년 1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건설공사	보성건설, 한양,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삼포	429	4,402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0월)	1단계 F1 경기장으로 기사용	SK건설,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부동	-	-	-	-	* KDI 사업타당성 분석결과(2011년 12월), B/C율 1미만으로 반려(2012년 1월)

주 : 영암해남기업도시 중 부동지구는 시범사업 외 추가사업임.

또한 2005년도에 도입된 기업도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업추진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같은 맞춤형 제도개선안은 2015년에 기업도시법 및 기업도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입지규제완화, 개발유형통합, 최소개발면적 축소, 주된 용지율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별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보조(2015년까지 749억원 지원)하여 총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준공(2012년 12월)하였고,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공정률 62%(2015년 12월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및 삼호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골프장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는 골프장 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총주기업도시는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8,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법률과 시행령 개정 완료로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특례 도입과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 맞춤형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참여 확대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41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908	508	38	67	136	1,159
원주	289	166	25	18	36	44
충주	143	143				
태안	199	199				
영암·해남	1,277	-	13	49	100	1,115

주 : 충주, 태안은 2012년이전 지원완료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수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km,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km,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약 2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km, B=20~27m)을 투입하였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1단계로 사업비 약 144억원(L=2.24km,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약 107억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투입 사업비	진입도로 내 사업 추진 실적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2005~2012년)	40,007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5년 05월 : 126개 기업 입주(산업단지 100% 분양)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2008~2013년)	28,337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6,238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2013~2017년)	10,660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의 개발의지와 함께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부지내 국제학교 3개교를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번째 국제학교 SJA Jeju도 201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식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100%가 분양 완료되었고 Daum, 이스트소프트 등 126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중국의 녹지그룹과 투자를 위한 MOA를 체결하였고 2014년 8월 1단계 휴양콘도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2단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랑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션마리나시티,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제학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3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추진실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7,810억원 3,792천㎡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헬스케어타운 (2006~2018년)	9,050억원 1,539천㎡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신화·역사공원 (2004~2018년)	11,010억원 3,985천㎡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람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5년 2월 : A지구 건축공사 착공
첨단과학 기술단지 (2003~2021년)	5,800억원 1,099천㎡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5년 05월 : 126개 기업 입주(산업단지 100%분양)
서귀포 관광미항 (1.2단계) (2003~2020년)	2,223억원 231천㎡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

우리농업이 가진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에 융복합하여 농산업을 첨단화·과학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분야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모델에 대해서는 확산사업을 추진하였다.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ICT 장비를 통해 축적된 농장의 환경정보와 생육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농장에 맞게 적용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스마트 팜의 효과에 대한 언론, 박람회 등을 통한 정책홍보,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교육,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A/S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팜의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어 전년에 비해 시설원예는 6배 이상, 축산은 4배 이상 확대되었다.

표 2-2-44 스마트 팜 보급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가율
시설원예	60ha	364ha	304ha	607%
축산	30호	156호	126호	420%

스마트 팜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 등에 힘입어 선도농가에서 인근농가로 전파되면서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팜 보급이 확산·집적화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스마트 팜 적용 및 성과창출 분야도 기존의 파프리카 등 첨단온실 위주에서 토마토, 딸기, 참외 등 비닐하우스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사료절감 효과 등이 주

목받으며 자본력을 가진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 축사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사과, 복숭아 과수원 등에서도 성과 사례가 창출되어 노지형 모델이 정립되었다.

스마트 팜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 생산량이 25% 늘어나고 품질이 12% 향상되었으며 고용노동비도 9.5% 감소하여 총수입이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의 생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 팜 도입이 농가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45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성과분석 결과

구 분	항목	결과
생산성 향상	단위 면적당 생산량(kg/㎡)	25.2%
	단위 면적당 출하량(kg/㎡)	39.0%
	단위 면적당 총수입(원/㎡)	30.6%
고품질 생산	단위 면적당 수율 향상률(kg/㎡)	12.0%
인건비 절감	고용 노동력 1인당 생산량	36.8%
	고용 노동비 절감률	△9.5%
기 타	병충해 및 질병발생 감소율	△16.8%
	병충해 및 질병 피해액 감소율	△16.6%

스마트 팜의 보급 확대 추세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농업, 과학영농,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현장의 혁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 성과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빅 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모델을 조기에 개발·보급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농업 현장의 운영성과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스마트 팜 확산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팜에 대한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 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낙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 2,031억원,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산업화지원이란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하여 총 매출액 1조 2,358억원, 총 고용인원 7,950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2-46 2015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5년 실적	1,235,768백만원	7,950명

주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한 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우수사례(12개) 선정 및 사례집을 발

간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1995년 957만명→2010년 879만명) 농가소득 수준이 정체(2005년 31백만원→2014년 35백만원)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3.7%p로 확대(2003년 76.2%→2014년 61.5%)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 2011년(549개소)→2015년(873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2011년 6.5백만명 → 2015년 8.7백만명)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정에 따라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 2015년 350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등급과 등급 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4년 14개소, 2015년 9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SNS채널(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매월 10개의 농촌관광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15년 1,315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30%, 자부담 20%, 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2015년 체험 774개소·화재 709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2015년 55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경험 정도가 2004년 7.7%에서 2014년에는 14.8%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7.7%에 달하고 있으며, 체험형 관광 및 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도의 발전체계 구축,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전통·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총 42개 농촌축제를 선정하여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으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1개 축제가 취소(국고 15백만원)되고 41개 축제가 개최되

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농촌축제자문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제 콘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축제 전반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나, 일반 주민의 참여도는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및 타 사업 연계·협력 등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획·준비·실행 등 축제 전반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농촌축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5)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산업의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조성을 하고자 한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업 위주의 단편적이고 어촌·어항·어장의 공간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사업형식으로 사업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어촌 산업화의 외연적 확대 및 6차산업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기존 수산물과 어항 중심의 산업화 대상자원을 수산물, 어항, 특산물,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의 무형자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단순식품가공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어업인 중심이 아닌 어업인과 마을기업 및 지역주민이 함께 산업화 주체로 사업을 주도한다. 사업내용도 H/W위주의 단순구조에서 탈피해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체험, 관광 부분의 S/W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던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도 2010년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포괄보조사업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리며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전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수산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 형태에 따라 7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유형은 ①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 ②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③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④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⑤ 어촌체험·관광 지원 ⑥ 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⑦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⑧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으로 분류되어 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사업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다음 해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및 사업은 예산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수준에 미달되는 지자체 및 사업은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완료 및 진행 중인 19개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을 관리하고,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어촌6차산업화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또한 강화하였다.

사업지원을 통해 2011년도 35,686백만원이던 매출액은 2015년도 74,063백만원으로 108%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2011년 177명에서 2015년 64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갈등, 계획년도를 초과하는 부진 사업지구 발생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어촌계,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6) 특화어항 개발사업

기존 수산 기능 중심의 단순어항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년)」을 통해 선보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어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어촌 지역발전 및 어촌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안전 대비책 마련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수산업 지원 중심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어항에, 관광·레저, 휴식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 계획에 어항의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4개소) 개발, 해양레저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촌 마리나역(驛) 조성 사업(16개항) 및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다기능어항 개발계획(10개항) 등을 담았다.

2015년도에는 아름다운어항과 다기능어항 사업에 국비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공사 착수한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대상지인 경북 죽변항, 강원 거진항, 울산 방어진항, 전북 구시포항에 국비 18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화어항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어항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최근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숲길 걷기와 산림휴양·치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5년까지 165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에는 전 국민의 30%가 넘는 1천 5백만 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7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6~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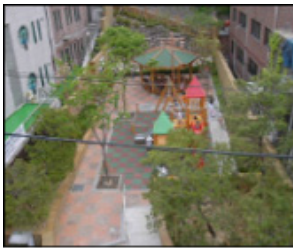
(단위 : 만명)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객	578	626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1,562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기후조절, 방음, 대기정화,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5년에는 537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66개소), 산림공원(18개소), 생활환경숲(89개소)과 가로수(776km)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61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183개소, 명상숲 121개교, 가로수 561km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30 지자체 도시숲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28개소(조성 11, 보완 17) 및 산림박물관 4개소(보완 4)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하여 총 10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억원을 투입하여 3개소를 지원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최근 도시화, 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6년간 3,662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6년 전국에 36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이며,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48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10~2015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객	3,662	76	158	315	787	1,153	1,173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 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산림복지법』제정에 따라 전문업 등록제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는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

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8) 숲길네트워크 구축

1) 등산로 정비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하고 산악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고 15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

최근 산행문화가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 위주에서 수평적 개념의 걷기문화로 변화되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완화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고 19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등 트레킹길을 조성·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9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는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중국 등 거대 농업국과의 협상진행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 대책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종합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 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56,44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53,05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54,000ha, 감귤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용수 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4년 144억원(413ha), 2015년 141억원(604ha)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43억원(603ha)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7,000ha 기반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 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지역공동브랜드 7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까지 18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8.3%까지 증가(2014년 214천톤, 15.0%→2015년 254천톤, 18.3%)하였다. 2017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0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2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49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국고)	14,302	2,227	2,507	2,256	1,847	1,375	1,335	975	905	875
브랜드경영체 수	18	8	3	1	2	1	1	1	-	1
(당해연도 국고 지원)		(8)	(11)	(12)	(7)	(5)	(5)	(3)	(3)	(3)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만~2만 톤)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1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개소를 선정하여 1,354억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32억원, 2016년 32억원을 각각 지원하여 총 24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를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의 1차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편의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편의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밭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시설지원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및 국내 곡물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보조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법정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방식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포괄보조사업 이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보조율

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국비 8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50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발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암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 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에 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소규모 배수개선	50ha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제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 방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제주)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부터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수산 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50ha 미만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8개 내역사업에 국고 1,742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계정(일반 시·도)으로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 6개 내역사업에 국고 1,492억원을 지원하였고,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도)으로 발기반정비,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5개 내역사업에 2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종계정(세종특별자치시)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1개 내역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협의회 구성, 명예감독관 위촉 등으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였다. 특히, 밭기반정비,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나 매년 세수부족으로 반복적인 국고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사업은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이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억~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며 마을 단위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5년에는 18개소 46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5년말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56.0%로 전국 평균(4.5%)보다 1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는 등 사업대상이 아닌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1,158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매년 20여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하여 단지 내에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억~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5년에는 광역단지 7개소 51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지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18.7%로 전국 평균(4.5%)보다 4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015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지·마을단위지구사업의 유사성,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곡류는 50ha 이상, 원예 등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3개소 1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7) 농기계임대사업

우리나라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고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 도입하였다. 2003년부터는 소규모 영농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발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국고 50%, 지방비 50%)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구입이 가능하다.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규모에 맞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지방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20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 운영하였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장기임대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본질적 취지

에 벗어나므로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변경하였고 2015년까지 37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31개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규모는 2003~2005년까지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2억~3억원 정도를 인상하여 2009년부터는 개소당 10억원으로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밭작물 주산지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주산 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0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임대사업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을 2016년부터 개소당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씩 98개소의 임대사업소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국의 임대사업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는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생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밭농업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효과는 감자의 경우 인력으로 파종 및 수확작업을 할 경우 ha당 227시간이 소요되지만, 감자 파종기 및 땅속작물수확기를 이용할 경우 19시간이 소요되어 감자 91.6%, 마늘(쪽분리, 파종, 굴취) 95.8%, 콩(파종, 예취, 탈곡, 정선) 80.5%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표 2-2-51 작목별 노동력 절감 효과

작 목	노동력 절감(%) (C/A*100)	작업시간(시간/ha)		
		관행(인력)(A)	기계화작업(B)	절감시간(C=A-B)
감 자	91.6	227	19	208
마 늘	95.8	592	25	567
콩	80.5	262	51	211

주 : 재배면적 ha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농기계를 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사료는 95.1%, 마늘은 85.4%, 감자는 80.6%, 콩은 66.8%, 과수는 60.4%의 비용절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2 작목별 비용절감 효과

작 목	평 균(%)	작업별 비용절감 효과(%)
감 자	80.6	파종 79, 수확 83
마 늘	85.4	쪽분리 77.4, 파종 88.4, 수확 81.7
콩	66.8	파종 75.6, 수확 79.0%, 탈곡 46.0, 정선 39.3
조사료	95.1	집초·결속 95.1
과 수	60.4	제초 29.3, 방제 71.0

주 : 재배면적 ha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용 농기계와 다수의 영세소농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하여 저비용으로 기계화 농업을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밭작물 기계화가 낮은 파종·이식, 수확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적정 임대료 산정,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임대 농업기계 개발 및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 등을 추진 운영할 계획이다.

(8)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⁸⁾과 생산량⁹⁾이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¹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분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서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상품화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물류센터 건

8) 2015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83천ha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577천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2015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4.9%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부지 68,972㎡, 건축연면적 25,927㎡(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9월에 완공하고 현재 14개 친환경법인이 입주하여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53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8,000	1,686	12,618	22,712	10,984
국 비	22,900	843	6,309	11,356	4,392
도 비	25,100	843	6,309	11,356	6,592

아울러 2012년부터 전남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표 2-2-54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8,852	1,152	9,440	5,944	-	11,280
국 비	14,426	576	4,720	2,972	-	5,640
도 비	14,426	576	4,720	2,972	-	5,640

주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당초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

위와 같이 20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2개소(경기, 전남)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형성, 안정적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친환경농산물의 제한적 유통구조를 개방적 유통구조로 점차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9)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일제시대부터 국가에서 직접 경작 및 홍삼제조를 장려하였고, 오랫동안 전매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인삼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생산·유통구조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수삼은 계약재배,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되고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조합, 백삼은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용도별로 구분되어 낙후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의 조직·전문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의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선정하고 있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을 위해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의 규모로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삼검사소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를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시·군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사업대상자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에

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2-55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사업 대상자	예산액
2010~2011년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84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84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84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84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2013년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630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63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2015년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630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63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
2015~2016년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630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63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순히 낙후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인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삼 거점 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이 노후화, 시설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종자판매를 확대하게 되면 해외 품종들로 인

해 국내 종자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점차 많은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의 특성상 품종개발에 오래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종자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68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2015년 2,094톤으로 늘어났으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78.0% → 2015년 90.8%), 화훼분야(국화)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4.5% → 2015년 29.7%),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6.9% → 2015년 28.8%)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종자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종자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농산물의 공급으로 물가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 농업 및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에 맞는 사업내역 조정(보조비율, 지원품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실추진 방지를 위해 사업참여 지자체의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사전단계 점검, 사업추진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성과가 농업인 뿐 아니라, 최종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

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 2011년에 13개, 2014년에 10개, 2015년에 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2.25배(2005년 선정), 7.34배(2008년 선정), 6.63배(2009년 선정), 116배(2011년 선정)로 증가하였다.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56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	비율 (B/A)
2005년선정사업단	1,846(A)	6,033	4,072	4,388	4,124	3,303	3,225	3,469	4,151	2.25
2008년선정사업단			296(A)	632	968	1,539	1,784	2,080	2,173	7.34
2009년선정사업단					320(A)	586	734	874	2,122	6.63
2011년선정사업단						0.3(A)	4	29	35	116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이 참여주체와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에는 미래 농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을 관련된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에는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10개소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에 지원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고, 선정 기준은 농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2)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

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도입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해 외부로부터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18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5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58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57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대상(개소) (최종사업지구)	218	18	28	28	28	29	26	26	20	15
예산 (억원,국비)	2,741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328 (0)

주 1)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 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015년부터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2) ()는 군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표 2-2-58 2015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단위:개소, 억원)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5년 실적	3,652백만원	29개

주 : 2013~2015년 착수지구(5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3)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해수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은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에 223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보강 포함)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2,015억원을 투자하였다. 2016년에도 신양항 등 5개항에 2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4)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개선을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 조성과 TAC 대상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5년에는 총 700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236ha, 바다목장 19개소를 조성하였고 연어 등 건강종묘를 생산 방류(1,680만 마리)하였고, 수산자원조사원을 활용하여 TAC 대상어종(오징어, 고등어 등 11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을 조사하였다. 주요성과로는 바다숲 조성에 따른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율은 16.2%, 연안어장 생물종수는 2014년 43n/㎡에서 2015년 55n/㎡으로, 생체량은 같은 기간 동안 1,516g/㎡에서 1,585g/㎡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2014년 2,178g/폭에서 2015년 2,417g/폭으로, 유용생물량은 395g/㎡에서 887g/㎡으로 증가하여 어패류 서식환경이 전년 대비 79.0%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59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구 분	측정산식	내역	측정결과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율	(당해연도 생물종수 증가율)*0.5 +(당해연도 생체량 증가율)*0.5	(55/43-1)*0.5 +(1,585/1,516-1)*0.5	16.2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율	(단위노력당어획량 증가율)*0.5 +(유용생물량 증가율)*0.5	(2,417/2,178-1)*0.5 +(887/395-1)*0.5	79.0

(1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식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산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산지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에 총 84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차가공품 및 우수식품으로 가공

하여 지역 특산품 등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73개 산지가공시설사업에 186억원을,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역인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18억원을,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사업 7개소 44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총 77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지가공시설사업 72개소에 183억원을,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5개소에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6)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정부에서는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제주 한림수협 등 5개소(중규모 2, 소규모3)를 건립 중에 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받아 물량을 직접화하여 전처리·가공 등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대규모 소비지에 있는 분산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대안 유통경로 및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규모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에 대한 유통시설, 위판시설 및 가공시설 등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향후 시범운영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연결하는 4단계형 유통구조를 시범구축할 계획이다.

(17)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정부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

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등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존 유통시설기능인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볼거리 및 즐길거리 기능이 합쳐진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성과로는 생산자 어업인에게 대량 판로 기반 유지를 통한 수취가 제고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별로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14개소 141억원(위판장 4개소 36억원, 직매장 5개소 16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4개소 74억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1개소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5년 수산물유통시설사업 중 주요 내역사업인 수산물 위판장 확충을 통한 성과 산출물로 '수산물계통출하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55.5%로 하였으며, 사업 추진결과 55.5%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향후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생기준에 따라 지역별 거점위판장을 중심으로 위생설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기타 수산물 직매장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연구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등 2개소, 2013년에는 목포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2개소가 각각 완공되었다. 2014년에는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1개소가 완공되었고,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2개소가 완공되었다.

2015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속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을 위한 4.5억원을 포함해 총 6개 내역사업에 1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신규사업자 선정을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이 있

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9) 수산업행정지원 사업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어업경영지도,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양식어장 항생제 및 위해물질 안전관리,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사업, 면세유류공급 지도·점검, 안전조업지도, 양식어장 관리 및 적조대응을 위한 주산단지 어장관리, 적조예찰, 자연재해예방 지도, 양식어장 질병관리, 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기술개발 연찬회, 원격영상 정보교류, 어촌정보화 및 어촌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어업인인 정보화 교육, 어촌정보화사랑방 운영,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어촌관광활성화, 수산물소비촉진 지원 등 수산업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수산사무소의 업무, 조직(30개 사무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9년 5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을 2010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228억원을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업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60 수산업 행정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33,561	20,196	21,886	22,866	22,871	22,871	22,871
인건비	107,458	16,059	16,862	17,705	18,944	18,944	18,944
기본경비	13,162	2,142	2,142	2,142	2,206	2,265	2,265
청사·지도선운영	10,555	1,598	2,485	2,622	1,324	1,263	1,263
행정정보화	2,386	397	397	397	397	399	399

(20)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제주)

선진수산기술 전파와 수산전문인력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198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어업 인후계자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율관리공동체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천 2백 만원을 지원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정부에서는 제주지역 어업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전파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61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	107	11	12	12	12	12	12	12	12	12

(21)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등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0년 이후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국정과제(농림축산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농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기술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도농업기술원에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약 494억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보급,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향토음식자원화, 농촌교육농장육성,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등이다.

2015년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4개 과제, 46개소, 4300백만원), 농촌체험기술보급(2개 사업, 26개소, 950백만원), 6차산업수익모델시범(1개사업, 24개소, 6,000백만원) 등 3개 내역사업에 11,79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을 통해 자가 생산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외식·체험·마케팅기술 등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및 농업인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62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015년도 주요성과
* 시범사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14년) 58,493천원 → (2015년) 81,306, 39.0%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창업 증가 : (2014년) 392개소 → (2015년) 435개소
* 지역 일자리 창출 : (2014년) 328명 → (2015년) 356명(상시182, 비상시 174)

사업별 주요성과를 보면, 국내산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하여 창업 3년차 사업장의 매출액이 41.9%로 향상되었고, 2015년 신규 추진 사업장 11개소의 대표를 포함한 참여인원은 38명(개소당 3.8명)으로 공동사업으로의 취지를 잘 살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창업보육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31과정 363회, 연인원 11,974명), 예비/창업사업장 코칭(39개소, 64명 239회)을 실시함으로써 가공 상품개발(26종), 특허등록 및 출원(6건), 상표등록 및 출원(19건), 홍보(72건) 등 창업 기술지원을 하였다.

향토음식 자원화 기술 지원을 통해 농촌형 외식공간인 농가맛집 19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농가맛집 품질관리 교육(담당공무원·농업인, 165명), 가이드북 발간(한영판, 3천부), 관광주간 활용 홍보(5월, 9월, 30개소) 등을 추진하였다. 사업결과 향토음식 발굴·개발(148, 개소당 평균 8.7종), 지식재산권 확보(9건), 지역산 식재료 활용률 제고(91%; 자가생산 59, 지역산 구입 32) 등에 기여하였다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기반 조성 및 농장주 역량강화 교육, 교구·교재 제작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체험학습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하였으며, 2015년도 방문인원이 15,588명(농장평균 332

명), 체험프로그램 만족도는 83%로 높게 나타났고 고용은 상시 59명, 임시 4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2013년 48개소, 2014년 74개소, 2015년 78개소(총 200개소)를 지정하였다.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은 지역 자원과 농업생산, 가공 및 체험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 24개소에서 참여 농업인교육(162회, 4,298명), 전문가 컨설팅(88회, 933명) 및 R&D 연구개발 술 투입(41건)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14건) 및 가공품(111종) 개발을 지원하였고 생산·가공·체험·유통분야의 일자리 창출(498명: 상시 57명, 비상시 441명)에 기여하였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지역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확대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 유발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 담당 공무원 및 참여 농업인에 대한 사업추진 역량강화교육, 사업연찬회 및 평가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시범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지원과 6차산업화 정책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2)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자율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및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 교육 및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 산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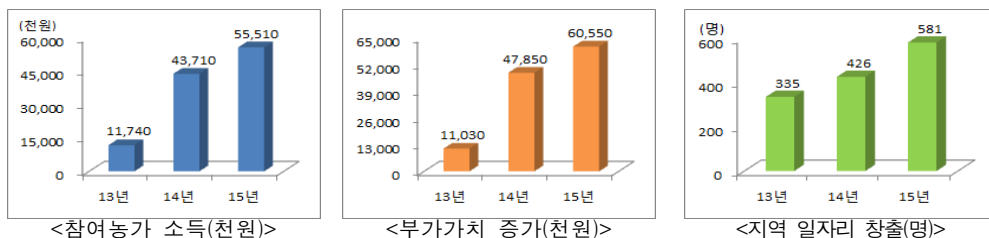
지원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규모는 95개소(1년차 45개소, 2년차 43개소, 세종 1개소, 제주 6개소), 국비 17,039백만원으로 시군별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라 개소당 150~240백만원 씩 차등 배분하였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 담당자 워크숍(2015년 2월), 시범사업 농업인 리더 교육(2015년 4월), 사업담당자 목표관리 교육(2015년 6~7월) 및 농촌자원사업 평가회(2015년 12월)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방향, 추진성과 공유, 현장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 및 소속기관 중심의 특성화사업지원단 운영으로 연구와 지도의 시너지를 강화하였다. 2016년 신규시군 공모는 식량·원예·특작·축산·융복합산업, 권역별의 6개 유형으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등급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다. 2015년 사업 추진시군은 서면평가(1년차 9월, 2년차 11월)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1년차 시군은 2년차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2년차 시군은 상위 6개 시군을 우수시군으로 선정하여 청장상을 수여(12월)하였다.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사업추진 결과 R&D 연구개발 기술투입(123건), 전문기관과의 MOU 체결(32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110건), HACCP 등 품질인증(33건), 브랜드 및 상표개발 등 지적재산권 등록(64종)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380회) 및 참여농업인 교육·컨설팅(477회)를 통해 사업 참여조직 인력화를 구성하였고 사업 추진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9% 증가하였다.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자체 역점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농업인의 고품질 재배 기술 수준 향상, 특화품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농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지역 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림 2-2-3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중앙과 지방의 기술보급체계 역할 분담으로 기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6년에는 81개소에 13,390백만원을 지원하여 식량·원예·특용작물·축산 및 융복합기술산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와 연계하여 현장기술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연중 실시해 현장 모니터링 및 애로기술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 내실화 및 성과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23)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각종 재해 및 농작업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농작업 편이 장비개선 및 보급으로 농업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시범사업은 160개소 마을 또는 농업인단체 5,47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농작업 편이장비 관련 박람회 관람 등을 포함한 총 948회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20,898명이 참석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총 1,976회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전동운반차, 방제기, 동력운반차, 전지전정가위, 살포기, 작업보조류 등 792종 14,126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하였다.

표 2-2-63 2015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별	사업량 (개소)	사업참여 인원(명)	위원회 및 전문가 등 활용실적(횟수)	교육실적		보급 장비(점)
				횟수	인원	
계	160	5,478	1,976	948	20,898	14,126
경기	6	109	62	49	599	1,394
강원	21	696	290	180	5,338	1,833
충북	12	359	136	39	798	659
충남	23	740	307	153	2,182	1,078
전북	9	194	105	23	399	162
전남	21	723	238	171	3,492	3,566
경북	21	436	293	129	3,701	599
경남	30	1,815	326	129	2,869	4,273
제주	8	157	103	28	533	157
광역	9	249	116	47	987	405

사업추진 성과분석 결과 마을주민의 종합적인 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는 4.4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농작업 효율 개선율의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이 전국 평균 198.1시간(56.8%)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연간 농가당 인건비 절감액은 전국 평균 1,304천원이 절감되어 편이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농업 노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작업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보급된 3년 이상의 편이장비에 대해서 지역별 순회교육 및 수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편이장비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과 동일 기종 편이장비에 대한 단일 가격 보급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작목별로 구분하여 대상농가, 컨설턴트, 관련업체 등 참여하는 종합컨설팅을 반기별 실시할 예정이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반, 건강장수 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개척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한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769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1년차 32개소, 2년차 78개소, 3년차 53개 총 163개소에 개소당 40~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71억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 사업마을 추진실적은 163개소에서 16,05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남자가 46%(7,597명), 여자가 54%(8,904명)이며, 참여자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8,42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4개영역별 사업비 집행은 소득활동>환경정비>학습·사회활동>건강관리 순이며, 소득활동 내용으로는 공동경작 및 가공, 메주생산, 떡메치기, 공밭 열무축제 등 농촌그린 투어, 직거래장터 운영 등이며, 환경정비로는 마을 안길 청소,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소나무 식재, 쓰레기 분리수거, 산책로, 조롱박 터널 등이며, 학습·사회활동의 내용은 목공예, 풍물, 난타, 사진 동호회, 시낭송회, 분재교실 등이며, 건강관리 활동으로는 백세체조, 농부중 예방 교육, 게이트볼, 요가 웃음치료 등 농촌노인의 활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 2013~2015년 사업 선정마을 700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86.6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 참여율은 99.9%,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15.6회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활동으로는 두부가공, 공동재배, 절임배추 등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일거리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2-2-32 사업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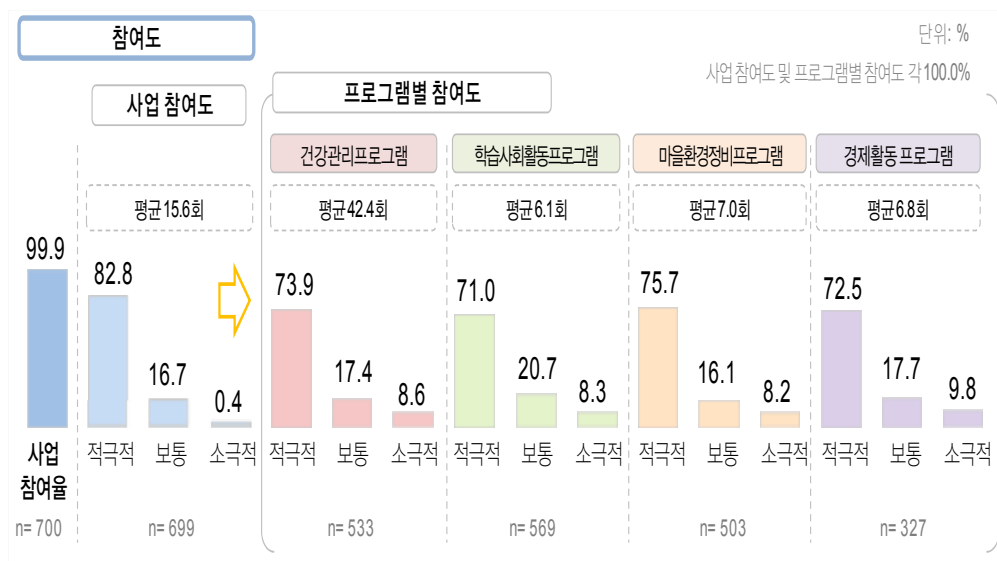


표 2-2-6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 (개소)	1년 차	833	100	200	50	84	7	59	82	23	53	79	32	64
	2년 차	832	-	100	200	50	84	7	59	82	23	53	78	32
	3년 차	736	-	-	100	200	50	84	7	59	82	23	53	78
	소계	2,401	100	300	350	334	141	150	148	164	158	155	163	174
사업비	1,174	42	150	160	167	71	75	74	81	78	76	81	87	32

주 : 개소당 40~50백만원씩 2~3년간 지원, '16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변경(기존 3년)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우선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을 마을별로 조직하여 건강한 장수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5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66개 시·군에 10,47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우량종자보급과 지역의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5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전 대비 소득은 24.3% 높아졌으며, 매출은 20.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부여는 딸기 재배 최적 환경조성으로 수량은 40% 증대되었고 수확작업은 60%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북 임실은 지역 복숭아 명품화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세균성구멍병 등 병해충 발병률이 30% 감소되었으며, 우산식지주 활용 광환경개선 및 생육관리로 소득이 15%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북 군위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 가지 양액재배 기술 투입으로 생산성이 56%이상 향상되었으며, 자동화 시설을 통해 노동력이 26% 절감되었다. 전남 보성은 고품질 씨감자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종묘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이 20% 이상 증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2-65 지역별 2015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지역별	사업비	2015년 사업내역
계(66개소)	10,471	66개 사업
경기	100	
(이천)	100	- 햇사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지원
강원	800	
(원주)	60	- 수출화훼작목 유색칼라 생산시설 지원
(강릉)	50	- 씨없는 3배체 포도재배 비가림시설 지원

지역별	사업비	2015년 사업내역
(홍천)	140	- 우량 산마늘 종묘생산
(횡성)	30	- 쉽고 간편한 고품질 산채 건나물제조시설 및 장비지원
(영월)	50	- 발고추냉이 절임가공 시설지원
(철원)	48	- 사과지구 및 방조망 일체형 과원조성지원사업
	22	- 절화국화 재배농가 수출 기반조성사업
(화천)	100	- 신소득 유망작목 아스파라거스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100	- 토종달래 경쟁력확보 생산기반 구축
	100	- 지역특화작목 호박, 오이 생력화 지원
(양양)	100	- 실증시험포 및 생력화과원 조성
충북	1,400	
(청주)	75	- 딸기 육묘장 시설환경개선
(충주)	150	- 기능성 하얀민들레 가공유통센터 조성사업
(제천)	800	- 남제천지역 농산물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보은)	75	- 소비자 중심의 명품과일 대추 생산
(증평)	75	- 기능성 스테비아 부추 생력 상품화 사업
(진천)	75	- 토마토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양액재배 시스템 설치
(괴산)	150	-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
충남	1,395	
(보령)	25	- 해양성기후이용 우량종구 종묘생산단지 조성
	100	- 폐광냉풍이용 양송이 버섯특화단지 조성
(금산)	1,020	- 3농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 제고사업
(부여)	100	- 고품질 명품딸기 생산단지 육성
	50	- 왕대추(슈퍼쥬쥬브) 재배 생산기반 조성
(서천)	100	- 쌈채용 토종민들레 재배기반 조성
전북	2,690	
(정읍)	250	-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
(김제)	100	-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시설 설치
(무주)	100	-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임실)	100	- 복숭아 명품화 사업
	80	- 친환경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160	-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
(도원)	1,000	-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600	- 기후변화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100	- 주년생산 체계 구축 시설수박 환경 개선
	200	-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전남	703	
(나주)	200	- 플럼코트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 사업
(보성)	200	- 국내육성 우량씨감자 증식보급 사업
	203	- 청정 보성녹차고추 브랜드화 사업
(장성)	100	- 기능성 인삼쌈채 단지 조성
경북	250	
(안동)	100	- 사과자근대목 생산센터
(경산)	50	- 우량건전종묘 연구기반조성
(군위)	100	-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가지양액재배 시범

지역별	사업비	2015년 사업내역
경남	2,239	
(창원)	100	- 국내육성 신품종 시험재배 시범포
	100	- 토마토 전문생산 양액재배
	80	-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 시범
	100	- 친환경 GAP 풋고추 연중안정생산 지구조성
	100	- 수출가치 양액재배 전문생산 단지 조성
(사천)	100	- 밀랍가공시설 기반조성
(김해)	50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밀양)	100	- 뽕은감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
(거제)	76	- 단감 공동생산 기반조성
	72	- 알로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양산)	100	- 우리지역에 맞는 딸기 우량종묘 생산
(의령)	200	- 웰빙과수 인프라 구축
(함안)	100	- 특수 기능성버 생산단지 조성
	96	- 과수 경쟁력 제고 생력화 장비 지원
	100	- 고품질 컬러수박 생산·마케팅 전략화
(창녕)	100	- 시설원에 양액 재활용 순환공급 시범
	100	- 양앵두 향토특화사업
(고성)	100	- 방울토마토 시설 현대화사업
(하동)	100	- 침출식 유자차 생산기반 구축
(산청)	90	- 사과 국내육성 품종 생산단지
(함양)	100	- 함양여주 감자 작부체계 시범
	75	- 친환경 육계 사육기반 조성 사업
(거창)	100	- FTA대응 국내육성품종 사과단지 조성
제주	850	
(제주)	135	-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및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시범
(서귀포)	215	- 노지감귤 성목이식사업, 극조생무가온 재배시범 등
(동부)	175	- 시설무화와 경쟁력 강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등
(서부)	325	- 시서채소 생력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등
인천	44	-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반조성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지원과 지역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73개소로 청사 시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5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 기반시설은 900건 266,692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 2-2-66 2015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73	16,523
청사시설지원	4	2,275
농업인교육시설	24	4,931
과학영농시설	26	5,969
테마파크조성	2	475
농업 체험관	5	752
기타	12	2,121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23대, 농기계차량 3대, 교육 등 홍보 65조, 가공교육장비 79대, 종합검정장비 51대, 가축질병진단장비 2대, 조직배양장비 11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8대 총 340종 6,53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20.9%로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고객인 농민의 활용도 증가 및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표 2-2-67 2015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원금액(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413	23,057
	지역개발계정	383	21,357
	제 주 계 정	18	1,350
	세 종 계 정	12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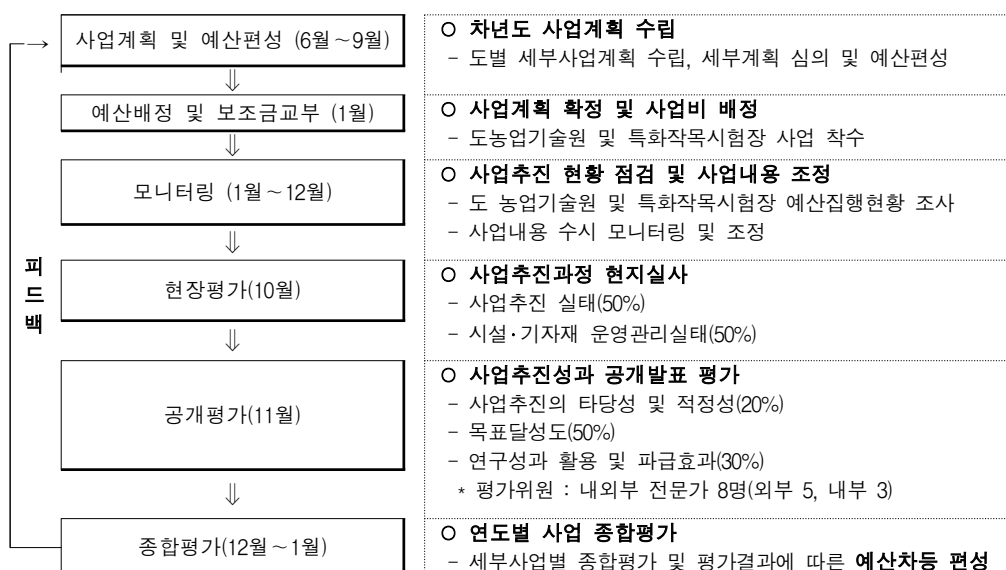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25조,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지역주도형 R&D사업 기반 확충”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농업연구기반(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를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2015년까지 총 4,266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가 2,133억 원이 투입되어 도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4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연구기반 교체 및 신규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계획수립,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3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



2015년에는 122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소득자원연구소 연구동 증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반수체 배가 옥수수 육종시설 확충, 충북농업기술원의 와인 명품화 시험연구 장비 보강, 충남농업기술원의 국화 육종용 노후 온실 개축 등 노후 연구 기반 교체/보강 78건, 전북농업기술원의 농업미생물 검정장비 구축, 전남농업기술원의 ICT 접목 원예시설 종합 환경제어 시스템, 경북농업기술원의 약용자원 치유산업 소재화 연구 장비, 경남농업기술원의 FTA 대응 쌀 가공분석 연구 장비,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감귤 교배 실생묘 조기결실 유도시설 조성 등 신규 연구기반 구축 42건 등 총 120건의 연구 시설·장비를 구축하였다.

표 2-2-68 2015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정	예산액	비고
계		12,216	120건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경제	11,428	노후 연구기반 교체 75건 (시설 47, 장비 28) 신규 연구기반 구축 41건 (시설 14, 장비 27)
	제주	788	노후 연구기반 교체 3건 (시설 3) 신규 연구기반 구축 1건 (시설 1)

표 2-2-70 본 사업에 의한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사업명	평균 투입액 (2012~2014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142억 원	276억 원	111억 원

자료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성과 및 파급효과 진단·분석(2013~2015년)(2015, STEPI)

앞으로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개발이 억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의 주체로서,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이 매우 크며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임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의 구입·설치비로 2015년 41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포함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6)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5억원을 충남 아산·부여·논산 등 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충남 아산·부여·논산 등 5개소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최근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등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국산재 이용 촉진 및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강원 화천 등 15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5년에는 인천, 대전, 경기 남양주·이천·안성 등 25개소에 22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도 충북 음성, 전북 임실·광양·구례 등 20개소에 1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경남 진주·함양 등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경남 진주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78개소(103ha)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2천 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30천 본(가로수 2천 본, 도시숲 7천 본, 기타 공공용 21천 본)을 식재하여 약 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6년에도 강원 정선, 전남 나주 등 40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7) 임도시설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숲가꾸기, 목재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산사태·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길걷기,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산림보건휴양·레포츠 등의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도 활용되어 지역산업과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8년 국유림 내 입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5년 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9,728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임도밀도는 3.09m/ha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도 설치를 위해 산림청에서 임도시설 기본계획(10년)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간선임도 설치계획(5년)을 수립하여 임도를 시설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서 임도시설 확대, 이용활성화, 유지관리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임도시공·관리의 종합계획인 '임도시설 확대계획(2015~2020년)'을 수립하여 임도의 안전시공과 품질향상, 임도기능 다양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에 1,487억원을 투자하여 651km의 임도를 신설하였다. 이중 민유림에 438km

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3,695km로 임도밀도는 2.83m/ha이며, 국유림은 213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6,033km 임도밀도는 3.91m/ha로,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민유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08km의 노후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기설 임도 4,705km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6년에는 1,419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728km, 구조개량 369km, 유지보수 4,083km를 실행할 계획이다.

부처 직접 예산편성 사업이었던 민유임도 사업이 2015년부터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되어 민유임도와 국유임도간의 상호 연계성 저하 및 지자체 장의 성향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유임도 확충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통해 민유임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해 30~10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4년간 총 78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2년 3개소에서 2015년에 103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64억원에서 1,65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 2-2-71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소수	3개소	32개소	71개소	103개소
매출액	64억원	317억원	950억원	1,659억원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34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로컬푸드직매장은 2016년 말까지 140개소로 확대 예정이며, 신규 설치 지원 외 기존에 운영 중인 직매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직거래 확산의 중심축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를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 시작되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대상지는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여 개별 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으로만 구성된 10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컨소시엄 대학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3-1 2015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권역별·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권역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학교수	사업단수	지원액
충청	34	43	3	27	80	540억원
대경강원	27	33	3	18	66	452억원
호남제주	24	28	3	16	55	372억원
동남	27	33	3	18	63	435억원
소계	112	137	12	79	264	1,799억원

주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50억, 사업관리비 등 31억 미포함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자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동남권은 영상/해양, 충청권은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 제주권은 해양산업/관광, 대경강원권은 IT·SW/환경 등 지역전략·연고 산업과 밀접히 연계)하여 지역사회·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편 및 신규 교과목 개설(사업단별 평균 8.4건)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단(전체 사업단의 68%) 및 학사제도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전체 사업단 중 인문사회 45%, 공학 23%, 자연과학 21%, 예체능 9% 차지)하여, 특성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3-2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구분	능동적·협력적 학습활동 PCL	전공교수·학습 만족도 M-STL	교수-학생 상호작용 SFI	교수·학습 성과 TLO	학생 지원의 질 QSS	비고
CK사업 참여대학(지방)	2.46	2.8	1.88	2.47	2.99	* 4점 척도
비참여대학	2.78	1.76	2.31	2.67	2.33	

주 :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학생 지원의 질, 학생지원에 대한 강조점 등 7개 영역의 교육성과 측정 도구

특히, 특성화사업의 교육 성과 창출을 위해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NASEL)을 도입하여 교육 성과를 비교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원-학생간 상호작용을 강화 유도하였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국적 다변화 및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컨소시엄 대학간 연계협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현장중심(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계 수요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을 유도함에 있다.

특성화전문대학은 I 유형(단일사업분야 특성화), II유형(복합산업분야 특성화), III유형(프로그램 특성화)으로 구분하여 70개 대학을 선정, 2,3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84개교 이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표 2-3-3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구분	I 유형 (단일산업분야)		지원금	II유형 (복합산업분야)		지원금	III유형 (프로그램)		지원금	합계
	수도권	7개교		수도권	15개교		수도권	1개교		
지원 대학	지방권	14개교	45,722백만원	지방권	30개교	99,538백만원	지방권	3개교	2,724백만원	70개교
	소계	21개교	69,597백만원	소계	45개교	159,088백만원	소계	4개교	3,554백만원	
										232,239백만원

2015년도 사업 수행 결과 ‘취업률(I·II·III유형)’은 사업개시 전 65.0%에서 72.4%로 7.4%p, 충원율은 99.3%에서 99.4%로 0.1%p 증가하는 등 사업 시행 이후 대학 강점분야 특성화로의 체제 개편에 따른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역(국가)·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면·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규모의 사업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 점검 및 확산,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Brain Korea)21 사업은 1999년부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으로, 1단계 BK21(1999년~2005년), 2단계 BK21(2006년~2012년)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 창조경제를 견인할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BK21(2006년~2012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서 32%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매년 약 8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대학 241개 사업단(팀)을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원은 우수한 국내·외 대학원생 유치를 통한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표 2-3-4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인력양성 방향	▪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등 모든 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특화전문분야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15년 예산	▪ 2,355억원	▪ 193억원	▪ 149억원
지원규모	▪ 470개 사업단(팀) ▪ 대학원생 15,900여명	▪ 21개 사업단 ▪ 대학원생 820여명	▪ 53개 사업단 ▪ 대학원생 1,030여명

BK21 플러스 사업은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하여 2016년 이후 4년간 지원할 사업단(팀)을 재선정하였다. 지난 2년간(2013년 9월~2015년 8월)의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되,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2개 분야를 9개 학문분야로 세분화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산학협력 연구 및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의 우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대학원 연구와 지역산업 연계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림 2-3-5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구분	분야								
2013년 선정 평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2015년 중간 평가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 수산·해양	과학기술 융복합	인문학	사회 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디자인· 영상

중간평가 결과 대학원 교육과정, 연구성과(논문, 저서), 산학협력(특허,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우수한 사업단(팀)이 다수 선정되어 BK21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역 사업단(팀)의 24.7%(59개)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규 사업단(팀)으로 교체되어,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BK21 플러스 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단(팀)의 창의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사업단(팀) 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의 창출·확산을 정책목표로 한다. ACE 사업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과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적인 학부교육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6개 대학(신규 10개교, 재진입 6개교)을 신규 선정하고, 2012년~2014년 기 선정 대학(16개교)을 포함하여 총 32개 대학(수도권 12개교, 지방 20개교)에 대해 평균 20억원씩, 총 594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 선정된 3개교와 2014년에 선정된

13개교에 대해 각각 1차년도·3차년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는 컨설팅과 연계하고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는 대학 지원금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표 2-3-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선정 대학 수(개교)	11	11	3	-	13	16
지원 대학 수 (개교)	11	22	25	25	27	32
당해 연도 예산 (백만원)	30,000	60,000	60,000	60,000	57,272	59,400

동 사업은 대학 본부를 대상으로 총액 교부(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한다.

ACE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학부교육 발전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이는 현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 강화, 창의성 함양과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교양 및 전공 교과와 연계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돕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 분석 전담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개선과 교육지원시스템의 구축·개선 두 축을 바탕으로 대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우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ACE 지원 대학들은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ACE 홈페이지(<http://eduup.kcue.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ACE 포럼 개최, ACE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교육계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학부교육에 대한 대학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여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제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지역(기업)과의 연계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한다. 4차년도(2015년)에는 57개 대학에 223,982백만원(대학 평균 39억원)을 지원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지난 4년간 LINC 육성사업은 대학 교원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하는 등 대학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57개 LINC 육성사업 대학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창의적 산학협력 모델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사업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성과 포럼 및 페어(FAIR)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선도모델을 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으로까지 공유·확산하고 있다.

2015년 LINC 육성사업에서는 대학별 산학협력 대표 프로그램 발굴과 브랜드화 등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성과 창출 및 확산이 가속되었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기업 연계 트랙 운영 등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은 대학 내에 보편화·내재화되어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로도 확산되었다. LINC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각각 39,675명, 94,240명으로 증가(전년 대비 각 11.0%, 15.2%)하였고, 맞춤형학과와 기업연계 트랙 등의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은 1,906건으로 증가(전년 대비 15.5%)하였다. 또한, 산업체 인력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지도,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등 산업체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창업교육 강좌시수도 2012년 사업개시 이전 학교당 평균 4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2.6배가 늘어나는 등 대학 내 창업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창업친화적 대학문화가 조성되고 학생창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역량이 강화되는 등 산업체와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5년 LINC의 기술이전 건수는 2,578건, 수입료는 29,547백만원으로 증가(전년 대비 각 28.9%, 14.1%)하였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발굴된 학생의 아이디어가 기술화되어 기업으로 이전되고 취업과 연계되는 사례도 창출되었다.

이 밖에도 교원 업적평가에 국내·외 특허, 기술이전, 현장실습 지도 등의 산학협력 활동의 배점이 SCI논문 1편과 비교하여 평균 1.32배 높게 책정되었으며, 교원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물을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비율도 91%로 증가(전년 대비 5.8%)하였고,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도 4,587명에 달하는 등 대학 내 산학협력 생태계가 고도화되었다.

앞으로 산학협력의 범위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창출·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대학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경제가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7 2015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

구분 년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명)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평균시간)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백만원)
1차년도 (2013년 2월)	19,616	42,744	872	53	992	15,144
2차년도 (2014년 2월)	27,618	70,145	1,484	79	1,583	17,496
3차년도 (2015년 2월)	35,757	81,858	1,650	94	2,000	25,887
4차년도 (2016년 2월)	39,675	94,240	1,906	108	2,578	29,547

구분 년도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산학협력 가족회사(개)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수입(천원)	특성화 분야 인력 양성(명)	특성화 분야 기술개발(건)	기술사업화 실적(건)
1차년도 (2013년 2월)	2,808	31,135	27,259	54,862	4,942	1,949
2차년도 (2014년 2월)	3,561	40,663	30,513	89,417	7,392	3,014
3차년도 (2015년 2월)	4,107	48,992	32,330	99,834	8,931	3,906
4차년도 (2016년 2월)	4,587	57,463	34,392	115,575	10,478	4,705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교육부는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차년도(2015년)에는 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 등 총 30개 전문대학에 19,500백만원(대학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여, 선정·지원받는 대학에서는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연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 체질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LINC사업 및 2단계(2015년, 4차년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를 1차년도(2012년) 14,751개에서 4차년도(2015년) 20,648개로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질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3차년도(2014년) 330명, 4차년도(2015년) 358명으로 전년대비 8.5%증가하여, 교수업적 평가(재임용·승진·승급)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30개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역량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강좌 운영, 창업동아리·창업기업 지원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적극 수행하였다.

앞으로는 동 사업으로 구축된 산학친화형 제도 및 인프라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고도화하고, 산학협력단 등 기존의 대학조직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2-3-8 2015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2년제)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개)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기술지도(건)	창업 강좌 (평균시간)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 공간지원(m ²)
1차년도 (2013년 2월)	14,751	215	62.9	1,381	41	766,450	3,658
2차년도 (2014년 2월)	17,241	296	72.6	2,126	43	944,000	4,254
3차년도 (2015년 2월)	16,991	330	70.6	2,170	48	1,059,000	5,095
4차년도 (2016년 2월)	20,648	358	80.7	2,368	62	1,201,000	5,669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 후 경력 개발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업경로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후학업”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사업(2012년 도입)과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지원 사업(2013년 도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확충과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9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 (2015)

사 업 명	지원대학	
	4년제	전문대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10개교)	경북대, 전북대, 경상대, 동명대 경희대, 계명대, 한밭대, 상명대, 세종대	서일대
재직자특별과정 학과운영지원 (16개교)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서울), 중앙대, 창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한림성심대

표 2-3-10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지원	예산
2012년	18개교	-	1,200
2013년	18개교	7개교	2,800
2014년	12개교	10개교	2,400
2015년	16개교	10개교	2,400
지원기간	단년도	2~4년(학제기준)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희소계열 재직자의 계속교육 학사운영 체제 마련을 위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학사 유연화를 선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후진학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본 사업 지원 대학들이 지역산업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직자에게 맞는 수업방법을 유연화하여 재직자의 특성·요구에 부합하는 학사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원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신입생 충원율은 전체 대학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졸 재직자들의 선취업 후진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표 2-3-11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

연도	전체 대학				예산 지원 대학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2010	3	265	183	69.1%	-	-	-	-
2011	7	541	349	64.5%	-	-	-	-
2012	23	1,027	375	36.5%	-	-	-	-
2013	70	4,462	1,060	23.8%	18	1,512	730	48.3%
2014	87	5,093	1,348	26.5%	18	1,509	695	46.1%
2015	88	5,932	1,547	26.1%	12	1,247	721	57.8%
2016	95	5,674	1,974	34.8%	16	1,474	965	65.5%

(2)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

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과 2004년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는 단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2단계(2015년~2019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은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첫 해로 학교기업의 내부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발전경로에 따라 신규·성장·자립형의 총 61개의 학교기업을 신규선정하고, 유형 및 학교급을 반영하여 0.5억~2.3억원씩 총 100억원을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학·전문대학의 학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투자금으로 의무 확보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전문)대학과의 규모차이와 기능중심의 현장실습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무 확보 투자금을 1억 미만으로 책정하였다.

표 2-3-12 유형 및 학교급별 사업비 배분 기준

(단위:억)

유형	학교급	단가	지원(교)	소계	합계
신규형	대학교	2.3	14±a	33.07	71.14
	전문대학	2.3	14±a	33.07	
	고등학교	1	5±a	5	
성장형	대학교	1.7	5±a	8.5	18
	전문대학	1.7	4±a	6.8	
	고등학교	0.9	3±a	2.7	
자립형	대학교	1	4±a	4	12.5
	전문대학	1	6±a	6	
	고등학교	0.5	5±a	2.5	
합 계		-	60	-	99.63

2단계 사업은 학교급별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과 학교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실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학교기업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세부 심화 직무교육을 통한 학교기업 운영역량을 제고시켜, 학교기업 단계별 발전을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결과, 학교기업 매출액은 총 164억원, 학점인정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9,702명이며, 4,988명이 학교기업 창업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 및 현장실습 항목별 만족도가 일반기업보다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체 인

사 담당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기업 현장실습을 이수한 직원의 만족도가 68.1점으로 기타 직원의 만족도 67.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 현장실습 학생수 등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수혜자 만족도라는 질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표 2-3-13 학생 종합 만족도 및 현장실습 항목 만족도 점수

(단위:점)

구분		종합만족도	현장실습 체감만족도	현장실습 내용실효성	현장실습 운영적절성	현장실습 담당자 지도내용
전체		73.5	73.7	73.0	73.1	73.6
참여 현장실습 프로그램별	학교기업	73.9	74.0	73.5	73.7	74.0
	일반기업	66.1	67.2	64.3	64.2	66.0

(3)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연구원을 지역·현장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을 통해 현장 감각과 연구능력을 갖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강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술정보,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기술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이공계 학과)과 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사업팀』으로서 연간 과제별 1억원 이상 3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사업유형을 기업수요지향형 창의인력양성, 지역특화 창의인력양성, 글로벌 창의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확대·개편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30~60%를 학부 4학년생,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대비 5% 이상의 대응자금(현금), 10%이상의 대응자금(현물)을 출연한다.

2015년에는 신규과제 54건, 계속과제 89건 등 총 14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2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3-14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예산	205	300	250	241	240	260	247	237	237	257	276	276	262	3,288
과제 수	241	328	360	255	296	309	254	202	167	168	165	156	143	3,044
(신규/계속)		(92/236)	(55/305)	(127/128)	(137/159)	(107/202)	(66/188)	(52/150)	(59/108)	(68/100)	(42/123)	(51/105)	(54/89)	

2015년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총 686명을 양성하고 475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총 350명이 취업하였고 그 중 57%가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SCI급 논문 257편, 특허등록 143건)과 산학협력(기술지도 518건, 현장실습 611명)의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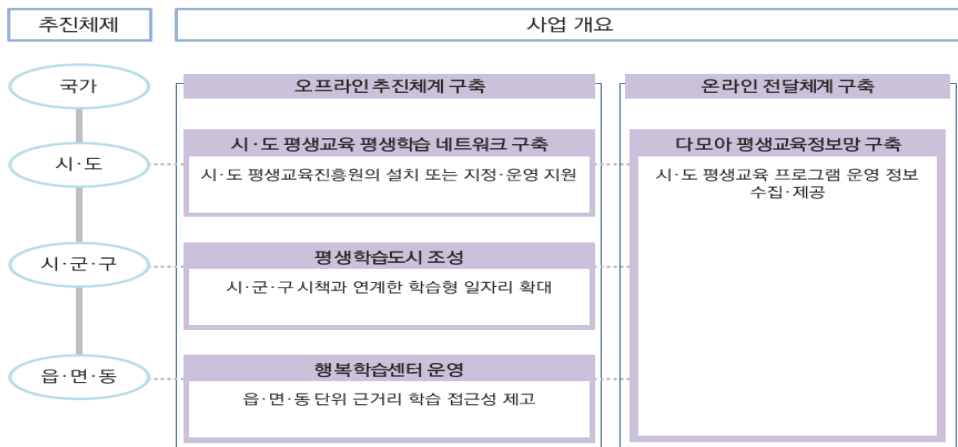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2015년 사업을 통해 전체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였고(전북, 세종은 2016년 개원 예정), 3개 시·도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17개 시·도 전체의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13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미약한 곳이나 시·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총 14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92개의 시·군·구 거점센터를 선정·지원함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자치센터, 도서관,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로 500여 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복학습센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요를 조사하고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행복학습 매니저 900여명의 배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표 2-3-15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운영·지원 현황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개)			평생 학습도시 조성(개)				행복학습센터 운영(개)		시·도 다모아 정보망 구축(개)
신규	계속	소계	신규	기존	일반 시·군·구	소계	시·군·구	읍·면·동	
3	7	10	7	13	14	34	92	502	신규 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 구축이 공고화됨에 따라 평생학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정책 시행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표 2-3-16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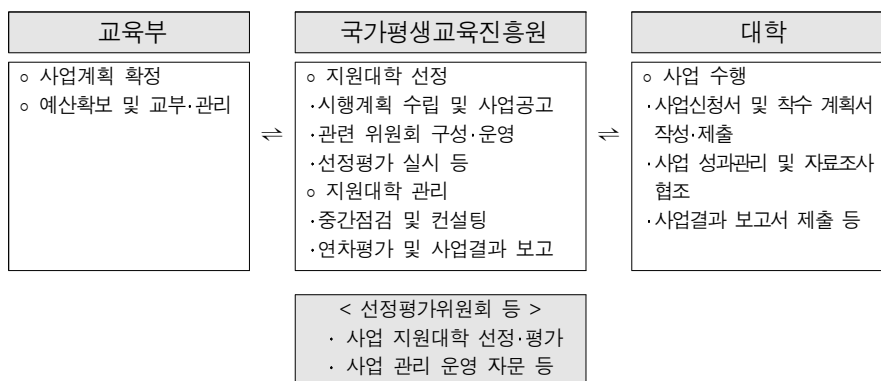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만족도(점)	사회참여자(명)		
				일자리	재능기부	합계
2014년	1,371	70,985	88	924	10,014	10,938
2015년	2,317	129,366	88.9	1,356	4,068	5,424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근거리 생활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학습자 참여 수가 증대되었으며 만족도 또한 전년도보다 향상되었다.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수는 전년도에 비해 47% 증대된 1,356명으로, 이는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성인학습자(고졸재직자, 근로자, 재취업·창업희망자, 은퇴자 등) 친화적으로 대학체제 개편을 유도하여,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확충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림 2-3-2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

로그로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 과정 입학에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창업 역량증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추진, 유사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학위/비학위과정),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원사업을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강화 및 성인친화형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표 2-3-1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20개교	2,500
2011년	대학전체체제개편,	24개교	4,040
2012년	평생교육원체제개편	25개교	5,508
2013년	선취업후진학, 4050제도약형	47개교(비학위13개교)	27,508
2014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5개교(비학위10개교)	10,233
2015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7개교(비학위17개교)	10,733
지원기간	학위과정 : 1~3년(학제기준), 비학위과정 : 단년도지원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100세 시대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후진학 및 평생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비학위 과정 사업은 지역 산업 연계 특화 교육, 대학 특성화 기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분야의 고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성인 친화적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표 2-3-18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27,508	10,233	10,733
대학 수	47교(비학위13교)	45교(비학위10교)	47교(비학위17교)
학과 개편 수	139	164	153
학위과정 학습자	3,209	2,762	2,405
비학위프로그램 수	64	1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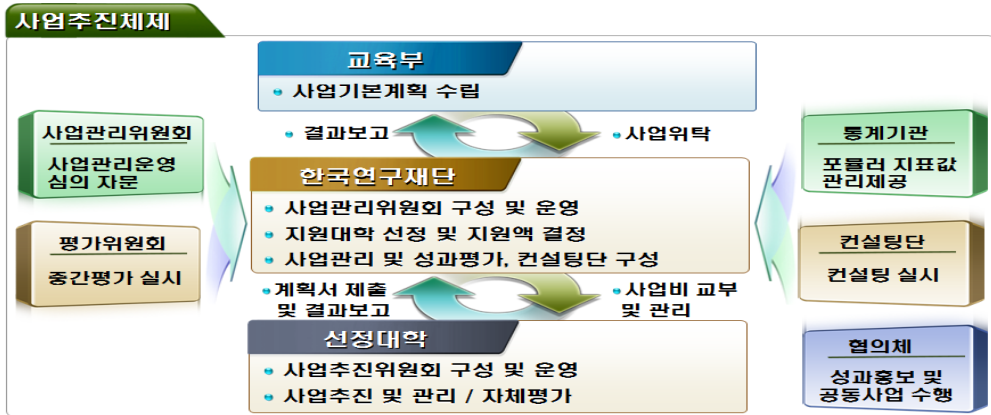
2016년도에는 본 사업을 통해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학교 여건, 지역사회 수요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특성 기반 평생학습 운영 모델 창출 및 평생학습자 맞춤형 체제 개편을 적극 유도하여 재직자 및 평생학습자의 후진학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은 일부 전문대학을 재직자, 미취업자 등의 재교육과 재취업·창업을 위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로 전환·육성하고 평생직업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발표(2013년 10월)되었으며, 이듬해 2월 전문대학육성방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현재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2014년 8개교, 2015년 2개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그림 2-3-3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2015년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는 총 772개의 비학위·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이수자 17,428명을 배출하였으며,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수요 맞춤형 특화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적극 개방 등을 통해 지역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19 2015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

(단위: 억달러)

권역	선정 학교 수	지원액	비학위·학위(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수	비학위·학위(NCS기반) 교육과정 이수자수
강원충청권	3	14,110백만원	168	3,077
대경권	3	14,210백만원	297	9,341
동남권	2	9,974백만원	226	3,527
호남권	2	9,567백만원	81	1,483
소계	10	47,861백만원	772	17,428

또한, 동 사업으로 일자리·현장 중심(NCS 기반)의 유연하고 다양한 비학위과정 평생(직업)교육이 이루어져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취업-후진학 계속교육 기회 확대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아울러 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제공을 통해 취약지역, 교육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문학 진흥 강화

(1)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인문학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민인문강좌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인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인문도시사업을 통한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을 형성하고 해당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석학인문강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높은 인문학자의 일반인 대상 강좌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년 6월 27일)을 통한 정상회담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인문분야에서의 학술을 교류하고 네트워크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15년에 지원된 시민인문강좌는 28개 과제이며, 이 중 11개 과제는 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시각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강좌이다. 인문도시의 경우 2014년에는 17개 인문도시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5개 인문도시를 지원하였다.

표 2-3-20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시민인문강좌	27	22	19	19	20	55	52	60	28	302
인문도시	-	-	-	-	-	2	5	17	25	49
합계	27	22	19	19	20	57	57	77	53	351

석학인문강좌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석학의 정규강좌(28강)와 비수도권 시민을 위한 인문공감콘서트(8회) 및 청중 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청춘인문강좌(5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고품격 인문강좌를 실시하였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인문도시 및 시민인문강좌기관 등에서 강좌, 체험 등 다양한 인문학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인문학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또한, 제1회 한·중 인문학 포럼이 서울(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어 한국과 중국의 인문학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중국의 인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5년 인문학대중화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3만명으로 향후, 참여인원의 만족감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1)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4-1 2015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구분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백만원)	비고
	광역시	기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1	대구	본청	1	-	300	
2		중구	-	1	80	
3	부산	수영구	-	1	80	
4	경기	성남시	-	1	80	
5		양평군	-	1	80	
6	충남	공주시	-	1	40	2014년~계속
7		부여군	-	1	120	2014년~계속
8		천안시	1	-	300	
9		당진시	-	1	80	
10		홍성군	-	1	80	
11	전북	예산군	-	1	80	
12		군산시	1	-	60	
13	전남	남원시	1	-	300	2014년~계속
14	전남	여수시	1	1	380	
15	경북	구미시	1	-	200	
16	경남	양산시	-	1	80	
17	제주	서귀포	1	-	300	
18		제주시	-	1	80	
19	세종	세종	-	1	80	
합 계			7	13	2,800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4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8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5년 국비 지원규모는 5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패션 완제품 업체 23개를 선정 및 지원하여 글로벌 집중 컨설팅 및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 310점, 소재/완제품 542점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278건의 디자인 출원을 하였고,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247만 8천 달러의 해외 수주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디자인드바이재우컴'(대표 : 김재우) 브랜드가 중국 내 MOUTOTO 외 멀티샵, 미국 PORTEMODE 등의 주요 매장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의 차세대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총 15명의 신진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600점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75건의 디자인 출원 성과를 거두었다. 패션디자인 브랜드의 판로 개척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입주 디자이너 16명의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738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다. 입주 디자이너 중 '런던클라우드'의 이수현은 2015한국패션브랜드대상의 '신진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고, '워크웨어'의 강진주는 국내 유명 편집숍 '에이랜드'에 진출하였다.

아울러 섬유패션도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여성의류, 홈침장류의 3개 분야 15개 업체를 D.Ground라는 명칭으로 브랜딩하여 집중 육성하였다. D.Ground 브랜드는 대구패션페어, PIS 등 3회 공동전시회 참가를 통해 상담액 24만 8천 달러, 계약액 2만 7천 달러를 달성하였다. 또한 '패션창업캠프'를 개최해 9개 팀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편집숍 입점을 추진하고, 일반인 대상 '패션문화캠프'를 개최해 패션관련 직업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 및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대구의 강점을 살려 젊고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 6,040㎡, 건축연면적 8,600㎡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시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 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은행, 편의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로 총면적은 245,413㎡(74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93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94개사가 입주완료하고 2016년 7월 완공예정이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지역의 구미공단과 연계하여 전자출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까지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176억원에 이른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지역	경남 김해	제주	대구	인천 남구	충남 천안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전북 익산	경기 부천	강원 강릉	경기 고양	전남 순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개관일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5)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총 6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6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DMZ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체 주최 행사이다.

표 2-4-4 2015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영화제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부산국제	2015.10.1.~10.10.	부산	75국 302편	227,377	123.0	8.0	60.5	54.5
전주국제	2015.4.30.~5.9.	전주	47국 200편	75,351	44.0	7.0	26.7	10.3
서울국제여성	2015.5.27.~6.3.	서울	37국 111편	22,545	13.2	3.5	4.0	5.7
부천국제판타스틱	2015.7.16.~7.26.	부천	45국 238편	58,852	40.0	6.0	27.1	6.9
제천국제음악	2015.8.13.~8.18.	제천	25국 103편	29,976	19.8	3.5	14.3	2.0
DMZ국제다큐	2015.9.17.~9.24.	파주, 고양	46국 102편	17,325	17.8	1.0	15.2	1.6
계			1,056편	431,426	257.8	29.0	147.8	81.0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6개 사업에 238억원(국비 119억원, 지방비 1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현하고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발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표 2-4-5 2015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폐산업 시설 (6개소)	계	6개 사업	23,750 (11,875)
	경기 부천시	부천 미래문화플랫폼 조성	4,600 (2,300)
	경기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3,860 (1,930)
	전북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조성	2,460 (1,230)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	2,600 (1,300)
	경북 영주시	영주아트센터 조성	5,140 (2,570)
	제주	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5,090 (2,545)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에는 18개 지역을, 2010년에는 19개 지역, 2011년에는 25개 지역, 2012년에는 24개 지역, 2013년에는 27개 지역, 2014년에는 31개 지역, 2015년에는 27개 지역을 선발, 각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4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014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목욕탕 등) 및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된 공간은 지역 생활문화동호회의 연습·발표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2015년까지 총 70개소(2014년 34개소, 2015년 36개소)를 리모델링 대상 시설로 선정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30개소 내외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7개소에 9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26개소에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도 5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11개소에 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에는 161개소에 9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72개소에 8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랙,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74개소 2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77개소 2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5개소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보유 시설 및 규격 미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26개소(강원 22개소, 충남 3개소, 충북 1개소)에 1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27개소(충남 22개소, 충북 3개소, 전북 2개소)에 2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248개소에 4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09개소에 2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인구 4.5만명당 1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978개관으로 인구 5.3만명당 1관 수준이다.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에 460억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83개관에 총 5,674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41개관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6개관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시작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140개관, 2,39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도 154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등 11개 시·도에, 허준박물관 등 13개관(계속 8개관, 신규 5개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94개관, 936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8개관,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5개관,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5년에 17개관 16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2개관에 1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낙후된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을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5개 시·도 7개문화원(계속 4개, 신규 3개),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6년도에는 8개 시·도 14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8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960년대 마을문고로 시작하여 2004년 이후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작은도서관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생활밀착형 운영으로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이라는 가치를 생활 속에 실현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12개관을 조성하는 등,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 731개관(정부지원 588개관, 기업후원 51개관, 국외 92개관)이 조성되었다.

한편, 2015년에는 조성 위주로 추진된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지속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독서프로그램 보급 및 도서관의 전문인력 지원 등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보다 다각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순회사서 80명을 320개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자료정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480명을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2,480명을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하였다.

(4)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3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2-4-6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구 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세 부 기 준	지역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	20만 미만 시군구 지역
	회 원 수	600명 이상	400명 이상
	종 목 수	5종목	3종목
	시 설	규모있는 복합체육시설 보유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유
지원예산		3억원	2억원

그림 2-4-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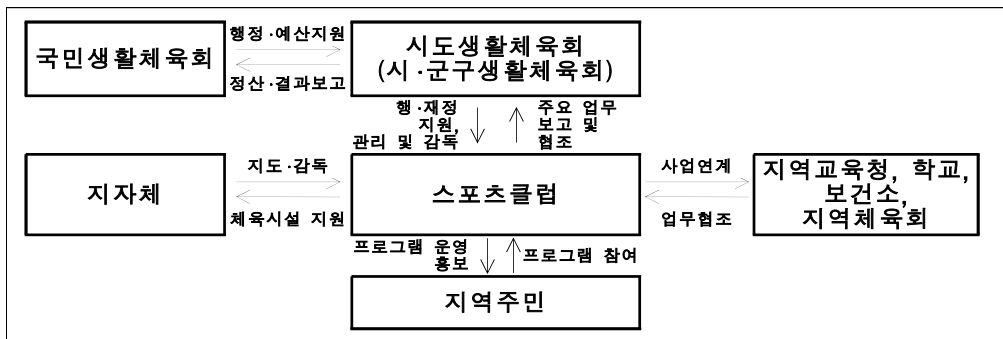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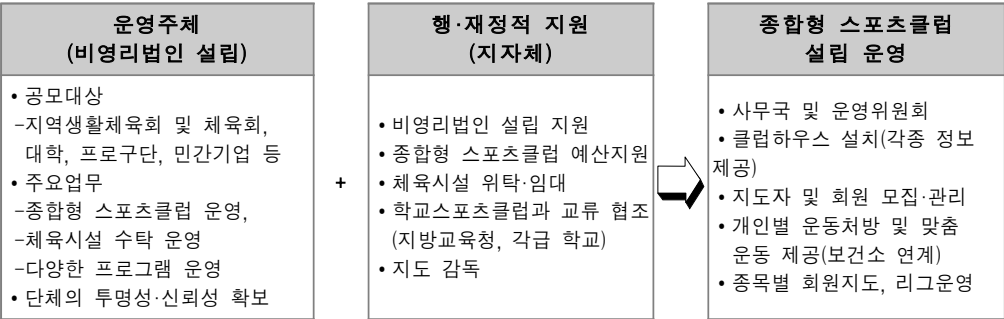


표 2-4-7 클럽운영 과정



(5) 생활체육 광장 조성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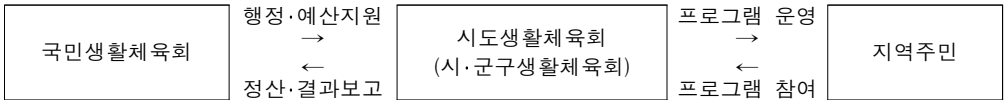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5	울산	14	전북	31
부산	32	세종	2	전남	36
대구	35	경기	30	경북	30
인천	20	강원	30	경남	37
광주	21	충북	25	제주	10
대전	22	충남	24	계	434

주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9 연도별 실적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소	302	256	381	404	402	500	500	500	500	500	500
횟수	109,165	95,285	146,737	162,009	148,412	149,012	145,148	140,016	142,816	137,074	140,892
인원	4,639,698	3,848,978	6,163,892	6,614,786	5,629,935	7,008,138	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4,943,438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소	500	500	500	520	520	520	518	434	434	434	434
횟수	142,672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인원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8개 지역(강원 정선, 경북 영양·고령, 경남 합천, 전남 해남·완도, 충북 영동, 울산 울주)에 3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4-10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지역	
2014년	9개	강원(삼척, 철원, 평창), 전남(장흥, 고흥), 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인천(강화)
2015년	8개	강원(정선), 경북(영양, 고령), 경남(합천), 전남(해남, 완도), 충북(영동), 울산(울주)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예술

계의 활성화와 피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추경사업 예산 200억을 포함한 300억원의 예산으로 529개 예술단체가 전국 4,662회 순회공연을 펼쳐 2,389,111명이 관람하였으며, 2016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으로 250여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육성

정부는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3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2012년~2016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3개 지자체, 24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1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지원 예산	1,000	1,720	1,320	1,320	1,20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200
계		1,400	2,000	1,580	1,580	1,40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광역시·도 단위「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에 따라,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희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이벤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였고, 2015년도에 광주 남구, 강릉시, 고령군을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3)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지역만의 독창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지역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15년에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에 7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삼로 트래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있다.

(4)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사업

본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현 정부 지역공약사업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Big-O,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을 재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

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박람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개발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면적 : 해양박람회특구 약 65만㎡(실제 활용부지 229천㎡, 건물 등 141천㎡)
- 개발 구상 : 엔터테인먼트리조트·복합콘텐츠·해양레저구역으로 구분 개발
- 개발 방안 : 부지는 매각, 시설·건물은 매각·임대 병행방식으로 민간참여

먼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2012년 9월)한데 이어 여수박람회법 개정(2012년 12월)을 통해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2013년 1월)과 재단을 설립(2013년 2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수박람회 폐막이후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O, Sky-Tower 등 특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2013년 4월 10일 재개장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는 한편, 박람회 기념관 조성(2014년 5월)과 한국관·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도에는 박람회장 방문객 190만명·운영수입 25억원을, 2014년도에는 방문객 223만명·운영수입 48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재개장 3년째인 2015년도에는 방문객 3백만명 돌파(318만명)와 운영 수입 68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박람회장 활성화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개장 이후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2014년도 69억원, 2015년도에 75억원을 지원하여 박람회시설을 쾌적한 해양힐링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자 세 차례(2012년 9월~11월/2013년 7월~9월/2014년 6월~9월)에 걸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박람회장 일괄 매각 조건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여수시와 공동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2014년 7월~2015년 1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박람회장 민간참여조건 완화(박람회시설 임대 전환, 매각대금 5년 분할상환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후활용계획을 변경·고시하였으며, 변경된 사후활용계획을 근거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재추진(2015년 6월~9월/2015년 11월~12월)하여 4개 사(매각 2, 임대 2)·1,138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한 박람회장 개발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의 목적인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 기업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박람회장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각적인 집객대책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집적화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201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88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으로만 추정하더라도 약 9천 2백억원(1인 평균 105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5년 크루즈 관광객 209만명, 시장규모 2조 4천억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600만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해양수산개발원), 국내시장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2015년 크루즈 관광객(기항지기준)이 88만명(2014년 대비 16%)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150만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00만명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중국 및 일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적 크루즈선사의 부재로 국내 크루즈 수요는 3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연관산업의 기반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적크루즈 선사 육성,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7월 해수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16년 3월 ‘제1차(2016~2020)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출항하는 상해에서 외국 선사 및 중국 여행사,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항지 홍보 마케팅을 최초로 추진하였고, 메르스로 인해 국내 기항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항만공사, 지방관광공사 등과 범정부 합동 유치단을 구성, 북경·상해·오사카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여 2016년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국내에 부족한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1기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2015.10~2016.3)한 결과, 총 70명의 과정 이수인원 중 54명이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에 취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격한 이들은 순차적으로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승무원으로서 기본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예산 3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을 개최, 약 1,200여명의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가 참석하여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 포럼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용품, 여행사, 기항지 지자체 등 연관 업·단체의 전시부스 운영으로 국내 크루즈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초석을 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크루즈 기항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해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전문 인력 2천여명을 양성하며,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로 확대하여 국내 연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양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광두레 조성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두레PD(지역관광매개자)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숙박·식음·여행기획·체험·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구성, 자립적으로 관광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관광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29개 기초 지자체에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8개 지역을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표 2-4-12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5년 12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역	P D	주민사업체	참여주민
계	29개	32명	148개	1,406명
1기(2013년)	3개	3명	17개	209명
2기(2014년)	15개	15명	82개	897명
3기(2015년)	11개	14명	49개	300명

(2)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고 걷기여행에 적합하며 지역 고유의 이야기 노선을 선정하여 도보여행 활성화 추진을 기획하였다.

‘해안길 걷기’에 걸맞은 명칭을 선정하고자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해안누리길’ 명칭에 걸맞는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5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53번째 노선으로 인천삼형제섬길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매년 1~3개의 노선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해안누리길 걷기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약 72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안군 진리해안길과 해남이길, 함평군의 돌머리 해안길 등 전남지역 3개 노선의 안내체계 및 시설을 정비·보완하였으며 2016년에도 2개 이상의 노선을 선정하여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조성된 해안누리길의 홍보를 위해 2011년도에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부안변산마실길과 남해다랭이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고, 2015년에는 인천삼형제섬길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

표 2-4-13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년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200	300	295	200	200

(3)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어촌주민들은 대부분 바다를 생산 공간으로 사용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어업생산 감소로 어

가 소득이 도시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촌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확보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어촌에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을 하였으나 어촌의 자발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어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어촌관광에 대한 수요 변화로 어촌이 단순한 수산물 생산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휴식과 체험관광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어촌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2001년부터 전국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과 휴양이 가능한 마을을 집중 육성하여 2015년까지 11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5년 체험마을 이용객수 100만명, 체험소득은 271억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5년, 봄철 수산물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20곳을 추천하는 ‘바다마을 식도락 여행’을 제작·배포, 다양한 박람회 참여, TV·라디오·뉴미디어 등을 통한 어촌관광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어촌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과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5년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촌과 학교 간의 자매결연사업인 1교1촌 사업에 11,161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렸으며, 기업·단체와 어촌 간의 자매결연 사업인 1사1촌 사업에 157개 기업·단체, 5,485명이 참가하여 어촌주민의 주거환경·의료지원 등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어촌체험마을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실태평가를 실시하여 수준별로 관리하고, 2015년에는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바다해설사 육성을 통해 어촌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어촌의 인문·

자연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운영 능력이 미흡한 어촌체험마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계, 경영, 관리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험마을 간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거리·공예·어촌 Stay 등의 4계절 방문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어촌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보전과 동시에 어촌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이 국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민 가족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이 편안하게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4)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최근 소득변화,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철도 및 도로의 개선 등에 따라 새로운 관광 활동의 대상으로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3개 사업 137억원(지특회계) 예산 규모로 강원 5억원, 충남 23억원, 전남 36억원, 경북 27억원, 경남 21억원, 제주 26억원 등 6개 광역시도에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남 완도군 수산생명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진도군 귀성항 해양관광지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이 준공되었다.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영목항 해양관광거점조성’ 등 22개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도별 2016년 사업으로는 충청도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트 조성’ 등 5개 사업 42억원, 전남도 ‘완도 해양생태체험관건립’ 등 9개 사업 44억원, 경남도 ‘거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조성’ 등 3개 사업 14억원, 경북도 ‘울릉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등 9개 사업 66억원, 강원도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등 2개 사업 9억원, 제주도 ‘4계절명품해변조성’ 등 3개 사업 8억원, 부산시 ‘송도 구름다리 복원’ 등 2개 사업 5억원 등이다.

수려한 해안선 및 연안별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관광기발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의 계절별 편중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2-4-14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수	18	22	20	23	36
예산액	15,569	17,482	12,338	13,746	19,923

(5)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성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이후 2015년까지 전주 한옥마을·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등 19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받기 위해선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하여 지구 내 외식업체 비중(50% 이상), 우수 식재료 사용비중(40% 이상) 등 여러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지구 중에서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2년간 총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내용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지역특화 메뉴개발·서비스 개선·교육·컨설팅·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 작업이 추진된다. 매년 우수 외식업지구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구는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시상하게 된다. 2015년도 올해의 우수외식업지구로 ‘평창 효석문화 메밀마을’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운영상황 평가결과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16.4% 증가하고 전체 평균 매출액은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외식업지구는 농촌관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표 2-4-15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2012~2015)

년도	지자체	지구명	소재지
2012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전북 전주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36개 업소)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시 수성구 상동, 두산동 일원(98개 업소)
	경남 함양군	건강100세 음식특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23개 업소)
	강원 평창군	효석문화메밀마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원길리 일원(60개 업소)
	경기 안산시	전통음식거리 땡이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7-1362번지 일원(34개 업소)
2013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가길 일원(177개 업소)
	제주 제주시	용두암 어영마을	제주 제주시 용담2동 어영마을 일대(41개 업소)
	제주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일대(55개 업소)
	전북 고창군	선운산 풍천장어거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일원(40개 업소)
2014	대구 달서구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일원(33개 업소)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일대(38개 업소)
	강원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동산리 일원(32개 업소)
	강원 인제	웅대리 황태마을	강원도 인제구 북면 웅대리 182번지 일원 (30개 업소)
2015	경기 안양시	삼막마을 먹거리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일대 (40개 업소)
	강원 평창군	자연밥상마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일대 (59개 업소)
	광주 동구	무등산 보리밥지구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중심사 일대 (43개 업소)
	경남 남해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 일대 (72개 업소)
	전남 강진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명길 일대 (25개 업소)
	경북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일원 (25개 업소)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및 기초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5년에는 인천 마니산 관광지 등 총 35개 관광지에 3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용문산관광지 등 총 37개소 20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에는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 등 170개 사업에 1,1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등 192개 사업에 1,2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4년에는 지리산 생태아트 파크조성사업 32개에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평창군의 ‘절개산 관광자원화사업’ 등 33개 사업에 230억원을 지원하였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에 43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개에 84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개에 20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6개에 1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에 1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9개에 88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개에 92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4개에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이란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을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2011년 4월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 142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7년에 신안군(증도면),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완도군(청산면)이, 2009년 하동군(악양면), 예산군(대흥면), 2010년 남양주(조안면), 전주(한옥마을), 2011년에는 상주시(함창읍·이안면·공검면), 청송군(부동면·파천면)이 각각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정부는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향토문화 계승, 지역생태,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한국적 슬로라이프 실현 및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느리게 살기 철학의 가치 구현을 도모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 47억원, 2010년 52억원, 2011년 20억원, 2012년 21억원, 2013년 22억원, 2014년 19억원, 2015년 1,250억원 국비를 편성, 슬로시티 인증지역의 기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의 6대 추진전략 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이다. 본 사업은 DMZ 등 우수 생태·문화·역사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대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23일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지원하였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전남 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군 우포늪,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강원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및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 자락

길, 진안군 고원 마실길 및 데미샘,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관광진흥개발기금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같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한 2010년 3월에 생태관광 컨설팅단 발족식 및 지자체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태관광 모델사업 기본·실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별 생태관광 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011년 6월 완료).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2년부터는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20억원, 2011년에는 18억원, 2012년에는 18억원, 2013년에는 39억원, 2014년도에는 36억원, 2015년도에는 29억원을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에 지원하였다.

(3)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양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등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 르네상스 창달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되었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산 영도, 인천 팔미도, 울산 간절곶, 제주 우도, 동해 속초, 여수 오동도 및 마산 소매물도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미술전시,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등대가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등대 및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부산 영도, 여수 오동도, 동해 속초 및 울산 간절곶 등대에서는 등대문화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 및 주변관광시설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다만, 육지와 도서, 접근성 및 방문객 수 등 각기 다른 여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차별화와 지역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등대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유인등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른 해양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 확보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2015년도 2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 인천 팔미도, 울산 간절곶, 제주 우도, 동해 속초, 여수 오동도 및 마산 소매물도등대의 홍보관, 전망대, 난간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및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추진하였다.

등대에 전시되는 항로표지와 해양관련 유물 및 해양문화행사,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해양문화행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문객이 등대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홍보의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1) 목적 및 추진배경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집중적·체계적으로 발굴·보존·정비하고 관람·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개요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5년에는 223.8억원(국비 128.7억원, 지방비 95.1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16 2015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국 비)
계	11개 사업		22,377 (12,866)
강원 속초	신흥사유물전시관 건립	• 유물전시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1,600 (800)
경기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 단지 정비(토목공사, 조경공사)	1,398 (1,384)
경기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 식생복원	2,953 (2,194)
경기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 유적정비, 조경공사 등	2,344 (1,172)
충북 청주	고려 금속활자 복원	• 직지활자 복원, 직지목판 복원, 종합보고서 간행	391 (211)
충남 예산	내포 보부상촌 조성	• 기반조성 및 공사	4,655 (3,405)
충남 논산	돈암서원 정비	• 예학관 건립, 조경 등 주변정비	3,636 (1,000)
경북 구미	채미정 주변정비	• 아은역사체험관 및 후정 조성	2,800 (1,400)
경북 칠곡	구 왜관터널 주변정비	• 터널 보수, 터널 신규 출입구 조성 • 공연장 및 공원 조성 등	1,400 (700)
경남 양산	양산 북정동 고분군 정비	• 관람로 황토포장, 배수로 석축 정비	200 (100)
경남 함안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	• 탐방로 정비, 목재데크 정비, 관람로 주변 안내판 정비	1,000 (500)

3) 추진경과 및 성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약 10여개 사업을 선정, 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역사문화유적에 대하여 발굴·보존·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계속사업 이외에 양산 북정동 고분군 정비,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정비 등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5)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동 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지역 문화공간, 대단위 관광산업 기반, 생태 자연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 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0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31개 사업 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7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42개 사업에 1,7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1) 사업목적

도시의 훼손방치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며, 조성된 자연마당은 도시 내 자연과 함께하는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2) 사업추진방향

환경부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의 도시지역 내 생활권에 위치한 유휴·훼손·방치된 지역으로 5만㎡ 내외의 국·공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이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환경부가 주체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소당 30억원 수준(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3년(1차년도 설계, 2~3차년도 공사)으로 생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주관부처) 등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3) 추진경과

2015년 1월에 2015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3개소 완공, 3개소 착공, 4개소 실시설계)을 수립하였다.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 2015년 자연마당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광주, 청주, 광양,

밀양 등 4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5년 8월에서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4) 주요성과

2015년까지 총 4개소의 자연마당이 조성되었고 4개소는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이 4개소로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5) 향후 추진계획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자연마당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17 연도별 조성 계획(자연마당)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 수	5	3	4	2	6	20

(2) 생태놀이터 조성

1) 사업목적

도시생활권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어린이에게 놀이·체험공간, 주민에게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 사업추진방향

환경부는 도시 주거생활권의 국·공유지로서 유휴·방치부지, 인공·노후된 놀이터, 방치된 공원·녹지공간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생태놀이터는 조성가능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당 500~5,000㎡ 규모로 조성된다.

환경부가 사업주체자가 되고 사업유지관리 주체는 지자체이며, 개소당 5억원 수준(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 추진경과

2014년 5월에 2015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당해 10월 2015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23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별 생태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다.

4) 주요성과

2015년까지 생태놀이터 35개소를 조성하여 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도시민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5) 향후 추진계획

2014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3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18 연도별 조성 계획(생태놀이터)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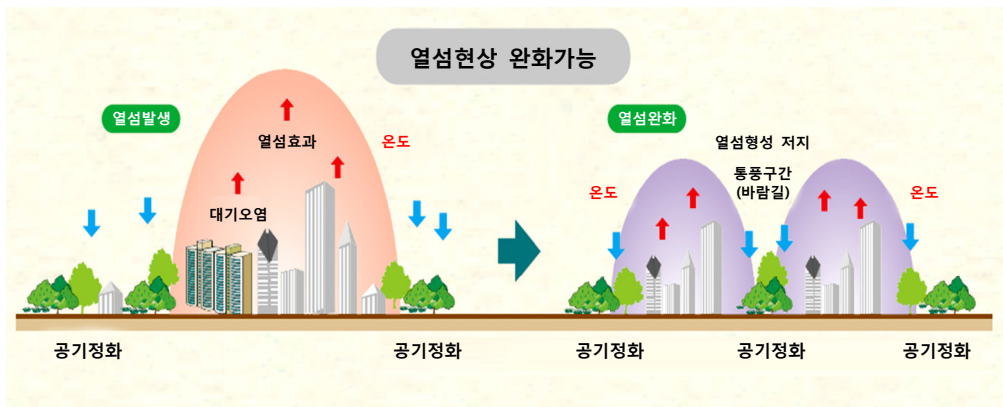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 수	12	23	20	18	73

(3) 도심열섬 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00여 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우리나라 7대 대도시의 평균기온이 무려 1.85도 상승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심열섬현상이 심해지고, 도시 상공에 떠 있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녹색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한여름, 도시숲이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한 낮의 평균 기온이 3~7°C 낮았고, 평균 습도는 9~23% 높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도심 내 건강한 나무는 한여름 하루 동안 15평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그림 2-4-4 도시숲의 도심열섬 완화 기능



또한 도시숲에 대한 도시열섬 완화효과를 분석¹¹⁾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1㎡ 증가할 경우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이 20KWh 감소하고 도시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C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이 도시열섬을 완화시키고 전기를 절약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총 583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427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11) 계량경제적 접근을 통한 도시림의 도시열섬 완화효과 분석(2011, 한국임학회지, 김동현 외)

기업·단체의 참여로 686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였다. 2016년도에는 6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숲 등 도시 내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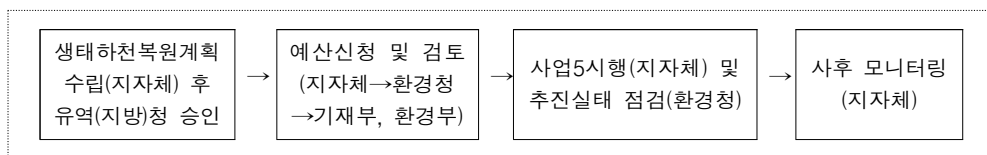
1) 사업목적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생태계, 수질 등이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50%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2016~2020년)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077km에 해당하는 오염·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2-4-5 사업 추진체계



3) 추진성과

1987년부터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오염·훼손된 하천 1,250km를 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성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년 2월 17일)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까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선정시부터 지자체에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한 후 환경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례집 ‘천생인생’, 생태하천복원 매뉴얼,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2014년 10월 17일),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하천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4) 향후 추진방향

오염·훼손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을 위해 도심하천, 소하천, 옛물길(터) 등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 사업개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휴가문화 정착 등으로 우수 자연자원이 소재한 특정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생태탐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50% 보조)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탐방로의 개념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이다

2) 추진경과

환경부는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2006~2007년)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2007년 11월)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2010)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4년까지 38개 사업에 약 1,280km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13개 사업에 약 670km를 조성 중에 있다.

3) 특징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는 전국에 걸쳐 5대강과 옛길(영남대로, 삼남대로),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탐방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테마형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태탐방로는 기존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등의 형태를 지양하고,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위주로 우수한 생태적 배경을 가진 강·하천길, 옛길, 숲길, 마을길, 들길, 해안(바다)길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

또한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생태탐방로, 광역생태탐방로, 지역생태탐방로로 구분하고 기존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4) 향후 계획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17년까지 총 2,500km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곳은 2015년부터 DB 구축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홈페이지(www.eco-tou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1) 추진배경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에는 생태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숙박 등의 체류를 위한 기반시설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해요인의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 활용과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지역 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로서 생태탐방체험시설(연수원)을 조성 중이다. 국립공원 외의 지역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잠재성이 높은 곳에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에코촌 조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 중이다.

2) 추진경과

생태탐방체험시설로는 2010년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시작으로 총 7개소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다. 2016년 현재 북한산(2011년) 및 지리산(2015년) 생태탐방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고, 소백산·설악산·한려해상·무등산·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5개소가 201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6년 현재 순천만 에코촌(2013년)과, 우포늪 에코촌(2015년)이 운영 중에 있으며, 랍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습지가 있는 제주 선흘1리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에 신규로 조성중에 있다. 에코촌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생태탐방연수원은 운영·조성중인 7개 시설을 거점으로 생태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에코촌 조성사업의 주민 참여도와 추진의지, 생태관광 인프라 등 잠재성을 검토하여 추가 조성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4) 국가하천 정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증대에 따라 홍수예방, 하천환경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하천 종합정비가 추진 중이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6조 7,927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2,458km에 대하여 치수·이수·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및 보강, 하도준설, 보설치 및 개량, 초지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 중에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6조 7,927억원 중 2015년말까지 5조 1,6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이후 1조 6,235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9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3년 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67,927	38,940	4,281	4,338	3,900	3,900	8,435	

표 2-4-20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

구 분	사 업 시 기	주 요 내 용	대표사업	비 고
자 연 하 천	1960 이전	▪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환경기능 양호	-	
방 재 하 천	1960 이후	▪ 치수 목적으로 정비된 하천 ▪ 이수 및 치수 기능은 양호하나, 환경 기능 미흡	▪ 하천개수사업 ▪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 등	
공 원 하 천	1980 이후	▪ 친수성을 강조하여 조경시설 및 운동시설 위주로 정비	▪ 한강종합개발 사업 등	
자연형 하 천	1990 이후	▪ 생물서식처 복원 ▪ 이·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물 서식처 보존	▪ 양재천, 경안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 등	
복 합 하 천	2010 이후	▪ 이·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물 서식처 보존 ▪ 역사·문화를 고려한 문화하천	▪ 4대강 사업,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5) 지방하천 정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하천관리가 매우 어려운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치수를 위해 제방을 쌓거나 이수를 위한 저수지, 보 등을 건설하여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해 왔다.

이러한 수문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친수가 공존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하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홍수예방을 위하여 제방이나 호안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비하는 등 하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960~1980년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하천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 및 친수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등이 복합된 친환경 하천조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금도 홍수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노력으로 홍수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2011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홍수로부터의 안전, 품격있는 친환경적 하천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관리하여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전한 국토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1945년 이전은 근대적인 하천관리체제의 구축 및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개념의 도입으로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위주의 개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광복 후 복구시기인 1945~1950년대에는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차원의 남강방수로 공사 및 중요하천의 개수와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하천 19개, 지방하천 44개의 약 680km의 하천개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출발 및 정착시기인 1960년대~1970년대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289.3km의 하천개수 추진 및 치수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1965년에는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966년~1975년)을 수립하여 치수사업과 이수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5대강 수계 치수사업시작으로 1975년부터 한강, 낙동강 및 금강의 국가하천 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고도화 시기인 1980년대에는 지역 간 균형 개발의 국토정책에 의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이 있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방재대책 중장기계획(1988)」을 수립하였다.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기인 1990년대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년~2001년)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7년~2001년)」에서는 분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추진

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 하천개수 투자 확대,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였으며,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1991년부터 하천정비에 환경개념을 도입하였다.

유역단위의 치수 및 생태하천 조성 병행 시기인 2000년대에는 하천법에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전 및 개선을 병행한 수해에 안전하고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지자체 특성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하여 도시하천구간의 정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기본계획 수립률은 전국 지방하천 총 3,774개, 하천연장 26,822km에 대한 하천연장기준 79.6%(3,082개, 21,362km)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개수율(하천제방 비율)은 74.8%(제방정비 완료 48.9%, 제방보강 필요구간 25.9%)를 달성하였다.

(6)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은 과거 도로 개설로 인해 마루금(농선)이 단절되어 산림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백두대간 고유 생태계의 건강성과 역사성, 상징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개설 등 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단절지역에 원지형과 식생을 복원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음으로써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은 3년차 사업으로 2015년 34억원을 투입하여 정령치(전북 남원)·말티재(충북 보은)·밤재(전남 구례)를 연차적(1~2차년) 복원 추진하였으며 2016년은 25억원을 투입하여 정령치(전북 남원)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이 목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포함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아가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은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를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2004년 3월)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12,160
-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02	600	1,000	5,928	5,796	7,483	7,648	8,116
- 준경관작물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4,044
○ 예 산	600	600	1,000	2,646	9,640	15,679	13,903	7,579	14,072	14,072	13,870
- 직불금	560	560	952	2,596	9,590	15,596	13,853	7,475	13,968	13,968	13,766
- 행정비	40	40	48	50	50	83	50	104	104	104	104
○ 마 을 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25	491
○ 농 가 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86	12,778	10,572	9,942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의 유형화를 확대할 계획이며, 경관형성 효과가 우수한 경관작물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본 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은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의 보유지역이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은 지역 유산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년간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2월에 농업유산지정관리기준(고시)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유산자원을 보전관리하고 있다.

2015년 7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2013년도에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4년 4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 구례 산수유농업,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 농업을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확대를 위해 지역의 유무형의 농업유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표 2-4-22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22,108km)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 전국 생산의 63%, 천년 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죽제품 생산
농업유산 제5호	금산 인삼농업	근삼군 금성면 양전리 등 14개리 (297ha)	○ 임야, 밭, 논에 걸쳐 다양한 인삼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국내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
농업유산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597.8ha)	○ 차 군락지의 조성부터 재배까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고, 차와 관련된 차 민요, 채다가(採茶歌), 차 품앗이 등 많은 문화유산자원이 형성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1) 추진배경

기존 규제중심의 자연자원 보호정책은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사회에 불만을 가중시켰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보전하는 ‘현명한 이용’으로 전환하고 생태관광 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로 국민의 생태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수요를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생태관광¹²⁾ 용어 남용 및 자연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산업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2) 추진경과

2008년 10월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

12) 생태관광: 자연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1990)

함에 따라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2008)하였으며, 2014년에는 질적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성공모델(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중점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년 3월)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3개소의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3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 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원-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⑬ 경기 안산-대부도, ⑭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⑮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⑯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⑰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⑱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⑲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⑳ 광주 평촌마을(명품마을)

3) 추진체계

생태관광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 서면평가, 현장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자연·생태적 가치, 도입 시설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 이해도, 지역사회의 추진의지와 기반, 보유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전략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지정 이후에는 주민협의체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보조율 50%)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태탐방로,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집중홍보 등을 실시한다.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2016년 현재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지역의 정착과 우수사례 확산에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지역별 운영평가를 통해 수준진단과 개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자연환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2) 개요

1998년 12월에 울산과 전남여수 지역에 최초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한 이래 2000년 8월에 8개소, 2001년에 5개소, 2002년에 1개소, 2005년에 2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총 18개소의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당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시행 2011년 10월 29일)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능을 추가하였다.

표 2-4-24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18개소	2개소 (울산, 전남)	8개소 (강원, 인천, 대구, 경기, 시흥, 안산, 충남, 대전)	5개소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광주)	1개소 (제주)	2개소 (부산, 서울)

3) 추진경과(현황) 및 성과

그간 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5년까지 틈새환경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2,939개의 연구과제, 기업환경기술지원(컨설팅) 11,577개 업체, 누적인원 41만 8천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354개(2011년 77개, 2012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2015년 63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

4) 향후 개선방향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조사연구, 기업체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사각지대에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지원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 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 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산후조리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입각하여 차년도 시·도별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세부 내역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2015년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그간 복지인력 7,000명 확충(2011~2014년) 등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증원해 왔음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2014년 6월 현재 읍면동 기준,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증원 효과가 반감되는 등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애로를 겪어 왔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및 직렬 간 칸막이 문제 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2014년	3개년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	1,177	1,600	1,600	1,623
사회 복지직	소 계	4,537	1,177	1,120	1,120	1,120
	정원 순증	4,057	1,177	960	960	960
	자연결원 대체	480	-	160	160	160
	소 계	1,463	-	480	480	503
행정직 등	행정직 순증	983	-	320	320	343
	행정직등 재배치	480	-	160	160	160

2015년부터 충원되는 인력은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하여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인적·물적 자원 발굴·연계, 노인·장애인 방문상담, 복합적 요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고,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

가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토록 하고, 복지업무 담당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1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토록 하고, 시도 국장급 및 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사회복지 교육 연 2회 실시, 읍면동장 대상 사회복지 교육 연 1회 의무화, 5급 승진자 교육훈련 과정에 사회복지 교과목 편성·운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5년에는 인력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복지직 1,644명(2015년 목표 1,120명 초과)을 선발하여 1,584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행정직(2015년 목표 480명)은 431명을 배치 완료하였다.

2016년에는 신규 사회복지직 채용(2016년 목표 1,120명)을 위한 시험을 3월 19일 시행하여 7월중 임용·배치 완료할 계획이며, 행정직의 경우 연내 신규 채용 및 재배치(목표 480명)하여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다. 그 외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완료(2015년 11월)하였고,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완료(2015년 11월)하였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추진해오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6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작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과 평가지표 설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다. 여러 서비스가 상호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집행하도록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지침과 일방적 예산·사업량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예산배분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력운용과 서비스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자율적으로 기획·실행토록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축하고, 평가지표 또한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추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에 적응하고 분절적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지역 건강문제 분석·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자원의 발굴·연계, 사업의 모니터링·환류 등 과정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적 성과관리 방안으로서 해당지역 내에서의 건강수준 향상도 또는 건강행태 변화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지표를 개발하여 사업과정에 대한 질 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고 관심을 높여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외연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직급별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유형별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한 보건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보건기관의 건강증진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이 25%에 달하며(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0명)의 2.3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시·군·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

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연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5년말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100개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메르스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림 2-5-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원(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2014년 대비 10개 신규지역을 추가하면서 2015년 12월 현재 229개 전체 시·군·구 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8만 102가구, 12만 5,56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양적 확장과 더불어 드림스타트는 질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 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정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 안전 보호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 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건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처 간 연계협력 업무협약 체결(2012년 10월) 이후, 2013년에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102개, 초등돌봄교실 12,380실, 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가 연계하여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2015년 말 기준).

표 2-5-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 개소	244	5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818	3,886	3,913
지원단가 (만 원/월, 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370	395	420	433	443

표 2-5-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건강관리, 생활안전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숙제·교과 학습지도,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등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관람, 견학, 캠프 등) 및 참여활동(공연,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부모·가족, 아동 상담) 및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및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표 2-5-5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109,661 (100%)	3,133 (2.9)	42,267 (38.5)	40,113 (36.6)	19,566 (17.8)	4,418 (4.0)	164 (0.2)

자료 :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 보고서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

(1~4등급) 41만~101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8.6만~234.1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됨에 따라 대상자 수를 확대(30천명→65천명)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활동보조인(방문간호사 등) 등 유휴인력에 대한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9천명→62천명)을 확대하였다.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고 29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정조사 전문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을 늘리고 실기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 전체(장애1~3급, 2015년 6월)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칭)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2013년 10월~)하였으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지역 및 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사업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신속히 연계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등 오프라인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32개 지역, 3,500명을 2015년에 77개 지역, 7,600명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관내 청소년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표 2-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2)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장애·3자녀이상·조부모·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2)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소수	46	100	150	185	178
	인원	2,350	4,200	6,300	7,680	7,245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소수	200	200	200	200	244
	인원	8,200	8,200	8,200	8,043	9,490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청소년공공시설					
사업기간	2015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운영)					
사업	244개소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5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45개소, 청소년수련원 193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26개소, 청소년특화시설 9개소 등 전국에 79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10개소 건립에 14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21개소 건립에 162억원, 청소년특화시설 2개소 건립에 83억원, 청소년시설 75개소 기능보강에 266억

원 등 모두 65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7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계	797	181	245	193	43	126	9
	공공	528	179	239	62	20	19	9
	민간	269	2	6	131	23	107	0

표 2-5-8 2015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	108	10	21	2	75
	지원액	656	145	162	83	266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노인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영양·위생 여건 등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주택은 노후화되었으나, 수선 및 난방 비용이 부담되어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이다 보니 식사를 걸러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 및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읍면 중심지에 마을회관 등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공동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고려하여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토록 하였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서비스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복지부의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문체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의 가사도우미 등 11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건축학회 소속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부터 공사 시행, 사후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4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8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4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제공하여 외로움·불안감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2016년에는 2014~2015년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의료·복지·문화 프로그램과의 협업 방안,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은 농어촌 및 저소득자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 관사 인근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하여 최대 2억 5,14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말 기준 2,629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65,743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50개소, 2015년 150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 근로자의 자녀 및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경우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5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 기부채납 활성화, 가정어린이집·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3)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또는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206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표 2-5-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5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5년	225,359	15,253	28,147	9,643	197,212	5,610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응급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취약지의 일반적인 환자는 먼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불편이 발생하지만, 응급환자는 일정 시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취약지에서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반면,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 비용은 많이 들기에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이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안전망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진화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는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郡)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여 115개소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표 2-5-10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115
지원액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22,866	23,908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5년 239억원까지 늘어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2006년 43개에서 2015년 12개까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의료의 질 개선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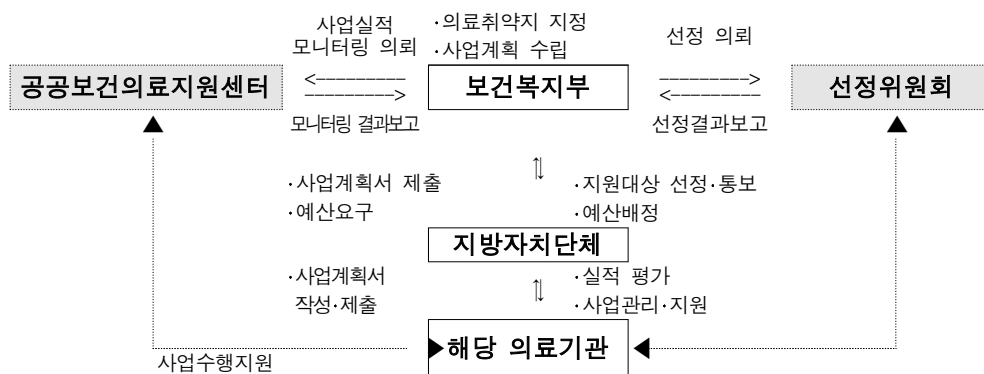
그간의 노력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2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적인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이외에도 야간·휴일 진료를 분담할 당직의사들이 필요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지역 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이런 의료기관이 없어 지원금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할 의료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바꿔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를 근거로 하여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서비스(응급, 분만, 산부인과 제외)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과·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를 지원하고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 소아청소년과 1개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1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표 2-5-11 2016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

시도	개수	소아청소년과 취약지(29)
인천	1	옹진군
경기	2	연천군, 양평군
강원	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2	보은군, 괴산군
전북	4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4	곡성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경북	5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경남	5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주 : 2014년 선정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관내 분만율을 상승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 2015년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과 5개소, 2016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예산지원을 통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도시 원정출산이 불가피했던 농어촌 지역의 산모가 근거리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국정과제(62-③)로 채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표 2-5-12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기관수	3	4	4	14	3	4	
예산(국비)	1,875	2,200	3,950	4,875	5,525	5,725	

제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010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5만명 감소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28조원이며, 1인당 GRDP도 3,31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08년 333억 달러의 1.9배인 6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84.2%로 3년 전에 비해 6.1%p 낮아졌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263,000	303,813	327,602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0,201	10,250	10,103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609	3,026	3,312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33,296	56,003	62,329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4,922	5,012	5,146
재정자립도(%)	53.9	51.9	50.3	88.3	90.3	84.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7%, 제조업 6.1%,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34.4%, 35.7% 44.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1	2.1	3.9	2.0	2.1	3.3	2.8	3.2	3.6
섬유제품	4.7	3.7	4.7	4.5	3.6	3.8	4.7	3.4	4.2
의복, 의복액세서리	33.2	36.4	39.3	33.9	36.2	43.9	34.4	35.7	44.2
가죽, 가방 및 신발	3.6	3.1	3.6	4.2	3.2	3.3	4.5	3.6	4.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5	9.6	5.7	10.3	8.6	4.8	8.5	7.8	4.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7	13.7	14.5	8.6	12.3	13.7	8.1	11.0	9.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3	0.6	0.5	0.3	0.5	0.4	0.5	0.6	0.5
전기장비	5.7	5.1	4.2	6.2	5.7	5.0	5.8	5.4	4.6
기타 기계 및 장비	7.0	6.3	5.1	6.9	6.7	5.3	6.7	6.5	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2	0.5	0.6	0.2	0.5	0.5	0.2	0.5	0.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3	18.6	36.6	8.0	20.0	38.7	10.6	20.0	3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3	11.9	17.2	18.5	10.8	16.0	17.8	10.3	12.6
사업지원 서비스업	5.1	25.4	11.3	5.9	24.4	11.4	6.7	25.3	11.4
교육 서비스업	14.9	10.3	6.8	15.0	9.8	5.9	14.9	9.0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	17.3	15.5	12.3	18.7	15.1	12.8	19.9	17.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0	5.9	6.7	11.3	5.6	7.4	10.2	5.2	8.1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6	10.1	5.4	28.7	10.0	4.9	26.7	9.7	4.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25.3%,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출판, 방송통신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출판, 방송통신업의 경우 방송·정보서비스 관련 시장의 확대에 의한 현상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9.6조원, 연구개발인력 151,835명, 연구개발조직수 8,017개로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8년에 비해 각각 5.7%p, 3.7%p, 0.6%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969건이며, 등록은 28,31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9.8%, 29.1%였다. 다만,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8년과 비교하여 각각 4.5%p,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7,174,712 (20.8)	9,231,293 (18.5)	9,635,558 (15.1)
	연구개발인력	125,616 (28.8)	139,579 (26.3)	151,835 (25.1)
	연구개발조직수	3,573 (25.6)	5,349 (24.5)	8,017 (25.0)
특허	출원	43,654 (34.3)	43,132 (31.2)	48,969 (29.8)
	등록	20,156 (33.0)	21,980 (30.4)	28,315 (29.1)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은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화 추세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환경, 복지수요, 소비시장 등 각 분야에서 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가치와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저탄소 도시로의 방향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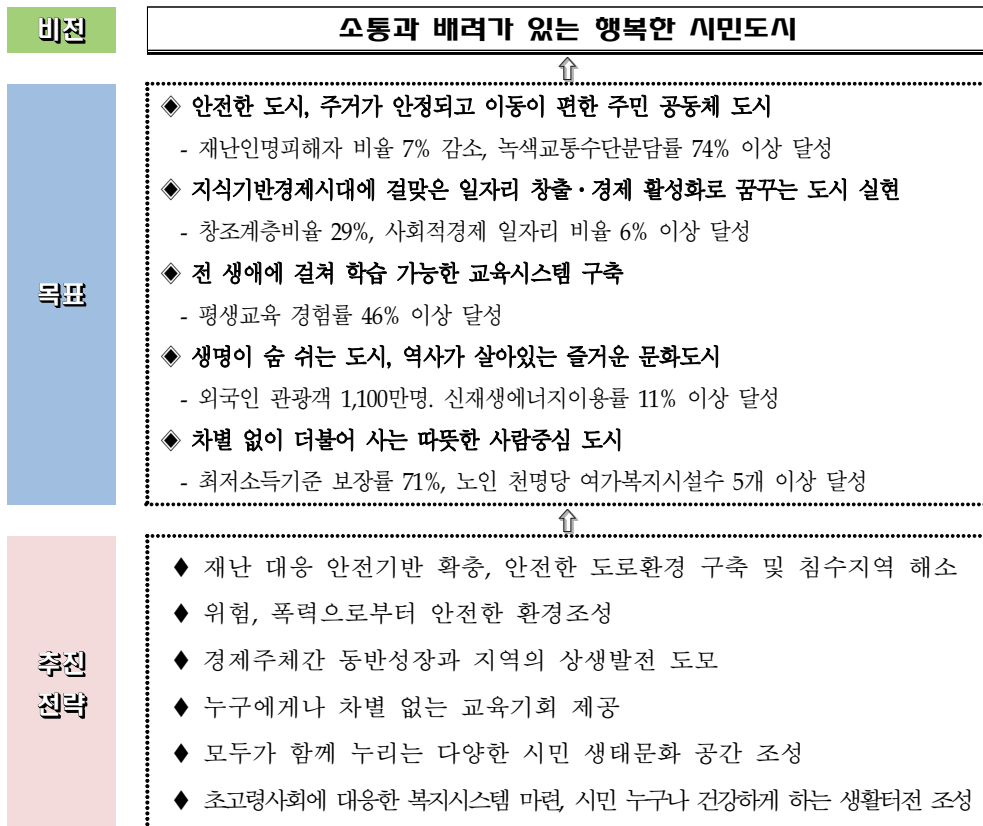
첫째, 총량적인 양적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 주택, 자연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고 역사자원의 보전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울이 가진 장점과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산업의 육성·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화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가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내세우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파주, 양주, 수원)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서경지역생활권’은 「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 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광진구가 주관하고,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가 참여하는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2015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6.5억원(총사업비 37.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차산을 중심으로 3개 자치단체에 형성된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의 연계 강화 및 서경지역생활권 내 대표적 역사문화·생태공간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아차산 복원·정비, 역사·생태학습장 및 힐링공간 조성, 아차산 통합관리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데크 조성 등 선제적 공공사업 시행,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낙후된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세운상가군 입주 문화·예술인 및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소통을 통해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주민주도의 설계를 확정하였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총괄계획이 선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민교육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상업기반 지원 등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답십리 현대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36개 시장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인 만족도 84.3%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폭력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지원(210,581건), 순찰(105,291건), 계도(112,702건)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 25개 안전마을 운영으로 여성안심을 위한 환경개선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특성에 기초한 지역고용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공연, 봉제, IT 등 다양한 영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청년 및 여성 등 지역주민의 직업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599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44,372명(공공분야 40,552명, 민간분야 3,850명)이 참여하여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2개소(금천구 G밸리, 동작구 대방동) 설치·운영하였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G밸리 무중력지대는 2015년 1월에 개소하여 1일 평균 150명이 방문하였으며, 월요브런치, 아트스쿨, 자기주도 학습지원, 청년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는 2015년 4월에 개소, 청년들의 활동환경 마련, 주체적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사회진출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 100명이 방문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동북권 무중력지대 1개소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 기업지원 펀드 조성, 메인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홍릉 관련 기관(7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문제 해결 등 서울시와 시민에게 필요한 R&D 지원을 위해 ‘서울형 R&D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68개 과제에 대해 총 14,42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게재(10건), 특허출원(58건), 특허등록(24건), 기술이전(36건) 등에서 전년 대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 매출 증대, 비용절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140개소),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7개소, 1,288구획), 민영텃밭 활성화 지원(15,388구획), 시민자연학습장 운영(1개소, 6,311㎡) 등 도시농업 저변확대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2,100구좌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보급·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서울 친환경 농장(7,200구획, 118,800㎡) 분양·운영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 촉진을 도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재정여건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시는 교육청,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개 자치구(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 종로, 서대문, 동작, 강동)를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6,4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진로직업교육 지원,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마을-학교 연계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운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2)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었다. 2015년은 사업 2년차로, 2014년 사업을 계승하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단일 학부·과의 특성화 사업만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복수 학부·과 형태인 단과대학도 선발·지원하는 등 융복합적인 특성화를 추구하였으며, 2014년 개발한 계산물리 실습모듈을 2015년 전공 교과과정에 사용,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춘 도시전문가 양성에 기여하였다.

(3)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21교), 실험실습기자재(79교), 실험실습재료비(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46교), 산학협력 지원사업(24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우수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 법인으로 전환,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관계자 연수, 자치구 평생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기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 평생교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양극화 해소 및 시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평생학습 협력기관 수를 2014년 280개관에서 2015년 284개관으로 4개관 확대하였으며, 거점기관 소외계층 프로그램(41개 프로그램, 7,706명 참여) 및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95개 프로그램, 20,895명 참여)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위한 현지실사 등에 대비하여 한양도성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및 보수·정비를 시행하였다.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정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한양도성자문위원회) 및 협의회(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구조안전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DB를 구축하는 등 구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시민들의 문화공연 향유 및 스포츠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보편적 기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예술교육센터 확충, 생애주기 및 예술경험 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별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용도폐쇄된 김포 감압장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체험·놀이 등을 위한 서남권 지역예술교육센터 건

립을 시범 추진코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권역별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37개 프로그램 운영, 25천명 참여),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100명, 미술 60명), 시민예술가 육성지원(80개 동아리, 1,200명 지원) 등 문화예술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셋째, 야구, 축구, 농구 등 이용률이 높은 17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 44개소 확충, 학교 운동장 27개소 인조잔디 교체, 소외지역 생활체육지도자 319명 배치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율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서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이태원 여행가방 등 상징물 조성(2015년 8월), 서울 속 세계여행 가이드북 발간(2015년 7월), 서울시 등에서 발굴한 핵심이야기 99선 선정(2015년 12월), 스토리텔링 역할극 운영(2015년 9월~11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역주민, 상인 등의 참여와 주도에 기반한 마을 커뮤니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인체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시행하였다.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부문 감축을 위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14년 12,484대→15년 13,639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가정으로 확대(14년 794대→15년 1,500대)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태양광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 배란다, 옥상 등 유휴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10,929개소)하였으며,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1,044명 참여, 82.5억원) 판매를 완료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동주민센터를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으로 13개구 80개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인력(606명)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중심의 공간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료원(400병상) 및 동부병원(155병상) 일반병상 전체를 환자안심병원 운영, 시민에게 보편적 공공의료를 제공하였으며(14년 129,079명→15년 163,811명), 국가정책(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조사·사례 지원(상담접수 739건, 현장조사 89건), 예방 매뉴얼 개발·배포, 시설 종사자·인권감독관 인권교육 실시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음건강학교(3개교) 실시, 대집단 프로그램 운영(241건, 7,259명), 교사 상담 스쿨라인 상담(121건)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중학교 43개교, 860명) 특별 프로그램, 교과학습, 문화체험 자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였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제공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망 지원을 위해 ‘서울형 공공의료망 50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간협력을 통한『서울시 안전망병원』을 12개소로 확대(14년 10개소)하여 소외계층 대상 진료 및 검사(784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병원 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14년 1개소→15년 6개소)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 11개 의료기관으로 전파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2016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구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창신송인, 해방촌, 5개 시범사업지구, 창동·상계, 세운상가군 등 도시재생 추진,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 여성안심특별시 업그레이드,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구축’, ‘지역 및 산업정책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완료 및 운영 활성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단계별 조성을 위한 앵커 공사 추진 및 입주기업 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창조적 전문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력 강화’를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확대,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추진,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는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급변하는 관광환경 및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정책 추진’,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가구당 1대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설치비 용자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을 목표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협력을 통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확대,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 인구는 2014년 기준 352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3만명 감소하여 2008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67조원에서 10.4% 증가한 74조원이며, 1인당 GRDP는 2008년 대비 25.3% 증가한 2,16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146억 달러에서 1억 달러 증가한 14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08년 160만명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67만명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57.4%로 2008년에 비해 3.1%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60,467	66,648	73,744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3,565	3,551	3,519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725	1,928	2,161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12,860	14,562	14,702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1,597	1,574	1,667
재정자립도(%)	53.9	51.9	50.3	60.5	56.4	57.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부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1%, 제조업 19.9%, 광업·농림어업 1.0%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7%, 14.9%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1차 금속 제조업'이 1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5	6.3	4.3	6.1	6.2	5.1	6.7	6.4	6.1
의복, 의복액세서리	6.8	7.4	2.8	0.3	0.2	2.7	0.3	0.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4	5.3	2.9	6.7	6.7	4.4	7.3	7.6	5.6
1차 금속 제조업	7.9	9.0	22.7	7.2	8.4	19.6	7.2	7.9	16.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7.2	13.4	12.8	17.2	13.8	11.9	16.7	13.0	11.7
전기장비	5.8	5.4	4.0	6.2	5.5	4.0	5.9	5.8	5.2
기타 기계 및 장비	16.5	12.8	10.7	16.3	13.9	11.6	16.7	14.9	1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4.7	7.8	13.7	5.8	8.8	16.6	6.2	8.7	15.1
기타 운송장비	0.2	0.3	9.5	0.2	0.3	6.2	0.2	0.3	5.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7	3.1	0.6	1.6	4.3	0.6	1.5	3.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3.0	5.7	1.5	2.8	5.9	2.1	3.0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	10.4	17.1	13.7	10.6	19.3	15.3	10.3	20.0
사업지원 서비스업	5.4	20.9	12.2	5.8	21.7	13.8	6.2	21.9	13.7
교육 서비스업	17.0	12.9	8.3	16.9	11.1	7.1	16.2	9.8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25.0	28.1	11.4	27.6	29.9	12.1	30.0	31.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2	7.4	9.8	11.1	6.7	8.6	9.9	6.4	8.5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1	18.7	15.8	39.1	17.9	11.3	37.6	17.0	1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7.6%, 1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0%, 3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1조 1,048억원, 연구개발인력 21,441명, 연구개발조직수 1,254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조직수가 각각 0.5%p, 0.8%p, 0.6%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약 3% 수준으로 부산시의 경제 및 인구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337건이며, 등록은 2,790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3%, 2.9%로 나타났다. 특허활동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8년과 비교하여 출원 및 등록 모두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742,330 (2.2)	906,781 (1.8)	1,104,845 (1.7)
	연구개발인력	18,670 (4.3)	22,119 (4.2)	21,441 (3.5)
	연구개발조직수	628 (4.5)	913 (4.2)	1,254 (3.9)
특허	출원	3,399 (2.7)	4,132 (3.0)	5,337 (3.3)
	등록	1,425 (2.3)	2,104 (2.9)	2,790 (2.9)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에는 유라시아대륙권역과 환태평양해양권역을 연결하는 시·중점으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은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 신항만과 특화된 산업단지, 기간산업과 전략산업 등 산업기반을 풍부히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해양 근대 유산과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한 도시이다. 개화기(1876년)부터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건축물 등의 근대문화 유산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를 보여주는 자원이다. 70~80년대는 국내 제조업 및 수출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역외이전 및 탈제조업화 등에 따라 성장과 고용이 저하되고 주력산업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의 미래와 전략산업 추진의 필수 역량인 인재 유출과 기술 부족으로 지역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은 동북아의 거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을 통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부산은 해양플랜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특구 조성, 영화·영상제작 중심도시 환경 구축 및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조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부산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동조하여 경제부흥을 꾀하는 한편 국민안전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복지수요 증대, 인재의 역외 유출, 재정건전성 악화, 지역경제 저성장세를 극복하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새로운 도시 비전과 실천 동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문화·복지기반의 소프트 시책 추진, 동·서부산의 문화·교육·생활 등 시민 삶의 질 격차 해소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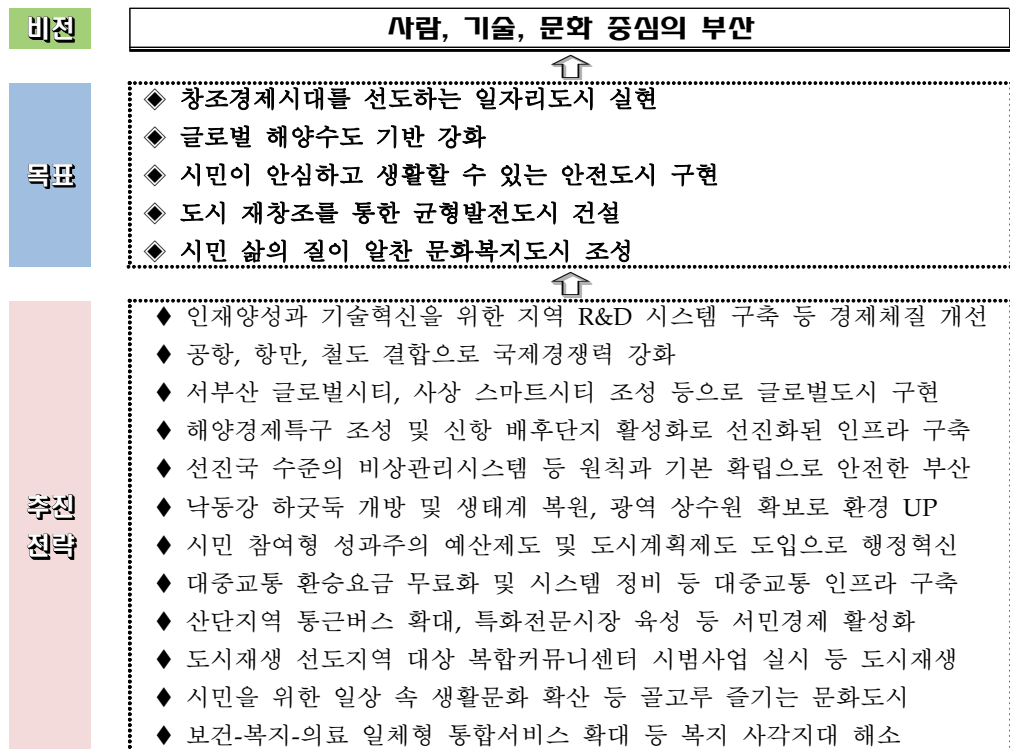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광역시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정의 중심을 과거 인프라 건설에서 인재양성·기술혁신·문화융성으로 옮기고, 도시체질 개선을 통한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도시 실현’, ‘글로벌해양수도 기반 강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도시 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건설’,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을 5대 목표로 설정하였고, 12대 전략분야, 88대 중점실행사업을 구성하였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는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도시’, ‘생활안전도시’, ‘균형발전도시’, ‘문화복지도시’의 5대 전략목표, 12대 전략분야, 88대 중점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중심도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1개 전략분야로 구성하였다. 전국최초 일자리창출정책 10대 아젠다를 채택하였으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정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계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

‘글로벌 해양도시’는 서부산권 개발 및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등의 3개 전략분야로 구성하였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낙동강 하구둑 개방, 에코델타시티 착공과 2030 등록엑스포 유치, 2028 하계올림픽 부산·울산 공동유치 등 메가이벤트를 본격 추진하여 낙동강 시대 개막과 복합물류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생활안전도시’는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부산, 환경 개선의 2개 전략분야로 구성하였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및 원자력 산업 육성,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한다.

‘균형발전도시’는 행정혁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서민경제 활성화의 3개 전략분야로 구성하였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 함께 미래 부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부산역 일원 원도심 경제기반형 국가선도사업 추진 등으로 창조가치를 더하는 선도적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도심활력을 회복할 것이다.

‘문화복지도시’는 도시재생, 문화도시, 촘촘한 복지의 3개 전략분야로 구성하였다. 이우환공간 개관, 오페라하우스부지 무상사용, 국립아트센터 국비확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부산시민복지기준을 수립·발표,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당당히 누리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부산·김해·양산·울주로 구성된 부산중추도시생활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생활권 4개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철길마을에 행복을 함께 놓는 W-Line 프로젝트,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화장시설 공동 이용, 상수원 공동 이용, 광역 도시철도 노선 연장, 광역도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생활권 구성



특히, 2015년에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중추도시생활권 주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부산중추도시생활권에서 부산, 김해, 양산에 걸치는 사업으로 2015년~2017년 간 3,958백만원(국비 2,770백만원, 지방비 1,188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낙동강을 두고 연결한 부산, 김해, 양산은 2014년 낙동강 뱃길 생태탐방선 운항을 통해 막혔던 뱃길을 연결한 바 있으며, 선도사업 선정으로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인근 주민들이 함께 추진할 것이다. 그 외,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범기수원지 상수원 공동 이용, 허왕후 산행길 관광상품개발 사업 등 생활권 자체 연계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시는 권역별(동부산권, 중부산권, 서부산권) 특화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부산 글로벌 시티 Grand Plan을 수립하였다.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을 일자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건설해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앞으로 서부산은 행정 복합타운 건립 및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16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시 재창조를 통해 부산의 원도심 및 낙후지역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2015년 6월)하고, 부산역 일원 원도심 재창조를 위해 북항재개발지~부산역~원도심간 연결성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산은 마을공동체 복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감천문화마을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도 이루어졌다. 2020 교통비전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60%로 상승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을 대중교통 중심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무료환승을 시행하였으며, 해안일주노선을 신설하는 등 버스노선 72개를 개편하였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행복센터 26개소와 소공원 6개소 건립, 옹벽 및 가로경관 15개소 개선 등으로 주민 정주 여건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23개 마을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발굴·추진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예술작가팀 등 유관기관의 건고한 협조체계 구축과 민·관 주민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형 육성전략 마련 등은 앞으로 부산이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부산시는 도시안전 확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재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통합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인 스마트빅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부산형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함께 생활안전체험관 7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빠른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132천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시민들이 하나된 힘이 맺은 결실로서 원전안전도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광역시시는 민선6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소통관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한 결과 17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일자리산업실을 신설(2015년 1월)하고 이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확대(2015년 7월) 운영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일자리 종합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2,332명 취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895개사가 참여, 1,582명의 채용을 지원하였다. 부산은 이러한 선도적 노력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창출평가「광역단체부문 대상」, 2015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경진대회「전국 1위」,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제기반을 강화시켰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631건의 금융소외자 대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등 2,850명에 대한 햇살론 보증지원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 36개 업체를 신규 인·지정(인증 15, 예비지정 21)하였으며, 마을기업 11개 업체를 지정하여 컨설팅·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현대화(43개), 소규모 환경개선(42개), 주차환경 개선(12개) 등을 추진하고, 개성과 특색을 살린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다.

과학기술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R&D 기획·유치 지원을 위해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을 설립하였다. 유망기술 발굴, 자회사 설립 및 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펀드 조성 등을 위해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특히 부산의 인재(Talent)와 기술(Technology)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2030년 세계적인 창조혁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TNT2030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였다. TNT2030은 부산지역 산업 인프라 및 연구개

발 역량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설정한 지역밀착형 혁신전략으로 지역사회 관련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인문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발전전략을 고민하였다. TNT2030은 4대 전략, 20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대 전략은 ‘과학기술기반 도시혁신 체계 구축’, ‘미래혁신 기술 지속창출’, ‘성과창출형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산업 전략적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부산시는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은 기술기반 산업이 지속 성장되는 창조혁신 생태계를 조성코자 한다.

글로벌 금융산업도시 부산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단계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FATF TREIN)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IMF 등 8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선박금융·파생상품과정 등 13개 과정의 부산 특화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이해 등 72개 과정을 운영하여 약 2,00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2015년 9월 이후에는 BIFC 입주기관 등 12개 기관과 연계하여 시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산업 성장기반을 강화시키고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건립하여 50개사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글로벌 신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11개 과정을 통해 연 273명을 교육하여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발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신발 제조공정 자동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계 첫 신발 걸창용 그린 탄성소재를 개발하여 21개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16개사에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 9건, 결과활용기업이 25개사에 달한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하여 2015 부산국제신발패션섬유 전시회를 개최하여 16개국 300개 업체, 713개 부스, 바이어 519명 참여를 이끌기도 하였다.

부산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창업관련 기관간 정보교류를 위해 정책기관 협업체 및 협업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활동의 적극적 지원으로 아이디어 상품화 564개사, 법률·금융지원 284건, 입주기업 등 판로지원 112억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인력 및 기술적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 및 확산하였다.

지역발전의 최우선 자원인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인재육성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단계에 접어든 BB 21(Brain Busan 21)을 통해 석·박사인재 양성을 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체 연계 맞춤형교육을 위한 기술사관육성사업을 운영하였다. BB 21사업은 고급연구인력 220명 양성, 경영 및 기술지도 126건, 상품화 실적 10건, 기술이전 15건, 사업수주 80건 3,868백만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기업지원, 대학체제 개편 등을 통한 지역대학·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을 추진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 68.1%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특성화분야 신규 인력이 1,752명 양성되었다. 특히 기술사업화 실적이 2014년 58건에서 2015년 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사업의 특성상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통한 지역 기여도는 향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 양성을 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정착하였다. 자동차고의 경우 산학협력 MOU체결을 확대하였고, 사업체 연계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7개의 전문 동아리를 운영, 기능사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취업률을 향상시켰다. 기계공고의 경우 자격증 취득 및 산업체 연계활동을 강화시킨 결과 기능경기대회 수상을 이루었다. 지속적 마이스터고 지원으로 해사고는 승선실습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외국어 성적 향상 및 산학협력 MOU 체결 확대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후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의 보다 큰 성과를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활동, 방과 후 수업,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광역시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문화 참여접근성 제고, 생활문화 확산 및 창작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및 부산만의 역사·문화자산의 보존·활용을 추진하였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조성하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부지 무상사용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내에 부산국제아트센터,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서구 구덕문화공원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의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동형 공연무대차량을 이용해 달리는 부산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매월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별 기획공연, 공공·민간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제공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였다.

예술인 복지 지원으로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부산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복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역사회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청년문화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동기 부여를 위해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공연예술, 전시예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 언론·출판 등 8개 분야 문화상을 시상하였다.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회관의 법인화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시립 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 충렬사 전통문화 및 우리역사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시지정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과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통해 부산의 특징적 문화 자원을 보존하였다.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동천재생 장단기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하천수질자동측정시스템 설치 운영을 통한 수영강 생태복원 2020 프로젝트, 하천살리기 기획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도심속 폐교를 활용한 부산산림교육센터 조성 운영과 연지근린공원 조성,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복지도시 구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광역시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하여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 구현, 시민 소통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 조성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구현하고자 양성평등정책, 돌봄의 사회적 책임, 여성폭력근절 및 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제4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여성친화도시를 기존 7개구에서 10개 구·군으로 확대하여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휘 향상을 도모하였다. 장애아동 성인권 교육, 학교 성인권 교육, 아동 참여형 교육 등 예방 교육을 1,419회 개최하여 여성권익을 증진하고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특히 맞춤형 복지는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을 149천명, 월동대책비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으로 19,156건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생산적 자활 사업을 통한 자립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희망키움 통장」 장려금을 3,488가구에 지원하고 7,126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 250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일자리를 2,029개 창출하였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지원 및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172개에서 177개소로 확충하였으며, 28개소의 시설은 기능을 보강하였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1,047건 추진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4.11%로 확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향상하였다.

메르스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확산방지 및 전국 최초 종식이라는 성과를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노력하였다. 신속한 정보공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메르스 대응백서」발간을 통해 대응성과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였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기동감시반을 18개 운영하고 표본감시 시설을 152개소 운영하였다. 자살예방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3,061건의 불안 상황을 해소하였으며, 정신건강박람회 및 정신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품위있는 노후를 위한 치매 조기검진을 50,138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6,112명으로 확대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2016년이 민선6기가 실질적인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인 만큼, 가시적·구체적인 성과로써 시민체감을 제고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김해국제공항 개항 40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대도약’을 목표로 3대 중점 분야 12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혁신리더, 개방형 혁신기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TNT2030 본격화로 과학기술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시킬 것이다. 창업·성장단계 지원 펀드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부산형 TIPS타운 조성으로 아시아 제1의 창업 도시를 향한 생태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민간합동규제 발굴단 운영 등의 선제적 규제 완화를 이루어 민간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주력·강점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활력있는 낙동강 시대를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컨’부두, 배후단지, 공동물류센터 등으로 신항 경쟁기반을 확충하고 복합물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남경제권 중심, 통일경제 및 북극해 개발 등 유라시아 관문위상을 정립하고자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단계별로 실행할 것이다. 시민대토론회, 전담조직신설, 시민 원탁회의 구성 등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전(全)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상스마트시티, 예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산업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공간으로 부산을 개조할 계획이다.

셋째, 도심하천을 살려 부산을 재창조하고 생활문화가 가득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동천수계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생태산업단지 구축 등으로 도심 하천을 살리는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통합재난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출범하여 원전 안전 및 자연·사회재난 예방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다. 3대 기준 107개 시책으로 부산시민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복지·건강정책으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 대표도서관·국회도서관 건립을 추진,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과 부산다운 문화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의 상향을 이룰 것이다.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249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하였으며, 2008년 이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41조원에서 14.6% 증가한 47조원이며, 1인당 GRDP는 2011년 대비 13% 증가한 1,89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64억 달러에서 22%로 크게 증가한 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117만명에서 12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1.7%로 2008년에 비해 7.8%p 낮아졌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35,465	41,448	46,592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2,493	2,507	2,493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433	1,676	1,894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4,534	6,371	7,807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1,142	1,169	1,215
재정자립도(%)	53.9	51.9	50.3	59.5	53.5	5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대구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6.3%, 제조업 23.4%, 광업·농림어업 0.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7.0% 및 21.1%,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2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업종 모두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도 높았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4.3	4.9	3.0	3.6	4.4	3.4	3.6	4.8
섬유제품	21.0	17.8	11.8	19.7	17.0	12.1	18.2	15.3	1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3	2.9	4.2	1.9	2.3	3.7	2.5	2.7	3.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4	7.8	6.6	7.3	8.1	6.6	7.7	8.1	7.0
1차 금속	3.1	3.2	9.6	3.0	2.6	6.8	2.9	2.3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0.8	15.4	12.7	20.6	15.9	13.2	21.2	16.4	13.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4	6.9	6.7	2.3	5.6	4.4	2.3	6.9	4.8
기타 기계 및 장비	14.5	12.1	13.0	14.7	13.2	15.2	15.2	13.3	1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6.9	14.3	17.7	8.8	16.4	20.5	8.9	17.0	21.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1	4.0	0.5	1.1	5.0	0.6	1.2	4.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3.9	6.2	1.7	4.0	8.0	2.0	3.7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4	10.9	28.9	11.1	9.1	15.7	12.6	9.7	18.4
사업지원 서비스업	3.9	15.9	11.2	4.3	18.7	14.5	4.7	18.1	13.4
교육 서비스업	21.6	16.0	8.3	21.3	14.2	7.9	19.6	12.7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4	26.3	26.8	11.8	28.7	32.2	12.9	31.4	34.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3	7.8	5.4	11.8	7.0	5.3	11.0	6.6	5.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6	18.1	9.2	37.6	17.2	11.2	36.5	16.7	10.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6.5%, 1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4%, 34.0%로 가장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9,705억원, 연구개발인력 15,395명, 연구개발조직수 1,284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동일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 4,470건, 등록 2,701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모두 2.7%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240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높아졌으며, 등록 건수는 1,418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6%p 높아졌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507,987 (1.5)	678,396 (1.4)	970,544 (1.5)
	연구개발인력	12,106 (2.8)	13,021 (2.5)	15,395 (2.5)
	연구개발조직수	556 (4.0)	865 (4.0)	1,284 (4.0)
특허	출원	3,230 (2.5)	3,568 (2.6)	4,470 (2.7)
	등록	1,283 (2.1)	1,969 (2.7)	2,701 (2.7)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구광역시에는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입지와 함께 의료,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대학과 융복합 연구중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술 관련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도심 내 풍부한 근현대 역사문화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생태계, 인재 유출 및 인구 감소, 글로벌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본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부의 문화관광 고부가가치화, 환경산업 육성 등의 기회 요인과 장점을 매칭하여 환경에 대응한다면 충분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미래산업도 육성하여 지역 산업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및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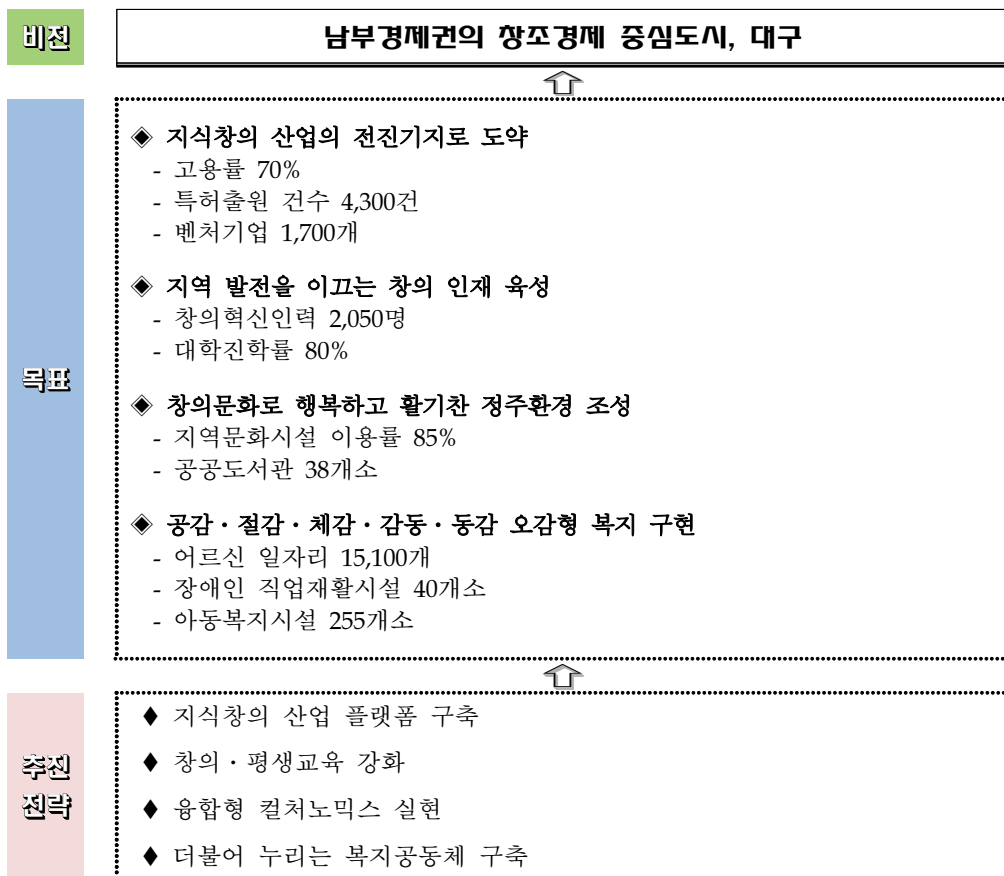
아울러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자원의 상호보완성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 내 문화관광 연계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구의 문화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 문화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대구광역시는 창조경제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간적 위상, 주변 지자체와의 역할관계 및 지역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그리고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 오감형 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시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분야 목표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인력양성 분야 목표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문화·생태분야 목표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복지·의료분야 목표인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 오감형 복지 구현’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대구연구개발특구·대구테크노폴리스 중심의 과학기술 기반 확충, 도심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SW산업 생태환경 조성으로 지역 SW산업 육성 및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신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실화로 지역 신성장 산업클러스터 육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창조산업 지원 기능 강화 등이 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실무능력 중심의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기업의 성장 유도, 학습 기반 확충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작·파일럿 중심의 공연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참여·창작의 기회가 충만한 창의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 문화적 비즈니스 및 문화예술 활동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리는 복지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연계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정비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지원체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경북 7, 경남 1)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 기반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은 3개의 선도사업(한방 MRC 신한류 창조·한방 휴(休) 사업,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추진 중인 선도사업으로는 와인 공동 마케팅, 특산물 판매, 관광지 연계 등을 진행하는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과 대구·경산 간 교육·문화·한방의료를 연계·협력하는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가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지역주도 협력사업 및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 활력 증진, 지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주도 협력사업을 위해 앞산커뮤니티센터 개소, 맛둘레길 생생협동조합 출범을 추진한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사업’과 수제화골목축제(20백만원), 간판가로 입면 정비(375백만원)를 추진한 ‘술술술,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군 방범취약지역의 CCTV를 고화질로 개체(325대, 2,000백만원)하여 범죄 발생 예방과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하였고, 5개 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9.4km), 저수지(240m) 등 농촌생활환경을 정비(3,291백만원)하여 재해도 예방하였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7,114백만원)을 통해 농수로·마을진입로·소하천 정비 및 전통문화복원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대되었다.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사업’(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새빛지구 구간 토지보상 및 철거 완료)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후포장 정비 및 차선 도색(700백만원) 등 교통안전 취약지를 개선하였고,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공정률 91%). 한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국비 168억을 확보하였고, 서대구 KTX역 건설 또한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국토부). 향후 이들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대구 서·남부지역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낙후된 서구지역 개발촉진 등이 기대된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지역 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식창의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확산 등이 있다. 먼저 지역 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창업초기기업 SW제품 상용

화지원사업'은 지원기업 매출증가(115%), 고용창출(31명) 등의 추진실적을 보였으며,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도 전시·상담회 참가(12회, 42개사), 디지털마케팅(11개사), 해외진출 컨설팅(3개사), 인력양성(239명, 86개사), 포럼 운영(5건), 산학연관 네트워킹(11회)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 전년대비 30% 매출 신장(2014년 239억원→2015년 320억원) 등을 유도한 공동브랜드 육성지원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을 위해 센터 건립공사 착공(2015년 7월, 공정률 16%), 장비 구축(38종), GS 시험인증·품질강화 등 지원(128건)도 추진하였다.

지식창의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 경쟁력 강화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로봇산업 수요시장 확산, 로봇핵심부품 기술고도화, 시장창출 기반 조성 기업지원(126건), 고용창출(226명), 매출액(293억원) 등에 기여하였고,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로봇산업클러스터 2개 센터 준공(2015년 5월), 표준화시험평가 센터 장비 구축(5종, 7대), 기술사업화 촉진지원(15건)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로봇산업클러스터 센터 준공으로 각종 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심장센터 및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등의 건립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과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신생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 창업보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했다고 평가되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66건), 특허·실용신안 등 인증지원(91건), 전시회 참가지원(58건), 컨설팅 지원(181건), 마케팅 외 지원(237건)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업종 간 기술교류를 통한 융합형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기업별 고유제품의 개발문화 정착을 시도한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조성' 사업은 창조기업협의회 구성(72개 업체), 창조제품 성능개선 개발(15개 아이템), 국내외 프로모션 지원(2회), 매출액(110억원) 등에 기여하였다.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육성 사업'도 중소기업 특화 임베디드 제품화 지원(9개 기업), 중소벤처 혁신기술 제품화 지원(3개 기업), 시험인증 지원(6개 기업), 교육프로그램 지원(4개 프로그램, 29명 참여) 등을 추진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시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이 있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관련하여, 대구동부공고의 대구일마이스터고 개교(2015년 3월)에 따른 영마이스터 육성을 지원(300백만원)하였다. 이 지원을 통해 마이스터고 양성을 위한 교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져 현장 수요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지원 사업’(12,660백만원)을 추진하였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실습학생 3,800명, 캡스톤디자인 4,006명, 특성화교육 3,239명, 기술이전 66건, 기술사업화 35건 등이 있었고, 본 사업이 지역 산학협력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관련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이 있다. 추진실적으로는 73개 과정에 2,444명이 참여하였으며, 진흥원 운영(362백만원)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사업으로 근거리 학습권 확보,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대구광역시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한 다음의 중점내용을 추진하였는데, 크게 시민참여 및 체감형 문화·예술·체육 환경 조성, 문화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생태문화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민참여 및 체감형 문화·예술·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였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지원하여 20개 단체 참가, 19개 공연 및 42회의 프로그램 진행, 관람객 35,692명 참가(유료공연 15,864명, 무료공연 및 행사 19,828명)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인기 레퍼토리 및 국내 초연작 등 평소 접하기 힘

든 작품을 선정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아시아 오페라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관람객 30,000여명을 참가시킨 2015 대구아트스퀘어에서는 청년미술프로젝트(청년작가 50명 참여) 및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학생 185명 참여)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새롭게 추가된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으로 인해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예술가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대구하트페스티벌은 6개 축제(치맥 페스티벌, 포크 페스티벌, 호러연극제, 국제재즈축제 등)를 개최하여 650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향후에는 직장인 및 외래 관람객을 위해 축제운영시간 확대와 지역 내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그 외에 생활문화센터 2개소(남구대덕문화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조성(1,700백만원)을 추진하였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위한 도심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방침 및 설계공모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공연창작 지원(2개), 주말아트파크 운영 및 공연(70개팀), 공연창작 인력양성(15명), 뮤지컬오디션 개최(1회), 뮤지컬버스킹 개최(10회)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사업은 공연창작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공연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역량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2015년 하반기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과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골조공사 완료, 시설공사비 90억원)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379,840천원)하여 생태문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공공의료체계 정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지원 중 청소년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였다. 이는 청소년 건전 활동과 균형 성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154,536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

개소를 지원하였는데(390명, 1,428백만원), 평가 결과 전국 방과후아카데미 128개소 중 대구시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가 3회 연속 최우수,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출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 있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출산율 제고 등에 도움을 주었다. 출산축하금의 추진실적은 지원인원 9,031명, 사업비 1,959백만원(전액 시비)이고, 출산장려금의 실적은 지원인원 27,226명, 사업비 11,928백만원(전액 시비)이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체계 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 계획에 의해 13개 건강증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로 운영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5,333백만원, 등록인원 338,459명)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정신보건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정신건강박람회(4,102명),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관련 심포지엄(215명),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교육(87개교, 95,654명) 등을 개최하였고, 생명지킴이(27회, 2,0687명)와 생명존중 강사(30명, 95명)도 육성하였다.

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복지센터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 등의 사업이 있었다. 상담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민원 해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센터 지원’은 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12,872명을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으로 입소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한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7개소를 운영하였다(1,320백만원).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 ‘장애인 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은 장애인 1,781,564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11건(신축 1, 개보수 1, 장비보강 9)과 함께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질병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1,688명에게 의료비 3,613백만원을 지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지역 치매관리사업 및 구·군 보건소 치매사업 교육지원 등을 중추적으로 수행한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4,357명), 교육프로그램(60회, 551명), 치매인식개선(178회, 81,029건), 치매관련행사(24회, 24,449명), 치매파트너등록(11,937명), 지역자원강화(6회, 354명) 등의 실적

을 달성하였다. 그 외에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96.8%를 달성한 ‘국가결핵 관리사업’, 검진실적 362,707명을 달성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사업도 중심병원 5개소와 협력병원 45개소의 네트워크 구축, 환자전원 3,219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대구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변화에 발맞추어 생활권 중심의 사업전개로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향후에도 생활권 및 시정 비전과 목표에 연계된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생활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특성화, 골목상권 활력 제고, 친환경 생활권 공원·유원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과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 선제적 안전인프라 구축,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서대구 KTX역·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집중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산업 육성으로 대구경제 체질혁신, 전통산업 구조의 고도화, 창업 생태계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래산업 육성은 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글로벌 의료산업허브 조성,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조성,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전통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노후 산업단지 혁신,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진행되며, 창업 생태계는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 창업지원 강화, 글로벌 창업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강화할 것이다.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은 교육 불균형 해소, 창의인성 청소년 육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달성해갈 것이다.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의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 힐링공간 조성, 1천만 관광객시대 준비 및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 문화선도도시로서의 글로벌 창조역량 강화,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시민예술가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등을 진행할 것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달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권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와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생

활권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육성과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회복을 추진하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290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10만명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62조원에서 6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392만원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1년 225억 달러에서 33% 증가한 3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136만명에서 147만명으로 11만명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6.9%로 2008년에 비해 4.1%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51,274	61,854	68,374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2,693	2,801	2,903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912	2,254	2,392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20,513	26,805	30,003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1,265	1,360	1,469
재정자립도(%)	53.9	51.9	50.3	71.0	69.3	66.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인천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8%, 제조업 28.6%, 광업·농림어업 0.6%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8.5%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7.2%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2	4.1	7.0	3.2	3.7	7.7	3.6	3.9	7.7
의복, 의복액세서리	2.1	1.6	0.2	2.3	1.7	0.3	2.0	1.4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3	8.1	4.6	8.2	8.0	4.3	8.3	8.4	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9.2	12.1	5.9	18.3	12.3	6.3	18.5	12.4	5.7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5	10.1	5.2	10.3	10.8	6.1	10.5	11.6	7.0
전기장비	7.5	6.7	4.6	7.3	6.4	4.3	7.5	6.8	5.1
기타 기계 및 장비	18.8	18.0	13.7	18.0	18.2	14.6	17.9	17.2	1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0	13.4	15.2	4.6	12.4	15.9	4.9	12.7	16.4
기타 제품	1.6	1.3	0.5	1.8	1.3	0.4	1.8	1.3	0.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2.7	12.0	0.8	2.3	12.1	1.0	2.4	11.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9	2.2	4.0	1.1	2.0	4.7	1.5	2.2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6	13.2	23.8	18.1	11.1	24.2	16.7	9.8	19.3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17.0	8.2	4.2	18.6	9.9	4.9	19.1	12.2
교육 서비스업	15.1	14.2	7.9	15.0	12.5	7.2	14.7	10.9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	24.2	22.6	12.7	28.1	24.0	14.7	32.4	27.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4	8.8	9.7	14.5	8.2	7.8	13.1	7.3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9	17.6	11.8	33.6	17.2	10.2	33.4	15.9	10.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2.4%, 27.9%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2.3조원, 연구개발인력 22,983명, 연구개발조직수 1,796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2%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0.1%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438건이며, 등록은 4,351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9%, 4.5%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719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1%p 감소한 반면, 등록 건수는 2,065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은 0.8%p 증가하였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177,669 (3.4)	1,983,189 (4.0)	2,282,890 (3.6)
	연구개발인력	16,825 (3.9)	20,938 (3.9)	22,983 (3.8)
	연구개발조직수	774 (5.6)	1,217 (6.0)	1,796 (5.6)
특허	출원	5,719 (4.0)	6,139 (4.4)	6,438 (3.9)
	등록	2,286 (3.7)	2,943 (4.1)	4,351 (4.5)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광역시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기구 중심도시로서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에 중국 및 신흥시장 등에서 인천에 대한 관심증대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 마케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중 FTA 효력 발효에 따른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기반강화는 물론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저성장세 지속과 제조업 경기 저조전망에 따라 인천경제도 경제성장을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므로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인천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8대 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 첨단 R&D를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은 주력산업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석유정제·화학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변동 폭이 확대된 환율,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천광역시는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한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며,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 등 대중국 접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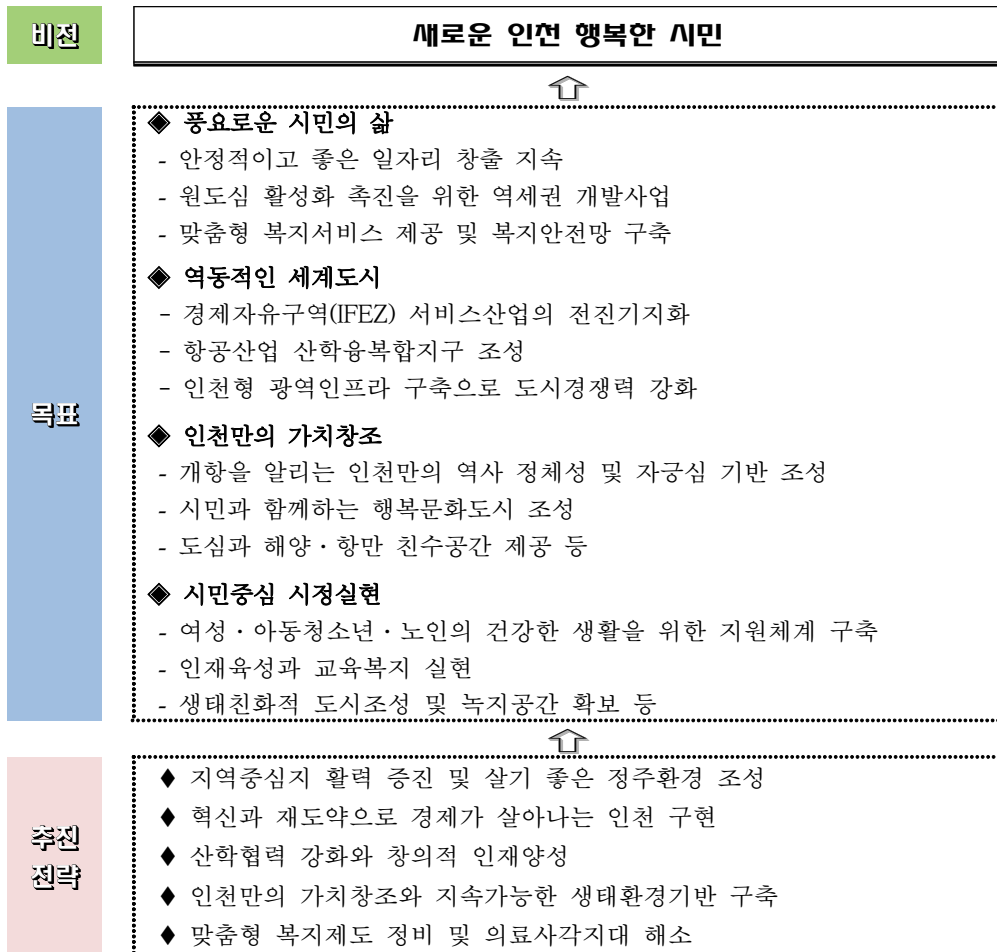
또한 민선6기의 핵심과제인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가치재창조 비전선포, 시민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 등 시민 중심의 가치재창조 사업 발굴과 섬 프로젝트 추진 등 인천의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다양성 확대 등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중장기 활용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위해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스테이(New Stay) 등을 활용하여 원도심을 살리고,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민선 6기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수립하고 ‘혁신, 소통, 성과’를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재정 건전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는 시민 중심의 인천 가치 재창조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인천광역시에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혁신과 제도약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구현’,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별로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생활인프라 등)’과 관련하여 우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한 경제기반형 및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발 KTX운행 및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인천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여, 인천시민의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된 부천·김포시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과 제도약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구현’과 관련하여 경제도약을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로봇랜드 조성, 민관 공동 뷰티 브랜드 어울(Oull)에 대한 해외 공략,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강화, 신규 및 혁신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 경제안정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도지구 서비스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ICT에 기반한 MICE산업 관련 융합과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항공정비·부품산업·서비스 분야 산학융합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소재·전자분야 기술 혁신을 창출하고, 자동차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셋째,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교육을 기반한 도시성장을 위하여, 지역내 산학협력 강화와 인천만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 대학교,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창조적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코자 하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정보를 공유하여 일, 교육, 여가의 인생재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인천의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만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등의 인천 고유의 창조적 기반을 조성코자 한다. 또한,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통해 발굴된 문화와 역사를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매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천만들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천은 환경친화적인 생태산업단지(EIP) 조성과 환경산업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추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인접한 생활공간 내에서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및 자연마당 조성, 생활공원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코자 한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위험계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또한 지역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활동프로그램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의 직업생활을 수행하게 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웅진·강화) 개선을 위하여 무의도서(4개면 11개도서)에 병원선을 운영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또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보다 확대코자 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된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반경 약 30km범위 내에 있으며, 인천-부천, 인천-김포, 부천-김포 시청 간 거리는 약 7.5km, 18km, 13km로 차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인접한 생활권 환경이다. 또한, 인천, 부천, 김포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편입과 분리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경계는 1990년대 들어서 확정되었다. 인천시 10개 군구와 부천시, 김포시는 20년 전부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공동발전협약을 맺고 각종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강화군 등 인접지자체 11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2012년)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인천, 부천, 김포는 다양한 생활권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기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은 당초 인천·부천 1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포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5년 현재 지자체 간 공간적,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3개축 + 4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창조적 공유를 통한 서부수도권 경제·문화 공동체 육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유관정책 및 연계협력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인천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 기반마련, 창조적인 중심 시가지 재생,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인천발 KTX 사업이 추진되어 인천·경기 서남부 650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광역교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인천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비정상적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통해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생활쓰레기로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원도심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되는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 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Safe Incheon 만들기사업을 통해 CCTV 관제를 일원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19개 시장에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경제형 공간으로 개선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과 재도약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창조경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일자리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고용률(66.1%), 경제활동참가율(64.5%), 취업자 증가(33천명 ↑)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2015년 기준 특·광역시 전체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에 약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음으로 인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8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략산업별(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 육성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천만의 역동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산업기반 확충 및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화, 서운, IHP도시첨단산업단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이며 남동, 주안·부평 산단 등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로봇산업을 부흥시키고자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인천시를 로봇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하고,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행정·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인천-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는 인천시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후 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구축(9개 사업), 중국 소비·내수 시장 선점(10개 사업), 상호 교류협력체계 강화(6개 사업) 등 3대 분야, 6대 전략,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시행중이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 매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2014년 대비 사회적기업 14% 증가(127→145개), 협동조합 22.6% 증가(212→260개)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밖에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통해 1~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생산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장학사업 지속 확대 추진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하였으며 2015년에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초·중등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멘토링 사업 참여대학 및 규모를 확대하여 4개 대학교(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연세대)에 약 200여개의 초·중학교가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인재와 차세대 리더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글로벌리더십 스쿨 운영 지원(2015년 30여명 학생 참여) 및 교육국제화 특구(2개소)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국제 화자율정책 추진학교 운영(10개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인재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교육포럼(2015년 5월 19~22일, 송도컨벤시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인천가치를 제고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광역시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세계 책의 수도 사업(6개분야 45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산재된 책 관련 자원 융합·집대성을 통한 출판·독서문화 진흥효과를 거양하고 인천이 가진 기록문화의 역사성 및 잠재적 문화가치를 발현하였으며 책의 수도 사업 지속추진을 통한 MICE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민대상 생활 속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문화적 소외계층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저소득층 77,749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공연전시 사랑 나눔티켓 6,997명 지원 등)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4개사업 1,646백만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인천 관광산업 부흥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할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하였으며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한국최초, 인천최고』100선을 선정·발간하여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 및 유일의 역사와 인천 최고의 사실 재조명 등 체계적 스토리텔링 구축 및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 홍보 및 인천 가치제고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인천의 168개 섬의 유·무형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섬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 역사와 문화, 생활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없었던 인천은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여 세계 주요 문자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 관리, 교육, 연구의 거점 조성과 더불어 지역내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MICE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54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에 생산유발 1,226억, 부가가치유발 480억, 고용유발 623명, 소득유발 197억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보전을 통한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저탄소·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폐기물 발생량 감량(2015년 185.5g / 일 3.2% 감량)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2015년 15.3% 감축)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석남 녹지, 용현녹지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4개 사업) 및 북부권역 공원 조성·관리를 시행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푸르고 쾌적한 생태도시 인천을 조성 중이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천시는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맞춰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7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지확인 실사를 통해 주민면담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2014년 대비 약 24% 이상 증가한 62,661가구, 97,334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위기가장 발굴·지원을 통한 긴급지원 확충을 통해 17,062가구에 11,4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랑가꿈 사업을 통해 2015년도에 1,297가구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생활필수 물품지원, 생활수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여기에 여성 안심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 여성 안심드림마을 조성,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도입(10개소), 공원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212개소), 노후 CCTV 개선 및 화질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14년 215개소이던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235개소로 확충하였으며 교사 1명 당 어린이 2~4명만 돌보는 방식의 ‘인천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 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보조·자립생활 지원으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약 40,751명의 시민들의 혜택을 받았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우선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2개소),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운영(7개소),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506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및 감염병 감시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치매노인 보호 및 저소득 치매치료 지원(12,085명) 등을 통해 보편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인천광역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의 4대 목표에 부합한 분야별 세부전략 추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인천발KTX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인천중심 교통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해5도 등 접경·도서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개선 및 소득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인천지역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여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인천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정책 활성화를 위해선 인접지자체인 부천, 김포 등 생활권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참여 유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인천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8대 전략산업 육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의 지역적 강점과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 기술성, 전략성, 입지적합성, 향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산업별 전략을 정립하고, 미래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과 중국과의 경제·문화·관광·교육분야 교류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시장을 선점코자 한다. 또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스마트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성장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허브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시행코자 한다. 아울러 인천은 8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농업진흥지역을 지니고 있으며 총 168개의 섬과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기반을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농어촌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코자 한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우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 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명품 교육도시 인천’을 조성코자 한다. 또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인재와 차세대 리더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려 한다. 여기에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증진 및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으로 행복학습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인천만의 가치재창조를 통해 인천시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양, 항공, 경제자유구역, 개항, 근대문화자산 등 인천만이 지닌 가치를 발굴·창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마케팅, 축제문화의 브랜드화, 매력적인 섬 만들기, 친수와 향만이 조화된 관광산업 육성,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등을 통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 속 문화 소외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세계인이 교류하는 창조 국제도시 인천을 위해 21세기 고부가가치「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관광객 특화 마케팅 강화, 선택적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미세먼지 저감, 악취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GOF 본부 도시에 걸맞은 녹색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각 없는 복지, 의료를 위해 인천시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정책 종합 컨트롤 및 복지추진 기능 강화, 공공보건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려 한다. 우선 잠재적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복지지원을 통한 탈빈곤 축진을 유도할 계획이며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및 돌봄사업추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도 병행코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저소득 장애인 안정적 생계보장 및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양성평등 실현 등을 통해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48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1.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28조원에서 3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045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0.6%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2.5% 증가한 1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67만명에서 7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6.0%로 2008년 대비 6.6%p나 낮아져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22,940	27,789	30,998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423	1,463	1,476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569	1,849	2,045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9,412	13,340	16,258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638	670	736
재정자립도(%)	53.9	51.9	50.3	52.6	47.5	46.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광주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3%, 제조업 29.2%, 광업·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8.8%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8% 및 4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4.4	2.7	2.1	4.9	3.0	1.8	4.5	2.7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2.7	1.0	0.1	2.2	0.8	0.1	1.7	0.6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6	13.8	9.6	11.5	13.6	9.2	11.5	11.8	8.5
1차 금속	4.8	2.4	4.4	4.6	2.5	4.0	4.3	2.4	4.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6.0	8.3	5.2	15.5	8.4	5.3	15.4	8.5	4.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9	11.2	7.5	4.8	12.8	6.7	4.9	11.1	5.9
전기장비	11.2	15.7	22.5	11.5	13.8	19.0	10.9	15.2	16.9
기타 기계 및 장비	18.1	11.5	7.5	18.0	10.9	6.4	18.8	12.6	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	23.0	33.0	10.7	22.2	39.9	12.5	23.8	42.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4	1.4	4.2	0.4	1.2	4.6	0.5	1.2	4.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3.5	6.2	1.9	3.3	7.3	2.1	3.2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7	10.2	18.0	11.0	9.6	18.4	12.9	10.3	27.7
사업지원 서비스업	4.1	16.8	11.7	4.4	16.8	11.7	5.4	17.3	12.4
교육 서비스업	20.8	14.7	7.9	20.8	13.6	7.7	19.5	11.7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26.6	31.9	12.7	30.9	31.2	13.7	33.4	28.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9	8.0	8.0	13.1	7.3	8.0	11.9	6.9	6.9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0	18.7	12.2	35.6	17.2	11.2	34.0	16.0	9.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0%, 1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4%, 2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6,798억원, 연구개발인력 12,178명, 연구개발조직수 662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은 각 0.4%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2.1%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612건이며, 등록은 1,626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6%, 1.7%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285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2%p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은 889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없었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500,366 (1.5)	690,127 (1.4)	679,836 (1.1)
	연구개발인력	10,358 (2.4)	11,759 (2.2)	12,178 (2.0)
	연구개발조직수	295 (2.1)	508 (2.3)	662 (2.1)
특허	출원	2,327 (1.8)	2,093 (1.5)	2,612 (1.6)
	등록	737 (1.7)	1,247 (1.7)	1,626 (1.7)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는 서남권 거점의 광역도시로서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연계·융합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문화융성을 꾀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내 16개 공공기관의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문화·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화시설 및 서비스는 양적·질적 열세이고, 지역의 인재유출로 인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업 활동에서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인접 배후도시의 사회·경제적 쇠퇴 현상이 뚜렷하기에 이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지정된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남구 송하동 CGI센터 일원에 미래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구축’,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에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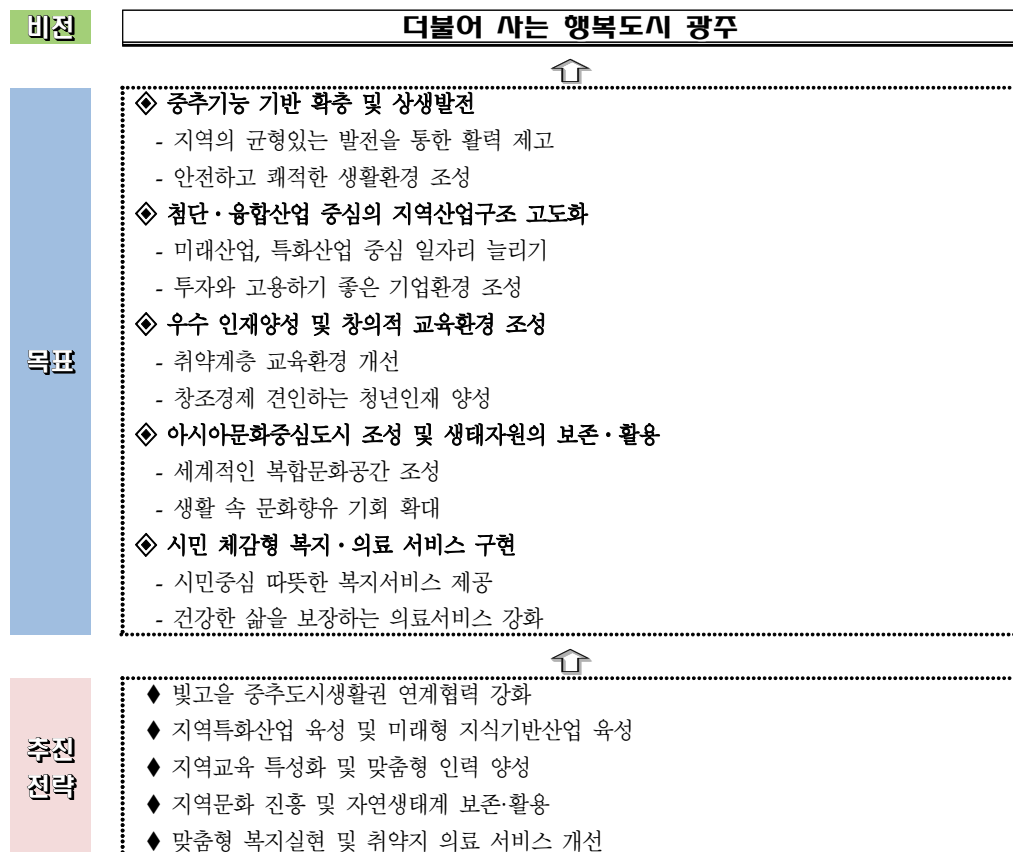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전통이 깃든 문화·예술의 도시 ▪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등의 비교우위 확보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보 ▪ 서남권 교통·물류·서비스의 거점도시	▪ 인재유출에 따른 우수 인적자원 부족 ▪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쟁력있는 선도기업의 부족 ▪ 배후도시(인접 시군) 경쟁력 취약 ▪ 도시고유의 정체성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도시 조성 ▪ 문화콘텐츠 특화도시 지정	▪ 노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도시간 경쟁 심화 및 인구증가의 정체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지역전략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을 위한 3대 문화지구 조성(문화전당권, 무등산-광주호권, 중외공원권)을 통한 관광명소를 만들어 관광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축하여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열린광주를 위해 빛고을 생활권 및 지자체간, 국가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를 실천하고 있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광주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첫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빚고을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의 강화이다. 특히,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①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②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③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 확산 ④재난 예방 및 도시 안전체계 강화 ⑤시민 안전지킴 서비스 제공이다. 또한, 빚고을 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와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인접 시군간 경제적 가치 및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①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 ②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③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④차세대 에너지 산업 허브도시 조성 ⑤문화콘텐츠 메카도시 기반구축 ⑥미래먹거리 산업 다변화 ⑦노화연구 클러스터 조성 ⑧서민경제 안정이다.

셋째, 지역교육 특성화 및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특히, 활력 넘치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서 ①청년의 역동적인 성장 지원 ②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③청년취업기반 활성화 ④청년 인재 지원이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 및 자연생태계 보존·활용이다. 특히,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도시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①문화전당권을 활력문화지구로 재생 ②무등산~광주호권을 생태문화지구로 육성 ③중외공원권은 가족문화지구로 조성 ④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축제 ⑤꽃과 정원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조성이다. ⑥광주형 도시 생태환경 구축 ⑦깨끗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다섯째, 수요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이다. 특히,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①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구축 ②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③취약계층과 소수약자의 생활안정 지원 ④어린이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 ⑤가족 친화적 일·가정 양립 문화정착 ⑥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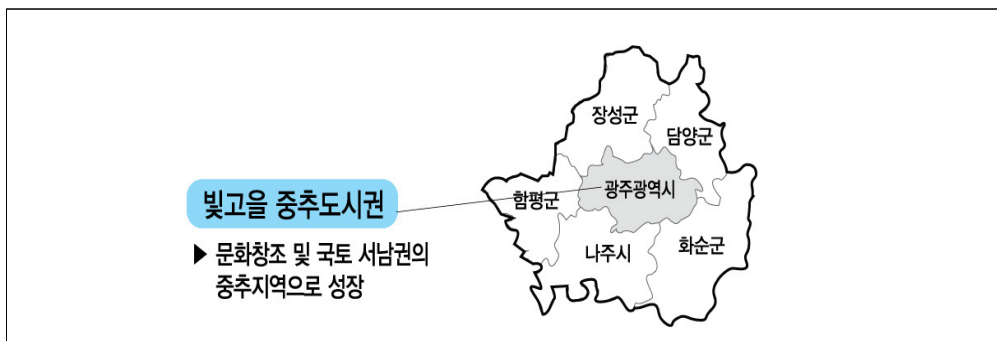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 대상(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장의시설을 공동 활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8위용 가족봉안평장분묘를 분양 공급하였다. 또한, 응급실 협진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지역 의료질 개선, 생활권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했다. 남도의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민체감형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생활권 운영체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및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 체계 구축사업은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거점병원인 전남대를 중심으

로 농촌지역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비전선포식(2015년 3월)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계획'을 수립(2015년 10월)하였다. 향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사업별 10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사업, 주민공모사업을 3회 추진했다. 앞으로, 공동예술두레마당과 충장미디어산업센터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역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낙후되고 소외된 구역민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다시 쓰는 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 '더하기 지구'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과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였다. 이후, 폐교된 본량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각종 프로그램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우리시와 함평군을 경유하는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버스센터 구축(함평군) 1식,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77대, 운전자단말기(OBE) 42대 등을 설치하여 인근 지자체간 운행하는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형성단계에 (씨앗기-확장기-안정기) 따른 맞춤형 추진, 총 221개 마을이 선정(1,027백만원)되어 마을 현안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구성원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기를 부여, 아울러 마을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코디네이터(11명)를 선발·배치하였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을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마을지원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향후 광주의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시는 지자체 최초 자동차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을 발표하였다. 향후, 해외 전기자동차 회사 투자유치, 친환경부품 개발 및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 현대차와 수소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내 핵심부품소재센터와 그린카진흥원 부지내 그린카기술전문센터 등 2개 센터 3개동 15,707㎡ 준공, 장비구축 5종과 기술개발 8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 선정(2015년 9월)되어 지역 헬스케어 및 로봇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헬스케어로봇 실증 테스트, 성능평가, 제품인증,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건축, 장비 등)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DC전기전자 연구기반조성을 위해 센터건립 공사를 완료 및 장비 2종을 구축하였다.

광주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뿌리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뿌리기업의 공동활용 R&D 기반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 구축된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통해 공정최적화, 제조공정 개선 등 문제해결형 현장지원으로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뿌리중소기업 밀착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2015년 8월), 국비가 반영되었다. 세부 사업으로 창조콘텐츠제작 지원센터 구축,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플라자 건립, 야외스튜디오, 체험테마파크 구축 등이 있다.

광주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복합산업입지시설로서 2015년 5월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끝마치고 7월 개관, 도시형 산업과 청년 기술창업 육성 거점으로서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하남산단 혁신 및 재생사업 추진 내용으로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2015년

7월)되어, 하남산단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평동산업단지 2개소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일평균 254명, 평동산업단지는 일평균 302명이 이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공단활성화에 기여했다.

농업기반시설로 활용도가 떨어진 하남저수지 일부를 주차장(98면)과 산책로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남산업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산단지 조성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무등산 보리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2015년 4월 17일), 2015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11개, 프로젝트2, 연구·포럼 3개 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수행하여 5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전장부품인력양성 2G-2C프런티어 프로젝트」사업은 일자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지역고용 및 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7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을 높여주었다.

광주시는 녹색생활실천을 활성화하고 있다. ‘빛고을 초록사랑’(3~4학년군) 학생용 교재 26,485부, 교사용 지도서 2,080부/ 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및 1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에코교실을 점차 확대하여 학교 내의 체험학습장 구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역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5%), 특성화분야 인력양성(1,100명), 기술개발실적(155건), 기술사업화(15건)이었다. 호남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9%), 특성화분야 인력양성(2,900명), 기술개발실적(10건), 기술사업화(5건)이었다. 광주대의 경우 영어 스피킹 및 리딩 교육(교육이수 30명), 기업가 마인드 함양 및 특허출원 교육(교육이수 102명)이었다. 조선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9%), 특성화분야 인력양성(640명), 기술개발실적(50건), 기술사업화(25건)이었다.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하여 NCS기반 광주전남지역 산업특성 인력양성 유형 개발 계획 수립, NCS기반 실전창의인재 양성 마인드 함양 전교직원 직무연수, NCS기반 인적물리적인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 재구조화 및 학습 모듈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전문교과 실무과목 1, 2학년 편성, 과정평가형 자격 2종목 3과정 운영하였다.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공고, 전남공고)인력양성을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였다(교육 720시간).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은평구와 공유부지 활용 건립방안에 대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제2남도학숙 건립을 위한 설계업체를 선정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부개관 등 5개원 콘텐츠 운영, 개관축제 기간 중 20여만명이 관람하여 예술극장의 컨템포러리 작품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 ACE Fair’ 전시회에 세계 38개국 4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고 중국, 미국, 독일 등 해외 바이어 198명이 1,757건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2억 9,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근대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정비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

역주민, 전문가의 중심으로 사업콘텐츠(역사문화길 조성, 이강하 미술관, 최홍중기념관 건립 등)를 발굴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지역주민, 시의원 등이 포함된 TF에서 개발방안(시설계획변경, 개발방식)을 마련하였다. 향후 민관위원회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청년창업 및 다문화를 통한 외국계 음식점 유치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은 비엔날레의 세계화를 위한 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에서 용역 중에 있다.

근현대 광주시민의 대표적 전망공간인 팔각정이 노후화되어 전망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팔각정의 장소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사직공원내 전망타워를 건립했다.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인예술시장이 2015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선정(인센티브 30백만원)되어 전국적인 문화브랜드로 성장했다. 예술인, 상인,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이 되어 세대간 소통공간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했다. 앞으로 예술의 거리/대인예술야시장의 지속적 운영으로 문화브랜드 확산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 견인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일정을 토요일로 일원화하여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방문객 증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2015년 1월)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예정이다.

각종 개발로 훼손된 맹꽁이 서식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도시생태 건전성 확보를 위한 풍암제 양서류 서식처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유희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월산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광주천에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착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방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은 2014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했다. 앞으로 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신규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주간활동급여(광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입소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자립 생활을 지원했다. 향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을 통해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시 현장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141회 14,629명에게 실시하였고 응급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하여 년 2회 평가를 실시, 16억의 재정지원으로 응급의료전진화를 유도하였다. 재난재해 발생 대비 훈련을 총 6회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3대 중증(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 인색개선 및 응급의료자원 홍보를 실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거점병원에 인력을 2인 충원하여 재난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 17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구강 진료센터(1개소)와 무료 구강진료버스(2대)를 운영하고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후 구강보건실의 지속 운영을 통해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29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151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30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29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0세(임산부)~만12세를(초등학생이하)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1,153세대 1,774명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추후,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1,146세대 1,821명에게 통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역주민의 의료 혜택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팔 대지진여파로 악화된 현지주민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아시아 광주 제 2진료소를 금년 하반기 중 네팔에 건립할 계획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산업거점 기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및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광주 R&D특구활성화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육성·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육성을 위하여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 자동차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완성차-부품기업 협업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은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먹거리산업 다변화를 위하여 생체 재료화 지원센터 구축,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및 기원지원을 통해서 미래 유망사업인 의료기기 분야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와 헬스케어 로봇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고부가 가치 로봇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메카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등 문화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2의 남도학숙 건립추진 및 학교기업 육성을 통한 고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내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치산업화 육성사업 및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2016년 11월 23회 광주세계김치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취약층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인프라 확충 및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를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세계적 미술축제로 육성할 계획이고,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53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6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30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117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41억 달러에서 10.6%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71만명에서 77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4.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이는 2008년 대비 11.5%p나 낮아진 수치로서 재정자립도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24,034	29,684	32,723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481	1,516	1,532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605	1,949	2,117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2,990	4,122	4,732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696	713	765
재정자립도(%)	53.9	51.9	50.3	66.4	57.2	5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대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9%, 제조업 17.0%, 광업·농림어업 0.1%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17.2%, 15.4%, 1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도 높았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생산액 비중이 13.2%로 높았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0	5.5	5.1	7.3	6.1	5.0	7.2	5.5	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3	7.6	9.9	5.9	8.5	11.8	5.5	9.1	1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1	10.4	14.3	4.0	9.4	14.5	4.3	9.1	11.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6.6	5.0	4.2	7.1	6.0	5.8	6.8	5.8	4.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1.9	13.1	8.4	11.5	14.4	10.2	11.2	13.2	1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6	2.8	0.3	3.1	3.6	0.3	2.5	2.7	0.3
전기장비	4.2	3.7	4.6	5.9	4.4	4.1	6.3	4.9	3.8
기타 기계 및 장비	16.5	15.1	14.9	16.8	14.7	15.3	17.2	15.4	1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	4.2	2.1	3.2	3.8	2.4	4.4	6.3	6.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4	1.3	2.7	0.4	1.2	5.3	0.5	1.0	2.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5.5	11.1	2.5	5.6	10.5	3.3	6.3	1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	11.2	20.6	13.8	10.3	21.7	13.8	9.3	13.8
사업지원 서비스업	4.1	21.4	13.3	5.1	22.2	13.4	5.7	24.4	15.0
교육 서비스업	18.2	13.1	8.1	17.8	11.5	6.5	16.7	9.9	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2	24.9	27.3	14.8	28.0	26.3	16.0	29.9	31.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6.8	6.9	12.4	6.6	7.7	11.7	5.8	8.0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1	15.6	10.0	33.2	14.7	8.7	32.4	13.5	1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2.4%, 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9%, 31.0%로 가장 높았다.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6.3조원, 연구개발인력 45,755명, 연구개발조직수 1,166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2%p 상승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는 각각 1.5%p,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1,118건이며, 등록은 7,550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6.8%, 7.8%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1,949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4%p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은 거의 2배에 가까운 3,684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6%p 증가하였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3,947,604 (11.4)	5,570,013 (11.2)	6,333,015 (9.9)
	연구개발인력	32,405 (7.4)	39,556 (7.5)	45,755 (7.6)
	연구개발조직수	651 (4.7)	894 (4.1)	1,166 (3.6)
특허	출원	9,169 (7.2)	10,112 (7.3)	11,118 (6.8)
	등록	3,866 (6.3)	5,223 (7.2)	7,550 (7.8)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에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인구 50만의 세종시 조성 and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인접한 중소도시와의 연계 확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역의 확대 기회라 할 수 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기 보유한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도시 재생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재창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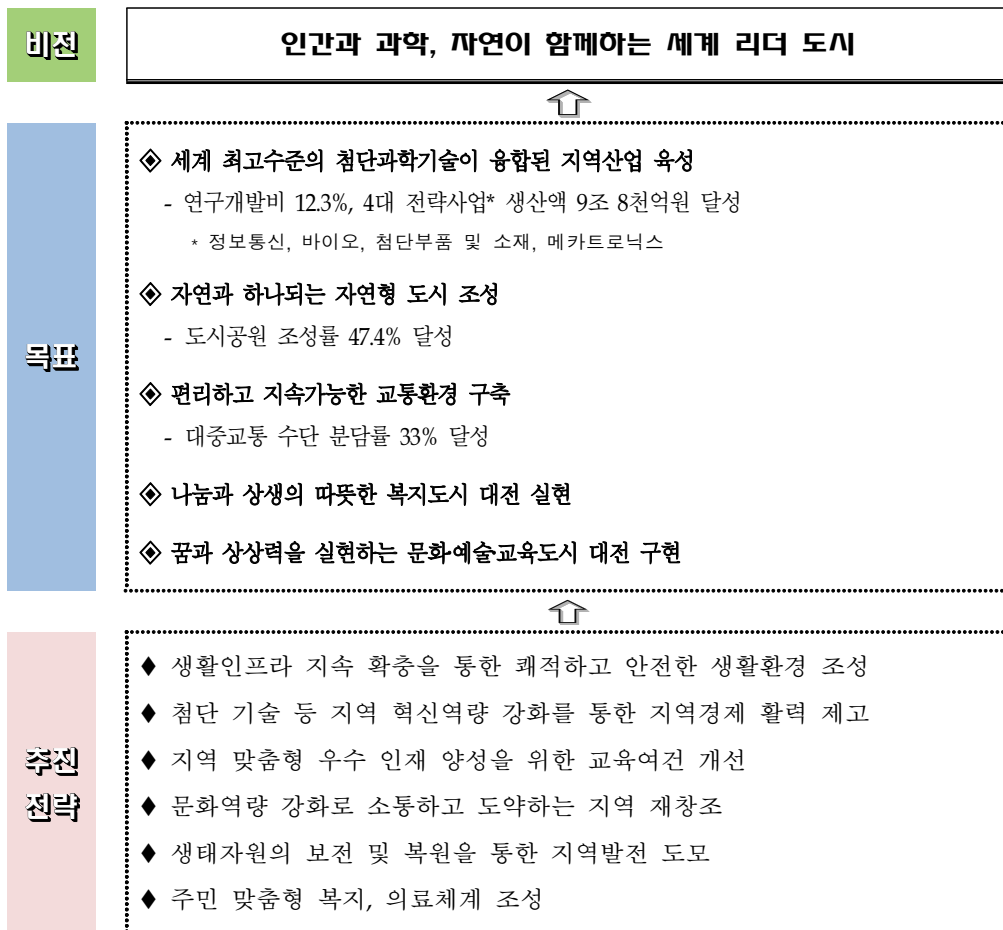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발전과제는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와 실업문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지속성장도시”, “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여대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km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을 80개소로 늘리는 등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구현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사업)으로 2014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5년에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

업비 26.4억원(국비 23.8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어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영농조합법인(대청호 두메마을) 설립 및 대청호 담장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한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여 주민편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4.5억원)이 투입되어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업의 초기단계이지만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3명이 취업하였으며, 2개의 기업을 통해 취업컨설팅 현장학습을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지피지기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제대군인 인력수요 파악 및 사업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다. 또한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서는 대전테크노파크 내 비즈센터 구축 공간(231㎡)을 확보하였으며, 군과 국방기업 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국방 Hub 비즈니스데이를 1회 운영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준비 및 이를 위한 지역 내 수요조사 및 귀농 정착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 준비를 실시하는 등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한편, 대덕구 장동 옥골지구는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안전 확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 9월 완료 예정이다. 대덕구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기 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전 지역주민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사업의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2015년도에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안전·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

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주택의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목표대비 163% 초과 달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 보강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시설개선을 하였으며(2014년 1,399개소 → 2015년 1,419개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비율 전국 2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구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문화와 관광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장을 조성하였으며,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대전 중심의 생활권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대전역~와동IC 광역 BRT 1공구 도로공사(92%)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환승센터를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5대 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등 지역 대표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였는데, 5대 주력산업 관련 신규고용창출이 397명, 생산증가액이 725억원, 신규기업창출 40개사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자력생존 역량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프로젝트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2015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년부터는 민군겸용 기술 사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전후방연계 전문인력(6,138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대 특성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국방관련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통

해 미국현지 교육(Global Commercialization Week) 9개사, 글로벌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미국현지 사업화 5개사, 수출협약식 2개사, 그리고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회 53개사, 해외박람회 참가 100개사(단체 9회 72개사, 개별 18개사), 수출보험료 지원 110개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66개사,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191개사, 인터넷무역거래사이트 지원 453개사, 해외지사화 사업 10개사, 해외마케팅 사후출장비 지원 10개사, 통번역지원 25개사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대전 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였다. 한편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서는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진 뿌리산업 관련 17개 기업을 지원하여 23명의 고용창출과 59억원의 매출증대를 이루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 훈련인원 390명에 207명을 취업시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를 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2021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 2,318천㎡를 재생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기존의 재생계획을 변경,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으로 하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총 관련연장 11.4km 중 7.5km를 시공, 2016년 12월 산단의 준공시기에 맞게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혁신주체들 간 연계·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기업 20개사 보육·육성, 해외진출 3개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앙로캠퍼스 개소, 기술금융 500억 펀드조성 등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과 포럼, 디자인씽킹, T아카데미, 창조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컨셉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사이언스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지역 상생방안 강화 방안(공익사업, 지역환원, 지

역기여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비즈니스, 여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엑스포 공원 IBS 구역 내 시설물 철거공사,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 과학공원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유성구에 로컬푸드 가공 지원센터(331㎡)를 구축, 2016년부터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작업환경 개선 평이장비 시범사업(2개소)을 진행하여 30개 농가가 수혜를 받았으며, 농작업 여건 조사 및 편이장비선정 효과측정 컨설팅(2식) 및 편이장비(3종 79농가)를 보급하였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 보급 사업으로 전통식문화 계승지원을 추진하여 3개 과정 72회 1,93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강사를 3명 배출하는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고품질 표고버섯생산 상품화 모델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버섯배지배양센터(2,251㎡)를 신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2015년도 성과목표인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창의 우수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초중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한 43명의 학생이 모두 취업(해외취업 28명, 국내취업 15명)하는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효과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을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2016년도에도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이 100%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개 대학)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1개 대학)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시스템 개선과 취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173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5개사의 기업성장 지원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창의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창업가, 대학생, 혁신매니저 등의 분야별 교육과 함께 글로벌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쓸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5개구 10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247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자격증 취득(22명, 3D프린팅)과 행복학습 매니저(16명) 등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 문화 융성과 생태복원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2015년 ‘생태·환경 및 체육·여가·문화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 내 자원가치 향상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국제행사 73건 개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위상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창작문화 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통해 테미예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용노레지던스 운영, 아티언스 랩 운영, 민간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과 함께 도지사공관(1호관사) 보수공사, 도지사공관 개관 및 오픈하우스(9월)를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시립미술관 기존 문화시설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복용실내승마장 건립,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생

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121명을 배치하고 470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1,090,294명(연인원)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생활체육광장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22명 배치하고 2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3,265명(연인원)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골든 플랜을 시행하여 학교체육시설 10개소 확충 및 511개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525,338명이 참여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의 주차장을 조성, 이용객의 편의 증대를 꾀하였으며, 대전 대표축제육성을 위해 효문화 뿌리축제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지원하여 2015년에 48.5만명(효문화뿌리축제 32.5만명,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16만명)이 관람하는 등 대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교량하부정비 3개소, 수문 보수보강 27개소, 야간조명 2.45km)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정생천 및 탄동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121백만원을 투입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10개의 연구사업과 37개 업체에 총 44회의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전광역시시는 2015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여 2,559명에 총 1,385백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220명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1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소양교육(3회), 직무교육(5회), 컨설팅(9회) 등 지역사회

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능력을 강화시켰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2,216명의 일자리를 창출(추진실적 107%)하였으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아동 1,710명(동구 317명, 중구 281명, 서구 244명, 유성 544명, 대덕 324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145개소의 운영비 지원 이외에도 특성별 예산을 추가 지원(거점형 5개소, 특수목적형 13개소, 토요일운영 50개소)하고 아동복지교사를 135명 배치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를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초록펜 학습지원서비스를 통해 학습교사 19명을 배치하고 지원봉사단 238명을 모집, 운영하였으며,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교육, 일감뱅크(167개 기업) 구축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였다. 한편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구축을 위해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정률 90%) 및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보강을 하여 청소년 활동 역량증진에 기여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여 2016년도에는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사업 승인을 말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맞춰 대전광역시 2015년에 지역민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험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2015년에 추진된 사업들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들은 개선하여 대전광역시 발전계획에 맞춰 2016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민선 6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존 사업들과 전략적으로 연계,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 중심의 교통망 확립을 통해 대중교통혁신체계를 지속 구축할 것이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또한 근대문화특구 및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 역세권을 개발하여 낙후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유동인구를 확대 유도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창업 확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취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취·창업 박람회 개최 확대 등 일자리 만들기 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여 생계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통한 평생학습의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기반의 대전형 창의인재양성 시스템을 확대하고 평생학습의 공공성 강화로 차별화된 소외계층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2015년에는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융성 및 생활체육을 통한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더욱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류를 통한 문화향유를 확대할 것이며, 시민의 생활체육 요구에 부응한 체육진흥시설을 보강하고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17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69조원에서 7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6,11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액은 2011년 1,015억 달러에서 9%가 감소한 924억 달러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취업자수는 55만명으로 3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70.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53,870	68,748	69,548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112	1,135	1,166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4,950	6,224	6,110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78,802	101,480	92,400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526	544	546
재정자립도(%)	53.9	51.9	50.3	69.9	69.1	70.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울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29.1%, 제조업 70.4%, 광업·농림어업 0.5%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기타 운송장비’가 18.1%, 종사자수 기준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29.2%, 생산액 기준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이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및 ‘금속가공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은 모든 부문에서 비중이 감소하였고, ‘기타 운송장비’는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6	3.5	38.8	1.2	3.6	34.8	1.1	2.6	34.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5	1.7	13.1	3.4	2.3	21.5	2.7	2.2	19.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8	1.8	0.8	3.0	1.9	0.7	3.4	2.6	1.0
1차 금속	1.9	0.6	7.4	1.7	0.7	8.9	1.3	0.6	7.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6	5.4	1.1	14.0	5.8	1.1	12.6	5.6	1.3
전기장비	4.8	2.0	0.4	5.7	2.8	0.7	5.1	5.4	2.0
기타 기계 및 장비	13.3	5.3	1.4	12.3	4.9	1.3	12.6	5.8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8	33.7	18.6	18.4	29.7	15.8	16.6	29.2	18.6
기타 운송장비	15.4	29.0	15.1	15.5	30.2	12.5	18.1	28.0	10.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2.3	9.3	0.8	1.9	8.2	1.0	1.8	6.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2.5	5.9	1.0	2.4	6.6	1.1	2.4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4	8.8	17.6	11.1	9.7	14.1	13.1	10.2	13.2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18.8	12.6	5.1	21.9	18.9	5.9	21.6	17.3
교육 서비스업	22.5	17.0	9.5	20.6	14.2	7.7	19.7	13.5	1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	23.6	26.2	11.8	25.5	25.2	12.6	27.4	27.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9	8.3	7.2	13.7	7.2	7.4	12.7	7.2	5.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6	18.8	11.8	35.9	17.2	12.0	34.0	15.9	1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0%, 1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4%, 27.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업종별 비중의 큰 차이는 없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종사자수,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출액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8,153억원, 연구개발인력 9,671명, 연구개발조직수 371개로 전국대비 비중은 2%대 미만으로 연구개발활동 현황이 낮은 수준이었다. 2008년에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825건이며, 등록은 1,284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7%, 1.3%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637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등록 건수는 786건 증가하여 0.5%p 증가하였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411,356 (1.2)	747,535 (1.5)	815,288 (1.3)
	연구개발인력	5,596 (1.3)	7,830 (1.5)	9,671 (1.6)
	연구개발조직수	172 (1.2)	272 (1.2)	371 (1.2)
특허	출원	1,188 (0.9)	2,722 (2.0)	2,825 (1.7)
	등록	498 (0.8)	735 (1.0)	1,284 (1.3)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에는 생산·산업도시로서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산악 관광자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확장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의 광활한 배후 부지에 문화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3D프린팅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구조 다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도시로의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ICT, IoT 및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내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인력 보강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도시경쟁력 우위 ▪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 보유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으로 신산업 태동 ▪ 풍부한 미개발 가용지로 토지지원 확보 용이 ▪ 인접지역간 산업연계 활성화로 중심도시 기능 강화 ▪ 환경보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인식 증대 ▪ 높은 지역소득과 풍부한 복지지원	▪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문화관광분야의 창조인력 및 인프라 부족 ▪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보유 ▪ 다소 부진한 창조산업으로 전환 ▪ 산업중심 개발로 시민생활 공간 미흡 ▪ 지역내 생활권역 간의 연계성 취약 ▪ 복지전문인력의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에너지정책의 전환, 산업융복합 촉진 ▪ 문화예술 소비육구와 여가시간 증대 ▪ 대외지향적 국가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역량 개선 ▪ 자연생태 공간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 ▪ 삶의 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 제조업의 성장 정체 등 국가경제 성장 둔화 ▪ 도시간의 경쟁과 국제화미흡으로 지역의 경쟁력 저하 ▪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진 ▪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경관 파괴 ▪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정책 급변 ▪ 은퇴자 증가로 인력 역외유출 가능성 높음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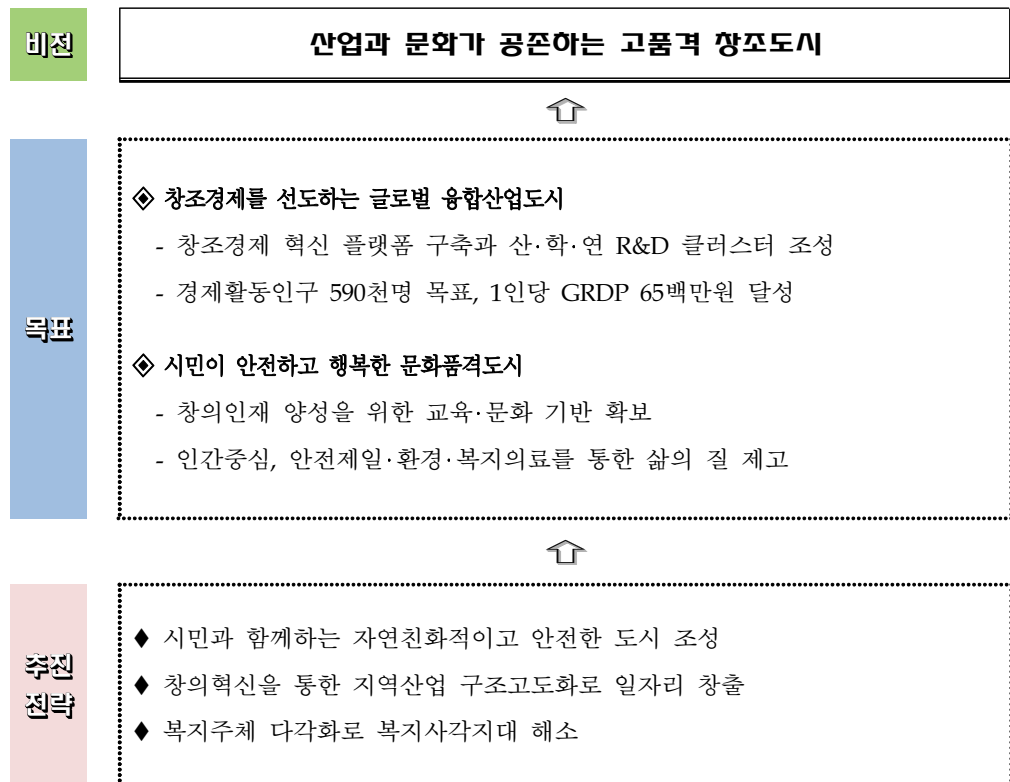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豊) 조화로운(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 구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 둘째,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셋째, 복지주체 다각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하며 개별 추진 전략에는 세부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울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 ‘창의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복지주체 다각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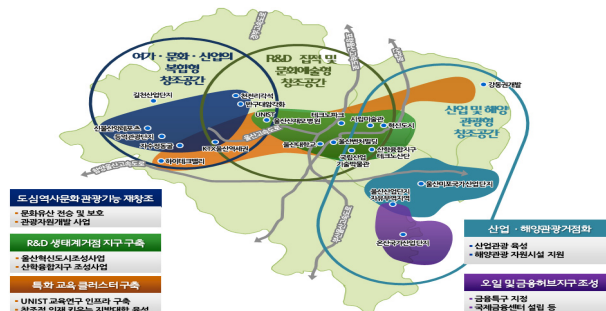
세부추진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과 도심 속 생태하천 조성,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저탄소·친환경 녹색생활을 정착하고, 안전·방재 인프라 구축으로 산림, 녹지, 생활환경 등의 통합적 관리와 보전으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을 확충한다.

‘창의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활성화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상용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요·공급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의 지역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를 조성, 기업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지역경제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복지주체 다각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 집 및 청소년시설 확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복지주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R&D 기능과 임상연구동이 있는 산재모병원 건립 추진과 지역내 의료 확충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추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마련으로 취약계층 등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공간별 추진전략은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인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서부권을 ‘여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예술형 창조공간’, 그리고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생활권은 농어촌 생활권과 도농연계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중추도시생활권 하나만을 구성하였다. 울산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및 지리적 연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2014년 2월 4일). 이에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5년 22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 중 선도사업으로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총 20억원, 국비 16억원, 지방비 4억원)이 선정되어 울산광역시~경주시 간 버스정보 연계 및 환승정보 개선, 버스노선 버스정보단말기 확대 등 생활권내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의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지역간 산업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접지역 간 통행자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센터 연계 서버 및 S/W 개발, 센터시스템(DB제공서비스 등) 확충, 버스정보단말기(BIT)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1,800m의 현수교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울산대교를 2015년 6월 개통하여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체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행복한 울산만들기’를 위해 경관개선과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생활권 도시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확립과 교통연계망 및 시스템 구현, 상하수도, 방재·안전 등 다양한 생활환경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재난전문자원봉사단(10개 분과 630명)을 발족(2015년 6월 12일)하고 전년대비 자원봉사 등록자 수 13.4% 증가, 전문자원봉사자 수 3.5% 증가 등 행복브랜드 ‘자원봉사 BEST ULSAN’ 참여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7개소),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CCTV 437대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북구 구도 4호선 준공), 초등학교·유치원·경로당 등의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완(359개소), 저상버스(10대) 도입, 노후소방차량(17대)을 현대화시켜 시민 봉사의식 고취와 안전한 도시조성에 힘을 쏟았다.

또한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를 위한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경로당 건립,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8개소 개량, 7개소 설치)를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이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인 주차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 15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생활여건 개선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저비용 및 고품격 여가공간 확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가시설 조성 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왕암공원 연안유희지 개발사업(오토캠핑장 20,207㎡, 미로원 2,433㎡ 조성 등)과 도심활력 증진사업인 구도심 녹지공간조성(토지보상 207㎡, 녹지조성 772㎡),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토지보상 3,582㎡, 인공폭포 조성, 동굴 정비)하였다. 그리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위하여 바다 속 폐기물 수거(128톤), 해안쓰레기 처리사업(1,054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219톤)인 해양폐기물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으로 개선하였다.

국가기간도로망과 효율적인 연계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공정 65.2%) 사업 추진, 옥동~농소간 도로(공정 95.1%) 등 우회순환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동하기 편리한 네트워크형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시는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였다.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4개사, 121백만원), 중소기업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31개사, 160백만원) 등 지역IT/SW기업의 통합지원으로 기업 성장 촉진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반기 사업참여자 모집 652명, 상반기 31개 사업장 157명 참여, 하반기 32개 147명 참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울산은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울산광역시시는 지역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2015년 12월 21일 협약체결), 조선해양도장표면 처리센터 구축 준비(기본설계 검토 등), 조선해양기자재에 대한 31개 기업의 45개 과제(국제인증 32, 벤더등록 11, 해외기관시험 2)를 지원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수송기계융합부품,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정밀화학, 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기술지원 10건, 시제품 상용화 10건), 바이오화학실용화학센터 건립(센터 준공 및 장비구축 47종)을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 강소형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석유화학업종의 맞춤형 인력양성(교육수료 72명, 취업 29명), 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교육수료 61명, 취업 38명), 스타트업 WIN-WIN 일자리창출 지원사업(5개 과정 58명 수료, 취·창업 17) 등을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로 지역의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 MOU 체결 62건(박물관·과학관 36, 기업 26)과 유물기증 창구 개설(65점 접수) 등 박물관 건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시 공동연구실 개소(2015년 4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2015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통해 생산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전시·회의 유치로 지역내 부족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였다.

장기 경기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산업단지 기업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그린에너지 소재

기술 개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으로 표준공장 준공(2015년 2월) 및 임대(2015년 6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외자유치 및 수출 진흥을 촉진시켰다.

울산광역시시는 2015년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투자유치 업종을 다양화하였으며, 2015년에 국내외기업 73개사 3조 3,996억원 투자유치와 2,6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투자허브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3대 특화분야(조선해양플랜트, 지역특화 3D프린팅, 첨단 의료 자동화 산업)를 중심으로 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 및 운영(2015년 7월 15일)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유치를 추진하고, 혁신도시 투자유치 홍보 책자 제작·배부, 혁신도시 생활정보지 제작·배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관 운영 및 홍보 등 생활편의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6차 산업을 통한 수산 및 농업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2개소, 20ha) 추진, 수산종묘 방류(100만 마리), 바다숲 조성(5ha), 고래문화마을 조성(2015년 5월)으로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자원 조성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농업 육성(팜투어, 텃밭 등),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3개소 증)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사업 추진으로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 설치(1일 참여농가 110명),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 1,680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연 20,000명(매출액 85억원, 73명/일)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어촌분야에서는 수산어업 지원 등 어촌지도사업인 수산어업 행정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을 수행하고, 농촌분야에서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배양실조성 164㎡ 및 배양기 2대설치, 미생물 생산 8.4톤)으로 농·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광역시시는 국내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 절실하나 지역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고교 이후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인재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학 평생교육을 활용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육성을 위한 학교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지역 신설대체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 효율화 달성(언양초, 강동초, 강동중 이전 완료), 상북지역 소규모학교 3개교 통합 등 도심지 학교와의 교육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교원확보, 낙후된 시설개선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에 이바지하였다.

농산어촌 초·중학교 지원인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울주군 읍면지역 소재 학교의 특교 지원여부에 따라 양질의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콘텐츠활용 여건개선, 콘텐츠 활용 제고, ICT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히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지원하고자 우수기능인력 양성 실습을 위한 공작기계실습실 확충 등 지역산업연계형 직업교육 운영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 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BK21 플러스사업인 울산대학교를 지원하여 2015년 취업률 88.89%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을 통해 취업률 60.6%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베이비부머 세대, 소외계층 등), 시민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평생학습박람회, 정보망 운영 등), 마을 학습공동체 조성(평생학습 마을학교,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창조학습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울산광역시시는 제조, 생산 위주의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지역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8개 분야 118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행사 개최(제33회 전국연극제, 울산연극제, 청소년연극제) 등으로 울산시의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통사찰인 석남사 요사채 개축, 내원암 일주문 단청공사, 월봉사 기와 및 단청공사 등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2015년 6월 공사착공),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용역(2015년 5월 13일~8월 10일))등을 추진하였으며, 레지던스 프로그램(3개 단체) 및 공연장 상주단체(7개 단체), 전국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생활체조 등 68개 프로그램 812,558명 참여),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초중고 및 특수학교 137개교, 강사 72명 참여),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문화소외계층 22,800명) 및 울산예술사랑티켓 발급(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7,000여명)으로 문화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86%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 저변 확대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의 우수한 산악관광인 ‘영남알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2015년 8월), 세계 ‘알프스’ 브랜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2015년 10월)로 도시 품격을 높였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2015년 12월 전망데크 설치공사 준공)을 추진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을 위해 떼까마귀 군무체험, 태화강 100리길 걷기대회, 태화강 봄꽃 대향연과 가을국화 전시행사 개최로 방문객 55만명 달성 등 생태관광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연결사업,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 등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증진시켰다. 또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를 조성하였고,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울산수목원 및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주체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현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방적 복지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대(사업별 제공기관 144개소→195개소(전년대비 35% 증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로 619명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직 신규채용(36명)과 통합사례관리 실시(582가구),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103명)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4가구), 사랑의 그린PC 보급(총 258대), 콜택시 증대, 제2장애인체육관 개관(2015년 4월 28일) 등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6,230명)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신축 1개소, 개보수 5개소, 자동개폐장치 28개소)하여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도모하였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욕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공동체 구성으로 복지주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57개소)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학습지도·상담 등)과 문화·교육서비스(체험활동 등)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시설 확충,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직업교육훈련 217명)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금연 클리닉 등록(11,307명), 가정방문 상담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25,957명)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울산광역시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목표로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셋째, 매력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유해화학물질안전대응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감시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북구 소방서를 건립하여 신속한 소방체계를 마련하고, 울산~경주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준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신담교~경주 시계 확장,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CCTV 389대 확충과 지역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여 편리한 교통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93동), 고도정수시설 설치,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 소하천 정비 등 도시기반 확충과 해양쓰레기 정화, 남산수변공원조성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고자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선도적 추진과 3D 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R&D 지원, 나노융합 산업 기반 확산,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 등 ICT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별화된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 물류거대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

끝으로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회색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산악·생태·역사·해양·문화·산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와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거점관광 공간 조성 및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아동지원 강화 및 복지시설 구축 등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로 복지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5.6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4만명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12년 2.8억 달러에서 3.6배 증가한 10.2억 달러로 수출액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50.6%로 2013년 38.8%에 비해 11.8%p 증가하여 전국 평균인 50.3% 수준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제현황은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이 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08년	2011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	-	-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13	122	156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	-	-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279	904	1,020
취업재(천명)	23,577	24,244	25,599	-	-	-
재정자립도(%)	53.9	51.9	50.3	-	38.8	50.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1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4.4%, 1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의 비중이 높았다. 2012년 사업체수와 비교할 때, '전기장비'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6	-	-	13.3	11.9	11.8	12.0	11.0	11.9
의복, 의복액세서리	0.0	-	-	0.0	0.0	0.0	0.0	0.0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9	-	-	11.8	9.5	9.1	10.2	7.8	9.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5.4	-	-	5.1	1.8	0.9	4.9	1.5	0.9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3.6	-	-	3.5	17.2	15.8	3.4	14.4	16.1
전기장비	6.8	-	-	8.6	9.0	11.1	8.3	9.5	10.6
기타 기계 및 장비	5.0	-	-	3.9	1.4	0.6	3.8	1.1	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6.8	-	-	7.5	8.9	7.1	7.9	10.5	6.9
기타 제품	0.5	-	-	2.0	0.7	0.1	1.9	0.7	0.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은 집계되지 않음.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	3.9	1.4	1.4	4.1	1.6	1.6	3.4	2.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0.6	0.1	1.2	1.3	0.1	1.6	3.0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1	17.6	11.2	24.9	17.8	16.6	31.0	21.0	14.0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10.2	0.8	4.9	12.0	1.2	5.0	12.8	1.4
교육 서비스업	10.9	8.6	0.6	11.5	7.7	0.5	11.4	8.4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	32.0	2.4	14.6	31.5	2.5	13.9	29.1	3.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4	11.5	82.3	11.1	9.9	76.3	9.9	8.8	75.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2	15.5	1.2	30.5	15.8	1.2	25.6	13.5	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1.0%, 2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년 사이에 7.9%p 증가하여 신도시라는 특성에 의해 관련 업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3,925억원으로 전국대비 0.6%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4,441명으로 전국대비 0.7%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체,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개발조직수는 102개로 0.3%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은 0.3%p 증가하여 1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특허출원은 326건이며, 등록은 179건으로 출원 및 등록은 전국 대비 비중이 각각 0.2%, 0.1%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와 비교할 때 비중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	188,074	392,505
		-	(0.3)	(0.6)
	연구개발인력	-	2,039	4,441
		-	(0.4)	(0.7)
특허	연구개발조직수	-	73	102
		-	(0.3)	(0.3)
	출원	219	267	326
		(0.1)	(0.2)	(0.2)
	등록	131	175	179
		(0.2)	(0.2)	(0.1)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와 최근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확정 등 전국으로부터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으며, 주변의 천안·아산 IT 클러스터, 오송·오창 BT 클러스터, 대덕특구의 R&D 등 충남·북 지역의 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충청권 발전을 유도하면 지역의 상생발전 구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산업권으로의 부상이 가능할 것이다.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도시 위상 제고 및 컨벤션, 국제협력, 해외투자, 관광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예산 22.5조원을 투입하여 인구 80만 명(신도시 50만, 읍·면지역 30만) 거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전, 청주, 천안 등 주변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생발전한다면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추도시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강점 및 기회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도시 건설의 초기 단계로서 도시의 자족성이 상당 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따른 인근 도시와의 격차로 인해 자치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약점 및 위협요인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강점 및 기회요인을 증가시키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발전과제로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이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조기에 광역 및 지역 차원의 교통·물류망 등의 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다. 이를 위해 건설지역과 주변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관광 개발 및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여가생활 여건 향상 및 창조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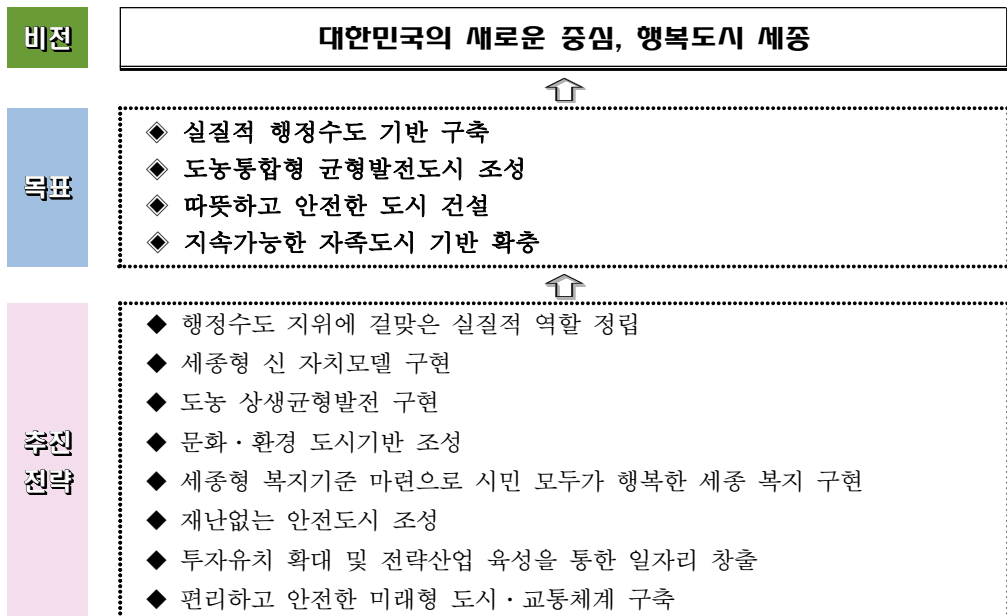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앙행정기능의 수행, 그리고 건설지역 및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행정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도농통합형 균형발전도시 조성’으로 건설지역과 주변지역의 상대적인 격차를 완화하고 도농상생의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 번째 목표는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로 지역 사회 각계각층과의 협력을 토대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안전 및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확충’으로 융복합 산업의 촉진과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근 주요 당면 과제로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 '도농통합형 균형발전도시 조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확충'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정주여건과 문화·복지 및 안전 강화,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한다는 세종특별자치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8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의 추진전략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추진전략으로 ①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수도로써 실질적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시설을 조기 건립해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하여 ②세종형 신 자치모형을 구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도농통합형 균형발전도시 조성'의 추진전략은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③도농 상생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건설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도심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환경 여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④문화·환경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인 '따뜻한 복지, 안전한 도시 건설'의 추진전략은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복지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⑤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도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⑥재난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확충'의 추진전략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융복합화 및 산업화를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⑦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고 건설지역과 주변지역 상호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⑧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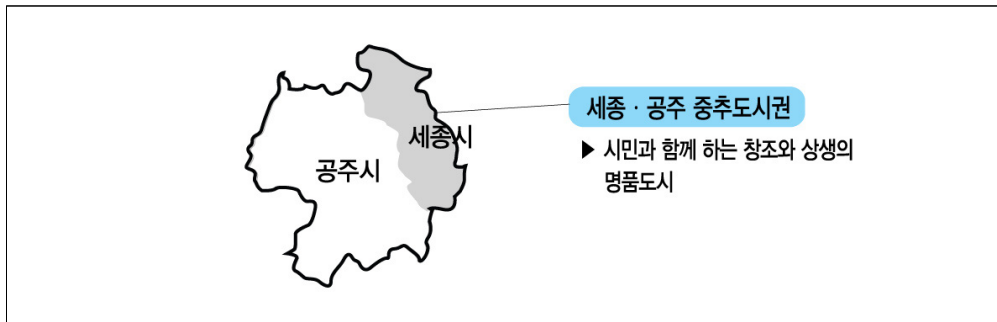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2014년 2월 27일)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 간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인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기관이 이전되면서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백제문화유적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생활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10월 1일)·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 발굴·집행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사업으로『세종·공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역BIS 구축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협의체 및 종합 집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양 도시의 대중교통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5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21.4만명으로 전년대비 5.8만명이 증가하는 등 급속한 인구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도시활력 증진 및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의 추진성과는 2018년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완료 및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용 CCTV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어린이 안전도모 등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 성과는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37개 청춘조치원 사업을 본격 전개하였고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21.9% 증가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읍·면지역에 도시가스보급률(74.4%)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 숙원 해결과 도심속 녹색공간 확보와 읍·면지역에 도시공원조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서북부지역(조치원 신시가지 조성)개발을 위해 기반체계 마련(계획수립)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 시민참여토론회, Q&A제작·배포 등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사업 수행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조성 1개소, 위험지역 안전시설 10개소를 설치·개선하였다. 또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버스정류장 847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4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백천지구 실시설계 추진, 신수지구 실시설계 발주, 조천2지구 예산(국비)을 확보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정시기본계획 수립 및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보건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산업 육성 및 도농상생을 위한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마련, R&D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기업애로 사항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공공일자리 창출 및 생활임금 지급 추진 등 근로복지 개선,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등을 통한 세종형 3농혁신 모델 구축, 세종시표 로컬푸드 기반 마련을 통한 도농상생 로컬푸드 활성화, 창조마을 조성 및 세종형 6차산업화지구 조성, 우수농산물 유통기반구축,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 추진, 세종축제 명품화를 통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축제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성과는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절초 소재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3개 기업에 함으로써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분야 세분화와 기업의 필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여성전문인력 양성 과정(2개 60명)을 운영하여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을 획득하였다. 세종고용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일자리 14,891개(공공 9,466개, 민간 5,425)를 창출하여 전년대비 4,483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외에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대전·충남과 합동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수출계약추진 8,272천달러를 달성을 통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 및 초보기업 육성 등 수출기반을 조성하였다.

창조마을 조성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통해 미래농업 혁신모델을 구축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의 성과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지정되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3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회에 걸친 공모에도 홍보, 중간지원기관 부재로 인한 신규지정이 저조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및 공모사업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70개사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2015년 목표 50개사 대비 140%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지역투자 촉

진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R&D 7개 과제를 선정하고 7개 기업에 총 176,200천원을 지원하여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5개의 기업 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여 5개 R&D 과제에 118,450천원을 지원하여 기업체 연구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충청권 혁신기관의 사업 참여 독려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사업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종형 고용복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6년 생활임금 기준 마련 및 생활임금(7,170원)을 고시하여 인간적·문화적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하여 대한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받돋움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SB(Science Biz)플라자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SB플라자 건립비(80억원)를 확보하였고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SB플라자 내 기업·연구기관 입주를 위한 유치 전략 마련, 홍보 추진 등 행·재정적 지원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공사를 완료(2015년 12월 4일)하였으며 아카데미과정(8회 48명)을 통해 정예 영리더 28명을 선발하는 등 선도적 농업리더 홍보 및 지역농업 인력자원 발굴을 위하여 농업리더 간담회 개최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모색하였다. 또한 재해위험저수지(고도실) 1개소 정비와 용배수로 25개소를 정비하여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였다.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를 운영하여 체험마을 리더 역량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체험 기반 H/W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재능기부 행사 등 시민참여형 축제로 참여의 폭 확대 등 지역과 상생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을 기획·추진하여 로컬푸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방향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교육청 구내식당 「우리 먹거리 날」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격차 없는 교육환경 및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
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제공, 평생학습체계 지원,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ICT) 맞춤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학부모가 자녀
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에 비해
읍·면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부족한 교원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격차
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4개 사업 / 2,928
백만원)하여 읍·면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건설지역과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
하였다. 또한 농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진료교육 활성화, 학교 스
포츠 클럽, ICT 활용프로그램, 외국어 친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를 향
상시켰으며 스마트 시설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하였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0%를 달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으로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초 6교, 중 4교, 130명
이수)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의 ICT 콘텐츠 활용을 통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
는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소
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를 집
중·육성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
등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이 자녀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
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으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인문·고전강좌를 운영하였
고 학습-고용 연계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및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과 교육환
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인재육성재단 설립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다모아 평
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
여 지역인재 육성 기반 강화와 인문·고전 강좌,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등 교육 추

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00세 시대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주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00세 시대 평생학습 46개 프로그램, 4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관련 2개교에 각각 10백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7개 프로그램, 28백만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저변을 확대하여 기여하여 야간학습프로그램 평균 교육참여율을 제고('15년 83%)하였고 또한 평생교육 인문교양 강좌 (인문학강좌 : 40회(2,692명) / 고전강좌 : 36회(556명))를 제공하여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및 재직자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석률 96%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풍요로운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 정체성 함양 및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문화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 인프라 확대 및 자연이 숨 쉬는 친환경 도시 구현, 주민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조성, 문화예술 지원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의 지역문화예술역량 제고,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을 연계한 행복문화벨트 구축, 부강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아마추어 생활스포츠 집중 육성 등 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기반 확충,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비위생 매립장 정비 등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 및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통한 행복문화도시 창조,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수자원 공급 및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도모 및 종목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강화(기금사업 : 12종 110개소 4,902회 운영 85,972명 / 자체사업 : 10종 100개소 2,382회운영 32,442명)로 클럽 및 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아마추어 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보급·운영 그리고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한 지도 등 생활체육지도를 통하여 노인 계층

에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맞춤형 생활체육을 보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 확보 및 인지도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골목정원학교 및 평리실태조사(2015년 11월)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골목정원학교 사업의 필요성 인식과 주민 주도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수요증가에 따른 독서문화기반 확충 및 자체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부강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실 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였고 소규모영향평가 시행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생활체육시설의 개선·확충에 노력하여 건강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생태계의 고유성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생태네트워크의 단절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북저수지 생태공원조성(2, 3단계)타당성조사 완료, 연꽃식물원 3,545㎡, 수변관찰로 342m×1식 준공, 수변관찰로 129m×1식 착공(2016년 8월 준공예정) 등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에게 생태체험 기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태·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및 의료취약 해소 등을 통한 ‘따뜻한 복지, 안정된 삶’을 위하여 세종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기초연금 적기 지원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의 보장, 세종형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사회적 돌봄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개관하여 시민행정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의 성과는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 실적이 증가(전년 대비 방문상담 44%, 취약계층 발굴 692%(547건), 사례관리 선정 59%(58건), 서비스연계 399%(3,871건) 등 주민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정보제공 및 상담 : 복지 1,147건, 보건 447건, 정신 102건, 고용 39건 등)으로 주민 복지체감 향상 및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서울행정데이터 440여종 개방(2015년 4월) 및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2015년 7월 ~ 12월)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추진중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자조 등 사회생활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개소 개원)을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일조한 성과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육을 통해 가족 간 의사소통을 도와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었고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여성의 자격증 취득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를 확대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 446가구/633명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240명을 선정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김장김치 만들기 등)하였으며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으로 드림가족봉사단 10가족 30명을 모집하여 맞춤형 복지 환경조성, 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등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노인층의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였다. 응급의료시설 2개소 및 평일 야간진료기관 1개소 구축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수혜자 303명)'를 실시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2016년도는 행복도시개발계획 2단계(2016년~2020년) 진입의 첫 해로서 자족기능과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개발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2015년도에 수립된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적, 추진전략, 사업계획 등의 청사진을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40개, 국책연구기관 15개, 기타 공공기관 4개, 지자체 세종사무소 32개 이전으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확고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및 미래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 건의와 대언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제형 자치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과 육성의 지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축제 명품화 등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강화 등 품격 있는 문화복지 도시를 조성하고 재난없는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며 세종특별자치 수정안 논란으로 행복도시 건설이 2년 정도 지체되면서 문화·의료·상업시설, 도로 등 도시기능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종합운동장, 아트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속히 추진하고, 교통·주거 등 도시 정주기반을 확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 복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신도시의 인구 집중,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있는 자족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대내외 협업·교류를 확대하여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 선도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236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4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1년 267조원에서 32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68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876억 달러에서 27.4%로 크게 증가한 1,11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583만명에서 62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7.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4.8%p 감소하여 60%대로 낮아져 17개 시·도 중 세 번째가 되었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225,736	276,155	329,449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1,292	11,937	12,358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009	2,339	2,683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61,084	87,557	111,641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5,529	5,833	6,226
재정자립도(%)	53.9	51.9	50.3	76.3	72.5	67.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경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9.8%, 제조업 39.0%, 광업·농림어업 1.2%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2.6%, 33.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높았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4.6	5.3	5.3	4.8	5.4	4.8	5.1	5.6	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6	4.7	4.0	3.8	5.1	4.0	3.7	4.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9	8.2	5.5	10.7	8.0	5.4	11.1	8.5	5.9
1차 금속	3.0	2.7	5.8	3.3	2.8	4.7	3.3	2.7	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0	8.8	5.8	14.3	8.9	5.3	14.1	9.0	5.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2	23.2	30.9	9.2	24.0	33.5	9.0	22.6	33.9
전기장비	7.7	6.7	5.3	7.7	6.5	5.2	7.7	6.5	4.9
기타 기계 및 장비	14.3	11.5	8.6	14.6	11.5	8.6	14.8	11.9	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3	8.0	11.0	3.6	8.3	12.6	3.9	8.4	12.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2.2	5.5	0.8	2.0	5.8	0.9	2.0	5.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5.1	13.6	1.7	5.3	15.1	2.6	7.0	2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6	14.6	23.3	18.7	12.2	17.8	17.7	10.8	17.7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12.1	6.5	3.9	15.0	7.8	4.6	16.6	8.3
교육 서비스업	17.9	16.5	8.2	17.8	14.5	7.8	17.2	12.4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3	23.2	20.2	13.7	25.8	19.7	15.1	27.9	21.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6	10.0	13.3	12.1	9.3	16.5	11.2	8.5	11.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4	16.3	9.3	31.3	15.8	9.4	30.6	14.7	8.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9%, 21.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31.0조원, 연구개발인력 193,926명, 연구개발조직수 10,616개로 경기도 전국 연구개발활동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증가하여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0,468건이며, 등록은 28,27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0.8%, 29.1%로 나타나 출원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등록 건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나 격차는 40건에 불과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등록 건수는 3.9%p 하락하였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3,550,457 (39.3)	20,846,902 (41.8)	31,032,952 (48.7)
	연구개발인력	122,257 (28.0)	157,995 (29.8)	193,926 (32.0)
	연구개발조직수	4,104 (29.4)	6,975 (31.9)	10,616 (33.2)
특허	출원	39,188 (30.8)	40,109 (29.1)	50,468 (30.8)
	등록	20,152 (33.0)	22,583 (31.3)	28,275 (29.1)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2015년 기준, 1,289만명)가 거소하는 지역이며,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요소인 인적자본이 축적된 곳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중심지이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는 지리적으로는 해양, 평원, 산악, 강 등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가용지가 많아 새로운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다수의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계획된 정주환경의 조성으로 고급인력의 집중과 전국평균을 웃도는 출산율(2014년 기준, 1.24명)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입지적으로는 국제공항 및 항만 등 중추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각종 도로망과 철도망 등의 지속적인 조성으로 경기도 내·외부 간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은 향후 도래할 사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와 대북관계 개선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최대수혜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인구 수, 사업체 수, 경제활동인구 수, 고용률 등 양적지표에서는 전국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1인당 GRDP,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질적지표에서는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해 생활인프라의 확충과 이를 위한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남북 간 지역격차도 상당하고 동부와 서부의 현안이 상이하여 권역별·사안별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구도로 인해 정책적·경제적 제한이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경기도 내 균등발전과 경기도의 잠재력을 활용한 공격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규제완화정책을 시행중인 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가 담보된다면 경기도의 발전기반 및 잠재력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경기도의 성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장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과제

는 첫째, 창조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결합한 ‘경기도형 일자리창출’, 둘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층별 맞춤 복지 실현’, 셋째,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정책’ 마련,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각종 재난, 범죄 등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이다.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은 VR(가상현실), SW 등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여성·노인 등 계층별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고 그 확산효과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동시 추구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층별 맞춤 복지 실현’은 복지의 영역을 주거·보육·문화 등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연령별·사회적 계층별로 차별화된 복지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정책 마련’은 각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종합대책으로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합리화하여 경기도 동북부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거시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을 통해 성장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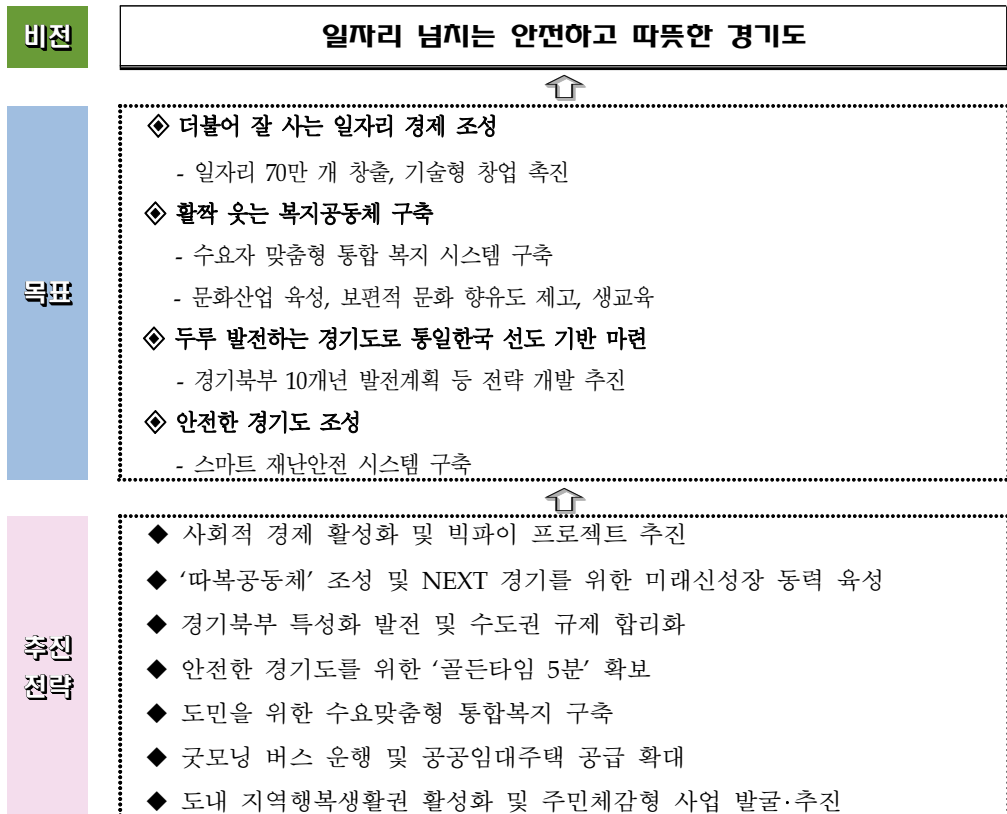
‘안전한 경기도’는 자연재해 및 참사 등 복합적인 재해상황과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기도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경기도의 공간적·기능적 역할과 민선 6기 도정 운영의 핵심개념인 '연정(聯政)'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발전비전의 추인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개념인 '지역행복생활권'계획의 취지와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현장 중심형 도정'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경제 조성',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 구축', '두루 발전하는 경기도로 통일한국 선도 기반 마련', '안전한 경기도 조성'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기도의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오픈 플랫폼’, ‘융·복합’, ‘공유적 시장경제 기반 조성’이다. 민선 6기 도정운영의 핵심 가치인 ‘연정(聯政)’은 전거한 3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연결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부문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신성장 활력을 조성하는 한편, 성과창출의 열매를 공유하는 대안적 경제체제 기반 조성을 통해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창조경제센터의 특화부문과의 연계를 토대로 ‘G-창업허브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인적자본의 활용을 위해 청년·여성·장년층·근로빈곤층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따복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반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를 위해 ‘복지허브화’ 전략을 추진하여 주민센터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수혜대상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의료 서비스’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지역별·계층별 특성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보육 및 청소년 시설의 확충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두루 발전하는 경기도로 통일한국 선도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계획으로서 북부지역 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북부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통일한국 시대의 성장거점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와 합리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DMZ일대’를 역사·문화·생태 중심지로 조성,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 중에 있다.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확대·개선하는 등 도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의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정책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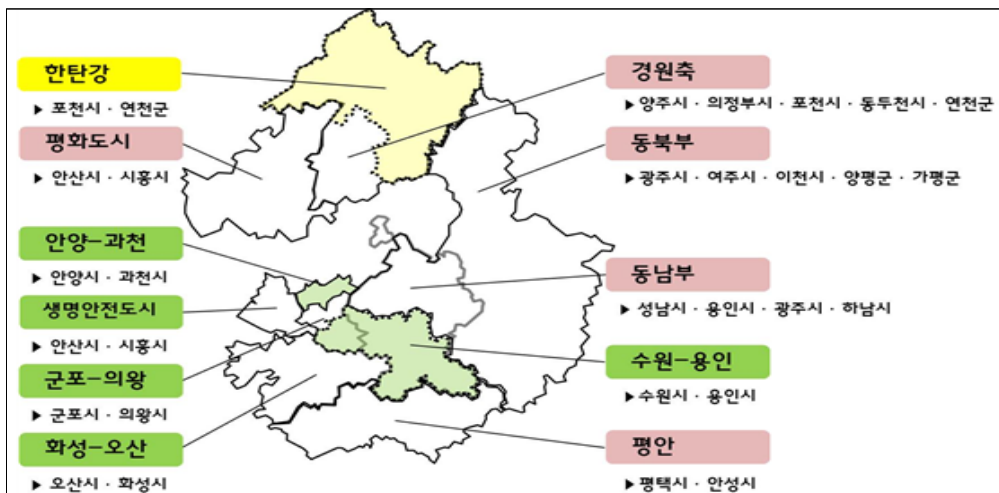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개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2월 기준). 30개 시·군이 13개 생활권을 구성(경기도 주관 11개 생활권, 타 시·도 구성 2개 생활권)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강원도 등 도 경계를 넘어서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각 생활권별 현황 및 현안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경기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구성을 시작하여 2014년 상반기에 6개 생활권을 구성하였고, 하반기에 7개 생활권을 추가로 구성하여 현재 11개 생활권(주관 시·군 기준)이 운영 중에 있다. 농어촌생활권 1개, 도농연계생활권 4개, 수도권시범생활권 6개로 중추도시생활권이 없으며, 수도권시범생활권이 존재한다.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

생활권명	비전	추진전략	유형
경원축 (양주·의정부· 포천·동두천·연천)	- 국가안보와 중첩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신성장동력 유치	-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화 - 정주여건 확보와 생활인프라 활용방안 모색	도농연계
평안 (평택·안성)	-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	- 농업경쟁력 제고 - 평택과 안성의 항만·내륙물류체계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물류 발전 도모	도농연계
동북부 (광주·여주· 이천·양평·가평)	- 도심과 농촌을 함께 아우르는 상생발전 기반 마련	- 농촌지역 문화·복지시설 확충 -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육성	도농연계
한탄강 (포천·연천· 강원도 철원)	- 생명과 역사가 숨쉬는 살아 있는 한탄강 개발	- 자연·생태·관광자원 공동 활용 및 개발	농어촌
평화도시 (고양·파주·김포)	- 자족도시 기능강화로 통일한국의 중심생활권	- 평화통일 교육벨트 구축을 통한 교육·체험· 건강환경 조성 -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녹색평화도시 조성	도농연계
생명안전 (안산·시흥)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 도시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 시화호 주변 환경개선 -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개선 - 시화호권 관광개발 및 주민불편 해소 - 반월·시화국가산단지 MTV개선사업 -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시범
동남부 (성남·용인· 광주·하남)	-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 동남부	- 탄천변 수질보전 및 수변 네트워크 조성사업 - 위례신도시 생활문화공동체(행복마을) 만들기 - 위례신도시 학군조정 사업	시범
화성-오산 (화성·오산)	-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도시 -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	- 지역자원 공동활용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 생활 인프라 확충 - 정조대왕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	시범
수원-용인 (수원·용인)	-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수원·용인 지역행복생활권	-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신도시지역(서천, 흥덕, 광고 등) 생활기반 확충사업 - 문화·복지 자원 공유 -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시범
안양-과천 (안양·과천)	- 관악산과 함께하는 자연도시 -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역사문화 도시 -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 관악산 둘레길 연계사업 (친환경 녹지축·문화관광벨트 조성) - 청소년의 안전과 인성을 책임지는 교육서비스 -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한 CCTV증설 및 활용사업	시범
군포-의왕 (군포·의왕)	-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상생공존의 행복도시 실현』 - 자연환경을 연계한 지역특성화 추진	- 군포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 공동 처리 - 주거취약지구 개선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범

경기도 내 11개 생활권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여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생활권별 현황 및 현안에 따라 차별적인 생활권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 11개 생활권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사업 외에도 지역별 현안에 적합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원축생활권(양주·동두천·의정부·포천·연천)의 ‘폐기물처리시설 교차사용 및 발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양주시의 소각시설이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운영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인근 자치단체(동두천·서울 은평구)와 공동 이용기로 협약하는 한편, 소각시설 공동이용에 따라 증대된 소각시설 여열을 에너지로 전환, 신규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7억(국비 50%, 지방비 50%) 규모의 이 사업은 님비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사회적 갈등과 예산을 줄이고, 여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평안생활권)’, ‘장사시설 공동이용(군포·의왕생활권, 수원·용인생활권)’, ‘채용박람회 공동 추진(경원축생활권, 군포·의왕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지자체 간 갈등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는 행정적 장치의 역사가 깊다. 또한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한데 모여 지자체 간, 도·시·군 간 갈등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하는 중재의 장(시장·군수 간담회)이 마련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상생협력의 경험은 지역행복생활권의 본래 취지인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시너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생활권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는 ‘한탄강생활권’이 대표적 사례다. ‘한탄강생활권’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으로 구성된 생활권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농어촌생활권이다.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연계·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와의 생활권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한탄강생활권’ 구성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은 한탄강생

활권으로 구성된 이후, 공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인 한탄강을 활용한 연계·협력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포천시와 철원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은 134억원 규모이다. 예산규모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8위, 사업선정 건수 기준, 9개 도 중 8위로 사업선정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이는 선도사업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저조한 선도사업 선정실적은 경기도 11개 생활권의 정책추진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본래 취지가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제고’에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정책기조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경기도민인 점을 생각할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HOPE)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비전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인 상황이며, 경기도에 대한 전향적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제활동인구 수’ 최대 규모인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이용자의 12.6%가 입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현황이 보고된 이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을 계획·추진하였다. ‘바로타고 앞아가는 굿모닝 버스’사업은 현재 2층 버스 19대 도입을 추진 중이고 맞춤형 따복버스 6개 노선 시범 운영, 멀티환승 정류소 8개소 구축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복지로서 대중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인 ‘굿모닝버스’의 본격적인 운영은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연일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찾아내 5개소의 물리적 개선을 수행하고, 1개소의 보행환경 개선, 2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개소의 회전교차로 환경을 개선하였다.

경기도에는 여전히 도시가스 등 주거생활의 기초적 서비스가 구축되지 못한 낙후지

역의 면적이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사업시행 결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7개 시·군의 15개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었고, 노후주택 4만5천 가구의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여 주민의 편의를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경기도 북·동부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중첩규제로 인해 생활환경 및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경기도 전역에 대한 균형개발은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북·동부 등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를 융·복합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계획에서 제시된 연차별 전략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6년에는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 북·동부의 경제특화 발전 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오디션 형태(Next경기 오디션)로 진행된 이 사업은 ‘지역산업경제기반 조성형’과 ‘생활경제형’으로 나누어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경제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따복 공동체)’를 지향한다. 1~2인 가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기도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에 적용하여, 통합지원체계를 확대·구축하고 있다. 보육·교육·주거환경 등 삶터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를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따복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정부의존도를 줄이는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6대 분야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따복공동체의 규모는 178개소에 이른다.

민선 6기 도정 운영의 요체인 연정(聯政)은 사회통합, 경제통합, 복지통합 등 도정 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이다. 사회·경제·복지 등 분야 및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수요자 맞춤 패키지 지원’이라는 전략을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로 구체화하고 있다. 2층 버스 도입 및 북·동부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공간구상 등은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 합리화를 시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정책의 정합성과 경기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체감형 정책의 추진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산업 간 경계가 없는 융·복합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이른 바, ‘골든타임’의 시기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산업의 발굴과 역량강화의 최우선 요소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경제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은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부문과 경제영역 전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실험적인 시도를 경주한 해였다. ‘G-창업허브 조성’과제를 통해 기술형 창업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자본 육성과 활용을 위해 청년·여성·장년·근로빈곤층 등 각 계층별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맞춤형 10-4 시간제 일자리’, ‘4050 여성 취업지원’)을 추진하였다.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G-창업허브 조성’은 대한민국 Start-up의 산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게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과제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빅파이(Big-Fi) 프로젝트’, ‘G-NEXT 게임산업의 메카’과제를 추진하였다.

‘빅파이(Big-Fi)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ICT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인적자원이 집적된 경기도에 적합한 분야이다. 2015년에는 ‘빅파이(Big-Fi)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요성파로 ‘빅데이터 추진 전담조직’ 마련, ‘공공데이터 조례 제정’ 등 빅데이터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빅파이(Big-Fi) 프로젝트’의 성과기반을 마련하였다.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마이닝 등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800인의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 160명의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부문 창출을 위해

민간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하여 선정된 유망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G-NEXT 게임산업의 메카’는 게임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차세대 게임인재를 양성하여 게임업체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로 10개 스타트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경기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 창업기반조성에 머물지 않고 ‘슈퍼맨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력을 얻게 되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슈퍼맨 펀드’는 대다수 창업(기업)의 어려움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펀드로서 200억원 규모이다. 4개 업체가 4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까지 8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88명 배출하였다. 경쟁력 있는 여성이 결혼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10-4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966개 업체의 5,352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승인받았다. 또한 ‘4050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34,500개의 여성일 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치 아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과제를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기반 고용 관련 비영리단체’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이 선정되는 한편,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개발, 기업연계취업, 국가 등 시책사업, 생활공간개선 사업 등에 1,988명이 참여하여 목표치의 145%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안산 반월, 성남 산단)를 리모델링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등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융·복합화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계획이다.

6차 산업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식품 ICT융·복합 추진’ 및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부문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일환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을 통해 17개소 운영, 412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열린 학습사회, 함께하는 교육협력’은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문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이다. 경기도는 교육을 복지차원으로 접근, 소외된 지역·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교육접근성 확대를 통해 상기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도입하여 경기도형 MOOC인 ‘G-MOOC구축’의 기초를 다졌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체계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교육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사업,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G-MOOC구축’은 도내 3개 기관에서 제공 중인 e-러닝을 통합, 콘텐츠를 강화하여 일원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민의 학습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통합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월 T/F팀을 구성, 6월에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12월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경기도는 G-MOOC을 활용하여 산학연 취업연계형 MOOC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여 경기도 산업인프라 네트워크 확대 및 지식융합형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다. 각각 마을프로그램 823개 운영을 통해 참가 인원 3만명, 총 112개 팀, 1,100여 명, 프로그램 200개 운영, 교육 참여인원 4,200여 명이 해당사업을 통해 교육기회를 얻었다. 이 외에도 주민강사, 학습코디네이터, 마을리더 679명을 양성하고 주민강사, 학습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54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경기도의 교육복지의 영역은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환경개선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892개교에 224억원 규모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을 확충하고 5개교에 77억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을 추진하였다. 안전한 놀이·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62개교에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운동장 노후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개선을 수행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다가오는 2018년은 경기천년(京畿千年)의 해이다.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성과는 경기도의 문화·관광 등 지역자산을 차세대 문화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민과 전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기반조성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생태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민에게는 특색 있는 문화 체험의 향유도를 높이는 한편, 전 세계적 관광지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사업의 표준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새롭게 다가올 미래 경기천년(京畿千年)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결과제는 단연 경기남부와 북부 간 지역적 격차해소일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의 문화예술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나, 인구 백만명당 문화예술시설 수는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로 경기중북부, 남서부에 집중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동북부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생활·전문체육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율을 제고하였다. 총 1,800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관람인원은 32만 명에 이른다.

공간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공간을 1개소 조성하였다.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마을공동체 작은 도서관 지원’ 등 문화소외지역에 소규모 시설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서관 8개소, 작은도서관 10개소, 박물관 1개소, 문예회관 2개소, 문화마을 2개소,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 5개소 조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생활·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통해 관 주도의 대규모 체육시설 공급을 지향하고 ‘동네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과 ‘주민밀착형 작은 체육관’을 7개소 조성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11개 생활체육클럽이 출범하였다.

경기도의 문화향유 관련 정책의 특징은 소규모 시설의 촘촘한 배치로 문화향유계층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주민자치 운영기반 마련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의 패러다임이 일방향·수혜적 복지에서 양방향·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35%(2014년)를 차지할 만큼 경기도의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2015년에는 경기도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등 복지시스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사각 없는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 13,391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대한 제도권 내 지원근거 마련, 총 5만여 가구에 407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147명 신규 채용하였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사업에 51,071명이 이용하였다.

사각 없는 지역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무료이동진료서비스 568회 시행, 33,701명이 혜택을 받았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등록된 가구가 19만 2천 가구에 이르며, 총 791회 방문하였다.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치매전문교육에 3천9백여 명 참가, 치매파트너 2만 2천명 양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사랑이음센터’를 3개소 설치·운영하여 총 4,200여명이 이용하였다.

보육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를 확충하였다. 청소년 시설 13개 소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24개 시·군 41개소를 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시행을 통해 1,071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의 복지사업은 사람 중심, 생명사랑 정신으로 기존 복지영역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공공디자인에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과 ICT,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의 미래비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이다. 국내 최대 일자리, 국내 최대 거소인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삶터, 공동체 기반의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의 명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신성장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약할 것이다. ‘NEXT경기’는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빅데이터, 게임산업 육성 및 차세대 자동차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창업 허브 조성을 통한 기술형 창업의 촉진 등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따복 공동체’와 ‘공유적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동반성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촘촘하고 효율적인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복지체질개선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플러스복지’ 과제를 통해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및 지원계층 다변화, 근로능력자의 자활-고용서비스 연계 지원, 주거·요양·병원·여가시설이 복합된 ‘어르신 행복촌’ 조성 등 계층별 맞춤 복지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동북부 등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과도한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의 중심지로서 북부지역의 기능적·공간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의 핵심 잠재력인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및 도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부문에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과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및 구축을 통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로 마련하고자 한다.

제10장 강원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54.4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8천명 증가하였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2011년 28조원에서 37조원으로 늘어나 2014년 현재 1인당 GRDP는 2,457만원이다.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로 2008년에 비해 45.4% 증가한 실적을 거두었다. 취업자수는 2011년 68만명에서 71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6.6%로 6년 전에 비해 1.6%p 하락하여 전국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27,981	32,438	36,886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509	1,536	1,544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892	2,172	2,457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1,424	1,977	2,070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674	676	711
재정자립도(%)	53.9	51.9	50.3	28.2	27.5	26.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강원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7%, 제조업 10.4%, 광업·농림어업 7.9%로 나타나 다른 시·도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문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각각 33.6%, 2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21.5%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은 업체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2.7	25.7	16.2	32.2	26.6	17.1	33.6	27.8	20.8
음료	3.0	3.7	5.6	2.6	3.4	7.3	2.4	3.1	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5	2.0	5.0	3.6	2.8	3.6	4.0	2.5
비금속 광물제품	15.7	17.5	24.3	15.0	13.8	20.5	14.9	14.6	21.5
1차 금속	1.4	1.6	7.0	1.4	2.2	7.9	1.7	2.1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9	5.6	4.8	5.4	8.1	5.2	4.9	6.2	5.3
전기장비	3.4	3.7	3.4	2.9	3.3	4.9	4.7	4.9	5.4
기타 기계 및 장비	5.6	5.7	4.4	6.5	6.5	5.1	5.1	5.2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	11.9	12.3	4.2	12.9	14.4	5.7	12.7	1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2.4	4.0	1.1	2.3	5.5	1.3	2.6	4.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3.0	5.7	1.3	3.5	6.5	1.5	2.9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8	10.2	15.1	12.4	9.3	15.3	12.5	8.7	14.2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9.5	6.0	4.1	13.1	8.0	5.0	14.1	10.8
교육 서비스업	16.8	12.6	6.1	16.3	11.0	5.5	15.6	9.7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27.5	27.0	13.0	30.5	26.2	14.1	32.2	27.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3	15.4	24.0	13.8	12.1	21.8	13.7	13.3	22.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0	19.4	12.2	38.0	18.1	11.2	36.3	16.5	9.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각 32.2%, 27.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모두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모든 부문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3,705억원, 연구개발인력 10,613명, 연구개발조직수 397개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0.2~0.3%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41건이며, 등록은 1,381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5%, 1.4%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27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5%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79건 증가하여 0.4%p 증가하였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57,570 (0.8)	339,950 (0.7)	370,470 (0.6)
	연구개발인력	9,128 (2.1)	10,047 (1.9)	10,613 (1.8)
	연구개발조직수	202 (1.5)	311 (1.4)	397 (1.2)
특허	출원	1,314 (1.0)	1,638 (1.2)	2,441 (1.5)
	등록	602 (1.0)	934 (1.3)	1,381 (1.4)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는 2000년대 이후 전국 최초로 수립·추진해온 첨단산업육성계획인 삼각테크 노벨리 전략에 힘입어 3대 거점지역(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전략산업 육성 및 R&D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명·건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관광문화 등)은 강원도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창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과 더불어 강원도는 경제성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주거생활 여건과 교육 여건도 가지고 있다.

향후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23만 명의 고용유발, 64.9조원의 직·간접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와 함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속초항 및 동해항의 대규모 개발사업,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동해안을 북방경제의 산업·물류·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강원도의 발전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제로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접근도로 개선 등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준비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 마련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한 운영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강원도를 동북아의 관광 중심, 겨울올림픽 중심, 청정 농수축산물 중심, 의료기기와 나노 바이오, 비철금속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대응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복지 증대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러시아 및 북유럽까지를 아우르는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 및 동해안 물류 전진기지 육성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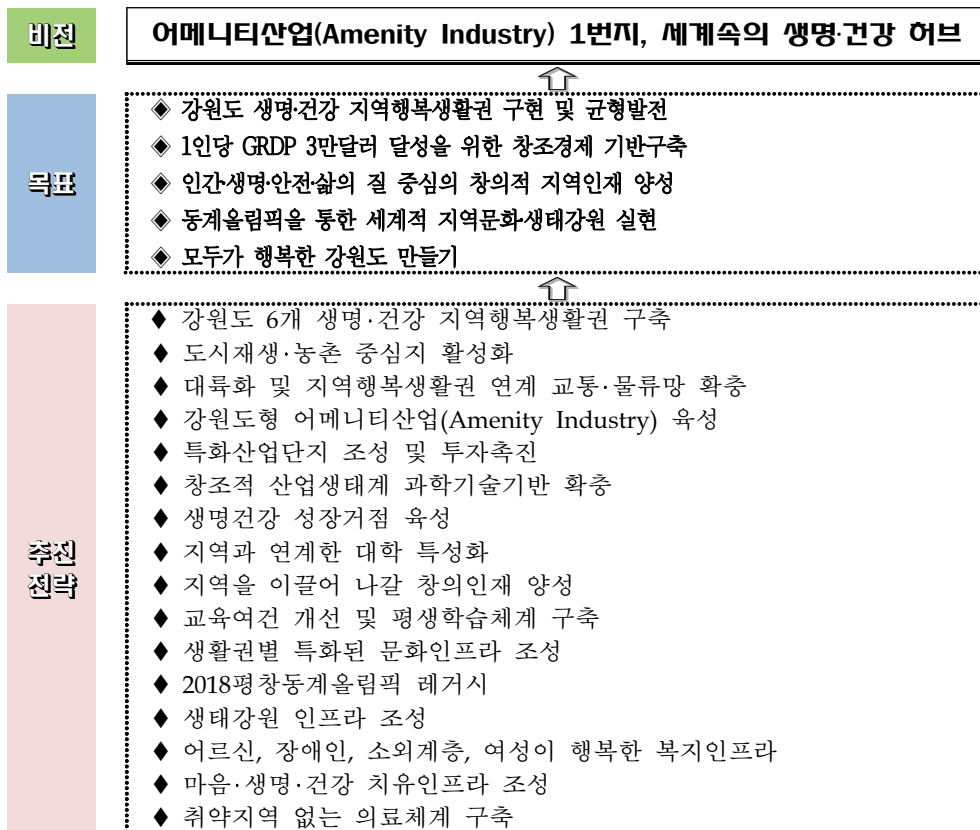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생명·건강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도형 창조산업인 어메니티 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를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5대 중간목표로는 첫째,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둘째, 1인당 GRDP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셋째,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넷째,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로 설정하였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라는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크게 5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전략으로는 시군별 차별화된 도시재생과 52개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 주도의 협력 발전체계 구축과 거점기반 조성사업, 대륙화·동계올림픽 및 생활권 연계 교통·물류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전략으로는 창조적 어메니티 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육성사업과 문막반계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구역을 거점으로 한 외투지역 확대사업, 의료기기특화산업단지를 강원도 제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도록 기존 산업단지 인프라 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과학기술 기반확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내국인 숙박관광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지 구축사업,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강원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농어촌의 생산성 혁신과 도농상생 6차산업화 사업 등 18개 시군이 모두 다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지원으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과 경쟁력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도내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 육성,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강원도형 차세대 리더 양성, 100세 시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추진전략’으로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and 문화올림픽 콘텐츠 개발,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인프라 조성 and 생활체육 활성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시설의 내실화 및 활성화,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략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 인프라·서비스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강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설치 및 지원, 지역주도형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행복 2배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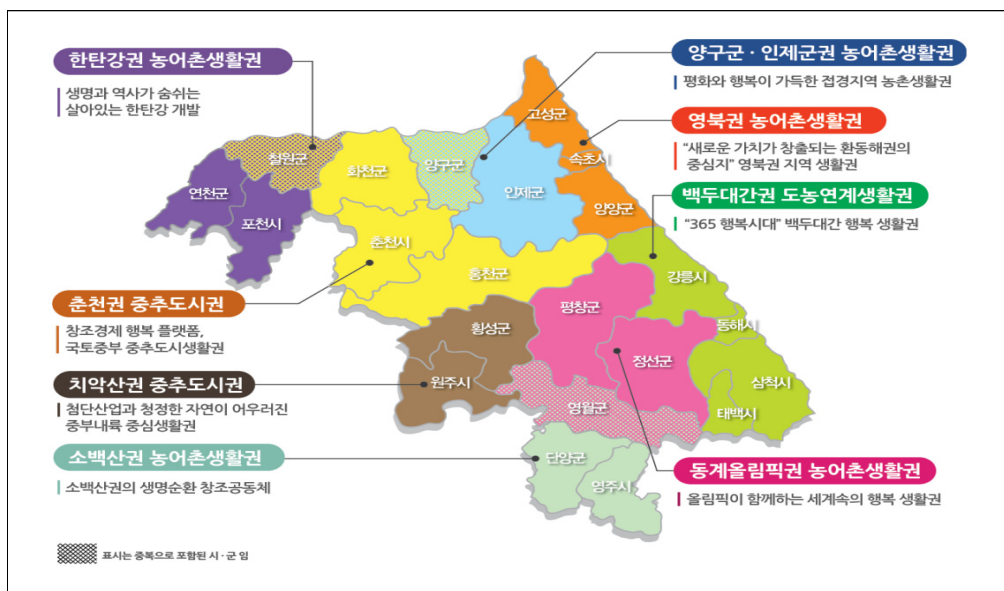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에 맞추어 지자체간 연계성(연계성, 수계, 산, 통근율, 통행·통학권 등), 문화·역사적 동질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실적(기존 농림축산식품부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등과 같은 기능적 연계협력 가능성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시도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생활권(한탄강권, 소백산권) 등 8대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이와 함께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연계협력사업(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 강원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2015년 협

의회 2회 개최)하였고, 생활권과의 협력을 위해 '강원도 생활권 발전협의체'를 구성(2015년 9월 23일)하여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컨설팅을 도모하였다. 이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5개 선도사업(총 7,707백만원)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새뜰마을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35,65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각 해당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선도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생활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은 고위험 임신모의 생명을 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새뜰마을 사업도 전국 최초로 양구군에서 사업 착수식을 진행하는 등 타 시·도 대비 진척도가 매우 양호하며, 시·군별 사업들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6시·군 72개 사업 추진), 소도읍육성사업(12개, 37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신규 2개 사업, 22억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64개 사업 79억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자족성 향상과 읍·면 종합정비 하드웨어에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이루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소교량 가설 등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정비 지원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농촌지역 활성화 및 강원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고용기회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170개 마을), 향토산업 7개소 육성, 전원마을조성(5개지구), 시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교통 및 생활안전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위험구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조속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18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3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1개소)등 사업을 통해 도민의 교통안전 환경 및 복지 증대가 이루어졌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완성형 어메니티산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육성을 통해 18개 시군 전체의 생태계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을 활용한 주민 주도적 공동체 활성화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의 경우는 주력산업 100개 과제 185억원, 경제협력권산업 65개 22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역공동체사업은 18개 시·군 180개 사업장에 2,517명이 참여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2015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49개를 발굴·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565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활성화와 6차 산업화를 통한 강원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공사(44억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이주비율(61.8%),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85%공정률) 건설 등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농산어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관정 등 생활용수 시설물 설치 8개 지구(강릉·삼척·정선·양구·인제·양양 6개 시·군)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2대 구획경지정리 150ha(대마3지구), 밭기반정비 154ha(둔전,자운1지구) 등이 추진되어 계획대비 100% 성과를 나타내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774ha 면적에 총 11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자연휴양림 3개소, 삼림욕장 4개소 확충),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수산물산지가공시설 5개소, 시설현대화 4개소), 연안정비사업(침식방지시설 3개소, 침식실태조사1개소)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에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간·생명 중심 어메니티 산업에 특화된 대학 특성화와 지역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강원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시범학교 166교에 운영비를 지원(초 126교, 중 40교)하였으며 지역협의회 및 현장지원 컨설팅단에 대한 운영지원(17청)도 추진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350교 중 349교에서 오후돌봄교실(337실)을 운영하였으며, 저녁돌봄(21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161실)을 통해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8교를 운영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영어학습, 고아원 봉사활동, 영어흥미도 상승(217.5% → 368.0%), 자존감 상승(250.0% → 400.0%)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144개교)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회화 중심 외국어교육을 확대하여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강원청년지도사 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61명의 청년지도사를 양성하였으며,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30명)을 통한 행정기관 근무기회 제공으로 도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인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4개 대학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재학생 3,079명에게 총 1,197백만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도내 고교 출신자의 도내 대학 진학을 확대를 도모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강원도는 지역 특화자원 및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영화관 및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 및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노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재창조, 시군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공공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지방문화원)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형스포츠클럽, 생활체육광장, 체육진흥시설 지원·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생태하천정비 추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놀이터,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존,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도내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여 육성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과 문화올림픽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사업(1관)과 전통문화 진흥지원사업(2관),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단종국장재현, 강릉단오제)을 통해 지역무형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 간 균형있는 문화인프라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6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2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3관)을 추진하였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관광지(8개), 문화관광(17개), 생태녹색관광자원(4개), 동해안권 광역관광(3개)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6개) 등 32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율 62.5%, 집행률 72.9% 추진)사업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사업 추진율 63%, 집행률 61.2% 추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1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천 10개소, 석호 4개소)을 추진하여 강원도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서비스 확대 및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 청소년 시설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구축(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포괄보조 확대를 실시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주도형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인프라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분만·외래·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질병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주도형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별 건강문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알코올, 자살, 정신장애 등 주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복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 인프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18개 시·군, 5,842명 이용, 종사자 73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지원형 8개소, 농산어촌형 8개소, 600명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3개소 추진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4개소 완료)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74개 사업, 9,788명 이용),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1개소 완료, CCTV 350대 통합, 850백만원), 자활기업 육성사업(36개 기업 및 사업단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의료취약지 인프라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분만건수(170건), 외래진료건수(13,111건)를 달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75%의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을 달성하였고 취약지 원격협진을 위해 6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및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강원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와 함께 민자 등을 적극 유치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2015년에 강원도는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를 선점하는 정책추진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강원도가 직면한 상황 및 당면 과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방문할 내·외국인 맞이 준비에 매진하고, 미래 100년 강원경제를 위한 경제구조 개편 및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강원도는 2015년도 1인당 GRDP 25.9백만원을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2% 증가한 27.6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차이는 아직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의 비중확대와 함께 1·2·3차 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지역산업과 생명·건강생활권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도 대표 문화공연 및 문예축제, 도민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시군별로 대표 문화·예술공연, 문화프로젝트 및 축제·이벤트 등을 개최할 것이다.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기반을 구축하고, 2018년까지 1인당 GRDP 3만달러 달성을 위해 제조업 비중 확대와 함께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강원도형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강원도의 도정 목표인 행복 2배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의료·복지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육성하여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복지예산 확대 및 ‘강원희망 e빛’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예방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580명), 직업재활시설 지원(33개소), 장애인 생상품 판매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는 2016년도에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밀하고 정교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1. 지역경제 일반현황

충북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57.9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만명 증가하였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2011년 42조원에서 4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3,139만원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2011년 122억 달러에서 17% 증가한 142억 달러 실적을 보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1년 75만명에서 8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재정자립도는 33.6%로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33,036	42,489	49,137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520	1,563	1,579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192	2,762	3,139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9,213	12,170	14,196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710	746	810
재정자립도(%)	53.9	51.9	50.3	34.2	32.7	33.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지역산업현황

충북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9.5%, 제조업 46.4%, 광업·농림어업 4.1%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0.7%, 23.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순이었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업종의 변동 폭은 적었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14.3	12.6	11.7	14.4	12.8	11.9	14.4	13.3	1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1	5.8	7.3	7.9	6.3	8.6	8.0	7.0	8.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	2.7	3.6	2.6	3.3	3.9	2.4	3.4	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1	9.7	9.9	12.3	8.9	7.2	12.8	9.7	7.2
비금속 광물제품	8.0	6.1	5.3	7.6	5.6	4.9	7.3	5.2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6	6.9	5.1	9.8	5.7	4.5	10.9	6.3	4.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4	24.1	23.5	7.0	22.1	22.5	5.6	20.7	23.2
전기장비	6.3	6.6	8.5	6.5	7.3	9.2	6.8	7.9	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3.7	4.7	4.2	4.9	6.4	8.2	6.2	7.4	8.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2.7	7.0	1.2	2.8	10.0	1.5	2.9	9.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4	4.4	1.2	2.5	5.1	1.3	2.1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4	10.9	22.7	13.6	10.1	15.5	12.9	9.3	15.7
사업지원 서비스업	4.1	13.4	8.6	4.9	14.5	13.0	5.8	16.9	11.4
교육 서비스업	18.2	14.7	8.9	16.9	12.3	8.1	16.1	10.4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3	28.3	27.0	13.3	31.3	29.0	14.5	32.8	32.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6	9.3	8.2	13.4	9.1	6.8	12.8	8.9	7.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3	18.4	13.1	35.6	17.4	12.4	35.2	16.7	11.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8%, 3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비중 변화가 적었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1.3조원, 연구개발인력 18,872명, 연구개발조직수 1,052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은 각각 0.1%p, 0.3%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비중은 0.4%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226건이며, 등록은 1,854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0%, 1.9%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029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26건 증가하여 0.1%p 증가하였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43,443 (1.9)	881,286 (1.8)	1,253,947 (2.0)
	연구개발인력	12,230 (2.8)	17,305 (3.3)	18,872 (3.1)
	연구개발조직수	519 (3.7)	764 (3.5)	1,052 (3.3)
특허	출원	2,197 (1.7)	2,574 (1.9)	3,226 (2.0)
	등록	1,128 (1.8)	1,644 (2.3)	1,854 (1.9)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천 한방, 충주 당뇨, 옥천 의료기기, 괴산 유기농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세계 3대 바이오밸리 허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항공MRO, ICT 융합산업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업 기반을 통하여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은 국내 5대 공항으로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거점 철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송역의 발전으로 국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신수도권의 중심지로 성장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정부의 수도권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지역 인재 유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저지 및 지속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인구가 충북 전체 인구의 52.3%(2014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창조지역사업 등의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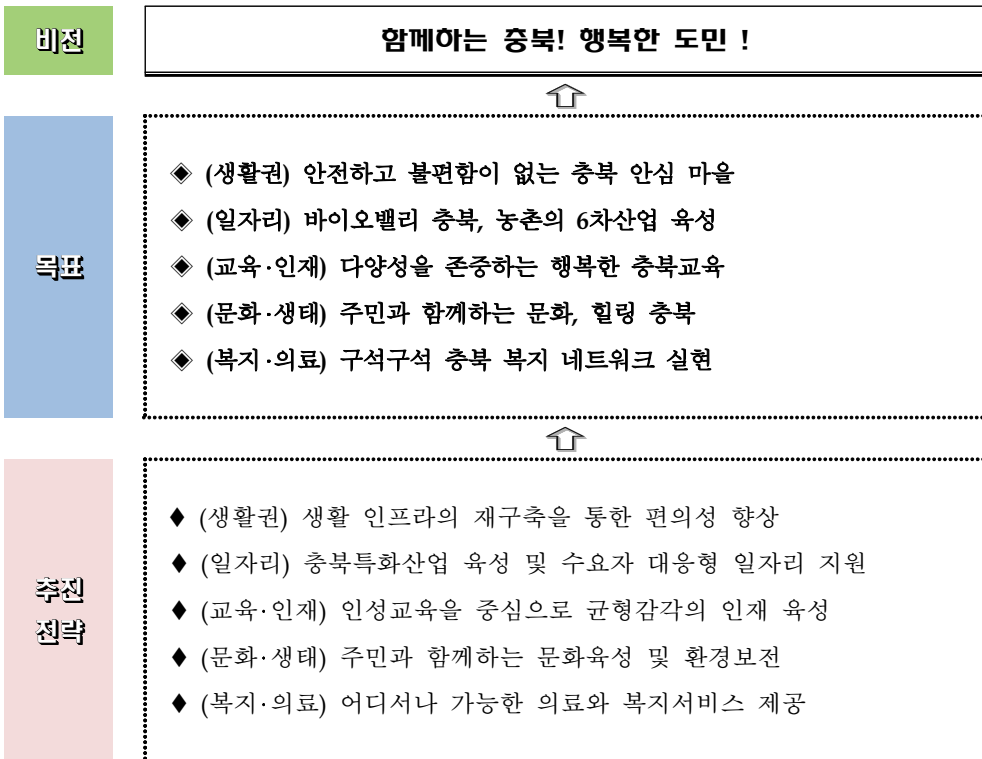
그리고 2014년 기준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4.2%를 차지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지출 부담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북은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의 5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으로 ①도시 활동의 역동성 제고, ②안전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③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④편리한 종합 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①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②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 ③산업단지의 창조지구로의 진화, ④지역과학기술의 혁신체계 구축, ⑤매력 있고 고급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⑥성장 거점을 이용한 파급효과 창출, ⑦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실용교육,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②창조경제를 견인할 대학우수인재 육성, ③기업 밀착형의 인재육성 공급, ④평생교육 도시 여건 마련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 ①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기반 구축, ②문화참여기회의 확대, ③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속의 문화·힐링 충북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모범적인 충북 건설, 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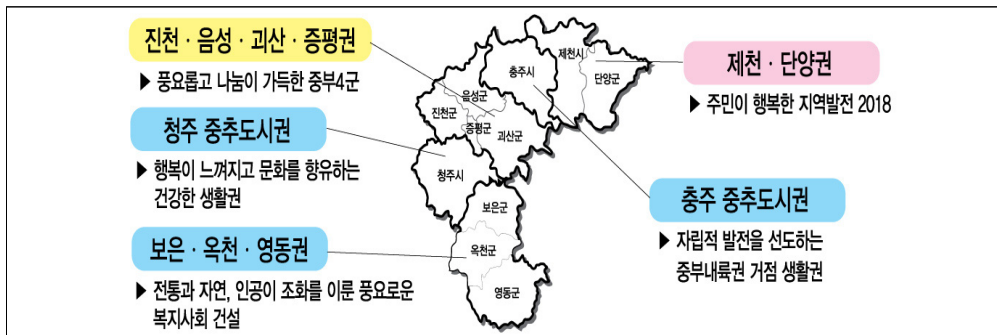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2014년 2월 14일)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4월 7일)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2015년 6월 25일)을 개최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선도사업으로 2015년에는 7개 사업에 4,573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1,188백만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878백만원) 등을 추진하였다. 새뜰마을 사업으로 2015년에는 8개 사업에 4,012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저곡마을(400백만원), 괴산군 관평마을(793백만원)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창조지역사업으로 2015년에는 6개 사업 1,288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 괴산군은 유기농 로컬푸드를 이용한 전통천연발효사업(155백만원)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2015~2017) 현황 및 성과

(단위 : 백만원)

권역	사업명	사업비(2015년)	주요성과
합계	7건	4,573	
청주권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	1,188	종합마스터플랜 수립계획, 8개발계획 수립
북부권	키즈 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및 운영	490	키즈카페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남부권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878	행복공감학교 프로그램 개발 진로찾기 체험
중부권	창의적 생태복원 및 자원화 꿀벌랜드 조성	1,377	꿀벌랜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대전권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 생애전환 프로젝트	100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삼도봉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204	세부계획 수립 및 행복버스운영 위원회 구성
소백산권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336	천연생약재 활성화사업단 구성 및 추진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및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청주권 일자리 HUB 센터 사업으로 구인 2,265명, 구직 2,329명, 알선 2,314명, 취업 1,183명 등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였고,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15년 상반기에만 귀농·귀촌 3,262가구를 유치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3,979백만원을 투입하여 26개소에 마을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를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 88.9%로 목표(87.6%) 대비 초과 달성하였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91km를 연장한 1,288km, 공급세대는 총 425,645세대로 21,471세대 늘어났다. 그 밖에 1,800동에 해당하는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등 낙후된 농촌 및 도시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잦은 12개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14개소 개선, 위험도로 10개소 구조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취약 지역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또한 저상버스 12대(1,192백만원), 특별교통수단 7대(280백만원)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015년 하반기에 9,964회 운행, 14,022명이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화 사업으로 총 15,598백만원을 투입하여 비상용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고, 여객청사 증축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다. 청주공항은 개항 이래 최대인 정부예산 27,909백만원(2016년)을 확보하였고, 2015년말 41개 노선 확충 및 공항 이용객 211만명 돌파로 전국 5위 규모 공항에 안착하였다. 동서 6축 고속도로는 2015년에는 충주~제천 구간을 개통하였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및 세종~청주~청주공항간 광역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KTX 오송역은 2011년 120만명에서 2014년 29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기점으로 2015년에는 41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공정률 50%) 등의 철도사업 또한 진행 중으로 지역 교통·물류망을 한층 더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북은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ICT, 공항 및 항공정비사업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등을 통하여 전국대비 충북경제 4%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고용연계형 기술개발 27건 등 총 48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67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2015년 말까지 충북 주력산업분야에서 총 2,800여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 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총 28개 과제에 1,600여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324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2015년 3/4 분기까지 62,7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바이오산업 인프라에 대기업 연구개발(R&D)과 자금을 연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LG그룹을 전담 기업으로 2015년 2월 4일 개소하였다. 지역특화산업(뷰티·바이오·친환경에너지 등) 분야 101개 중소·벤처기업 발굴·지원 결과 154명 신규 고용 창출 및 399억원의 매출증가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LG그룹의 특허 317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개

발과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개방 이외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국내외 특허 출원 43건을 지원했고, 총 82개사를 대상으로 특허 기술 진단을 수행하였다.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을 통해 30개의 특허 사업화 후보를 선정해 시상하고, 10개사에는 사업과 자금 제공, 20개사에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중남미 해외진출 17개 업체지원 및 중소기업 784억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업 29개사(2015년 22개, 2016년 7개사) 발굴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존 구축·운영을 통해 잡매칭 22회, 109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업연구관에 49개 기업 입주, 184명 고용창출, 연 매출 1,307억원을 달성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을 통해 4개소 준공, 신규 4개소 착공 등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충주 5산단, 제천 3산단, 괴산 수산식품산단 등 3개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진천 신척산단 등 1개 단지를 준공하였다. 진천 산수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2015년 8월에는 분양을 완료하여 우수 외국기업 유치에 기반을 닦았다. 또한 지역성장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SB플라자 건립 계획설계를 착수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핵심연구지원시설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60과제, 109억원, 우수 연구개발기관 6개 업체를 유치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노력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주 계원지구 30ha, 음성 갑산중동지구 36ha 등 총 66ha 면적을 조성 완료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으로 방문객 285명, 매출액 4,220백만원, 6개의 농촌축제지원사업으로 방문자수 10,312명, 매출액 66,058천원을 달성하였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참여농가의 농산물 매입실적 20톤을 달성하였고(목표대비 200%), 저온저장시설 41개소 설치 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년 9월 18일 ~ 10월 11일)를 관람객 108만 명, 국내외 우수기업 264개 참여, 바이어 1,140명, 2,173만 달러 수출 상담과 현장계약 32억원 등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충북은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도 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오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임상시험센터, 바이오메디컬

시설(4개소)을 건립하였고,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가 2015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을 2015년 3월에 준공하였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는 총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8,924㎡에 착공하였다(2015년 6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은 181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2016년 1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다(2014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같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하였고, 현재는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연구개발 기관·기업 24개 등 총 87개 기업을 유치하여, 42.3%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제천은 2017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고, 옥천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조정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충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내 전역으로 성과를 확산시켰으며, 특히 오송은 정책기관,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산학융합지구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주도하였다.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2015년 10월에 개최한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는 164개사, 바이어 965명이 참가하고, 총 363건, 1,085억원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충북의 화장품·뷰티산업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성장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으로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기후환경실증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용량 ESS 시험평가센터를 착공하여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외 증평군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을 완료하고,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자동차 연비센터, 기후환경 실증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농어촌 ICT 활용 시범학교 추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 및 토론학습 등 양질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ICT 활용 시범 학교 추진에 54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범 운영학교 117교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및 ICT 콘텐츠 활용 문예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충북의 초·중·고 전체인 471교를 대상으로 함께 행복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농촌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 10교,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2교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초등학교 160교, 중학교 20교에 통학차량 지원, 시군별 농어촌 유학 상담 전담 부서 운영, 통폐합 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으로 2015년 충주 양성중을 선정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충북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3개 대학에 2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맞춤형 인재양성 4,219명, 기술지도 523건, 기술이전 89건을 추진하였다. 우수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성화고 26교 중 학교 기업 7교를 선정하여 운영비 36백만원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그 외 충북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학교육 연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선도모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100세 시대 주민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 5개교, 평생학습중심 대학 2개교를 지원하였고, 404명 이수, 207명 자격취득, 15명 취업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706명 이수, 259명 자격 취득, 16명 취업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였다. 13,589백만원을 투입하여 의림지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 7개소를 건립하고,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으로 실내빙상장 전국 공모에 선정되어 충북에 전무한 빙상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천에 진천선수촌을 건립 중이며, 2015년 현재 3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사업으로 도립교향악단 및 도지정예술단이 소외지역에 공연 85회를 수행하였고, 저소득층에 좋은 공연 관람권을 지원하여 62개 작품에 총 16,419명이 관람하였다(2015년 12월 15일 기준).

또한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영동군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산림바이오휴양밸리 조성의 일환으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옥천 휴-forest 조성, 영동 웰니스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사업은 황토마을 숙박동 8동, 안내센터 등이 추진 중이다(전체 공정률 40%). 2015년 10월 8~10일 개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 한중 대학생가요제, 한중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3만여 명이 참석하였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 외 청남대 역대대통령 기록사업 완료(2015년 6월), 범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관광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해 27,851백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괴산(설치완료), 단양(설치 중), 증평(설치 중) 등에 각 1개소씩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3,690백만원을 투입하여 20지구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3,397백만원을 투입하여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5개소, 310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시 및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58,000가구,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6개월 금연성공 성공률 42%(17,000명)를 달성하였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3.6만 건, 자살 관련 상담 3.2천 건 등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11개 시·군 24명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중인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단계적인 읍면동 이관을 시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고령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51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210명을 구성하여 경로당 3,000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13개 센터 및 108개 사업단 지원을 통하여 36.4%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달성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558백만원을 투입하여 1,100명의 인력을 제공하였고, 1,7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진천혁신도시내어린이집, 동성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2개소를 신설하였고, 120백만원의 기자재비를 지원하였다. 지역 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41개소에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하였고, 11개소에 1,651백만원을 지원하여 43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영동 황간청소년문화의 집을 준공하였고, 옥천, 증평, 진천의 청소년 시설 3개소의 기능 보강을 실시하였다.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건립 중이며(2015년 공정률 90%), 가족친화 기업인증·기관을 79개소(2015년 누적 예상치)로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10개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4명을 배치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내 산부인과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9개소 및 당직 의료기관 2개소를 지원하였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수검률 33.48%를 달성하여, 전국 2위의 수검률을 기

록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 36,127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당초 목표인 36,000명을 초과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2015년이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기세를 안으로 다진 해였다면, 2016년은 ‘충북경제 전국대비 4%를 통한 영충호 시대의 리더 실현’을 목표로 충북의 기운과 기세를 세계 만방에 힘차게 펼치는 충기만세(忠氣滿世)의 정신으로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도민행복시대의 구현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동서 5·6축 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호남선 분기점으로서의 오송역 위상강화 등 국토 X축 교통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아우르는 조정자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산과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 충북형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특히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단지, 제천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완공, 충주 당노바이오밸리 조성을 통해 세계 3대 바이오밸리로 도약해 나아갈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완공, 과학벨트 SB 플라자 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연구지원센터, LG그룹과 함께 하는 충북창조혁신센터 구축, 혁신도시의 솔라 그린시티 조성,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MRO) 완공 등을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6년 10월 4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북이 K-Beauty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배려 받는 충북형 복지의 강화를 통해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9988행복나누미·지키미 사업 확대 및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골마을 행복택시 마을 확대(150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완공 등을 통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모든 사람이 배려 받는 충북을 더

육 균형 나갈 것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 등 지역이 함께 하는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2012~2016년)에 548억원을 투자하고, 2017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 또한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부권의 선도사업, 행복마을사업, 27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충북 종단열차 운행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산업단지 준공 및 신규 지정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다섯째, 수출농업 지원으로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수출목표액 6억 5천만불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유기농 육성에 5,185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청주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건립하고, 괴산에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신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충주 국제무예센터 건립 및 올해 9월에 개최되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생활체육공원 확충, 세종대왕 행궁 조성,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작은 도서관·영화관 건립 등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북부권의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음성 UN평화관과 진천 보재 이상설 기념관, 남부권의 바이오산림휴양벨리를 통해 고품격 힐링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도민 중심의 안전한 충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가동하고,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 건립 착수, 단양소방서 완공,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안전신문고 운영, 4대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하여 24시간 365일 안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남의 2014년 기준 인구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으로 2011년에 비해 4만명 감소한 206.2만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04조원으로 2011년 92조원에 비해 12조원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4,702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1년 600억 달러에서 8.6% 증가한 6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1년 100만명에서 11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5.6%로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64,067	91,816	103,740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2,019	2,101	2,062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3,185	4,355	4,702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42,936	59,954	65,112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973	1,001	1,158
재정자립도(%)	53.9	51.9	50.3	37.8	35.4	35.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충남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 내 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8.4%, 제조업 56.9%, 광업·농림어업 4.7%로 나타나 17개 사·도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3.5%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8.7%, 21.1%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13.0	9.0	5.5	12.1	8.2	4.5	11.7	7.4	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3	5.4	13.2	6.0	5.1	11.5	6.1	5.5	16.0
비금속 광물제품	7.8	6.3	4.4	7.1	5.3	3.6	6.7	4.3	2.6
1차 금속	3.5	4.4	9.0	4.6	5.7	12.2	4.8	6.5	10.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2	6.5	3.0	10.5	5.9	2.7	11.1	6.3	3.2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0	18.6	20.5	4.3	20.8	27.3	4.1	18.7	21.1
전기장비	5.5	7.9	6.1	5.6	7.1	4.9	5.2	7.1	5.1
기타 기계 및 장비	11.7	9.1	4.5	12.1	8.8	4.4	12.6	9.6	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4	13.8	11.3	12.2	14.7	10.8	13.5	16.5	12.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3.2	8.5	1.0	3.2	10.8	1.3	3.0	9.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1.5	2.8	0.9	1.8	3.7	1.4	1.5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10.2	16.2	13.9	9.3	22.2	13.9	8.6	16.4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9.9	6.6	4.7	14.9	8.9	5.6	16.2	12.7
교육 서비스업	15.8	14.1	8.5	15.0	11.6	7.2	14.3	10.3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30.7	32.1	15.0	32.5	26.0	16.1	34.6	29.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0	9.7	11.2	12.1	8.2	8.5	11.5	7.5	8.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1	20.8	14.1	37.3	18.6	12.7	36.1	18.4	13.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6%, 2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소폭 하락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2.3조원, 연구개발인력 22,828명, 연구개발조직수 1,288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의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2010년 5.0%에서 2014년 3.7%로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473건이며, 등록은 3,598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3.9%, 3.7%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2,083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4%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439건 증가하여 0.2%p 증가하였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725,530 (5.0)	2,942,683 (5.9)	2,323,791 (3.7)
	연구개발인력	18,916 (4.3)	24,323 (4.6)	22,828 (3.8)
	연구개발조직수	650 (4.7)	938 (4.3)	1,288 (4.0)
특허	출원	4,390 (3.5)	4,923 (3.6)	6,473 (3.9)
	등록	2,159 (3.5)	2,600 (3.6)	3,598 (3.7)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남은 지리적, 산업적,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현시점에서의 충남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편,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중심의 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아시아 IT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남은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충남
특표	↑ ◆ 환황해시대의 경제거점 육성 - GRDP 110조, 수출 770억달러, 중부권 최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 당진항·대산항 조기 개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도시재생(8개소), 농어촌중심지활성화(30개소)를 통한 재창조 사업 - 안전 인프라(CCTV), 생활인프라(도시가스) 등의 전 시·군 확대 보급 ◆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북부권(아산만권)-내포신도시-공주역세권(금강권)의 Network 도시체계 구축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350개소) 및 사회경제네트워크 구축
주진 전략	↑ ◆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2. 추진전략

충남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세부전략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문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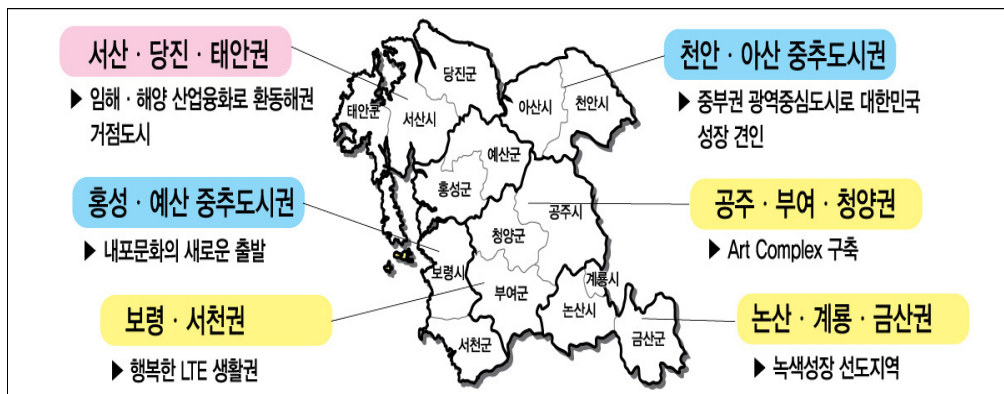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서산·당진·태안 도농연계생활권, 공주·부여·청양 농어촌생활권, 논산·계룡·금산 농어촌생활권, 보령·서천 농어촌생활권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천안·아산 생활권은 지역행복생활권 우수지자체 및 생활권 행정협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도 지방재정 중앙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홍성·예산 생활권은 내포역사문화 투어사업 외에도 내포문화숲길 조성, 내포직거래장터 운영,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홍성예산 친선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도 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서해안안전센터 설치사업, 산수향 육쪽마늘 공동생산·홍보사업, 프란치스코 교황 따라가기 기차여행 등 연계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은 농촌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창조적 마을만들기(84개) 및 역량강화(14개 시·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및 농촌현장포럼 운영(63개 마을)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면단위)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 92.2% 달성, 가뭄대비 비상급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사육 밀집 수계지역에 가축분뇨 공동화시설을 확충(아산, 보령 2개소)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양질의 퇴·액비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46개, 19.7km)로 재해예방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산 외곽순환도로(공정률 60%), 부여 백제호 관광 진입도로(공정률 40%) 개설, 서천 유부도 호안시설 보강(L=200), 예산 삼교 그린나우 프라자 조성 등 낙후지역의 성장촉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인 도서지역의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해안도로 개설(효자도, 응도, 우도) 및 야영장 및 낚시체험장 조성(죽도) 등을 추진하고, 공동작업장(원산도) 설치, 배수로 정비(응도) 및 방파제 연장(가의도) 등 도서민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천안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추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중심가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인접시군간 연계협력사업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공주·부여·청양), 내포 창조관광기반 구축(홍성·예산), 서해안 안전센터 설치(서산·당진·태안),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6차산업(논산·계룡·금산) 추진을 통해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도로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홍성~내포신도시 구간, 예산 구) 응봉사거리 2개소의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꾀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어린이 유괴 및 납치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영상 인프라를 확충(CCTV 192개소 설치)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남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매출 극대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디스플레이산업의 5개 주력산업 육성, 공모를 통한 58개 과제(R&D 34개, 비R&D 24개)를 선정·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도내 핵심산업 연관기업 770개사 유치(고용 11759명, 투자 21,076억원)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강소기업 9개소를 유치하였다.

지역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메르스, 엔저, 유가하락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확대(수출상담 6억 달러, 계약추진액 2.7억 달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금산인삼 약초 명품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금산인삼 4,166천 달러 수출 및 계약 추진, 해외매장 5개소 승인, 국제인삼교역전(11개국 바이어 초청) 및 금산인삼 대도시순회특별전(2회, 방문객 10,584명)을 개최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246명의 인력 훈련, 182명이 취업하였고,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1,635명, 전년대비 5% 증가)하여 재능기부, 배당금 환원, 마을소득 증대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R&D DB Book 제작, 충남형 R&D 투입·산출모델 구축, SUMMIT 포럼 개최 등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을 통해 충남의 R&D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응용제품 아이디어·사업화 공모전 개최(연2회), 멘토링 및 교육(매주2회) 등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및 네트워크 확산을 꾀하여 글로벌 진출 및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기능지구 조성 및 응용·개발 연구 사업화는 SB플라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추진,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2개 설립, 대학 역량강화 2개 사업 추진 등 R&D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의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고품질의 과실 생산성 향상과 유통·물류비용 감소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아산원예농협 APC 저온저장고의 시설보완)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를 위해 과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등 9개 시·군의 과수농가 생산기반시설 280ha를 설치하였다.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전략산업으로 천안 배, 공주 베리류, 보령 고구마, 금산 약초 융복합, 금산 흑삼, 태안 소금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지구로 금산 약초음식과 흑삼이 선정되었다. 중소농의 조직화를 통해 다품목 소량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으로 신규 직매장 13개소를 개설하고 총 25개소를 운영하여 매출액 132억원을 달성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생산인프라를 확충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내수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천북 웰빙특화단지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건축) 착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어초 설치(9개 해역 20단지, 94ha, 910개), 해중림 조성(홍성 죽도 24ha), 어초어장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수산시설 개선 등 산지 위판 출하액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품종 중점 검사 등 안전성 조사 120건을 실시(목표 대비 20% 초과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홍성 어사해양바다낚시공원 조성 실시설계 추진, 태안 해상바다낚시공원 조성 및 안흥항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착수하였고,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및 농촌체험기술 보급으로 농식품 창업농가 매출액 증대(91백만원) 및 일자리 창출(60명), 농촌교육농장 육성(농가당 3,317명 방문, 63백만원 소득)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 비교우위 품목 홍성 딸기, 태안 생강 육성 등 시군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의 집중육성으로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안전생활 및 환경정비, 소득활동 기반 조성,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2009년 69%→2015년 80.6%)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남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주대는 차세대 IT 융합부품용 희소소재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국대(천안)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및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단, 운동의과학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설계 및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공주대, 상명대, 선문대, 중부대 4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주대는 글로벌 소통 및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동아리 및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상명대는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10개 기업, 62명 학생 참가), 태양광 자전거·충전기·가로등의 모형제작을 통해 디자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선문대는 제약산업 인력수요 전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 다문화 통합사회 상담복지인재양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 및 현장맞춤형 핵심연구 인력 배출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건양대, 단국대, 중부대, 호서대 4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건양대는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팩토리 12개팀 운영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작품화 및 교내외 경진대회 참가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단국대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인사 및 학사제도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창조창업·창작 교육센터 설치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부대는 베트남 경제단체와 상호교류 협정식을 통해 글로벌 산학협력을 마련하고, 취업연계 기업주문형 FSM교육과정 및 특성화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호서대는 재학생들 취업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주대에서 선취업·후진학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취업 친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밖에도 도에서 자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5대 정책목표 19개 핵심과제를 추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충남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3D애니메이션 3건, 창작콘텐츠 개발 3건, A&T 융합글로벌콘텐츠 1건 등 지역기반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로 충남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 문화도시에 1개소가 선정·추진되고 있으며, 공주, 부여, 천안, 당진, 홍성, 예산 6개 지역의 문화공동체 구성 및 특화된 도시 마을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2개소) 및 개관시간 연장 운영(23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2개소), 박물관 및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9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워크숍 및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지도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지도인원 131명)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지속적인 흥미유지 및 참여를 유도하여,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67.6%, 수혜자 만족도 90%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의 확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공설운동장 보수·보강, 공주 영명중고 등 7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다.

충남의 사계절 관광 및 관광자원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관광지를 현재 관광트렌드 변화 및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재정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덕산온천 관광지의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환황해권의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삼교호 관광지(해안탐방로 및 풋살장), 만리포 해수욕장(운동오락시설 및 경관조명), 임해관광도로(산책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돈암서원의 예학관 건립(실시설계 진행 및 현상변경허가 완료)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보부상촌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천안 성정천과 부

여 왕포천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산모신생아관리지원 사업 총 15,651백만원 및 일자리 991개 창출, 14,1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주민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1,638명), 생명사랑 지킴이 육성 및 활동 강화(4,190명), 재가정 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자살위기 24시 상담전화 운영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인력 및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읍면동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윈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654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5,424명), 드림스타트간 멘토-멘티 운영(워크숍 1회)을 추진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 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255개소) 및 아동복지교사(200명)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511명) 등을 추진하였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3,306명을 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14,247명에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진단·평가·수업·상담 등을 실시하여 2015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5.0만점에 4.84점을 얻어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2개 시군, 15개소 590명) 지원을 하였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청양, 홍성, 예산 3개소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착공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민에게 안전한 식의약품 공급을 위해 도내 유통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대상 식품 및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의 수거검사 실시 610건, 의약품 품질점검 기본계획의 수거검사 50건 등을 실시하였다. 분만 취약지역 부여군의 산부인과 운영지원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외래 지원(건양대 부여병원 인건비 지원) 및 부여군 보건소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여 임신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10개 기관, 2,557백만원)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충남은 주민이 주도하고 원하는 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기본 생활인프라 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지역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의 관련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생활권 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활권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매출 극대화와 지역의 우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연고산업을 육성(연구개발, 기술지도, 기업지원 3개 분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외 마케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구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지자체와 일자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업·대학·연구소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술중개 혜택에서 소외된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거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의 R&D자원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연구개발 지표확립, 정책수립 근거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충남의 경제를 미래지향적 R&D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양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창의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산업관광육성,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유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관광수요의 변화와 동향,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체험·학습형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창조관광의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충남관광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취약지역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진정한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다.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87.2만명으로 2011년과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45조원으로 2011년 40조원보다 5조원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128억 달러에서 33.3% 감소한 86억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취업자 수는 2011년 83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24.5%에서 2.5%p 증가한 27.0%로 여전히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31,832	39,960	44,623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856	1,874	1,872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781	2,221	2,483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6,842	12,818	8,556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829	830	875
재정자립도(%)	53.9	51.9	50.3	22.6	24.5	27.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전북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4.3%, 제조업 26.8%, 광업·농림어업 9.0%로 나타나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6.6%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1.3%, 25.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기타 기계 및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경우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6.9	17.0	13.9	15.1	15.1	13.2	16.6	17.4	1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6	8.6	18.0	6.0	9.3	17.9	6.3	8.6	1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9	1.3	2.1	0.8	1.0	1.7	0.4	0.8	1.0
비금속 광물제품	10.4	7.2	4.2	9.1	5.7	3.6	8.7	4.9	3.6
1차 금속	2.7	4.5	11.2	3.4	5.1	11.4	4.1	5.5	10.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8.4	4.1	1.5	11.2	7.3	2.2	10.6	6.8	2.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	5.1	3.1	1.7	4.2	2.6	2.1	4.4	2.5
기타 기계 및 장비	6.4	5.8	3.9	8.0	7.3	5.3	7.8	7.2	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2	23.2	26.5	11.9	20.8	26.9	11.9	21.3	25.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2.2	5.1	0.9	2.3	7.3	1.1	2.4	6.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6	5.3	1.1	2.3	4.4	1.3	2.2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4	9.4	16.2	11.1	8.5	16.7	11.9	8.2	18.1
사업지원 서비스업	3.4	10.3	7.6	4.3	12.8	8.7	5.0	13.8	10.1
교육 서비스업	19.1	13.8	7.7	18.8	12.3	7.6	18.1	10.7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4	35.0	39.1	15.7	36.9	37.0	16.6	39.3	37.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5	8.5	7.1	10.7	7.5	6.5	10.3	7.1	6.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6	18.2	11.9	37.4	17.4	11.7	35.9	16.3	11.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9.3%, 37.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8,705억원, 연구개발인력 14,912명, 연구개발조직수 72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4%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수는 각각 0.6%p, 0.3%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501건이며, 등록은 1,777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1%, 1.8%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754건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085건 증가하여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0.7%p 증가하였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615,428 (1.8)	656,034 (1.3)	870,475 (1.4)
	연구개발인력	8,261 (1.9)	11,727 (2.2)	14,912 (2.5)
	연구개발조직수	277 (2.0)	477 (2.2)	729 (2.3)
특허	출원	1,747 (1.4)	3,051 (2.2)	3,501 (2.1)
	등록	692 (1.1)	1,041 (1.4)	1,777 (1.8)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북은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로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서해안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막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정책은 전북이 비교우위를 점한 전통 문화자원과 산업화 기반의 우수성 등의 여건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과 부합됨에 따라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창조거점 등 전북의 특화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전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한다. 새만금 개발의 잠재력과 중국과의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지향의 추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과 미래형 융합 신산업(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LED융합) 등을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을 육성한다.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연구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농식품 제조·가공, 새만금의 대규모 수출농업 등 농생명 관련 기관·기업이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이룩한다. 전통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전북 한문화 자원을 원형 발굴하고, 한문화 확산의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체험·교육·관광·소비의 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하고 연계관광을 육성한다. MICE 및 비즈니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도심문화관광의 거점화, 마을관광과 연계한 대안관광 프로그램화 등으로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섯째, 안전 및 행복한 복지 구현을 실현한다. 도·농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간적 구조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복지, 수요자 중심의 재정 맞춤형 복지, 그리고 소득계층별 맞춤형 복지 등의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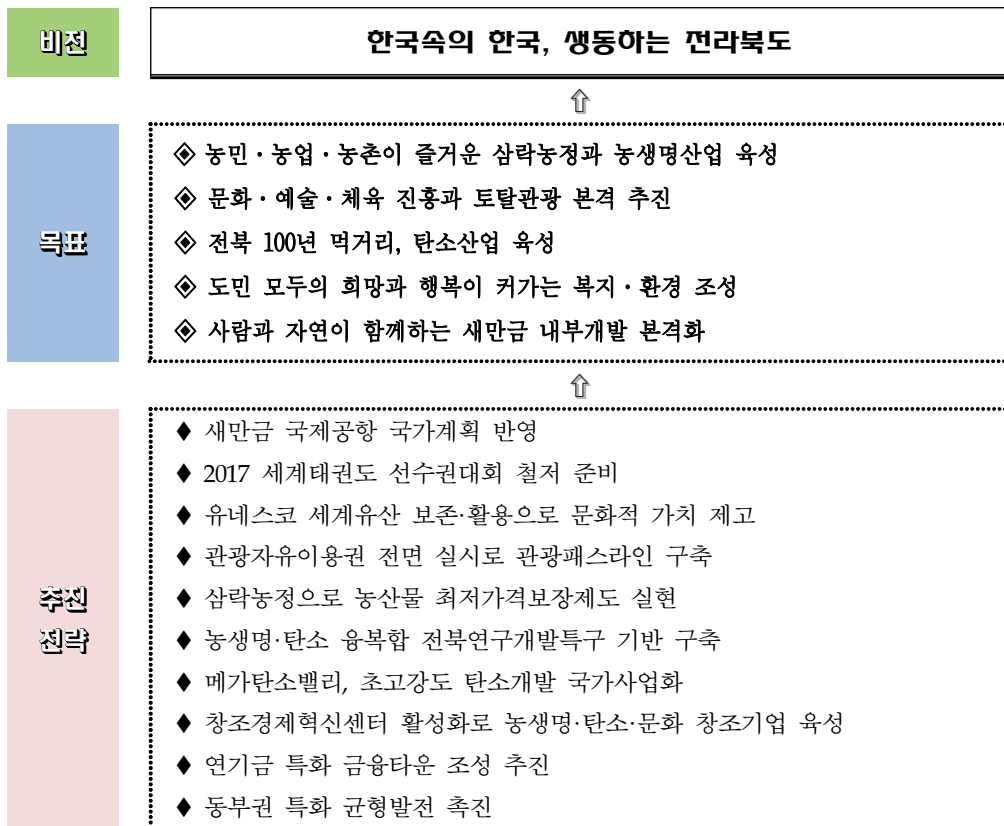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은 핵심사업의 초석을 다진 한해이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전북은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에 대한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2개 추진전략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공동체 협력 강화와 기초생활서비스의 기능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 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군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 인프라, 주민체감형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SOC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2개 추진전략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신 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은 탄소 및 농생명허브 등 지역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농어촌 일자리를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 것이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및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행복한 복지·의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 등 총 4개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 확대,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마을기업육성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업무협약(MOU)이 2014년 1월에 완료된 후 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다. 2015년 1월 13일 동북부 생활권을 끝으로 4개 생활권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시·군 부서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후 행정협의회회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체 발대식이 6월 2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발전위원장, 도지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생활권 연계협력(선도)사업이 총 10건 제출되었고, 그 중 최종 4건이 선정되어 생활권별 1건씩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중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은 우수사례로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남부권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출산을 저하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5년에 처음 시행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은 도내 시·군 당 1건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10건(도시형 2건, 농촌형 8건)이 선정되어, 낙후된 농촌·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각각 수립되었고, 진안군 동향면 상향리 지구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기공식(2015년 11월 9일)을 갖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북의 대표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 및 생활인프라 구축, 쇠퇴한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그리고 교통물류 체계 구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150개 지구, 국비 73,22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육성에 100개소를 지원하여 8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1개소 275백만원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인근에 위치하지만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남원, 장수 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을 K-water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오지마을의 상수관로 130km를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78.5%로 높였다. 생활오수의 미처리 지역에 하수관로

를 설치하여 보급률을 74%로 높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7개 시·군 18개소에 처리용량 1,500㎥/일을 추가 설치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사업은 낙후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3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거주민에게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전주시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143억원, 시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요사업은 천사마을 가꾸기,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풍남초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서, 특히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자산으로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 목적으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기능 수행은 물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거점공간으로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15년 12월 완공하고 운영 중에 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물류 체계 구축사업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촌형 교통서비스 8개 지역과 더불어 대중교통지원 4개소를 추진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편의성 개선과 함께 주차난 해소 및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 등의 교통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해 왔다. 버스 이용수요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소형승합차를 활용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체계이다. 전북은 2015년 1월에 국내최초로 수요응답형교통(버스DRT)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 정읍시 산내면 및 완주군 동상면을 선정하여 도비 각 1.5억원을 교부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정읍 산내면의 일평균 이용객이 47명에서 90명으로 증가하고, 완주 동상면의 만족도는 35%에서 91%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전라북도 자체 2차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 서비스 중에 있다.

또한, 무주·진안·장수 등 인접한 3개 지자체의 대중교통서비스는 ‘무진장’ 여객이 담당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버스DRT) 도입을 위해 4개 면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무진장’지역의 경우, 이용수요 및 만족도의 증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DRT 사업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장 많은 모델을 구현 중에 있으며 DRT 운영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북은 오랜 기간 농업이 주력산업을 이루어 왔으나 1995년부터 제조업 비중이 농업 비중을 추월하는 등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이중 자동차·조선·기계, 신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높아가는 전북을 회생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밑거름이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로 2010년 이후 상용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5년에도 국내외 기업 135개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 당초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다. 주요 유치기업은 다원시스, 도르람협동조합, 대림씨앤씨, 해원에스티 등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에 상액은 8,033억원, 고용인력은 5,346명에 달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PPS수지공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 제품생산이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는 대중국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지역특화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공동 과제이며, 특히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탄소산업 등 지역의 경쟁우위를 기반하여 고용 창출형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고,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조성 및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산업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기반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기계 생산기반산업, 경량소재

부품산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및 전북연구개발 특구가 국가 지정을 받았고, 탄소산업특별법 법안 등 탄소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 클러스터 선정과 친환경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경량소재 성형산업지원 및 해양설비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부가가치가 향상되었다.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사업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4년까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360백만원(국비 1,180, 도비 354, 시·군비 826)을 투입하여 140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취약계층 618명(상반기 385명, 하반기 233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근로소득의 성취감과 생계 안정이라는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게 지불된 인건비가 다시 지역경제의 소비로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되었다.

(4) 탄소밸리 구축사업

전북의 미래산업 신성장 동력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탄소복합재의 세계시장 수요가 연평균 7%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5년간 1,991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5년 주요성과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함과 아울러 산업육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5월)하였고 탄소기업 유치에 유리하도록 투자유치 촉진 조례(7월)를 개정하였으며,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8월)됨에 따라 탄소산업의 탄력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시도 공동사업으로 전북·경북의 4,50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 포함되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12월에는 전국 15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및 탄소융합산업연

구조합 출범식이 도내에서 추진되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이 지난 9월에 국가정책에 최종 반영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범사위를 통과(2015년 12월 30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 5월 19일에 최종 의결되어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전북 탄소산업이 안정적 지원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북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로 교육·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고, 농어촌 학교의 학생감소와 도·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도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역시 열악하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 등에 총 사업비 95,082백만원을 투입하여 2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글로벌 해외연수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겨울학과 여름학기에 연수생 1,053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외에서의 유의점과 생활에티켓, 생활용품 등에 대해 1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연수국에서 4주 동안 현지 공립학교에서 ESL를 배

우며, 4주 동안 공립학교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돌아온다. 해외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9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를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갖고 발전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복돋워 주고 있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성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육성 지원으로 시군 공모를 통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성인문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기반 조성 등으로,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읍·면·동 단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내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 기여하였다.

더불어 전북지역 8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순회연수 실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지원,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을 실시하였다. 성과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국비 321백만원 확보, 도민의 '교육 받을 권리' 및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2015년 교육부 공모,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등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전북은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주시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대표 관광지 및 관광패스라인 구축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4가지 매력 있는 도 대표관광지를 육성하여 관광자원

화를 목적으로 연간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며, 성과분석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태의 평가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대표관광지와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모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주와 완주지역을 대상으로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을 발매하고 자유관광시설 10개소, 무료주차장서비스 13개소,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가맹점 70개소를 확보하여 전북을 찾는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6년에는 모든 시·군에 패스라인 사업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사업은 익산 역사 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 및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156억원을 지원받아 3개 부문, 17개 사업에 총 3,65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중 2015년에는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과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에 103.1억원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금마지구 전통 주거지역 기반조성 및 전주 객사·관아터 유적 발굴사업 등 전통 문화자원의 복원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5년간 102억원을 투입하여 5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중 2015년에는 문화페스티벌 등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 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젊은 층의 문화향유 공간 구축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이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3개 시·군(남원, 군산,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문화포럼 개최 및 생활문화 육성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였다. 특히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 조성하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 제공은 물론 시군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은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의 집중화로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되고 있어 도시와 취약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및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삶을 누리도록 지역맞춤형 복지를 통해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31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였고, 주민정신건강 지원확대를 위해 등록회원 40,032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은 장애인 활동 우선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한 진료권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 등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도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진안·무주·장수에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진안의료원을 개원하여 진료 9개과, 85병상, 의료인력 73명의 규모로 진료를 개시하였다(2015년 4월 24일).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한 거점병원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진안군내 주민과 인접 무주군과 장수군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부의 고창병원은 분만 산부인과를 7월 1일 진료 개시하는 등 11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임산부 이송 지원실적은 산전 진찰 이송 7,102건, 분만 이송 1,827건으로 총 8,929건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약 4% 증가율을 보였고,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의 사전 대응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예산 64,133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2,375명에게 27억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67.7% 인상하여 19,754명에게 6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6.8%로 전국평균 수급률인 67.3%를 훨씬 웃돌게 되어 201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전북은 2015년에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의 기틀을 닦고, 시·군별 대표관광지 선정과 전북관광 자유이용권 시범출시로 토탈관광의 마중물을 마련하였으며, 메가탄소밸리 예타사업 선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를 갖추었다.

이를 토대로 농업의 강점을 살려 음식문화가 발달한 ‘맛의 고장’ 육성과 더불어 한국적인 전통문화자산을 온전히 간직한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미래산업의 쌀’인 탄소산업의 탄소섬유 양산체계의 구축 그리고 새만금의 대중국 교역 생산거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도에는 6개 실천전략을 정하고 세부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먼저,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전북’을 구현할 것이다. 안전혁신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확립과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제훈련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망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복지, 청년 주거문제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

넷째, 도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커가는 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 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전라북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환경, 삶의 터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SOC 확충과 지역특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도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신항만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한중 FTA 산단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90.6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8천명 감소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63.1조원으로 2011년 62.7조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588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400억 달러에서 2.2% 감소한 3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1년 89만명에서 9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2.2%로 전국 평균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52,424	62,689	63,095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1,919	1,914	1,906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921	3,541	3,588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29,037	39,992	39,112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904	886	909
재정자립도(%)	53.9	51.9	50.3	21.4	20.7	22.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전남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0.1%, 제조업 41.7%, 광업·농림어업 8.2%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제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22.5%, 종사자수 기준은 '기타 운송장비' 27.9%, 생산액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5.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식료품'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기타 운송장비'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외 업종별 비중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6.3	13.1	1.8	23.9	13.2	2.1	22.5	11.3	2.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	2.5	33.0	0.3	2.5	33.3	0.3	2.0	3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3	16.3	33.1	8.0	16.4	32.6	7.2	15.6	3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3	6.0	1.3	5.5	5.3	1.3	5.4	5.2	1.9
비금속 광물제품	12.6	6.2	1.6	11.2	5.2	1.2	10.6	5.4	1.7
1차 금속	4.1	12.3	18.7	5.5	13.6	19.9	5.5	12.5	17.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6	9.0	1.3	12.3	9.5	1.4	12.3	8.5	1.6
기타 기계 및 장비	5.1	4.1	0.6	4.6	3.4	0.6	5.2	3.5	0.9
기타 운송장비	10.3	20.9	6.7	15.2	22.4	6.4	17.8	27.9	5.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3.0	7.6	1.2	3.2	10.4	1.5	3.3	9.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0	4.4	1.1	1.9	5.3	1.2	1.4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7.2	6.5	7.9	7.4	6.1	10.9	8.3	6.5	10.0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10.2	9.5	3.9	11.7	11.0	4.9	11.6	12.0
교육 서비스업	17.0	11.8	6.4	16.4	9.8	5.6	15.2	8.3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	35.3	40.7	15.7	38.3	34.9	16.7	41.5	39.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0	9.7	7.8	12.6	9.2	7.6	11.8	9.0	7.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7	21.5	15.6	41.6	19.7	14.4	40.3	18.4	13.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1.5%, 39.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7,485억원, 연구개발인력 7,361명, 연구개발조직수 457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2%p, 연구개발인력은 0.1%p 증가하였으며, 조직수는 0.1%p 하락하여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533건이며, 등록은 1,44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 1.5%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22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4%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899건 증가하여 0.6%p 증가하였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28,700 (1.0)	532,903 (1.0)	748,547 (1.2)
	연구개발인력	4,857 (1.1)	6,507 (1.2)	7,361 (1.2)
	연구개발조직수	213 (1.5)	355 (1.6)	457 (1.4)
특허	출원	1,411 (1.1)	1,942 (1.4)	2,533 (1.5)
	등록	546 (0.9)	828 (1.1)	1,445 (1.5)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남은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305천ha로 전국의 18%이고, 국립공원과 갯벌은 각각 2,513km², 1,044km²로 전국의 38%, 42%를 차지하며, 섬은 2,165개로 전국의 6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 3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남의 자연환경은 관광자원 및 산업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섬 방문객 수가 729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서해안에 5GW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2015년 에너지 선도기업이 61개 유치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남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2015년말 인구는 1,909천명으로 2014년말보다 3,216명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생물·우주항공 등 신산업을 지속 지원하며,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신산업·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업은 FTA 확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유기농업 확산,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 구조 정착, 수출망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객 5천만명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강화, 전남의 역사적 인물 및 전통 문화예술자원 등의 가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출산 친화형 환경 조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대, 취약지역 생활복지 강화,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소중한 자산인 섬의 생태·문화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가고싶은 섬」가꾸기와 매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하고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는 「숲속의 전남」만들기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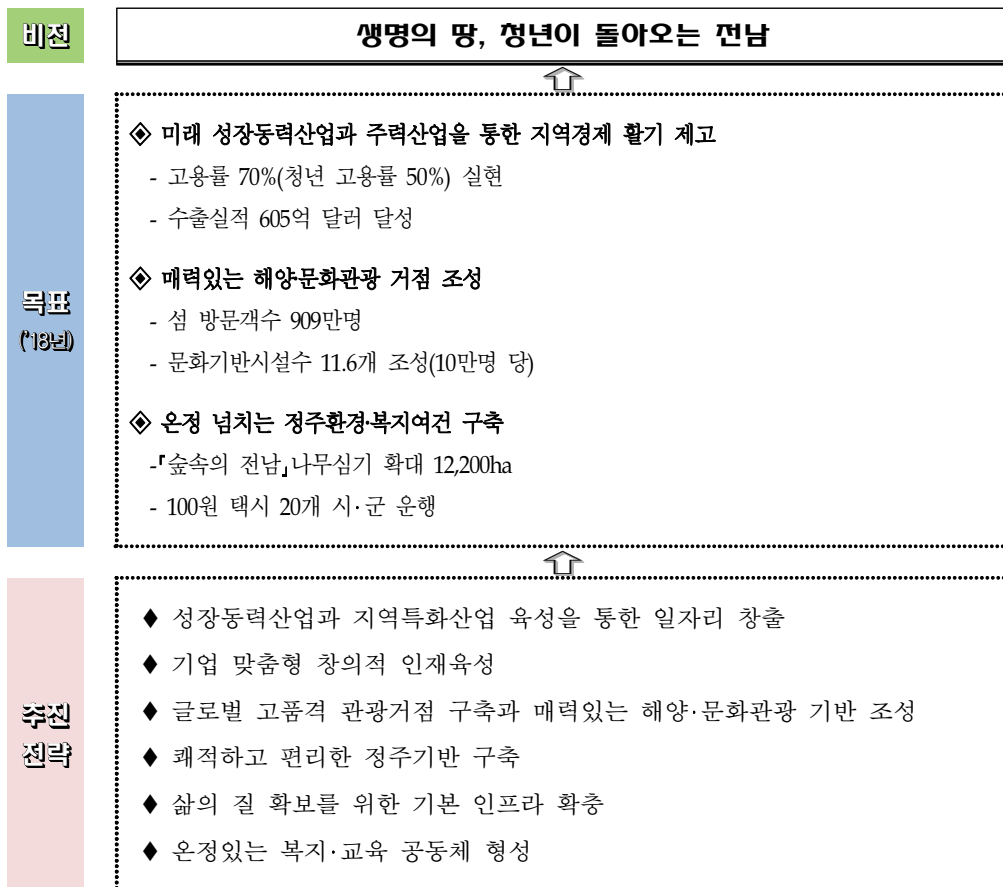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남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남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식량산업, 해양산업, 관광·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전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전남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해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로 우선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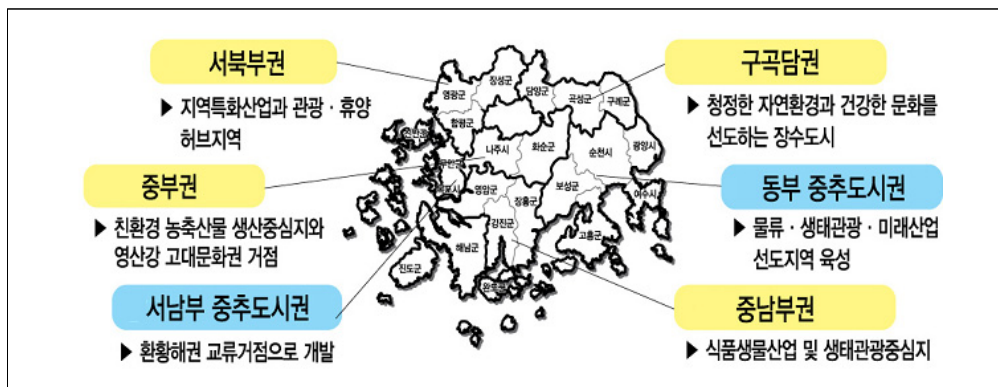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별 비전을 살펴보면,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선정 6개 사업, 2015년 선정 5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고 있고, 동부권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유희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은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과 구곡담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곡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운영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남부권은 완도 도서 주민들이 육지를 드나들 때 거쳐야 하는 장흥과 협력하여 향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은 중심지 기능강화,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 주도 지역발전,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해 목포시 6건, 순천시 18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동체를 활성화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37개지구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오지마을 362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농어촌 교통복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구축하였고, 상수도 보급률 92.0% 달성으로 농어촌 상수도 서비스 제고 등 취약지역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였다.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생활권 선도사업의 발굴 및 선정뿐만 아니라 생활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0개 신규 지정과 행자부 마을기업 24개 지원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목포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압해-암태 1.2km와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화양-적금 3.6km가 건설되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지역에 무선통신방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분야의 2015년 대표적 성과는 새로운 일자리 3,965개 창출과 128개 기업을 통해 6,530억원 투자를 이루어낸 것이다.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30명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45개이고, 투자보조금은 43개 기업에 231억원이 지원되었다. 271개 기업(5조 9,209억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3,613명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는 고도기술 보유 해외기업(합작투자 포함)이 6개사 2,590억원이고, 국내기업은 264개사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기업은 61개(1,933억원) 유치되어 조성원년 목표(50개사)를 초과 달성하였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을 중점 육성하였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참여주체들이 지역연고자원을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켜 인력양성 220명, 기업지원 17건, 창업 8개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미취업자에게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 수료 729명, 취업 463명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미취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지원 및 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산하 전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25.8%(2014년)에 이르는 전남은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가 1차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농촌 경관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휴양·레저·체험공간인 농촌 테마공원 6개소를 조성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2,604개교 학교급식에 유기농 식재료 지원으로 유기농 쌀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고, 한정식 맛길 조성과 지역 특성화 브랜드 연계를 통해 소득 증대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업기반정비사업은 8개 내역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설치·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창조경제의 구현 및 확산이 일자리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구현은 산업단지 면적의 전국 비중이 18%인 전남에서는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계획이 시·군의 토지이용, 상하수도, 산업폐수 배출 현황 및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확보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창조경제의 지역확산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업체 센터입주, 농수산 우수제품 26개업체 GS유통망 입점, 5개 관광상품 GS 홈쇼핑 입점 등을 통해 농수산 특화 창업·벤처 활성화, 웰빙 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역특화 맞춤형기술 이전사업은 기술수요를 촉진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기술이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전남 R&D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R&D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R&D 수행사업의 중복성 검토 기능을 지원하였다.

빛가람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 조성은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거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발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능과 광주·전남 전략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시책도 확대 발굴되어 청년희망버스(시범운영), ICT인력양성(400명), 잡매칭데이(3회), 청년인턴(285명), 선취업 후진학 과정(70명) 등이 구인·구직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창조경제를 견인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은 목포대의 해상풍력, 신해양산업과 동신대의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특성화 분야 인력을 양성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

성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가 202개 운영되었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지원 1,340명, 기술지도 738건을 달성하였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으로 육성된 전남도립대는 기업체 취업을 전제로 교육트랙을 개설, 운영하여 산·학이 만족도가 높은 취업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동신대의 지역문화콘텐츠·웰에이징메디스파, 목포대의 해양레저스포츠·친환경바이오융합, 순천대의 인문고전·광양만권경제특구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높였고,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목포대, 순천대) 추진은 대학의 기술정보·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기업 운영 6개교, 창업동아리 15팀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업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학교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애로를 겪었다.

또한 초·중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초·중학생 영어캠프는 1,952명이 참여하고, 대다수 학생이 영어체험캠프 참여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평생학습은 배움 행복마을학교 3개소 조성,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8개소 운영, 문해교육 교원 양성 29명 등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자 만족도 82%를 달성하였다. 한편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강의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및 학습자의 눈높이 적극 고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소통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남도학숙 출신자들을 활용한 나눔활동 추진은 학숙 후배들에게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는 등 환원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 7종,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6종, 문화상품 3종이 개발되어 지속적인 사업화가 기대되고 있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 4종이 개발되어 도내 전시·박물관에서 운영 중으로 성과물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설화를 시급히 발굴·보존하기 위한 발굴 용역도 추진하여 시군 설화 발굴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장흥에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었고, 고흥, 완도, 해남 등에서도 2016년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목표에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독서공간 확보 및 문화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36개소에서 운영되어 남녀노소 매일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사업은 흑산도 소형공항이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과 환경부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순천만 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인근에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민과 함께 섬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 자원화하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는 섬 고유의 특성을 살려낸 각양각색의 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공동소득사업을 위한 마을기업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섬 방문객 수는 7,290명에 이르게 되었다.

농업과 문화자원의 결합은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경지 6,498ha에 지역내 특화작물을 경관작물로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의 안정적인 관리는 전통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원적 가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공원 같은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1,009만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민간주도 「(사)숲속의 전남」이 창립되었다. 또한 하천의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 인위적 하천정비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24개 하천에서 추진되어 휴식장소 및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전달체계는 지역과 밀착되도록 구축하였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시·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여 건강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을 공중목욕장 운영일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효율적 치매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설치·운영되었고, 130,397명이 치매조기검진을 받았다. 주민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간 경계를 없애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43천명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받게 되었다.

복지시책은 수혜자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었다.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동급식 506개소, 공동목욕장 114개소가 운영되는 등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영양 및 위생 여건이 개선되었다. 보육서비스는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신축비용을 절감하고, 이직률이 높은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여 청소년시설 이용만족도 92%를 달성하였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에 찾아가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여 상담, 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필수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 6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가 운영됨으로써 안정된 출산 및 의료환경이 구축되었다.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설치됨에 따라 농촌지역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전남도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50명으로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수는 25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충족률이 2015년도 60%로 높은 편이나,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응급의료의 질이 열악한 상황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생활권, 일자리·경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등 5대 분야별 2016년 중점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 마을의 안전, 위생, 기초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새뜰마을 사업을 도시 5개소, 농촌 18개소에서 추진한다. 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645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등 농촌주민의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상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 수원지 축조와 개보수, 관로 정비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생활권 협력사업으로는 지능검사, 캠프운영 등 다중지능 교육으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박물관·미술관 이동전시를 통해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군간 연계협력의 토대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드론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신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분기별 운영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을 통해서도 국내·해외 농수산 식품(K-Food) 및 관광상품(K-Tour) 판로를 지원하고, 농수산 생산 및 가공 창업과 바이오 화학기업을 육성·지원하며,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흑산공항 용역,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교육 및 기술습득 등으로 민간취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경우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의 현장실습·창업 등 현장중심형 교육과 기업의 애로기술 지도·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학교기업 기획·운영·실습을 통해 학생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가 마인드를 함양한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 협력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지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등을 운영한다.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여수,

나주, 담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주민과 함께 『가고싶은 섬』 8개를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 자원화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농어촌 면단위에 건립된 공중목욕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추진기관 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제2호점 추가 설치로 도내의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섬지역을 위한 거점보건지소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270.1만명으로 2011년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92조원으로 2010년 82조원보다 약 10조원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47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521억 달러에서 1.3% 감소한 5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136만명에서 14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9.1%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70,559	82,276	91,653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2,674	2,699	2,701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675	3,122	3,471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47,612	52,129	51,476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1,353	1,358	1,420
재정자립도(%)	53.9	51.9	50.3	28.7	28.1	29.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경북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3.2%, 제조업 51.1%, 광업·농림어업 5.7%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업 비중

이 높은 지역이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0.0%, 39.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1차 금속’의 생산액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2	3.9	4.2	5.0	4.0	4.5	4.5	3.8	4.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5	7.4	3.2	9.4	7.3	3.3	9.1	7.9	4.4
비금속 광물제품	6.6	5.5	3.2	6.5	5.1	3.0	6.0	4.7	2.7
1차 금속	7.1	12.0	28.4	7.2	11.4	26.9	7.2	11.3	21.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9	9.0	4.0	13.7	9.3	4.2	13.3	9.7	5.2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5	25.3	38.7	7.1	23.7	38.5	7.2	20.0	37.8
전기장비	3.9	3.9	3.4	4.3	4.7	3.2	4.6	5.2	4.0
기타 기계 및 장비	9.9	5.7	2.5	10.9	6.7	2.9	11.2	7.0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	8.3	3.9	7.6	8.9	4.9	11.0	12.1	7.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3.1	15.4	1.2	3.1	16.0	1.6	3.5	14.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2.8	6.0	1.1	2.0	4.5	1.4	1.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	7.6	8.3	9.1	7.3	8.0	10.6	7.4	9.6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12.5	8.9	3.8	14.8	10.7	4.9	14.0	12.4
교육 서비스업	18.4	13.7	7.2	17.7	11.3	7.0	16.2	9.3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0	29.1	30.9	13.7	32.3	30.7	14.6	35.5	31.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9.8	9.0	12.5	8.9	8.4	11.8	8.8	8.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3	21.4	14.3	40.9	20.3	14.7	38.9	19.7	13.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5.5%, 31.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2.7조원, 연구개발인력 24,393명, 연구개발조직수 1,20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조직수가 각각 0.1%p, 0.3%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2%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235건이며, 등록은 5,723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4.4%, 5.9%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2,426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6%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2,346건 증가하여 0.4%p 증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410,551 (4.1)	2,098,759 (4.2)	2,696,556 (4.2)
	연구개발인력	18,116 (4.2)	21,507 (4.1)	24,393 (4.0)
	연구개발조직수	482 (3.5)	793 (3.6)	1,201 (3.8)
특허	출원	4,809 (3.8)	7,008 (5.1)	7,235 (4.4)
	등록	3,377 (5.5)	3,557 (4.9)	5,723 (5.9)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다.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이전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의 역외 유출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청시대에 발맞추어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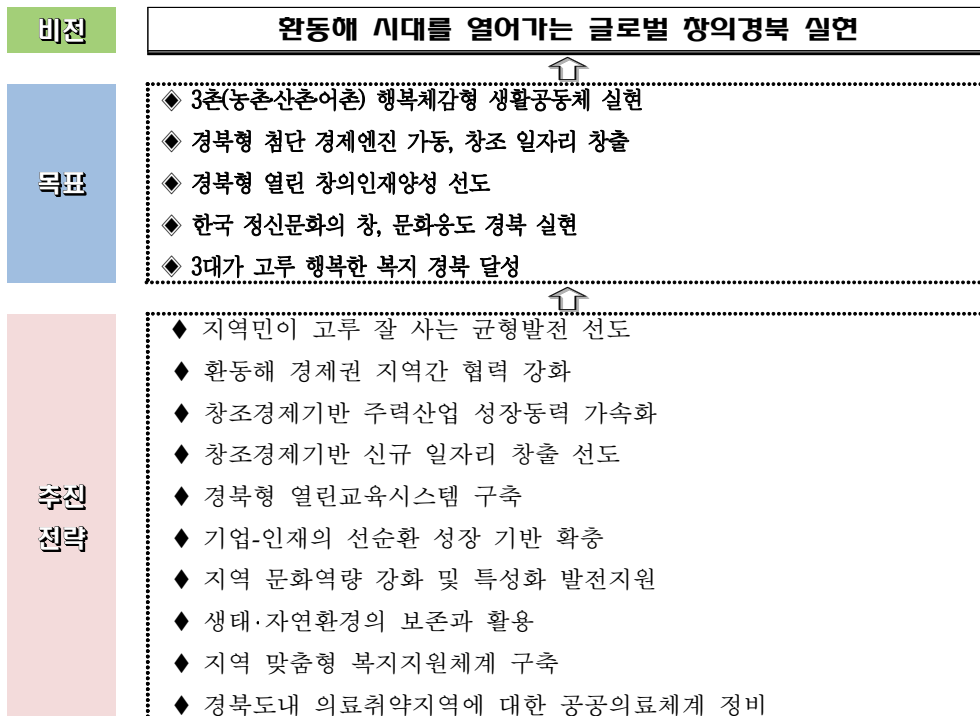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설정한 경북지역의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으로서,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력강화 및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과 경북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행복 생활 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 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경북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북은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의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을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 연계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산림·해양자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적 삶·문화·자원을 연계한 경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한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북 동해안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산업·해양에너지산업·해양융합산업·해양레저 및 휴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동해안 미래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함께 나서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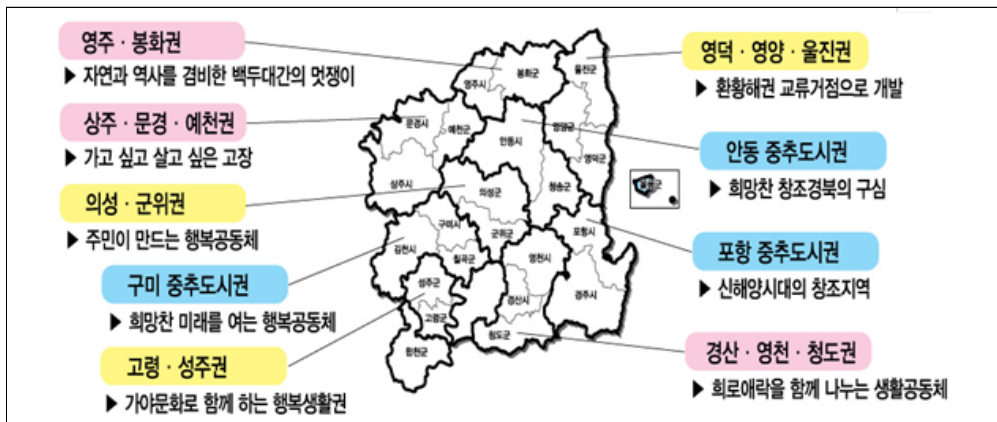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내 9개 생활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낙강선유(落江船遊) 휴(休)벨트 조성 사업,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북도는 농어촌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망 및 마을 상하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다. 특히 농어촌마을단위 8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으며,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3,925동)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개발 67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등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토지계·축산계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으로 탁도 50NTU(임하담 말단 지역) 유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4개소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율 5% 향상 등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환경기반시설 확충에 힘썼다.

지역자원 및 자산 기반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지역 개발을 도모하여 23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10개소, 농촌공동체회사 6개소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외씨버선길, 낙강선유 휴벨트 등 지역 공유자원 활용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를 통하여 연계협력을 촉진하였으며,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태의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였다.

2015년 5,231가구(9,123명)가 귀농한 대한민국 귀농1번지인 경북은 농산물의 단순 생산에서 탈피하여 2·3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농기업체의 총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참여농가 소득액도 6.16%가 증가하였으며, 지역 일자리가 117명 증가하였다.

또한 간선도로, 철도 등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울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다산-화원간 광역도로 역시 송곡교, 월성교, 노강교 건설이 완료(전체 공정을 85%)되는 등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 기간도로망 기능보강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방도를 건설(L=13.12km)하였으며, 대구·경산지역 근로자(13만명) 및 4개 대학 통학생(3.5만명) 교통편의 제공과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L=8.77km) 연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북도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성장거점 육성사업, 농어촌일자리확충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역량을 경주하였다. 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고용정책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률 62.1% (전국 4위), 일자리 78,307개 창출(목표대비 122%)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23개 마을기업을 육성(신규 12개, 2차년도 11개)하였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인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는 도시의 취약계층이나 유휴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하여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 381명 및 취업 310명, 로컬푸드 매장 개소 등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공시제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년 희망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년 취업자수가 2014년 187천명에서 2015년 193천명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2015년에 192개로 2014년대비 18개가 증가되었고, 상용직 4만1천명 증가, 일용직 근로자 9천명 감소로 평생일자리수가 늘어났다.

경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의 에너지산업, 남부권의 부품·소재산업, 북부지역의 바이오·생태산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원과 산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산업의 특화와 R&D, 산업화 기반확충을 위해 각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첨단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지역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2017년까지 3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사의 영천 MRO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완공 후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동 센터는 보잉사가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건립하는 항공기수리정비개조센터로서 최대 1억 달러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 서남부지역에는 1차 소재, 조립금속(기계, 자동차) 및 전기, 전자부품, 소재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집적된 IT 기반과 기술의 융·복합화를 가속하여 기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IT의료 융합기술센터 준공, 생체신호 의료

기기 관련 장비 구축(25종 27대) 등 IT기술 기반의 바이오, 메디컬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생태산업의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7월 안동에 SK케미칼의 안동백신 제2공장 설립을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1,0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차원의 백신 생산 및 공급 지원을 위한 백신산업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 선진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경북바이오벤처 프라자 및 경북바이오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가올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이 국내 최대의 원전 현장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한 원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산업이 집적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업과 2·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도 12개소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6차산업 가공상품 경진대회 수상(우수1, 장려1),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25건)을 통해 농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2015년 방문객 111만명, 체험마을 보험가입 74개소, 마을사무장 54명 채용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수산종묘 17종 887천마리 방류, 다목적인양기 6대, 지방어항 3개소, 인공어초 5개시군 16개소 등의 성과를 통해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힘썼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단위 통합마케팅 실적 1,627억원으로 목표 대비 4.3% 초과달성하였고, 통합브랜드(김천애플)를 사용하여 과실출하 17,787톤 달성 등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과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및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 힘썼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4개소) 및 보완(4개소), 도시숲조성(녹색쌈지숲 1.4ha, 산림공원 24.4ha, 가로수 57.7km 등), 산림욕장 조성(1개소)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북도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는 8개 대학교에 국·도비 24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역량이 특화된 ‘기술혁신형’ 대학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현장밀착형’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에는 구미대학교가, ‘현장실습 집중형’에는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취업중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권내 1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특성화고 학사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율 100%, 취업률 88%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선도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37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전 시·군에 확대 지원(23개소)하였으며,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10개 시·군, 12개 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포항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대구대학교) 등을 통해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켰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였다.

지방 최초로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역사문화권과 생태문화권을 융합, 역사와 생태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옛것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에 힘썼다. 또한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로 경북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유교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신라 천년문화 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신비한 가야문화 재발견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북의 빼어난 녹색자원을 활용한 강·산·바다 녹색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리버 관광지구 조성, 해양자원과 산림·휴양자원을 연계한 자연치유 휴양벨트 조성과 네트워크화, 문화권과 생태자원이 연계된 도시관광 비즈니스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26개 사업 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문화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18건(도서관 4건, 박물관 1건, 문화예술회관 6건, 문화원 1건,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3건, 전통문화시설 3건)을 실시해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으로 추진된 2015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은 47개국이 참여, 146만명이 관람함으로써 경북의 문화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육성하였다.

최근 생태관광·체험에 대한 관심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휴양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4개소) 및 보완(4개소), 도시숲 조성(녹색쌈지숲 1.4ha, 산림공원 24.4ha, 가로수 57.7km 등), 산림욕장 조성(1개소)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인 산림휴양 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 산림문화 학습장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영천·영덕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안동시 등 9개 시·군에 낙동강 풍경 트레일 조성(126km), 봉화군 등 10개 시·군 낙동정맥 트레일(378km) 조성 등을 통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활용한 휴양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연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북은 2013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였다. 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10개 시, 2개 군에 도 자체 시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다. 23개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신규 복지인력을 확충(56명 순증)하였다.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좋은 이웃들’을 구성하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5,305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응급센서(활동·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등)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910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주1회 직접방문, 주2회 유선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은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별 주 2회 순회 진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28,455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오·백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닥터헬기를 운영하여 응급환자 846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관광 우수병원을 8개소 지정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반구축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동국대 경주병원)하였고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개소 확대(상주시, 문경시)하였다. 또한 도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5년 290,962건으로 2014년에 비해 25,340건 추가 제공되었고, 구강보건실 운영을 당초 87개소에서 94개소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분만 취약지 12개 시군에 순회·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으로 2015년 34,688명에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

여 노후화된 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준공년도,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하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고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손주와 조부모간의 만남을 통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증대하고, 격대(인성)교육을 통한 인성회복과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 2014년 10월 ‘할매·할배의 날’을 선포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공동체 회복 100일 프로젝트, 길거리캠페인, 연극단 운영, 손주맞이 조부모교육 시범마을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확산에 힘썼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북은 2016년 3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여 세종시와 더불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하여 국토의 통합적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경북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IT, 항공, 자동차 부품, 레저서비스 등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을 대혁신하고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꿈의 소재라 일컫는 탄소섬유와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팅을 경북의 2대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ICT융복합, 로봇, 에너지, 물 융합, 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을 국가차원의 원자력 R&D 허브로 조성하여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유일 전주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과학벨트 DUP 연합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낙후지역 지원으로 23개 시·군 간 발전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3대 문화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작은도서관·작은영화관·작은음악회와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알찬 문화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FTA 대응전략으로 경북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 CEO양성·유통구조 개선·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고, 바다목장 확대·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림약용 자원을 산업화하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산지부농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여성·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활기반과 여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335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4.1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02조원으로 2010년 91조원 보다 11조원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13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1년 658억 달러에서 22.3% 감소한 5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액 감소폭이 컸다. 취업자수는 2011년 158만명에서 16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42.4%로 2011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79,694	91,233	102,484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3,225	3,309	3,350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2,521	2,824	3,131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56,873	65,834	51,142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1,531	1,581	1,632
재정자립도(%)	53.9	51.9	50.3	39.4	42.6	42.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경남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5%, 제조업 44.7%, 광업·농림어업 3.8%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업종 비중이 각각 19.8%, 16.7%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액은 '기타 운송장비'가 29.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업종별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8	4.5	3.5	5.4	4.6	3.7	5.5	4.5	4.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8	6.4	4.1	7.0	6.7	4.3	7.3	7.5	5.3
1차 금속	5.7	5.8	7.9	6.2	5.5	8.1	5.4	5.5	6.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7.6	13.4	10.5	18.1	13.6	10.5	18.7	13.6	10.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1	3.1	4.8	2.1	3.0	3.2	1.7	2.0	1.2
전기장비	4.6	5.4	5.6	4.8	5.9	6.1	4.9	5.8	6.1
기타 기계 및 장비	20.7	16.7	19.6	20.4	17.5	18.5	19.8	16.7	1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8.2	8.3	6.4	8.9	8.7	8.4	10.8	11.0	10.8
기타 운송장비	10.8	24.4	28.5	10.7	24.2	29.4	10.3	23.3	29.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2.7	8.1	1.0	2.9	9.5	1.3	2.8	7.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9	2.2	5.4	1.0	2.1	6.9	1.2	2.2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10.0	15.2	12.6	9.4	15.7	13.9	9.4	17.8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10.1	7.3	3.6	11.2	10.9	4.5	13.1	12.2
교육 서비스업	20.3	16.1	9.3	19.7	13.8	7.3	18.3	11.6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0	29.5	32.0	13.9	32.8	29.6	14.7	34.8	32.3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9	9.7	8.3	11.3	8.5	7.7	10.6	8.0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9	19.8	14.4	36.9	19.3	12.3	35.7	18.1	12.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8%, 3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6,507명, 연구개발조직수 1,500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및 조직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0.9%p 하락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502건이며, 등록은 3,46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4%, 3.6%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2,031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7%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897건 증가하여 1.0%p 증가하였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424,034 (4.1)	1,649,156 (3.3)	2,062,025 (3.2)
	연구개발인력	19,515 (4.5)	22,560 (4.3)	26,507 (4.4)
	연구개발조직수	785 (5.6)	1,129 (5.2)	1,500 (4.7)
특허	출원	3,471 (2.7)	4,415 (3.2)	5,502 (3.4)
	등록	1,568 (2.6)	2,362 (3.3)	3,465 (3.6)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남은 국토의 관문으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해외로부터의 개방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지역주력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의 메카로서 기계, 조선,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산업을 토대로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과 항노화산업 등의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해양자원과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영남알프스 등의 산악자원,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수자원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관광산업, 대장경, 가야문화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역사문화관광 등의 종합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경남지역에 갖추어진 기간산업,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기반은 향후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작동할 것이며, FTA 등 세계화되는 경제환경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산업중심지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해양자원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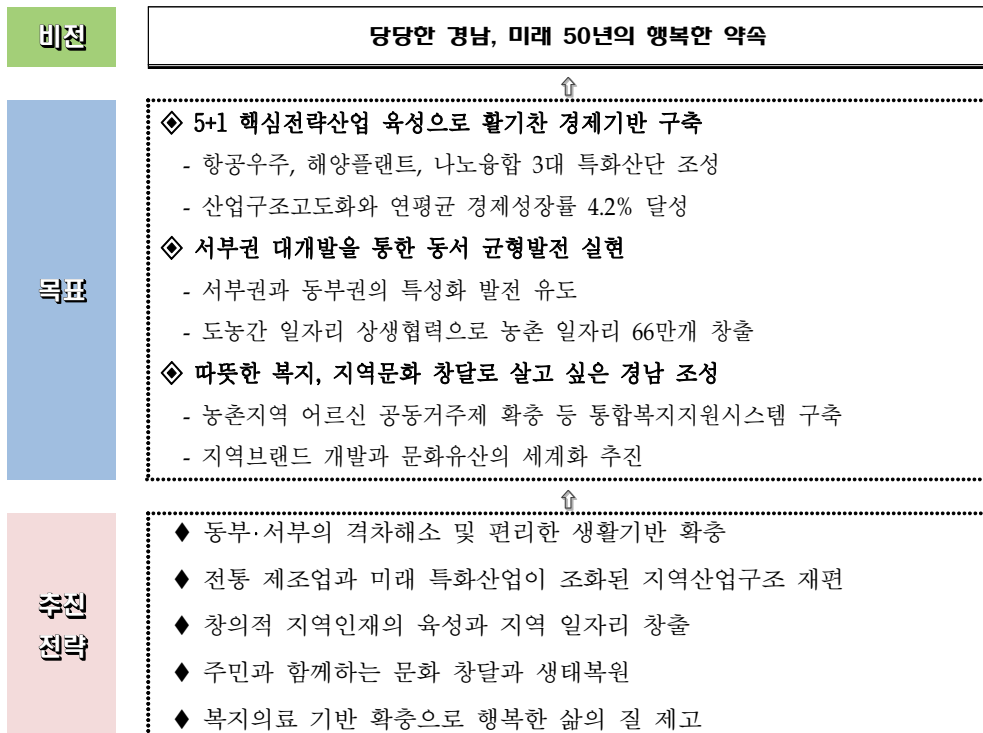
경남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기존의 기반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 신산업 등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발전과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기계, 조선, 항공 등의 제조업과 이를 토대로 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하도록 하며,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협력과제 도출을 통해 다 같이 골고루 잘사는 경남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남지역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성장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의 집적지로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 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을 통해 미래의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부대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 내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발전비전을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추진전략

경상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부·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경남지역은 산업 및 행정이 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권 농어촌 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서부권 대개발의 추진과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 문화, 생활 등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생활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계, 조선산업 등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항노화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지역의 창의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인재양성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학습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내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 및 보전을 통한 지역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공동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간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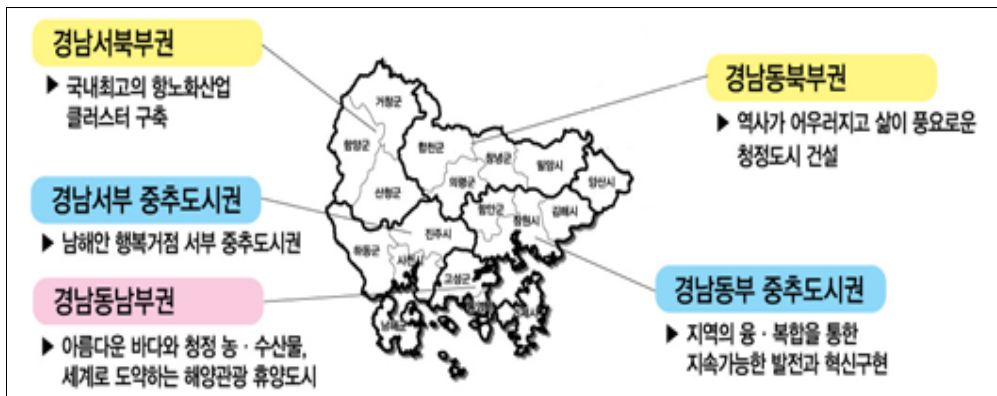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지역은 중추도시권 2개권, 도농연계권 1개권, 농어촌연계권 2개권으로 총 5개의 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동부중추도시권(창원시·김해시·함안군), 서부중추도시권(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도농연계생활권은 동남부권(통영시·거제시·고성군), 농어촌생활권은 서북부권(거창군·함양군·산청군), 동북부권(합천군·밀양시·창녕군·의령군)이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5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5건(인접 중추도시권 1건 포함)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함안·창원의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 고성·통영의 재난 대비 피항항 설치, 합천·밀양·창녕의 농촌인력은행 구축, 산청·함양·거창의 거함산 약용식물 상품화, 김해·양산·부산의 낙동강 뱃길 관광자원화사업 등이고, 2014년에 선정된 3개 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생활권내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위기는 크게 높아졌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서 보다 선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한 추진 및 점검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연계협력사업 9건, 새뜰마을사업 10건, 창조지역사업 3건 등에 217.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신규사업 선정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1개를 준공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4개 지구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28건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에 40.5억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 신규 사업으로 김해시가 지정되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13개 사업(신규 4개소, 계속 9개소)에 176억원을 집행하였다. 이로써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중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도시민의 농촌유지 및 성공정착(귀농귀촌)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농업창업박람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 4개 사업을 통해 3/4분기 3,367가구를 유치하여 전년동기 대비 61.6%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에 809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의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상수도보급률을 92.4% 달성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9개소에 685.7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과 도로정비를 위해 16건에 65억원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지방비는 물론 민자투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일자리 창출은 크게 제조업기반의 지역산업분야와 농어업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산업분야에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157.9억원을 투입하여 R&D 39개 기업과 비R&D 7개 기관 등 46개 주관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주력산업 분야 우수 역량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실크소재활용 및 전통목공예 육성 등 지역전통사업에 5.5억원을 지원하였다. 연구개발 및 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4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78.2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에 186억원, 지역산업마케팅(기계 10, 국내전시회 마케팅 10.4, 중국시장 마케팅 3) 지원 사업에 23.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해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인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 3건 사업장 51.5억원을 지원하여 공업용수 보급 기반구축을 위한 관로 5.0km를 매설하였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3차, 양산일반산업단지)에 공모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 노후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함안 칠서 용성지구에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내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9.3억원을 투입하였는데 1,503명이 참여하여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에 62.9억원을 투입하여 133개 기업에 870명을 지원하였으며 당초목표보다 120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산학관 협업을 통한 창조적 청년 일자리창출 등 7건에 17.2억원을 집행하여 553명을 교육하였고 이중 411명이 취업하여 72.9%의 취업률을 달성함으로써 우수 판정을 받았다.

농어업분야는 농업, 어업, 그리고 공동마케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업분야를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총 43개 사업(유통기반구축 17개, 제조가공지원 14개, 체험전시 1개, 체험관광지원 5개, 6차 산업 1개, 농공단지재정비 4개,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구축 1개)을 추진하여 매출액 108.4억원, 고용인원 879명, 참여농가 156

농가, 농가소득액 6.2억원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57.3억원을 투입하여 논·밭작물 재배지원 5개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8개 지구, 밭기반 정비 17개 지구, 시군수리시설개보수 51개 지구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17.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도모하였으며, 농가소득 22%를 향상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생활만족도는 80%로 2년 전에 비해 2% 향상되었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를 통해 작업시간이 532시간에서 251시간으로 281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은 2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연구소 장비구입 10건, 시설현대화 7건에 11억원 지원, 주곡작물 종합육종 연구장비 보강 등 장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영농활용 26건, 논문 게재 6건, 학술발표 7건, 품종출원과 등록 7건 등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어업분야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114억원의 예산으로 산지가공시설 19개소에 지원하여 수산물의 위생적 가공 처리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36.6억원을 지원하여 관광단지 3개소, 낚시공원 1개소를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어촌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촌자원복합산업화를 지원하였다. 어업기반정비사업에는 389.6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어항 14개소 관리, 소형어선 인양기 27대 설치, 양식어장 관리 1,750ha, 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20개소, 인공어초시설 수면적 201ha, 해삼씨뿌림 11,453천미의 사업실적을 기록하였다. 철저한 양식어장 관리로 미 FD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종묘방류 물량 계획대비 168% 달성 등 당초 계획대비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농수산물 마케팅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직거래장터 2개소(사천시, 함안군),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진주시 등 5개 시·군), 꾸러미 지원 1개소(창원시)에 설치하여 지역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3.8억원의 예산으로 상담 6회에 527건 76,628천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려 지속적인 경남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도시지역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점학교의 설립과 거점기숙형 중학교를 개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양 미리벌중학교를 개교하였다(2015년 3월 1일). 그리고 거점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위하여 321.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산청 (가칭) 산청중학교, (가칭) 산청고등학교 설립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6개교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망 설치를 완료하였다.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에 총 9개교 29.2억원을 지원하였다. 함안군북중, 함양안의중, 김해진례중, 사천용남중, 합천해인중, 거제제일중, 양산양주중, 창녕영산중, 창원진전중 등에 지원하여 도농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돌아오는 농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초·중·고교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270억원의 예산으로 초·중·고교 돌봄교실 909실에 지원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1학기 93.6%에서 2학기 94.5%로 향상시켰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1개교에 246억원을 지원하여 취업률 58.0%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취업률이 8.8% 상승하였고, 전국대비 평균 10.2%를 상위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NCS 교육과정을 35개교에 지원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였다.

경남도에서는 도내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대표 교육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 입학 및 재학, 취업까지 서민자녀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484.5억원(지방비 444.5억원, 민자 40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초·중고생 약 58,000명에게 지원하였다. 단계별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1단계는 초·중고 학습시기로 초·중고 학력향상 지원을, 2단계는 대학입학 시기로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3단계는 대학재학 중으로 쾌적한 숙식·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4단계는 취업시기로 졸업 후 좋은 일자리 우선 취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방문화산업과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24개 사업에 58.3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민자(BTL)사업 3개소, 박물관 조성 1개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개소, 문예회관 건립지원 4개소,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개소 등 11개 사업에 39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친화형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동 참여 환경 조성과 지도자 배치 등의 생활체육지원 사업에서 51.9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지원을 통한 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친화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7개 시·군 33개소에 301.0억원을 투입하여 서민중심 생활공감 체육정책을 확대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04억원을 투입하여 지정관광지개발 3개소, 문화관광자원개발 19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개소, 남해안관광클러스터 5개소,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9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사업에 뚜벅투어 활성화사업, 고품격 관광코스 'Must See Routes' 개발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 지역민 관광역량 강화사업 등에 3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실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은 함안 말이산고분군 탐방로 신설 및 정비, 양산 북정고분군내 관람로 포장, 배수로 석축정비 등에 12억원을 투입하였다.

생태하천복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 등의 생태·자연환경보전·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6개 지구에 417.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지구 7.99km의 복구를 완료하였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관 공조체제 구축, 기업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도민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 7건, 기업환경지원 50개 업체, 환경교육 및 정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사업은 42.2억원의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개소를 준공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 199.9억원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 일자리 1,078명, 지여가회서비스 이용자수 21,075명,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9.08점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민정신건강 지원사업은 46.4억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개소 확대 및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4,806명, 자살예방 교육 37천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 41천명, 금연시설 90천 개소 등록·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 204천명, 건강강좌 3,750회, 상담 334천건 등에 151억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73.9억원이 투입되어 사회복지인력 48명 충원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남희망울타리 지키미를 운영하여 경남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에서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53.8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141억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18.5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75.3억원,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 7.3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27.4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은 취약계층아동, 아동,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취약지이나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18.3억원을 투입하여 9개 시·군 시설개선 10개소, 장비 427점을 지원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육성사업에는 29.3억원으로 15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24시간 기초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남은 지역발전사업의 목표를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기반의 마련과 주민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기계, 항공,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성장을 통해 신규 고용 20%, 생산액 30%, 부가가치액 20%, 수출액 20% 증가를 유도하고, 생활인프라인 상수도보급률, 도로,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전년대비 2% 이상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5대 분야별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연계협력사업,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융복합화를 통해 신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어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업의 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어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에도 도민의 인식을 강화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지역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지원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권내 시군의 연계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에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성과를 공유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60.7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4조원으로 2011년 12조원보다 약 2조원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9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1년 29만명에서 3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2011년과 비교해서는 8.9%p나 증가한 34.0%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08년	2011년	2014년	2008년	2011년	2014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05,722	1,330,888	1,484,542	9,342	11,847	13,894
인구(천명)	49,540	50,734	51,328	561	576	607
1인당 GRDP(만원)	2,259	2,674	2,944	1,720	2,143	2,391
수출액(백만달러)	422,007	555,214	572,665	83	100	106
취업자(천명)	23,577	24,244	25,599	290	291	316
재정자립도(%)	53.9	51.9	50.3	26.3	25.1	34.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4년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2%, 제조업 3.7%, 광업·농림어업 14.1%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낮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비중이 각각 42.9%, 45.5%, 4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음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높았으며, 그 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금속 광물제품'은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생산액은 증가하였다. 그 외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3.3	44.7	48.3	39.4	42.6	46.6	42.9	45.5	41.0
음료	5.7	12.3	14.8	5.7	12.8	15.9	5.4	13.6	19.9
목재 및 나무제품	0.6	0.0	0.0	1.1	0.0	0.0	0.5	0.0	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5	5.4	4.6	4.6	4.8	4.1	4.9	5.9	4.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0.0	0.0	0.6	0.0	0.0	1.5	0.7	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8	2.8	4.2	5.7	5.4	2.2	5.4	4.3	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0	4.9	3.2	8.0	5.6	2.7	6.3	4.8	4.0
비금속 광물제품	26.1	18.7	18.0	24.0	17.0	14.6	22.4	15.3	21.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9	1.2	1.1	2.3	1.7	0.6	1.5	1.1	0.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1	0.3	0.5	0.1	0.3	0.7	0.1	0.3	0.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3.8	6.6	1.6	5.3	8.1	1.9	5.6	1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	6.0	9.0	8.7	5.8	11.6	11.7	6.9	15.9
사업지원 서비스업	5.5	10.3	8.0	8.5	12.2	10.3	9.6	13.7	7.3
교육 서비스업	19.1	13.9	7.8	18.6	12.5	6.8	17.7	10.1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	28.4	25.4	13.9	30.0	23.0	14.3	31.1	20.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1	20.3	32.4	13.2	18.3	30.7	12.1	17.9	25.2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0	17.3	10.8	35.5	15.8	9.4	32.8	14.8	7.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1%,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구개발비 1,609억원, 연구개발인력 2,438명, 연구개발조직수 122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 조직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74건이며, 등록은 413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0.3%, 0.2%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출원 건수는 168건, 등록 건수는 276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변화는 없었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80,317 (0.2)	135,411 (0.3)	160,882 (0.3)
	연구개발인력	1,372 (0.3)	4,358 (0.8)	2,493 (0.4)
	연구개발조직수	64 (0.5)	93 (0.4)	122 (0.4)
특허	출원	406 (0.3)	461 (0.3)	574 (0.3)
	등록	137 (0.2)	237 (0.3)	413 (0.2)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지역발전 잠재력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첫째, 최대의 장점으로 청정 환경과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및 동북아 중심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이 유리하다. 둘째,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배후 휴양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국내·외 대도시를 시장으로 하는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에 이점이 있으며, MICE산업 클러스터화 조성 등 쇼핑, 관광, 회의 연계전략으로 고부가가치의 휴양관광지로 도약이 가능하다. 셋째, 청정 제주에 적합한 지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물산업, 식품가공산업 중심의 '제주형 제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으며, BT산업을 중심으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을 통해 미래가치를 담보하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공항·항만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 제약, 섬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류·유통 비용 과다, 교육·의료·문화 등 인프라 부족, 산업 및 R&D 기반 취약, 산업 구조 및 제조업 기반 취약, 영세한 지역자본 및 재정 자립도 등 약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가속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및 양극화 확대,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3차 산업 비중이 사업체 수의 91.1%, 종사자 수의 86.2% 등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관광산업 및 연관 업종에 특화되어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187개소(분교 8개소) 중 대다수가 제주시 116개, 서귀포시 71개소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등록 박물관 9개소(연간 방문객 200만명), 공연시설 32개소, 공공 공연장 10개소, 민간 공연장 16개소, 영상 상영장 6개소 등 문화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어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관광 연계확충이 시급하고,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적인 환경자산을 활용한 세계환경수도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 내 총 병·의원 수가 230개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가 많아 읍·면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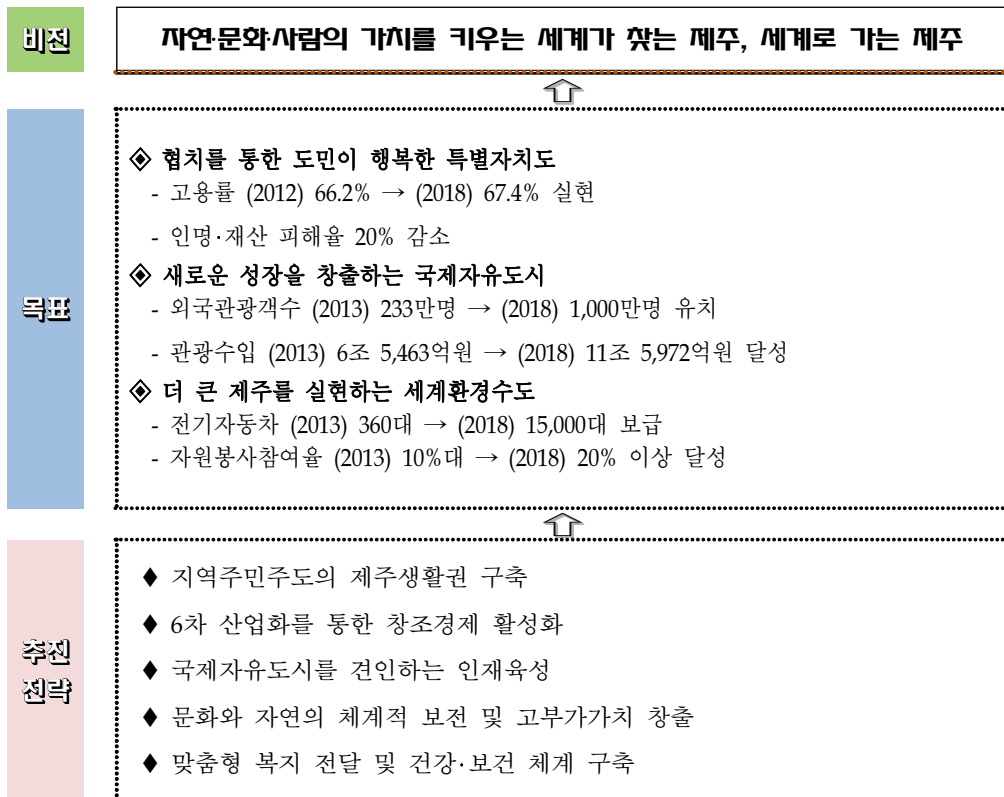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협치를 통한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는 국제자유도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세계환경수도 등 3대 발전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 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조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및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활용,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한정된 자원과 인력 활용의 극대화 추진,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시스템, 중앙정부 부처별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등이다. 이러한 전략 기조를 통하여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대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 205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체감형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를 통해 구현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화, 고품격 관광지 조성을 위한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견인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 경쟁력 향상 실현 및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은 일상적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체감도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의료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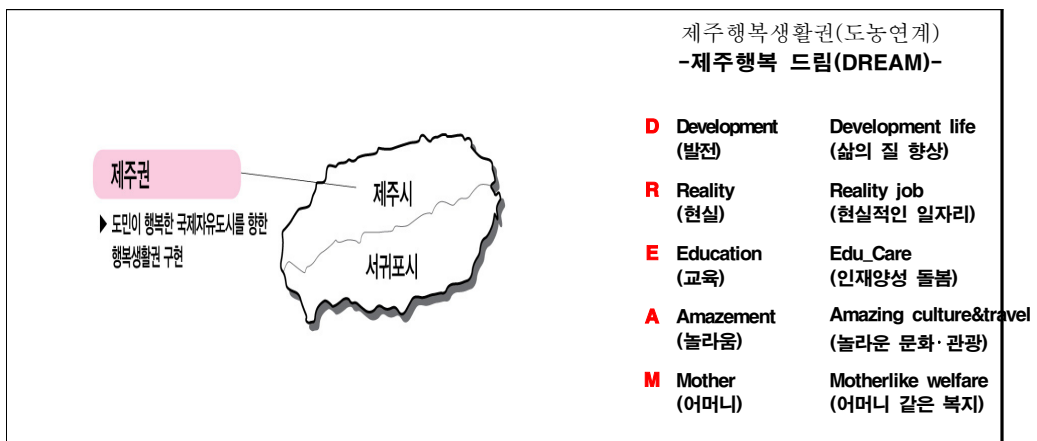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제주시·서귀포시간 연계된 생활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된 제주행복생활권이다. 제주시는 생활인프라, 인구, 교통, 경제, 의료 서비스 등 중심도시로서, 서귀포시는 향토산업 육성,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관광활동 중심지로서 각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기반으로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행복 Dream’의 완성을 생활권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2015년 주요 성과로는 행복생활권 과제기획·발굴 8건(연계2, 단독 6), 생활권 실행 추진체계 내실화(마을전담 조직연계),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사례 선정(유네스코 지질마을 활성화 사업), 2015 지역희망박람회 생활권협력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2015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제주행복생활권은 도농연계권 유형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 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환경 조성’,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마을별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준비를 통해 이호동, 봉개동, 상모리·영천동 등 3개 지구에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은 한림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확장,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등 상수도 시설 확충과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 구축 및 특수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976동, 지붕개량 246동 등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세계자연유산권역, 무릉도원올레권역, 한늘타리권역, 월령선인장마을권역, 어멍아방권역 등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참여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민 유치 홍보로 제주로 이주하는 순전입 인구 14,254명(전년대비 22% 증가)을 달성하였다.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는 신촌-함덕 도로개통, 애조로 대체 우회도로 등 구국도 건설, 도민불편 최소화 등 국도유지운영, 도로이용자 편익증진 등 구국도유지보수, 분리교통섬 4개소 설치 등 구국도시설개량, 도로표지판 130개소 정비 등 국도시설안전개선으로 구국도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였다. 또한 항만 시설 유지보수, 연안정비 사업 등으로 항만정비를 실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항만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았다.

이와 같이 4대 과제를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제주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한 창조경제 거점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SW산업진흥지원,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 고도화 등 IT/SW 기업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용률 74.2%라는 전국에서 최고 수치(전국 66.3% 2015년 11월 기준)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지역특화산업육성, 전통산업육성사업(제주무) 등 특화산업육성으로 지역산업육성을 도모하였다.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의 거점육성은 제주관광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구체화하여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기울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은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관람객수 345천명 방문 등을 기반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 수 13백만명(외국인 2.6백만명) 방문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은 1인 창조기업 Newjob 창출지원, 농촌융보합관광 상품 컨설팅 등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를 촉진하였다. 자원활용기술보급을 통해 수다뜰 공동브랜드 홍보로 매출증대(34개 업체, 30억(2014년)→35억(2015년)) 성과를 올렸으며,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획득(총 6개 농장) 등 농장수 사회적 역할수행에 따라 자긍심 및 자신감을 높였다. 특히, 농업인교육훈련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농림부 장관)받아 제1회(6명 : 친환경과수 1명, 감귤 3명, 아열대과수 1명, 시설채소 1명)와 제2회(4명 : 친환경과수 1명, 감귤 2명, 시설채소 1명)에 걸쳐서 운영하였으며,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제주형 유기농업생산 유통단지조성에 지원사업장 3개소를 유치하였다. 이 밖에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으로서 키위 수꽃가루 안정생산 시범으로 59.4%의 소득 증대(6,900천원 → 11,000천원/10a)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통해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진 등에 힘을 쏟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은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ICT활용 교육 학습 환경 구축을 도모하였다. 읍면지역 92개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패드 보급(2,310대), 무선 인터넷 구축 교실(441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 능력 향상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학교교육진로교육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오케스트라, 기타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명품대학 육성’은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사업으로 현장실습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현장실습집중형 육성사업으로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인성교육실시, 패키지 기술지도, 관광아카데미 등을 수행했고, 가족회사 확대(351개), 취업률 70%, 현장실습 참여 매년 60여명 총 240여명,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83.9% 등을 달성하였다.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로 산·학·관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교육 40명, 총 138시간 이수, 호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수행(11명), 취업 7명(국내 3명, 해외 취업 4명) 등 사업성과를 달성하여 제주지역 전문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로서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거점 2(제주시·서귀포시평생학습관), 읍면 7(제주시 4, 서귀포시 3) 등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 교육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부여 등으로 인재·기업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인재양성을 통해 더 큰 제주를 위한 미래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해 주말 아트마켓 92회, 판매부스 24팀 운영, 양질의 기획공연 30회 추진, 관광극장 개관 및 기획공연 60회 추진 등으로 작가의 산책길 방문객수 150백명(전년대비 28% 증가)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CRD) 육성을 통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31편, 스토리보드 50편, 본편 28편 등을 제작하여,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개발 및 문화콘텐츠상품 제작 등 제주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화격차해소’는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차별화된 여성 전문교육 실시(여성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 157명), 다양한 기획전시 및 우수문화공연 개최(기획전시 5회, 문화공연 16회), 감성과 열정이 넘치는 문화교육 운영(문화동아리 123회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인 활성화(23회)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전문교육 실시로 사회참여 증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는 제주발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중점관리지역 발담 조사(1회), 제주발담 도록발간(200부), 축제(1회) 등 제주발담 관리보전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으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와 환경개선 경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였다. 또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을 통해 선홍1리 생태관광 협의체 구성(연 5회),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총 8개 기획 홍보, 주민 교육, 주민 간담회 연 3회(마을 공동체 화합 유도), 선홍 특산물 상품 개발과 제주 고사리삼 디자인 티와 문구 개발 (선홍 고사리)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공존의 제주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및 운영체계 마련,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제주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혜택 기회 증진,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지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제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18회), 제공기관 1:1 컨설팅,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이용자 부모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DB 구축으로 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내실화(10개 기관 구축),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보수교육(2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제공(701명) 등 제주지역 사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 최종중장애·1인가구에 대한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확대(월 20시간 → 월 90시간), 활동지원 등급 확대(1~3등급 → 1~4등급)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드림 스타트 지원사업의 확대(2014년 27,22명→2015년 43,294명) 및 체계화된 프로그램(130개)을 운영하였다. 특히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69개소)과 청소년 시설 확충(10개소) 등으로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과 청소년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상담인원 107명을 배치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산남지역(서귀포시) 유일한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으로 사회복지 인력(16명)을 15개 읍면동에 배치하였다. 또한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로 세월호구조자 대상 심리안정서비스 제공, 4.3 및 강정마을(정신건강실태조사 기반 마련), 자살위기관리시스템구축(1577-0199)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보육환경 개선 및 구현,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사회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역 복지·의료 구현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초석마련에 기여하고 더 큰 제주를 위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정책방향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제주’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등을 핵심이슈로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별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는 행복생활권 기반 구축 공정률 5%증가(2015년 대비), 주민행복 만족도 80점, 주민활력지수 44위 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적인 생활권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주민기초생활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체감형 인프라 확충 사업, 소외지역 정주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환경, 상수도 시설 관리 확충,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등 등 생활여건 사업 및 생활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창조경제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8.1% 달성, 사회적경제 GRDP 1위 달성, 창조계층 비율 16위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성 및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이다.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평생학습 센터 운영 만족도 80점 이상, 평생교육 경험률 40%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농어촌지역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은 농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이다.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은 문화격차해소 1%증가(2015년 대비), 문화환경만족도 6.1점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은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 프로그램과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개소,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2개소 등 사회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역 복지·의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약지 공공의료체제 정비를 통한 의료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이다.